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1993. 12

徐載鎮(北韓研究室長)

姜元植(政策研究室 研究委員)

柳浩烈(北韓研究室 研究委員)

金聖哲(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吳承烈(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全相仁(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이 보고서는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장기적 연구계획의 하나로 추진된 연구결과이다. 研究院 설립 첫째 해인 1991년에는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이라는 주제로 북한체제의 부문별 실태와 변동요인을 역사적 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해에는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라는 제목하에北韓의 체제역량을 南韓과 부문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금년에는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라는 주제하에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체제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들 3개 연구는 모두 거시적인 시각에서 1년씩의 기간으로 부문별로 6~7명의 北韓研究室 분야별 담당연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이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단일 사례분석, 남북한 비교분석, 사회주의 국가간 비교분석 등 일련의 상이한 접근방법을 통한 북한 분석 계획이 일단락되었다. 앞으로는 보다 미시적인 주제에 대해 보다 경험적인 자료의 개발과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거시적 분석을 補完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한을 폭넓은 比較社會主義的 視角에서 理解하고 또 北韓體制의 향후 變化를 展望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통일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제1부 및 제2부는 서재진, 제3부의 舊蘇聯 및 러시아 사례는 강원식, 동유럽 사례는 유호열, 중국 사례는 서진영, 베

트남 사례는 전상인, 북한 사례는 김성철, 제4부는 오승렬, 제5부는 서재진에 의하여 각각 집필되었다.

이 보고서의 연구과정에서 좋은 의견 제시를 통하여 많은 기여를 해주신 고려대 서진영 교수, 연세대 안병영 교수, 경남대 이수훈 교수,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출신의 김성진 박사,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Guennadi Riabkov씨, 베트남 사이공 경제대학의 Tho Dinh Nguyen 교수 등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3. 12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I. 序 論

이 연구보고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과정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구소련, 동구 사회주의 8개국, 중국, 베트남, 그리고 북한이다. 이들 다섯 개의 개별 사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사회주의체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최근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함과 동시에,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각 사례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歴史的 接近法과 比較社會的 接近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역사적, 비교사회적 분석을 통하여 각 사례에 대해서는 역사적 조망을 하고 사례간에는 횡적인 요인비교를 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보편적 요인을 판별함과 동시에 북한체제가 갖는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북한 고유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향후 북한체제 변화의 방향과 특성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의 사례분석 부분에서는 역사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歴史的 特殊性(historical specificity)을 부각시킬 것이다. 또한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歴史的 普遍性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이 사례연구에 적용되었다. 첫째, 개개의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사회주의 각국에서 경제의 위기적 구조 및 사회·정치적 갈등구조의 생성 및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며 셋째,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사회주의 각국의 체제변화 내용 및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II. 社會主義體制的 形成과 變化를 보는 視角

이 보고서의 제II부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생성에서부터 자본주의체제에로의 재편입에 이르는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도정(trajectory)을 일반화된 이념형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의 형성 배경을 자본주의에 대한 추격발전 전략의 개념으로 본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경쟁력에 밀려 주변화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으며, 발전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이제까지 주변부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追擊發展을 위한 발전전략의 지주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는 社會主義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조건 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는 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대응이 사회주의의 체제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세계체제의 변수를 중시하였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체제의 등장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breakaway)이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적대적인 세력이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對社會主義 國家들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사회주의권을 봉쇄하고 고립시켜 枯死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추격발전의 전략으로서 등장한 사회주의가 추격발전에 실패하게 된 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사회주의에 대한 고사전략 이외에도 內的 要因으로 사회주의체제

의 내재적인 비효율성을 중시한다. 오타 시크의 표현대로 현실사회주의는 잘못된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실패는 必然的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에 대량실업의 문제, 주기적인 경제위기, 불평등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거나 體制轉換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의 성장임을 강조한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발달하였지만 그 영향은 사회주의권 전체에 미쳤다고 가정한다. 사회주의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야기시킨 결과는 인민대중의 心性(mentality)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권력엘리트들의 성격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실패하고 시민사회가 발달하여 밑으로부터의 체제저항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전개는 대체로 기존의 권력엘리트들의 자신감 상실 및 엘리트들간의 노선투쟁에 기인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資本主義에 대한 追擊發展 전략으로서, 그리고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體制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했던 사회주의체제가 失敗한 시점에서 당연한 대안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하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맑스·레닌주의 또는 스탈린주의, 마오이즘을 폐기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재도입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핵심인 것이다.

Ⅲ. 事例研究

1. 舊蘇聯 및 러시아

1917년 볼셰비키혁명 당시 러시아는 마르크스가 혁명의 조건으로 상정하고 있던 고도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과 보통선거권 등 민주주의를 통한 프롤레타리아의 높은 사회의식 모두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소련에서는 공산주의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곧, 생산력 증대와 인민대중의 사회의식 향상을 위하여 레닌은 스스로 ‘資本主義로의 戰略的 後退’라고 부른 新經濟政策을 추진하였고, 스탈린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한 중공업발전전략을 모색했다. 그후 소련은 스탈린식 발전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흐루시초프 시대와 브레즈네프 시대를 거치는 동안 생산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탈린식 중공업발전전략은 철저한 국가관리를 통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시켜 외연적 발전을 이룩할 수는 있었으나 內包的 發展段階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브레즈네프 말기에 이르러 소련경제는 경제성장이 저하하는 등 침체현상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5년 3월에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는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와

1989년 5월 인민대의원대회를 분기점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경험하였다.

제1단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 가속전략으로서, 경제침체의 원인이 노동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인식하여 노동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병리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경제개혁의 성과를 현실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제2단계에서는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그후 인민대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이해를 반영한 수많은 민중조직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민주화·다원화가 촉진되었다. 나아가 국가이념 자체를 재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진 결과, 이른바 ‘人道的·民主的 社會主義’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기득권 세력들은 1991년 8월 쿠데타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함양된 민중의 민주의식은 쿠데타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마침내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전반적인 해체로 귀결되었다. 결국 소련사회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으나,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의해 정치개혁이 추진되어 점차 사회 전반에 걸친 혁명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경우 經濟改革보다 政治改革의 속도가 훨씬 빨랐고 그 범위도 또한 더욱 넓었다. 예컨대 民主化의 경우, 과거 소련에서 형식적이었던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실질적 민주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그 範圍와 深度가 점차 상승적으로 확대되고 내실화되어,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도 수반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화는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민중의 기대수준을 상승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공개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연방 해체라는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부정, 곧 체제 전환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일순간에 전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1992년 초의 가격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경제는 지금 현재 과도기적 혼란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中央集權的 一黨支配體制에서 多元的 民主主義體制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 東유럽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고와 알바니아는 빨치산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소련의 영향하에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소련식 계획경제체제와 공산당 一黨唯一體制를 확립하고 소

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코메콘 등을 결성하여 상호 협력과 선린관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한 국가들과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은 소련에 의한 지배구조에 대해 반발과 저항을 표출하는 한편, 명령식 계획경제체제가 그 한계를 노출하게 됨에 따라 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이들 국가들의 체제개혁 노력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부문에 한정되었으나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걸쳐 개혁이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함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정치, 사회 등 제반 분야로 개혁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국가를 비롯한 諸 사회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국가들은 크게 네가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첫째는 1985년에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여 改革·開放政策 및 新思考外交를 추진한 것이다. 그 이후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의 독자적 개혁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개혁·개방노력을 지원하게 되었다. 둘째로, 1970년대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부채 및 무역적자의 심화에 의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게 되었다. 유고,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통한 市場社會主義의 發展을 모색하였으나, 근본적인 개혁 없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서방 국가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였다.

셋째, 서방세계와의 교류 및 정보의 유입은 동유럽 국가들의 지

배엘리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신념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각국의 혁명 1세대가 노쇠하거나 교체되자, 엘리트 내부에서 나타난 체제정당성의 약화는 지도력의 공백 현상을 초래하여 체제변화를 자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끝으로 1980년 폴란드에서의 자유노조의 탄생을 필두로 하여 체코의 77 현장그룹, 헝가리의 민주포럼 결성 등을 통하여 동유럽 국가들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사회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代案의 體制에 대한 선택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국가조직 바깥 영역에서의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체제의 모순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킴과 동시에 동유럽 국가들이 나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國家와 市民社會와의 갈등과 긴장을 가속화시켰다.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이같은 4가지 변화는 1989년을 기점으로 개혁·개방의 수준을 넘어 革命的인 體制轉換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동유럽 8개국의 혁명적 변화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정착과 시장경제제도의 확립, 그리고 사회주의블럭체제의 붕괴 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과정은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및 기타 제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드러냈다. 일찍부터 경제개혁에 착수한 경험이 있고 비록 초보적인 형태나마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있었던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선진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 정부와의 타협에 의해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이룩하였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형성이 부진하고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自由總選舉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자유총선거에서는 과거의 집권 공산계열이 재차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복수정당제의 실시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대전제를 공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에서 공산당 유일지배체제 및 명령형 계획경제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1990년대에 있어서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문제와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격화되는 각국 내부의 민족분규 등 새로운 갈등 요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유럽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다.

3. 中國

중국 사회주의체제는 소련 및 베트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자생적 사회주의 유형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편전쟁 이후 근 100년간에 걸친 제국주의 세력의 끊임없는 침략과 군벌통치의 암흑시대, 그리고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시달려온 중국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1949년 10월에 태동했다.

구조적·제도적 차원에서 毛澤東 치하의 중국 사회주의는 고전적 스탈린주의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毛澤東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맑스·레닌주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독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일원적 영도권을 보장하는 당·국가제도를 견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生産樣式의 共有制의 原則에 입각한 계획경제체제에 입각해 있었다. 더욱이 모택동의 발전전략도 여전히 중공업 중심의 급진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발전전략과 별로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택동 시대의 중국적 사회주의가 직면한 체제위기 가운데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달리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한 특성이 존재했다. 즉 일반적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위기 요인 이외에도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과 같은 중국적 사회주의의 ‘大失敗’에서 파생된 위기는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에서 발생한 체제불안의 성격과 특징을 구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개혁정치가 등장할 수 있게 한 ‘中國的’ 배경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은 중국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택동 이후 개혁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과 동력을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심화된 지도부의 분열과 노선투쟁은 모택동 사망 이후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반좌파 연합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반좌파연합세력들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면서 모택동 시대와의 질적인 결별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中國共產黨 11期 3中全會에서 ‘歷史的 路線轉換’을 선언하고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개방을 표방한 덩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모택동 시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중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였다. 덩소평의 경제발전 제일주의에 입각한 대담한 경제개혁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국경제는 지난 10여년간(1980~1990) 연평균 8.9% 이상의 GNP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1992년도에는 12.8%의 실질 GNP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경제로 부상하였고, 국민들의 경제생활도 과거에 비교하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덩소평의 경제개혁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經濟社會의 多元化, 自律化, 및 開放化를 촉진함으로써, 공산당의 일원적 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는 기존의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市民社會的 要求’를 증폭시켰다. 결과적으로 덩소평의 경제개혁은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1989년에 발생했던 천안문사태는 바로 이같은 위기의 극적인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사회주의는 사회주의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4. 베트남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근대국가가 수립된 것은 19세기 말 우옌왕

조가 붕괴된 이후 근 한세기 만인 1976년의 일이었다.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은 20세기 전반기에 프랑스 식민주의에 저항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베트남의 南北分斷을 획책했던 프랑스 및 미국과의 一戰을 不辭하면서, 민족해방과 국토통일을 차례로 쟁취한 베트남 현대사의 주역이자 최종 승리자였다.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은 강력한 대내적 正統性, 민족주의적 성향, 안정된 정치적 리더쉽,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의 實用主義的 수용 등으로 요약된다.

통일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하에서 전형적인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1976년부터 추진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1970년대 말부터는 경제발전 정책에 있어서 시련과 시행착오가 거듭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經濟自由化와 再統制化, 그리고 再自由化措置를 왔다 갔다 하던 베트남경제는 1986년을 기점으로 하여 도이 모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획기적인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의 도이 모이정책은 베트남 경제를 성장과 발전의 궤도에 올려 놓는데 성공했다. 베트남은 重工業 優先政策을 포기하고 多元的 經濟構造의 발전을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 방식에 있어서 市場原理를 대폭 도입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사회영역에서도 刷新을 모색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연방의 해체 이후 도이 모이가 일시적으로 동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1년에 시작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도이 모이를 수정·강화했다. 곧, 경제부문에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고, 政治·社會領域에서는 체제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당내 民主主義와 法の 지배를 표방하면서 소위 ‘2000년대를 향한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전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은 自生的이고 自主的인 발전전략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도이 모이는 先進 社會主義 國家의 개혁·개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도 아니고, 發展路線을 둘러싼 지도부 내의 權力葛藤이나 市民社會로부터의 도전이 야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도이 모이의 이념적 기초는 反植民地 革命과 反外勢 戰爭을 치르는 동안에 다져진 베트남 民族主義와 실용적인 맑스·레닌주의에서 찾아진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도이 모이정책은 소련이나 동구의 개혁·개방 모델과도 구분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市場社會主義 發展戰略과도 차이를 드러낸다. 오히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발전모델에 매료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본주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5. 北韓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내부적인 혁명에 의해서 태동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것만도 아니었다. 특히 정권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소련의 지원이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이 북한 내에서 武裝勢力을 가진 유일한 政派였다는 점과 그의 라이벌이었던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등이 理念的으로 同質性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동구의 경우와 상이한 체제발전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립된 인민정권은 1946~1947년에 걸쳐 토지개혁 등 일련의 반제반봉건개혁을 실시하였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비교적 신속히 이룰 수 있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이래 발전전략 논쟁을 둘러싼 권력갈등,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권의 변화 및 중·소분쟁의 격화 등 대내외적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여 重工業 中心의 自主的 發展路線을 채택한 결과 공업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 불균형에 의한 발전둔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특히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을 둘러싼 엘리트 갈등은 金日成 唯一支配體制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나 체제발전에 대한 異見 表出의 메카니즘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은 1970년대 초 데탕트 무드를 타고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대내적인 구조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외채 부담만을 남긴 채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작업과 이를 위한 이념적 장치로서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및 그 실천운동으로서의 3대혁명소조운동의 전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채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대외개방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1984년 舍營法 채택으

로 나타났으나 이것 또한 대내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만 물질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연합 기업소를 중심으로 獨立採算制를 확대 실시하였으나, 이것 역시 경제관리방식에 있어서의 조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특히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새로운 개방 전략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두만강개발계획을 겨냥한 나진·선봉 自由經濟貿易地帶의 設定과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法制度의 整備로서, 기존의 실험적 개방정책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제적 요구가 언제나 정치적 要因에 종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새로운 개방전략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할 수 있다.

IV. 比較分析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주의권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부터 출발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정치적 多元主義의 지향과 시장화 및 사유화라는 보편적 방향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변화과정 및 결과에는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각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나타난 諸 類型의 決定要因으로는, 각국 사회주의에 대한 세계체제의 영향, 지배엘리트의 특성, 시민사회 및

정치적 대안세력의 존재 및 강약 여부, 경제객체의 행위패턴 및 경제구조상의 특성,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은 크게 보아 東歐 사회주의 국가 및 구소련의 경우와 같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결합된 경우,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정치체제의 전환 없이 경제체제의 변화만을 추진하는 사례, 그리고 북한처럼 지극히 제한된 영역의 경제체제 정비에 그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및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추진된 동구 및 소련의 경우를 세분화하면, 정치체제의 전환과정에 나타난 특징에 의해 해당 국가들은 중부유럽형과 동부유럽형 및 소련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중부유럽형의 정치체제 전환유형을 보여준 헝가리,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소련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유지될 수 있었던 지배엘리트의 취약한 통치력과 경제적 침체를 원인으로 하여 1980년대 이래 市民社會 및 政治的 代案勢力이 강화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세계체제의 변화 및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된 소련의 역할변화는 이들 국가에 있어서 체제 대변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배엘리트와 정치적 대안세력간의 타협에 의한 평화적 체제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동부유럽형 체제변화 유형은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와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소련에 의한 이식형 사회주의체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비록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분규,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의 강성 독재, 불가리아의 철저한 소련체제 편입, 그리고 분단체제하 동서독간의 특수 관계 등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대안세력 형성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타협에 의한 체제전환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들 국가에 있어서 지배엘리트들이 통치력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과감한 개혁조치의 시행을 통한 局面轉換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중부 유럽의 급격한 변혁에 영향을 받은 인민대중의 직접적 저항에 의해 체제가 전복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구소련은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專制主義的 文化背景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했다. 또한 강력한 사회주의 이념하의 중앙집권적 정부를 유지한 결과, 시민사회 및 정치적 대안세력의 형성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혁명 이래 근 7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경직된 관료체제에 의한 명령형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침체를 가속화시켰다. 1980년대 중반 이래 고르바초프는 정치와 경제의 동시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경직된 소련의 정치·경제구조로 인해 체제위기가 증폭되었으며, 이는 곧 민족국가의 독립에 따른 聯邦解體와 인민대중의 反體制化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지배엘리트는 정권경쟁적 파벌로 분열되었으며, 급진적 성향을 보인 엘친은 주민들의 반체제적 성향에 힘입어 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체제전환을 진행시켰다.

이와 같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은 스탈린식 중앙명령형 계획경제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1960년대 이래 경제계획 메카니

즘의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해 왔다. 특히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는 특수한 정치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부분적 시장기구 도입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련은 물론 소련의 철저한 통제권에 놓여있던 동구 사회주의체제는 정치 및 경제구조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계획경제의 본질적인 결점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활수준의 상대적 낙후성은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체제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배엘리트와 여타 사회구성원간의 갈등구조를 통해 볼 때,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政治的 多元主義가 도입된 경우에 있어서도 新體制의 安定度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부유럽의 경우에는 낙후된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대안세력의 부재 때문에 새로 등장한 권위주의적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보편적 발전방향과 일치하리라는 예측은 속단이다. 즉 동부유럽형의 경우 정치적 체제전환이 경제적 체제전환의 充分 條件이라는 명제는 시간의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에 있어서 동아시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은 자생적 사회주의 형성과정을 배경으로 일찍부터 소련과 정치·군사상의 일정 거리를 유지해 왔다. 또한 근대 사회주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스탈린식 경제발전 모델을 변용하여 적용하는 실천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초기의 혁명지도자에 의한 통치체제를 集團指導體制化함으로써 다양한 경제발전 정책노선을 수렴해 왔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의 지배엘리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치체제의 극적인 전환이나 붕괴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과감한 시장기구의 도입 및 소유제의 다양화와 대외개방을 통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공산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했으며, 政治와 經濟의 二分화된 體制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긴장 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과 베트남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제적 체제전환이 정치적 체제전환을 수반하지 않고 있어서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의 必要條件이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체제형성 초기에 소련의 군사적·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김일성 체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래 자주적 사회주의체제로서의 특성을 강화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적·정치적으로는 소련 및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스탈린식 경제발전 모델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변혁과 더불어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및 경직된 스탈린식 계획경제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절대적 권력체계로 인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대안적 정치세력의 형성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폐쇄적 정책과 집요한 대내적 정치캠페인 및 敵對的 分斷體制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反體制的 性向의 表出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 변화 유형은 계획기구의 개선, 부분적 시장기구의 도입, 시장화·사유화를 통한 체제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정책노선은 정책결정권자의 비용·편익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정책결정자의 비용·편익적 고려에는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경제적 부작용은 물론 권력엘리트의 정치적 입지 및 이념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 모델을 통해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경제개혁 정책과 시장화 및 사유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경우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정책결정자의 비용·편익적 고려에는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역사적 경험 및 自國 經濟構造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정책 결정메카니즘에 의해 정치체제 변혁 이전의 동구 사회주의체제 및 소련은 계획기구의 개선을 통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는 부분적 시장기구의 도입을 시도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모택동의 주도로 스탈린식 모델을 중국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려는 시도로서 대약진운동과 경제정책결정권의 週期的인 地方分權化 및 中央再集權化가 행해졌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각국의 신지도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시장화와 사유화의 진척

속도가 결정되어 왔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1980년대 이래 정치체제의 전환 없이 과감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 정치이념과 경직된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의 경제체제 개선 노력은 경제계획 메카니즘의 개선을 포함한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왔으며, 경제정책 역시 정치 및 이념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에 의한 절대권력의 행사는 집단적 지도체제하에서 볼 수 있는 정책노선의 조정 메카니즘을 말살함으로써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체제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을 비교·분석한 본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체제변화는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요인간 상호작용 및 이에 의해 형성된 社會構成員의 行爲樣態에 의해 그 구체적 유형이 결정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제변혁의 와중에 있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불안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完了型이 아니라 進行型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상호간에 外生變數로서 작용해 왔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V. 結論：北韓體制的變化展望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북한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社會主義體制的 形成過程, 支配理念, 社會的 性格 및 권력엘리트간의 派閥 存在 有無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동구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逆으로 대응하여 변화를 억제해 왔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적·정치적 영역의 요인들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풍요나 국제적 협력관계와 같은 구조적 토대가 아니라 정보의 차단,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같은 정치적 통제에 의존하여 사회주의체제 및 김일성 일인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社會主義 統制原理의 非效率性和 官僚主義的 病幣로 인하여 경제가 쇠퇴하였던 바, 북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中央計劃經濟體制라는 점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 경제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에 종속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난국을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지도부 역시 이미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나름대

로 對外開放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변화의 유형은 결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었던 과정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식의 독특한 변화유형을 창출시킬 북한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蘇聯이나 東歐뿐만 아니라 中國이나 베트남 정도의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權力維持 方式의 閉鎖性, 分斷體制 管理 및 體制競爭의 負擔, 그리고 다른 社會主義體제의 改革·開放이 주는 否定的 教訓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식 개혁·개방의 유형은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인 北韓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은 크게 보아 동아시아 유형에 더욱 접근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사회주의체제와 기존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는 유형을 모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동유럽의 루마니아나 알바니아의 경우처럼 일인 장기지배체제하에서 경직된 체제관리를 해왔지만 北韓은 그들과는 달리 체제유지에 順機能的인 여러가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세계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밑으로부터의 봉기에 의한 체제전환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制限的인 開放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만을 추구

할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의도하는 개혁·개방의 방향은 1970년대 후반 중국이 취했던 정책을 어느 정도 모방한 형태일 것이다. 중국에서 1978년 이후 덩소핑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자는 四個堅持(공산당 영도, 사회주의노선, 프롤레타리아독재, 맑스·레닌·모택동사상)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도 한편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구개발식의 경제개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서 선택될 북한식 개혁·개방의 모델로 추정된다. 그러나 北韓이 中國의 改革·開放을 모방하고 있으나 개혁과 개방의 내용이나 깊이와 폭에서는 中國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변화를 시기별로 전망해 보면 短期的으로는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기간으로서 향후 3~4년 정도가 이 기간에 포함된다. 이 때는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하던 요인이 그대로 온존되어 있는 시기이다. 金日成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의 기초가 되어 현재의 정권은 계속 유지됨과 동시에 사회주의체제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 기간중 북한의 經濟回生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中期的으로 김일성이 사망하고 金正日 단독 체제로 이행하게 되는 시기를 전망할 수 있다. 이 때에는 權力의 正當性의 기초가 金日成이 의거했던 전통적 및 카리스마적 정당성에서 점차 經濟合理的 正當性(rational legitimacy)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역사에서 金正日 정권 기간은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金正日 정권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실험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다. 변화의 논리가 아니라 현상유지의 논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및 構造的 要求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김정일은 早期에 失脚할 가능성이 있다.

長期的인 전망은 金正日 時代 이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김정일 이후의 새로운 정권은 과거 정권에 대한 否定을 기초로 積極的인 개혁·개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의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새 政權의 正當性을 확보하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시키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체제통합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가 얼마나 빨리 찾아 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目 次

序 文

要 約

第 I 部 序 論.....1

I. 研究目的.....3

II. 改革·開放, 體制轉換 및 變化的 概念.....4

III. 分析의 焦點.....6

第 II 部 社會主義體制的 形成과 變化를 보는 視角.....9

I. 追擊發展 戰略으로서의 社會主義體制的 形成.....11

II. 資本主義 世界體制的 對應.....20

III. 社會主義的 追擊發展의 失敗.....23

IV. 市民社會의 發達.....32

V. 代案的 政治勢力의 形成.....53

VI. 資本主義 世界體制에의 再編入.....56

第Ⅲ部 社會主義體制 變化的 事例	65
第1章 舊蘇聯 및 러시아	67
I. 蘇聯 社會主義體制的 形成過程.....	67
1. 볼세비키 革命理論	67
2. 레닌 時代의 社會主義 建設과 發展	73
가. 反官僚主義 鬭爭	73
나. 新經濟政策	76
3. 스탈린 時代 一黨獨裁體制的 鞏固化.....	80
II. 스탈린 時代 以後의 改革政策	86
1. 흐루시초프 時代	86
가. 共產主義的 社會的 自治와 民主化	86
나. 經濟改革 措置	89
2. 브레즈네프 時代	93
가. 브레즈네프 憲法과 民主化	94
나. 經濟改革 措置	101
3. 안드로포프·체르넨코 時代	105
III. 고르바초프 時代의 改革과 開放.....	109
1. 페레스트로이카 推進樣相	110
2. 새로운 社會主義觀의 定立	115
가. 社會主義的 人民自治: 參與民主主義.....	115
나. 人道的·民主的 社會主義.....	120

3. 政治體制的 變化	131
가. 黨內民主主義	131
나. 政治的 多元主義	135
다. 權力分立에의 摸索	141
4. 經濟體制的 變化	148
가. 市場經濟 移行計劃	150
나. 고르바초프 改革의 成果와 限界	154
IV. 엘친 時代의 體制變化過程	158
1. 蘇聯邦의 解體	158
2. 엘친의 體制改革政策	165
가. 政治體制 轉換: 民主化	165
나. 經濟體制 變革: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185
3. 展望	192
V. 結 論	194
第 2 章 東유럽	198
I.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의 形成	198
1. 東유럽 社會主義 政權 樹立	200
2. 計劃經濟體制的 樹立	208
3.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同盟關係	214

II.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問題 露呈과 改革	216
1. 社會主義體制 變化 1期(1948~1956)	217
2. 社會主義體制 變化 2期(1957~1979)	223
3. 社會主義體制 變化 3期(1980~1988)	234
III.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體制轉換.....	260
1. 東유럽 體制危機의 深化	262
2. 對抗勢力的 成長	266
3. 東유럽 社會主義體制的 崩壞.....	281
IV. 體制轉換 以後 東유럽	293
1. 政治的 多元主義 導入	293
2. 市場經濟로의 轉換과 世界資本主義 經濟體制로의 編入.....	304
3. 새로운 葛藤樣相과 東유럽의 將來	307
V. 結 論.....	311
第3章 中國	322
I. 中國 社會主義體制的 形成過程	322
1. 中國革命	322
2. 人民民主主義와 中國的 社會主義의 建設	327
3. 大躍進運動	340
4. 文化大革命과 中國的 社會主義의 危機	348

II. 鄧小平의 改革政權 登場과 歷史의 路線轉換	360
1. 華國鋒 政權에 의한 鄧小平의 復權.....	362
2. ‘歷史的인 路線轉換’	368
3. 改革聯合勢力的 內部的 葛藤과 鄧小平의 中國의 社會主義	372
III. 中國의 改革政治와 中國의 社會主義의 發展과 試鍊	379
1. 妥協과 調整의 改革政治(1979~1984)	381
2. 改革·開放의 深化(1984~1989)	388
3. 天安門 民主化運動과 中國의 社會主義의 危機(1989~현재)	394
IV. 結 論.....	402
第 4 章 베트남	411
I. 베트남 社會主義體制의 形成過程	411
1. 民族解放運動과 베트남民主共和國	412
2. 베트남戰爭과 베트남社會主義共和國	423
II. 統一 直後 베트남 社會主義 經濟發展의 挫折과 實驗的 改革	435
1. 스탈린式 社會主義 發展戰略의 挫折	436
가.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目標과 成果	436
나.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敗因과 教訓	439

2. 新經濟政策의 實驗과 陣痛	444
가. 經濟自由化政策과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	444
나. 經濟의 再統制化와 再自由化	449
III. 베트남 社會主義經濟의 改革과 開放: 도이 모이	453
1. 第1段階 도이 모이政策	454
가. 도이 모이政策의 背景과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454
나. 도이 모이政策의 成果와 도이 모이의 動搖	461
2. 第2段階 도이 모이政策	466
가. 도이 모이의 修正·強化	466
나. 第5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 現況과 展望	470
IV. 結 論	475
第 5 章 北 韓	486
I. 北韓 社會主義體制의 形成過程	486
1. 政權樹立過程	486
2. ‘민주개혁’	494
3. 生産樣式의 社會主義的 改造	498
가. 農業部門	498
나. 手工業 및 商工業部門	501
4. 社會主義 發展戰略의 定立	503

II. 北韓 社會主義體制的 發展과 限界	509
1. 中·蘇紛爭과 自主的 經濟發展路線	509
2. 動員體制的 強化와 唯一支配體制的 確立	514
가. 群衆路線의 政治事業 優先	514
나. 金日成 唯一支配體制	517
3. 社會主義經濟의 發展鈍化	520
III. 北韓 社會主義體制的 變化	524
1. 1970年代 初 開放의 實驗 및 試鍊	526
가. 開放의 對內外的 促進要因	526
나. 改革의 構造的 制約要因	528
2. 1980年代 開放의 再試圖 및 經濟管理方式의 調整	536
가. 對內外的 要因	536
나. 合營 및 獨立採算制의 實態	541
3. 1990年代 初 새로운 開放 戰略	545
가. 對內外的 要因	545
나. 法制度의 整備	550
IV. 結 論	554
第 IV 部 社會主義體制 變化의 類型 比較	563
I. 政治·理念的 變數의 比較	567
1. 社會主義體制 形成過程	567
2. 政治的 代案勢力의 性格 및 力量	572

3. 蘇聯과의 關係	577
4. 體制理念의 收斂效果	579
II. 經濟的 變數의 比較	581
1. 計劃經濟 問題點 解決方式	581
2. 世界經濟秩序 再編의 影響	584
3. 經濟改革 政策路線	587
III. 社會主義體制의 變化 類型	601
1. 變數間의 聯關性 및 類型化의 基準	601
2. 變化 類型	604
가. 中部 유럽型	604
나. 東部 유럽型	607
다. 蘇聯型	611
라. 東아시아型	615
마. 北韓型	618
IV. 結 論	621
第 V 部 結論：北韓體制의 變化 展望	627
I. 北韓의 社會主義體制 維持의 要因	629
II. 變化의 促進要因	636
III. 北韓式 變化 類型 決定要因： 積極的 改革·開放을 制約하는 要因	639
IV. 北韓式 改革·開放 類型의 展開方向 豫測	643

第 I 部

序 論

빈 면

I. 研究目的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최근의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의 핵심적 관심이다. 많은 연구들이 북한의 단독 사례에 대하여 특정한 變數의 變移에 초점을 맞추거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등의 부문별로 또는 여러 부문을 종합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체계적인 비교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전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보고서는 蘇聯, 東歐 사회주의 8개국, 中國, 베트남, 北韓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섯개의 개별 사례에 대하여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최근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분석함과 동시에, 각 사례들간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 가장 과학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평가되는 두개의 연구방법인 歷史的 接近法과 比較社會的 接近法을 같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방법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방법은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조건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켜 그 나라의 歷史的 特殊性(historical specificity)을 밝혀낼 수 있게 하는 접근법이다. 比較社會的 接近法(cross-societal approach)은 밀(J. S. Mill)의 차이법과 일치법에 의해 변수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판별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역사적·비교사회적 분석을 통하여 사례별로 역사적 조

망을 하며 동시에 사례간의 요인비교를 할 수 있어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普遍的 요인의 판별과 아울러 북한체제가 갖는 社會主義的 普遍性과 北韓만의 特殊性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유형들을 밝혀내고 아울러 향후 북한체제 변화의 방향과 특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II. 改革·開放, 體制轉換 및 變化의 概念

기존의 연구와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략 세가지 유형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를 이 글에서는 체제내 변화 또는 체제내부의 개혁·개방을 경험한 사례(change within the system)라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내적인 측면의 변화를 지칭하기 위하여 개혁, 대외적인 변화를 지칭하기 위하여 개방이라는 말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대체로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급진적인 정도의 상황들을 의미하지만 이 글에서는 1950년대 후반 東歐에서 일어난 변화들도 개혁·개방의 현상이라고 본다. 즉 개혁·개방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¹⁾ 고전적인 사회주의의 형태, 또는 스탈린주의적 社會主義에서의 離脫(shifting

from the classical system)을 의미한다고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고전적인 사회주의체제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정, 공산당 중심의 권력구조의 변화, 국가소유제도의 완화,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기업의 자율화, 사회적 자율화 등의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다원주의적 요소로 이행하되 사회주의체제는 유지되는 정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유형으로서 소련과 東歐 諸國처럼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다가(change within the system) 사회주의체제를 완전히 또는 대폭 폐기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를 이 글에서는 體制轉換 또는 體制崩壞(change of the system)라고 본다.

셋째 유형으로서 체제전환은 물론 中國이나 베트남 정도의 개혁·개방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로서 고전적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는 경우인데 북한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변화라는 개념은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적인 의미에서 古典的 社會主義體制로부터의 離脫 또는 修正(shifting from the classical socialism)을 의미한다. 變革, 革命과 같은 개념은 문맥에 따라 쓰일 수도 있겠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체제의 개혁·개방이 매우 미약한 북한의 변화를

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383.

전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체적인 분석의 관심은 개혁·개방의 과정과 그 요인 분석에 두어질 것이다.

Ⅲ. 分析의 焦點

위에서와 같이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의 개념이 정의된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연구문제는 왜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의 전환을 경험하였고,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體制內 變化만을 경험하였으며, 또 왜 북한과 같은 나라는 체제내의 변화조차도 미미한지를 답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의 제Ⅲ부 사례분석 부분에서는 역사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歷史的 特殊性(historical specificity)을 부각시키는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을 상호 비교하여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歷史的 普遍性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시 적용할 역사적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되는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사회주의 각국에서 경제의 위기적 구조 및 사회적 정치적 갈등구조 생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주의 각국의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내용 및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한 사례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제Ⅳ부에서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체제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형식적 분석의 방법이 역사적 분석법과 비교사회적 방법이라면 그 내용물을 구성하는 것은 政治經濟學的 接近法(political economy approach)이다. 사회주의체제 변화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전체주의 이론, 엘리트 갈등이론, 근대화이론 등의 패러다임을 선호해왔다. 이 연구에서 채택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경제성장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대내외적, 구조적 요인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歷史構造的(historico-structural) 설명을 하는 사회과학의 한 패러다임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생산양식의 하나로 파악했듯이 자본주의에 상반되는 사회주의도 생산양식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주의 각국의 개혁·개방의 핵심적 내용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부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접근법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은 주로 자본주의권의 제3세계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발전되었으며 종속이론, 계급구조이론, 국가이론, 세계체제이론 등 정교하게 정립된 개념들을 사용하는 매우 설득력있는 이론이다. 이 패러다임은 문제의 본질을 경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세계체제 그리고 경제 등 제반 구조적 상황적 변수를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분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 제3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政治經濟學

的 패러다임을 적절히 변용하여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고자한다. 이 視角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Ⅱ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第Ⅱ部

社會主義體制的形成과 變化를 보는 視角

빈 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되었다고 단순화할 수는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변화는 각기 상이한 역사적 전통과 역사적 과정을 거쳐 상이한 귀결점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론들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Ⅱ부의 目的은 매우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古典的 社會主義體制의 형성 및 개혁·개방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주요 변수들을 찾아서 그 변수들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일반화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주요 개념들은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등장 배경으로서의 追擊發展 전략의 개념,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基本 假定(assumption),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개념, 시민사회 및 사회세력의 개념 등 이다.

이들 개념들이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변화의 과정에서 행한 역할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 경험을 예시하기도 하면서 각 개념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나의 논리적 연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제Ⅱ부의 목적은 이 보고서의 분석틀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入門의 概念(sensitizing concept)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I. 追擊發展 戰略으로서의 社會主義體制의 形成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모순

을 비판하고 인간의 해방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이상적 대안적 체제에 대한 理論體系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등장한 현실 사회주의는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古典的인 社會主義 理論과는 괴리되었다. 사회주의체제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 러시아의 1917년 혁명이나 그 이후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 중에서 마르크스가 예견한 방식으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체제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自生的 革命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강제에 의해 사회주의체제가 등장한 경우도 많다.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하면 社會主義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階級葛藤의 결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자본가계급 국가를 전복하여 등장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후진적인 러시아였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가난하며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이들 나라들은 2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농업사회이며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 소작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적 기술과 근대적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부문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정치적으로는 議會民主主義를 발전시킨 나라는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나라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이거나 군사적 점령하에 있거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대국에 점령되거나 종속된 상황에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적에 대항한 전쟁, 내전, 게릴라전, 또는 연이은 蜂起 등을 경험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先進資本主義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경우는 하나도 없다.”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가 강요된 대부분의 동구 국가를 제외하고 혁명이 내부에서 발생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쿠바, 니카라구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고 1925년의 조선공산당 결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또한 월러스타인²⁾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과는 반대로, 反資本家 階級の 혁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周邊部³⁾ 피지배계급의 反帝國主義 革命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레닌(Nikolai Lenin)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의미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레닌에 있어서 러시아혁명은 착취당하는 식민지국가와 착취하는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투쟁인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감행한 민족해방투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22~23.

2) Wallerstein Immanuel,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_____, *The Capitalist World-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를 中心部(core)－半周邊部(semiperiphery)－周邊部(periphery)로 나누어 각 체제간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설명했다. 중심부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주변부에는 제3세계와 후진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되며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선진국을 追擊發展⁴⁾하고자 하는 後進國 경제발전의 전략개념으로 사회주의의 생성을 설명하는 쟁아스(Dieter Senghaas)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서 있는 쟁아스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경쟁력에 밀려 주변화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으며, 발전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이제까지 주변부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追擊發展을 위한 발전전략의 지주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는 社會主義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조건 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는 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주변화의 결과 제3세계는 대체로 독자적인 생산재와 기술을 발명하고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곳의 동일한 재화를 자국의 욕구에 적응시키는 능력은 상실된다. 跛行된 성장과 확대되는 대중적 빈곤간의 辨證法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이 생겨나며 이로 인해 대안적인 사회정책의 잠재적인 추종자와 집행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사회주의자에게는 周邊化된 사회들을 지속적인 주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응집성있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다시 가속화된 追擊發展을 가

4) 사회주의적 추격발전이란 경제적으로 후진 사회인 사회주의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 잡아 자기중심적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주의를 추격발전의 한 전략적 체제로서 파악한 사람은 쟁아스이다. Dieter Senghaas, *Von Europa I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Frankfurt: edition suhrkamp, 1982), 한상진·유팔무 譯,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1990).

능하도록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조건 속에서 대안없는 발전정책으로 된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분화되고 균형잡힌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산파와 안내원의 기능을 한다.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사회전체를 규정하는 힘이 되는 환경조건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 또는 대체로 전쟁을 통해 조건지어진 침예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⁵⁾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여 追擊發展(catching up) 하는 것이었다.⁶⁾

월러스타인과 쟁아스의 추격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 개념의 근원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 우월론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마르크스-엔겔스는 자본주의는 점차 生産力 發展을 저해하며 오직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조건, 즉 사회주의적 조건만이 생산력의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보다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레닌에게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를 폐지해야 生産力이 발전한다는 사회주의적 경제합리성론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다.⁷⁾ 즉

5) 위의 책, p. 217.

6) 사회주의를 추격발전 전략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고전적인 사회주의자로서 마르크스-엔겔스, 레닌 이외에도 쟁아스를 포함하여 다수이다. W. Brus and K.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22; Ota Sik, "Socialism: Theory and Practice," in Ota Sik, ed. *Socialism Today?: The Changing Meaning of Socialism* (New York: St. Martin Press, 1991), pp. 2~3;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 18.

7) Sik, "Socialism," pp. 2~3.

사회주의 우월성의 논리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 生産關係보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더욱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며 경제적 효율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속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사적 소유에 의한 경쟁, 착취계급의 기생적 소비 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하에서는 계획, 사회적 소유 등에 의하여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경제행위의 개별적 단위를 범사회적 전체로 통합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의 기준을 私的인 수준에서 社會的인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며 미시적인 수준에서 거시적인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 목표의 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행위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정하는 중앙계획경제가 사회주의의 자연스런 귀결로 되는 것이다.⁹⁾ 착취로부터 해방된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노동자보다 더욱 열광적이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生産性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감독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이다.¹⁰⁾

古典的 社會主義理論에서 사회주의 우월성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 주장된 것은 道德的 優越性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도덕적 우월성은 곧 경제적 우월성과

8)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50~51.

9) Brus and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pp. 4~5.

10)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 50.

병행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사회주의하에서는 노후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足鎖로부터 生産力 解放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¹¹⁾ 사회주의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는 더욱 발전된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個人主義와 利己主義를 극복하고 공동의 서어비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개조한다는 것이다. 이思想은 스탈린주의에서 나타나지만 毛澤東思想에서 더욱 발전되었다.¹²⁾

사회주의의 도덕적·경제적 우월성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 개념에 기초해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는 임금노동에 의한 인간착취에 종언을 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경제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生産手段의 사회적 소유는 생산수단이 적용되는 방식이나 생산의 과실이 分配되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하면 자본주의를 쉽게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예견과는 다르게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또 하나의 방식은 소련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경우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소련에 의하여 강제이식되었다.¹³⁾ 東歐 諸國은 2차

11) V. I. Lenin, "Die grosse Initiative," *Schriften*, vol. 29, Sik, "Socialism," p. 1에서 재인용; Brus and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p. 3.

12)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 51.

13)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의 공동의 적인 파시즘을 이기는데 전

대전중에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감에 따라 반나찌 저항운동과 해방의 과정에서 소련에 점령되거나 또는 반나찌 민족해방운동의 결과로서 종전과 더불어 공산화되었다. 동구 제국의 공산정권 수립과정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⁴⁾ 첫째, 다음 5개국의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련군의 점령이 共産化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들이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의 경우, 소련군의 점령이 없었다면 정치적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전혀 공산화의 소지가 없던 나라들이다. 헝가리와 불

넘하면서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했던 서방연합국측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소련은 동구지역의 소비에트화라는 부동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다.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독일이 패배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며 계속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스탈린은 전후 동구의 공산화를 직접 주도하기 위하여 대전중에 이미 이들 지역 내에서 소련의 통제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반나찌 저항세력을 견제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소련은 대전중에 이미 동구의 공산화를 위해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대전중에 이미 특수학교에서 동구출신의 ‘혁명의 아들’들을 다년간 교육훈련시켰다. 붉은 군대를 쫓아 제나라에 돌아간 이들 모스크바파 공산당 간부들은 미리 마련된 정권인수계획과 그때 그때의 스탈린의 구체적 교시에 따라 움직여 결국 이들 나라의 공산화의 주역이 되었고 공산화가 성취된 후에도 권력의 핵심으로서 스탈린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 안병영,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 전후 공산화과정,” 안병영·오세철 공편,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서울: 박영사, 1986), pp. 107~116.

14) 자세한 분석은 위의 글, p. 113 참조.

가리아의 경우, 소련군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의회주의적 정치과정이 있었던 측면은 있다. 이것은 이들 나라에 反蘇의 감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소련이 전략적 차원에서 위장된 의회주의적 과정을 사용했던 것에 기인한다.

둘째,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비교적 소련의 군사적 위세가 직접 작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회주의적 정치과정이 비교적 늦게 까지 용인된 나라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38년 뮌헨회담에서 영국, 프랑스의 對獨 유화정책의 희생이 되어 끝내 나찌독일에 의해 병합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대서방 배신감과 나찌의 폭압에서 해방시켜준 소련군에 대한 호감이 함께 작용하여 사회주의화가 체코의 시대정신으로 되는데 이바지하였다.

셋째,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경우는 자력에 의한 공산화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들 나라의 공산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 자생 공산주의자들이 나찌 점령군과의 국민전과 왕권복고주의적 애국주의 세력과의 內戰을 함께 치루는 이중전의 과정에서 농촌에 기반을 둔 게릴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결과 공산화된 경우이다. 공산주의자의 권력장악과정에서 소련군의 군사적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이 경우도 이들 나라가 소련의 세력권내에 있었다는 사실이 공산화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어떠한 형식으로 사회주의화 되었던간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나라는 대부분이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답습하였다. 따라서 동구의 경우도 자생적으로 사회주의가 등장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離脫과 追擊發展 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든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모두 인민들에게 추격발전을 약속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격차는 머지않은 시점에서 극복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추격발전한다는 약속은 나라마다 형식은 달랐지만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체제우위의 확고한 신념,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보다 나은 삶이 머지않아 온다는 확고한 신념, 약속한 미래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⁵⁾

II. 資本主義 世界體制의 對應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체제의 등장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breakaway)이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적대적인 세력의 생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對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사회주의권을 봉쇄하고 고립시켜 枯死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봉쇄는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17년의 혁명 직

15)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53~54.

후부터 미국은 소련의 혁명을 억제하기 위해 14개국의 연합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미국군은 소련의 북부와 동부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¹⁶⁾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을 본격적으로 봉쇄시킨 것은 미국이 세계체제에서 확고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은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대소정책의 기초로서 ‘封鎖’ 독트린을 채택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소련에 대해 모든 점에서 끊임없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소련의 정치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략이었다. 1945년 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몇 주 전에 이미 美國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 전쟁이 종식된 바로 그날 무기대여법에 기초한 무기원조는 갑자기 중단되었고 이미 소련으로 향하고 있던 몇 척의 선박은 도중에 되돌아갔다. 다액의 재건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깨졌다. 게다가 말할 것도 없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는데 이는 2차대전 최후의 집중 폭격이 아니라 냉전을 예고하는 최초의 집중 폭격이었다. 원폭의 투하는 적과 동맹국(여기서는 소련) 양쪽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⁷⁾

세계체제가 본격적으로 냉전으로 구조화되는데 기여했던 미국의

16) 자세한 논의는 서재진, “세계체제이론과 소련사회의 변동,” 『사회비평』 제4호 (1990), pp. 298~301 참조.

17) G. Arbatov and W. Oltmans, *The Soviet Viewpoint* (London: Zed Books, 1983), pp. 84~88.

소련에 대한 주요 조치들로서 봉쇄정책, NATO (1949년 결성), Marshall plan (1947년 결성), Truman Doctrine, 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1949년 결성)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령 서방 측의 코콤이라는 것은 아무도 코콤의 규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소련에 대한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하려고 설치된 기구이다. 코콤은 무기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첨단기술과 장비가 舊蘇聯 등 동구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나토의 산하기구로 탄생하였다. 코콤은 그동안 첨단기술분야의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품목 리스트를 작성, 동구권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서방의 기술우위를 지키는데 일조해왔다.¹⁸⁾

다른 여러 가지 압력들 가운데 군비경쟁은 소련을 피폐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이 독트린은 1950년에 작성되어서 1975년에 공표된 ‘봉쇄’의 공식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문서(NSC-68)에 잘 나타나 있다. “현존하고 있는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종합적 군사력이 없다면 봉쇄정책은 - 이는 사실상 계산에 기초해서 점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 한낱 정책상의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제안되어 적극적으로 채택된 수단 가운데는 “對蘇 충성으로부터의 집단적 이탈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공공연한 심리전”과 “일부 선정된 전략적 위성 제국에서의 동요나 반란을 유발, 지

18) 금년 11월 17일 아일랜드를 제외한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15개국과 일본 및 호주 등 17개 회원국은 헤이그에서 회담을 갖고 코콤의 해체를 결의하였다. 「中央日報」, 1993. 11. 17.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전쟁과 정치, 심리전 분야에서의 비밀수단에 의한 대담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와 작전의 강화...”가 있었다.¹⁹⁾ 이러한 조치는 모두 최종적인 목표, 즉 소련의 영향력을 후퇴시켜 소련체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美國은 방대한 군비강화와 군비경쟁을 주도했다. 미국의 군비강화와 군비경쟁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이탈자에 대한 응징과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蘇聯도 범세계적인 세계 대국이 될 때까지 군사력을 증강하고 지구상의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도 그 병력을 투입할 능력을 지니기에 이르렀다.²¹⁾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美·蘇間의 군비경쟁은 소련을 체제붕괴에까지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Ⅲ. 社會主義的 追擊發展의 失敗

자본주의에 대한 추격발전의 전략으로서 등장한 사회주의가 추격발전에 실패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이 절에서는 外的 要因으

19) Thomas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eds.,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p. 435~446.

20) Ibid, pp. 389, 434.

21) Silviu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 (New York: Praeger, 1987), p. 145.

로서 앞절에서 살펴본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사회주의에 대한 고사 전략과 內的 要因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내재적인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논자들이 주장하는 대로²²⁾ 겉으로는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와 관련되게 된 많은 사회주의적 제도들은 실체는 외국 군대의 침략 및 그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對사회주의권 전략에 對抗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적 적응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소련의 체제가 탄생한 냉엄한 국제적 조건이 군국주의적 제도와 스탈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²³⁾ 브루칸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지적한다. 1917년 혁명 후의 러시아가 백군과 혁명의 억압을 기도한 14개국 자본주의 국가의 간섭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스탈린 치하 수십년에 걸친 급속한 공업화와 강제적 집단화의 시대는 자본주의에 의한 포위, 경제봉쇄, 어린 소비에트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압력과 같은 적의에 가득찬 국제환경 속에서 전개되었다.²⁴⁾ 고립된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戰時共產主義體制였으며 경제적으로 명령경제체제, 정치적으로 경찰국가로 나타난 것이다. 1917년 이후 지금까지 소련은 경제적 봉쇄나 경제적 압력을 경험해 왔다. 소련이 서방측에

22) Sheila Fitzpatrick, *The Russian Revolution, 1917~193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Jack Snyder, "Soviet Economic Crisis: The Most Immediate Stubling Block and the Next Step," *Monthly Review* (October 1989), p. 11.

23) Snyder, "Soviet Economic Crisis," p. 12.

24)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 p. 121.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을 피하면서 자체의 경제나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온 것은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외부적 강요 때문이다.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기까지는 소련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²⁵⁾

따라서 蘇聯의 경제체제가 戰時經濟體制로 특징지어지는 스탈린주의적 체제로 발전된 것은 부분적으로 자본주의권의 봉쇄전략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이 반자본주의 체제의 종주국이었기에 가장 철저하게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견제와 위협, 봉쇄를 받았다.

동유럽을 포함한 중국, 북한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한 원인으로 는 세계체제의 봉쇄도 한 원인이지만 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에도 기인한다. 콜라코프스키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는 처음부터의 실패였다는 것이다. 경제의 영역을 당과 국가의 명령으로 대체하여 버렸으며 국가의 주도와 명령에 의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경제행위도 금지되어버린 것이다. 즉 경제를 폐기하고 정치만 강화하였다. 경제가 살아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기술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켜버린 것이다. 價格이 계획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가격을 산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동기유인을 말살하여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경제적 요인을 물리적 강제로 대체하여버린 것이다. 사회주

25) Arbatov and Oltmans, *The Soviet Viewpoint*, p. 62.

의란 이름하에 노예제와 농노제가 부활한 것이다.²⁶⁾

오타 시크²⁷⁾도 현실 사회주의는 잘못된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실패는 必然的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관리자, 그리고 협동조합이 사회적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가정되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은 개인적인 이익을 전체사회의 이익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는 개인의 이익이 社會全體의 이익에 우선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분업체계가 존재하고 소비품의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한 개인은 최소의 노동으로 최대의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의 질적 개선이나 기술혁신보다는 혁식적인 목표량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생산구조를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 社會主義의 모순은 사회주의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이론적 모순에 기인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체계 및 동기유발체계와 그들이 경제행위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세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²⁸⁾ 첫째,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이론과 생산가격이론은 자본주의적 생산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을 간과하였다. 소비자가 수많은 종류의 상품

26) Lezek Kolakowski, "Mind and Body: Ideology and Economy in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Kazimierz Poznanski, *Constructing Capitalism* (Oxford: Westview Press, 1992), p. 9.

27) Sik, "Socialism," pp. 9~11.

28) Ibid.

에 대한 사용가치를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시장의 메카니즘을 간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서 시장메카니즘을 폐기하고 계획으로 대체하게 한 것이다.

둘째, 마르크스는 企業家의 資本主義的 擄取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관료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술혁신, 생산혁신, 모험적 창의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업가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기업가를 擄取의 主體로만 보았지 기업의 주체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利潤率 下落의 경향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이 감소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이윤율 하락의 경향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주관적인 願望的 思考(wishful thinking)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사회주의가 추격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²⁹⁾

이러한 사회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오타 시크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자본주의에 대량실업의 문제, 주기적인 경제위기, 불평등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오타 시크에 의하면 사회주

29) 자본주의가 1920~1930년대의 위기를 극복하여 고도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Eric Hobsbawm, "Goodbye to All That," in Robin Blackburn, ed. *After the Fall: The Failure of Communism and the Future of Socialism* (New York: Verso, 1992), p. 119 참조.

의는 사회주의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당이나 지도자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에 내재하는 체제 자체의 缺陷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⁰⁾ 사회주의가 목표로 했던 자본주의보다 빠른 생산력의 발전도 개인적 사회적 요구의 만족도 성취하지 못했다. 사회주의체제의 필연성을 정당화할 아무런 증거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점점 더 자본주의에 뒤떨어졌다. 특히 질적 성장, 생산력의 혁신, 기술과 과학의 진보의 분야에서는 더 심하였다. 자본주의와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의 결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사회주의적 생산은 자유시장경제보다 효율성이 낮아서 같은 양의 생산을 위하여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원자재,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投資가 요구되었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생산요소의 양을 늘리는 외연적 성장만 있고, 기술혁신, 생산요소의 질적 성장을 통한 내포적 발전은 없다. 생산물의 품질이나 소비자의 기호와는 무관하게 시멘트 생산량이나 신발 생산족수 등과 같은 물리적 指標에 의거한다.
- ② 사회주의적 생산은 소비자의 수요를 외면하고 오히려 비필수품 목만 생산한다.
- ③ 사회주의적 생산은 西歐 나라의 제품에 비해 질적·기술적 수준이 매우 낮다.

30) Sik, "Socialism," pp. 6~7.

- ④ 사회주의적 생산은 기술혁신의 정도가 낮아서 신제품의 생산이 취약하며 상품의 품질이 엉망이다.
- ⑤ 사회주의적 생산에서는 서구에 비해 소비품의 비율이 생산재보다 매우 낮다. 다시 말해 생산재 생산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위에서 말한 낮은 생산효율의 필연적인 귀결이다.³¹⁾

사회주의 경제이론과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경제적 결함들을 간과하거나 은폐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의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의 요구는 점점 더 박탈되게 되며 생활수준도 서방사회에 비해 더욱 뒤떨어질 것이다. 蘇聯이든 東歐 사회주의 국가이든 붕괴된 사회주의체제에는 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貧困의 동굴이었다.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공통점은 경제적 토대가 무너져 내렸다는 점이다.

소련 및 동구의 시기별 경제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²⁾ 1950년대에는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 그 밖의 자원들을 동원하여 인적 및 물리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다. 인민들에게 강제저축을 부과함으로써 외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원을 철강, 석탄, 기계산업 등의 중공업에 집중투여한 결과 성장율의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비

31) Howard Davis and Richard Scase, 한상진 역, 「체제비교의 사회학: 서구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90), p. 150; Sik, "Socialism," pp. 6~7.

32) David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and the Cold War* (Oxford: Westview Press, 1992), pp. 30~33.

재의 생산이나 수입보다는 중공업에 더 비중을 두었다.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이전까지의 밀어붙이기식의 外延的 産業化政策은 점차 어렵게 되었다.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사회들도 外延的 經濟(extensive economy)에서 內包的 經濟(intensive economy)³³⁾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기형적인 계획관료제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불합리한 정책들, 사회주의 세계체제내 分業의 미발달로 인한 경제효율성 결여, 누적된 소비욕구 불만 등은 사회주의 발전의 經濟的 正當性을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의 위기가 서로 상승작용하여 체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인적 물적 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버린 것이다. 농업의 협동화가 끝난 시점에서 도시로 이주시킬 농촌의 유희노동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시인구는 이미 과잉이었다.

1960~1970년대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잠재화되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동구 유럽 국가들도 蘇聯의 리베르만 개혁의 방식을 따라서 경제분권화를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둘째, 동구 국가들의 경우는 경제상황이 소련과의 무역량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소련으로부터 에너지와 원료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수입하고 서방세계의 상품과는 경쟁

33) 외연적 성장은 노동력과 자연자원의 투입에 의존한 양적 성장을 의미하며, 내포적 성장은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 안되는 소비재를 소련에 수출하였던 것이다. 셋째, 1970년대 동안 동구 국가들은 일부 관대한 서방은행의 융자와 서방과의 무역 증가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조건을 발견하였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의 기간 동안 이 모든 안전밸브는 닫히기 시작하였다.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관료와 기업관료들로부터 抵抗을 받게 되었고 정치적·경제적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없이 별효과가 없었다. 소련과의 유호적인 交易條件은 1970년대 말이 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소련이 자신의 경제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동구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의 오일가격이 1973년 이후 급등하였다.

1980년대 들어 동구 국가들이 1970년대에 빌린 외채에 대한 채무변제능력이 약화되면서 서방의 금융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소련 및 東歐 諸國들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GNP성장율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 외채가 많아져서 수출액의 전부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할 정도였다. 서방의 자금줄이 끊어지면서 서방의 소비품이 수입될 수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높은 성장율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경제개혁으로 야기되는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經濟危機로 인해 政治的 正當性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³⁴⁾ 경제적 위기는 對內外的으로 결정적인 위협요인으로 변화되었다. 기술발전의 침체는 對外的으로 軍事力 均衡에 해악적인 요인으로 작

34)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p. 33.

용하였으며, 對內的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정치적 정당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⁵⁾ 이하에서 경제위기가 사회주의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V. 市民社會의 發達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거나 體制轉換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발달하였지만 그 영향은 사회주의권 전체에 미쳤다. 사회주의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야기시킨 결과는 인민대중의 心性(mentality)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대체로 빈곤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東獨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제법 잘 살았지만 루마니아의 경우는 매우 비참한 정도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붕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체제의 붕괴를 야기한 것은 상대적 또는 절대적 물질적 만족의 정도가 아니라 心性의 변화이다. 일단 대중적인 운동이 시작하면 모든 종류의 경제적 불만이 표면화되지만 체제전환의 진정한 動因은 心性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이다.³⁶⁾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란 곧 反社會

35) Brus and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p. 34.

36) Kazimierz Poznanski, ed., *Constructing Capitalism: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and Liberal Economy in the Post-Communist World*

主義的 또는 反體制의 理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의 발전의 배경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 市民社會 發達의 背景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반체제운동은 불가능하다. 비판적인 사상이 표출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율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완화되고 국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後期全體主義(post-totalitarianism) 사회에서 등장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적 전통과 사회통제의 차이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장은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사회분화와 이익집단이 형성되면 자율적인 사회결사체가 성장한다. 권위주의적 정권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결코 환영하지는 않으며 갖은 수단을 다하여 억압하지만 社會構造的 大勢는 어찌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통제의 완화와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쇠퇴의 결과로서 야기된 후기전체주의적 질서 속에서 형성되는데 민초의 자발적인 주도, 즉 비정부차원의 주도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自律的 構成體(ensemble)이다.³⁷⁾

(Oxford: Westview Press, 1992), p. 11.

37) Vladimir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가. 多元主義的 傳統과 反蘇, 反社會主義的 民族主義

경제의 실패에 기인하여 정치적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구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활발하게 발전된 배경으로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이 있다. 동구 제국들이 사회주의화된 것은 소련의 군사적 점령에 의하여 強制된 것이지 自生的 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유고와 알바니아와 같은 일부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그들이 원했던 사회주의는 소련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나찌로부터의 民族解放의 한 수단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이었다. 나찌 독일이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에 병합한 이래 1941년까지 2년 사이에 모든 동구권 국가들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독립을 상실하였거나(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영토보상을 이유로 추축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경우) 독일의 衛星國이 되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점령당한 동구 제국에서는 정치기구가 해체되어 國王과 官僚들은 외국으로 망명하고 나찌·파시스트에 대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³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敗亡함에 따라 동구 제국은 파시즘에서 해방되었지만 또 하나의 점령을 당해야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p. 170.

38) 반파시스트 저항운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紫 宜弘, “제2차대전 중의 저항운동,” 동구사연구회 편, 「격동의 동구현대사」(서울: 좋은 책, 1990) 참조.

했다. 동유럽의 종주국이 나찌주의 독일에서 스탈린주의 소련으로 대체된 것이다. 따라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反蘇 民族主義는 이러한 반나찌 저항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차대전중의 반파시스트 저항운동의 전통은 곧 反蘇·反社會主義 民族主義 저항운동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동유럽인들은 동유럽이라는 말까지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그들은 유럽에 속해 있었는데 스탈린에 의한 점령이 서유럽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그들을 단절시켜 그들의 역사와 희망과는 낯설은 소련의 전제주의에 복속시켜 놓았기 때문이다.³⁹⁾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 밀란 쿤데라가 1983년에 출판한 「중·유럽의 비극」이라는 책에 의하면 ‘東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유럽(여기서는 소련을 지칭함)보다는 서유럽에 속하며 단지 그 지역이 소련에 의하여 납치당하여 동유럽에 옮겨졌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⁴⁰⁾ 그만큼 이질적인 체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은 초기의 스탈린주의적 독재체제하에서는 깊이 억압되어 있었다.

나. 스탈린사망, 修正主義, 맑스·레닌주의의 正當性 喪失

반소·반사회주의적 저항운동에 불을 붙인 최초의 계기는 동구를 사회주의화시켰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사망(1953년 3월)이

39) Gale Stokes,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 10.

40)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pp. 39~40.

었다. 스탈린의 죽음은 동구 각국에서 이른바 ‘스탈린 체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한 후 스탈린주의로 알려진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헝가리에서의 위기적인 정치·경제적 政勢를 우려한 소련의 신지도부는 1953년 6월에 정책변화와 인물교체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때까지 한직에 머물러있던 농림장관 나지(I. Nagy)가 수상으로 기용되었다. 나지는 ‘신노선’으로 알려진 일련의 온건적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나 라코시가 당지도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의 입지가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폴란드는 스탈린 사망의 영향이 헝가리보다 뒤늦게 나타났다. 1953년 10월이 되면서, 소비재와 농산물의 공급부족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3년 봄에 공안국에서 黨의 지도급 인물을 감시하는 비밀임무를 맡았던 스비아틀로(Swiatlo)가 서방측에 망명하여 체제의 내막을 폭로함으로써 體制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도부 비판이 속출하고 비에루트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1955년 1월의 당중앙위원회총회에서는 지도부의 분열이 표면화되었다. 문화예술방면에서는 이미 문화매체의 보도자세에서부터 종래의 획일성이 약화되면서 社會批判의 論調가 강화되었다. 1955년 8월 지배층 내부의 虛僞意識을 고발한 바지크(A. Wazyk)의 장시 “어른을 위한 시”가 작가동맹의 기관지 「노바 그라투라」(새로운 문화)에 발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당내 청년조직이 발행한 학생대상 주간지 「뽀 뽀로스투」는 철학자 콜라

코프스키(L. Kolakowski)와 사회학자 호치펠드(J. Hochfeld)와 같은 개혁파 지식인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雜誌가 되기도 하였다.⁴¹⁾

특히, 1956년 제20차 共產黨大會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 이후 소련의 지도부에서도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흐루시초프의 연설은 스탈린에 대한 個人崇拜(cult of personality), 스탈린의 잔인성, 비인간성 그리고 그의 專制政權에 대한 센세이션널한 공격을 가하였다. 이 연설은 비밀연설이어서 소련에서 결코 공식적으로 출판된 일은 없으나, 서방에서 출판되었으며, 소련정치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다. 스탈린을 공격한 흐루시초프는 그에 대한 강요된 崇拜와 神格化는 맑스·레닌주의와 부합될 수 없으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단죄하고, 黨 지도를 1인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환원하며, 국민생활 전반에 레닌식의 민주주의가 깃들 수 있도록 혁명적 사회주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련이 결코 전제정치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한 이 연설은 어느 정도의 자유화와 시민생활의 개선을 의미한 내부개혁을 기약하는 것이었다.⁴²⁾

흐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 연설은 사회주의 이념의 도덕적 황폐

41)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동구사연구회 편,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좋은 책, 1990), p. 192.

42)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s, Growth and Dissolu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451.

화에 대한 고발이었고 스탈린주의적 동구 지배에 대한 반성이었다. 따라서 흐루시초프의 노선변화는 東歐 위성국가들의 반사회주의운동을 폭발적으로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찍부터 反蘇 민족주의 감정이 발달해 있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흐루시초프의 이 연설은 화약에 불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저항의 표출은 1956년 6월 폴란드의 공업도시 프즈난에서 일어났다. 식량부족과 경제상황의 피폐에 저항하여 일어난 示威가 民衆蜂起로 발전되었다. ‘빵과 자유’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하다가 폭동으로 발전하자 군대가 투입되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53명, 부상자 300명, 체포자가 323명에 달하는 이른바 프즈난 사건이 발생했다. 봉기는 다른 도시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정치적 개혁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스탈린당의 지도자 비에루트가 모스크바에 20차당대회 참가도중 사망하고 결국 티토주의자라고 숙청되었던 고몰카(Gomulka)가 지도자로 복귀하였다. 고몰카는 국민들의 눈에 소련에 대한 폴란드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비춰졌다. 고몰카는 폴란드식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로마카톨릭교에 대한 억압을 완화하였고 농업의 집단화를 폐기하였으며 소련인 국방장관을 해임하였다.⁴³⁾

헝가리의 1956년 사건은 훨씬 대규모 사건으로 발전되었고 결국은 蘇聯 軍隊가 투입되어 진압되었다. 당원, 지식인, 학생, 공장노

43)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p. 24.

동자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과 계급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不滿이 폭발하여 全國的 革命的 運動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적 혁명적 운동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지도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헝가리 사태는 노동자들의 반사회주의, 반소 민족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개입했고 또 소련군의 개입없이는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국적인 대규모적인 격렬한 시민봉기였다.

19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도 체코 내부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와 체코의 독자노선을 표방하고 개혁을 주도하자 소련은 군대를 동원하여 鎮壓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反蘇運動, 獨自路線 주장에 대하여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바로 이때 1956년과 1968년에 일어났을 것이다.

스탈린 사후 동구 사회주의체제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전의 테러에 의존하였던 사회질서가 점차 다원주의적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권력의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는 순간에 전체의 체제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權力의 기초가 문제적인 것이다. 첫째, 유고를 제외하고 어떤 국가도 大衆의 의지에 의하여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지배이념인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 격하운동과 1956년의 민중봉기를 계기로 설 땅을 잃게 되었다. 셋째, 야만적인 억압시대에 東歐 共產黨을 이끌었던 스탈린주의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엘리트들은 맑시즘을 하나의 교의적인 강령으로만 보고 공허한 송장으로 취급하였다. 단지 권력독점을 僞裝하기 위한 이념적 위장에 불과한 것으로만 레

닌주의를 활용하였다.⁴⁴⁾

소련의 修正主義 노선과 스탈린주의로부터의 이탈은 中·蘇間의 이념분쟁을 야기하여 사회주의 전체는 이때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의 과정은 시민 사회의 발전의 과정을 의미한다.

다. 西方의 介入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서방의 집요한 ‘浸透’ 전략이었다. 이것은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라는 소련과 동구 국가 및 서방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전개된 것이라는 데서 아이러니컬하다. 1954년 소련이 처음으로 제안하여 시작된 CSCE가 오랫동안의 협상끝에 이루어진 최초의 합의가 1975년의 헬싱키선언(Helsinki Agreement 또는 Accords)이다. 미국, 캐나다, 소련과 동구를 포함한 유럽의 35개국간에 채택된 이 승意書를 통해서 소련은 2차대전 이후의 국경을 서방으로부터 확인받는 국경불가침원칙을 관철하고자 하였고, 대신에 서구 국가들은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를 명문화하여 내정간섭할 것을 기본 의도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 선언의 제1부에서 쌍방이 합의한 10개 지도원칙 중 7번째의 것이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인권존중에 관한 원칙이다. 이 선언의 제3부에서는 인

44)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p. 87.

도 및 기타 분야의 협력으로 첫째, 인적 교류에 대해 참가국들은 사람, 시설, 관련 기관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을 쉽게하기 위해 ① 이산가족의 접촉과 정기적인 방문, ② 가족재회의 적극지원, ③ 異國市民間의 결혼시 출국신청서에 대한 인도적 고려, ④ 개인적 및 직업상의 여행편의 제공, ⑤ 개인 및 집단의 여행편의 제공, ⑥ 청소년 교류, ⑦ 스포츠 교류, ⑧ 인적 접촉의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둘째, 정보에 관해서는 외국기자에 대한 취재활동 완화와 외국인의 초청강연, 세미나, 원탁회의 참가 편의제공, 외국간행물 배포확대, 방송필름 등 정보배포의 개선에 합의하였다. 셋째, 교육과 스포츠에서의 협력교류를 다루었다. 이 인도적 분야의 제3부는 제1부의 기본적 자유의 존중 원칙과 더불어 서방측이 가장 관심을 둔 분야였다. 특히 서독은 이를 원용하여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동독내 주민의 인권보장을 요구하였다. 사실 東獨은 CSCE의 국제적 약속 때문에 인권과 인적 교류에 협조적으로 완화된 신속한 조치를 취해왔다. 제1부의 인권의 조항은 서방이 소련과 동구 국가들에게 인권을 포함한 내정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제3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항은 사람, 문화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통한 파급효과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을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⁴⁵⁾

소련에서 반체제는 레닌과 스탈린 치하에서 분쇄되었으며 흐루

45) 이장희,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원, 「統一問題研究」(1989 가을), p. 43.

시초프 시대에 간헐적으로 등장하였으나 1970년대에 정치적 반체제가 부활하게 된 것은 1975년의 이 헬싱키선언에 기인한다. 헬싱키선언을 통한 서방국가들에 의한 사회주의권의 인권문제 제기는 사회주의권의 反體制運動에 큰 자극을 주었다.

소련에서 헬싱키조약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인권유린 사례를 사미즈다트(samizdat)라고 불리는 地下新聞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물리학자 사하로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추방되었지만 그들은 1980년대의 더욱 본격적인 반체제운동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비슷한 단체들이 동구의 여러 나라에서도 결성되었다. 소련에서 보다는 더욱 강하게 오래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스탈린주의하에서 기간이 보다 짧았고 2차대전 전의 민주주의의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체제인사는 대체로 소규모의 지식인 그룹에 한정되었다. 동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77헌장이다.⁴⁶⁾

1975년 8월 헬싱키에서 조인된 동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헬싱키 최종 決議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헬싱키 결의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再檢討會議가 계속되었다. 이 재검토회의가 결실을 보게된 것은 1989년 1월 15일 Wien회의에서 동서간의 무역증대, 여행 및 인민의 자유 등 인권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CSCE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고르바초프

46) Stokes,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p. 150;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p. 36.

가 집권한 이래 소련이 정치·경제 개혁을 위해 자체군사력 감축이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서방측이 요구하는 핵무기 및 화학무기의 협상대상 제외와 인권문제 포함을 수락함으로써 커다란 장애요소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⁴⁷⁾ 이 Wien협정은 인권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東歐圈 국가들에게 광범한 인권의 존중을 촉구하고 그 보장을 받아내었다. 솔츠(George Schultz) 당시 미국무장관은 이 Wien회의의 폐막에서 이제 冷戰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 해 1989년에 베를린장벽은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으로써 冷戰은 종식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의 한 원인이 시민사회의 발달에 있다면 시민사회의 발달을 촉진한 것은 CSCE를 통한 서방의 내정간섭이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서방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봉쇄, 군사적으로는 군비경쟁, 사회적으로는 이념적 침투를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을 枯死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2. 市民社會 發達의 理論的 基礎

東歐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은 사회주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적 개념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곧 反社會主義의 저항이론이었다. 반체제운동에서는 어느 나라의 경우든 지식인의 역할이 매우

47) 이장희,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p. 60.

중요하였다. 동구에서 지식인들이 특히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탈린주의적 통치 시대를 통하여 지식인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았다. 둘째,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스탈린주의에 의하여 짓밟힌 民族主義的 價値를 보존하는 주체로 생각하였다. 셋째, 1848년 헝가리의 민족주의적 봉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혁명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계몽엘리트로서 獨裁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자임하였다. 넷째, 맑시즘의 가치관을 신봉하던 일부의 지식인들도 현존 지배계급의 가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⁴⁸⁾

이하에서 시민사회 발달에 영향을 미친 東歐 市民社會 理論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77헌장을 주도했고 1989년에 체코의 대통령이 되었던 하벨의 논문은 체제저항운동을 위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前提를 잘 부각시켰다.⁴⁹⁾ 하벨의 후기 전체주의 시대에 대한 분석은 브레즈네프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매우 분명히 통찰력있게 보여주었다. 하벨에 의하면 브레즈네프 체제는 스탈린 시대와 같이 야만적인 방법으로 個人을 공격하지는 않으며 후기 전체주의에서는 인민재판, 공공연한 테러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없다. 이 체제는 망해먹은 체제라고 만인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넘어뜨리지는 못한다. 하벨에 의하면 이 체제가 존속되는 이

48)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p. 69.

49)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Powerless* (New York: M. E. Sharpe, 1985), pp. 30~31.

유는 상징과 심볼을 조작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後期全體主義 體制에서 이데올로기가 모든 영역에서 인민들을 간섭한다. 그 까닭은 이 체제가 위선과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료제에 의한 정부가 인민에 의한 정부라고 불린다. 노동계급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奴隸化되어 있다. 인간에 대한 억압이 인간의 해방으로 표현된다. 동원을 위한 권력사용이 권력에 대한 大衆의 統制로 불린다. 권력의 恣意的 사용이 권력의 발전으로 불린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최고형태의 자유로 불린다. 연출된 선거가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로 불린다. 자율적인 사상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불린다. 정권이 이러한 모든 형태의 자기거짓말에 매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僞裝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도 위장해야 한다. 현재도 위장해야 한다. 미래도 위장해야 한다. 통계도 위장해야 한다. 전능한 경찰을 안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인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다.⁵⁰⁾

하벨은 후기전체주의는 대중들의 도덕적 무감각이 후기전체주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라고 보았다. 이데올로기가 거짓말투성이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慣性的으로 용인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후기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된다고 보았다. 권력층이나 일반대중 모두 과거의 맑스·레닌주의의 신화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 아무도 표면적으로 공공연히 말하

50) Ibid., pp. 30~31.

지는 않는다. 하벨에 의하면 후기전체주의 체제는 이전의 스탈린적 전체주의의 희생자들을 동조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문제는 대중들의 도덕적 취약성, 타성, 정치적 무관심에 있다기 보다는 기존체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⁵¹⁾

후기전체주의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벨은 인민대중에게 自己解放의 전략을 가르쳐주고 역사에 대한 자포자기 및 無力症에 빠진 인간들에게 대안적 전략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의 논지는 순종의 논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자유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억압될 수 없는 것이라는 解放의 理論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전략을 그는 權力없는 者들의 權力(power of the powerless)이라고 불렀다.

하벨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대중영역을 탈이데올로기화 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인간의 기본권인 자율을 방해하는 동원의 정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방어함으로써 시민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연대를 재건설하고 보편적인 허위의 정치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의 自我解放을 위한 투쟁은 공식적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권리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후기전체주의 체제는 순종, 획일, 조직화에 기초해 있지만 시민사회는 창의성, 개별성, 독창성으로부터 나온다.⁵²⁾

51)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pp. 134, 138~139.

52) Ibid., pp. 133~37.

동구의 시민사회 운동에 이론적 논리를 제공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 미츨니크(Michnik)의 新進化主義(New Evolutionism)이다.⁵³⁾ 미츨니크의 신진화주의는 기존 체제에 대한 폭력적 격변이나 급작스런 파괴 대신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주장하였다. 소비에트제국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소련이 東歐를 단순히 제국의 延長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프라하의 봄의 비극적 종말을 통해서 볼 때 기존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소련의 개입을 불러올 뿐이라고 인식하고 지배계급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 대안적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즉 기존의 조건 속에서 市民自由를 확대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미츨니크의 신진화주의는 지배자의 교체보다는 자율사회에 대한 변화의 이론이다. 신진화주의에 의하면 사회는 전체주의의 마비상태로부터 회복될 수 있으며 권력자와 권력없는 자 사이의 대결없이도 개인은 점차 자유로운 시민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신진화주의는 폴란드의 민주화 저항운동의 형성에 이론적 틀이 되었다.⁵⁴⁾ 시민사회 운동의 전략은 점진주의, 비폭력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폭력을 사용하여 기존의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다. 사회변동은 항상 暴力을 수반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변동이 다양

53) Adam Michnik, *Letters from Prison and Other Essay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28.

54)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pp. 125~130.

한 폭력간의 폭력적 충돌의 결과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변동은 사회질서에 대한 상이한 도덕관과 상이한 세계관의 對決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배자의 폭력이 피치자의 폭력과 충돌하기 전에 가치와 윤리체계가 인간의 내면에서 먼저 충돌하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 체코의 벤다(Vaclav Benda)에 의해 1978년에 간행된 *The Parallel Polis*라는 책에서 주장되었다. 시민사회 운동이란 기존의 체제밖에 또 하나의 사회(parallel structure)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또 하나의 사회란 공식적 사회의 바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였다. 지하신문 사미즈다트의 제작 및 돌려 읽기, 암시장 등 제2경제권에서만 물건사기, 야학 등의 비공식 채널에서 공부하기, 교회를 지지하는 등의 자율적 행위를 하여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第2의 社會(second society)를 발전시키는 것이다.⁵⁵⁾

또 헝가리 철학자 콘라드(Gyorgy Konrad)는 모든 권력은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로 「반정치」(Antipolitics)에서 주장하였다.⁵⁶⁾ 반정치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자율적 포럼의 등장을 의미한다. 반정치는 권력을 잡을 수도 없

55) H. Gordon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56) Miklos Haraszti,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The Independent Peace Movement and the Danube Movement in Hungary," in Vladimir Tismaneanu, ed. *In Search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Peace Movements in the Soviet Bloc* (New York: Routledge, 1990), pp. 85~87.

으며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의미한다. 삶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해버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며 시민사회란 국가의 통제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77헌장도 동구 시민사회 운동의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시민사회 운동에서 제기될 이슈는 반드시 정치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재체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진실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다. 저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덕적인 것이다. 하벨이 지적하듯이 권력없는 자들의 抵抗은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의 인권은 시민사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되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다른 개념이다. 동구 시민사회 운동의 전략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陣地戰의 戰略(war of position)에 유사하다.⁵⁷⁾ 그람시의 진지전(war of position) 이론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체제이행을 위한 체제이행이론의 하나로 주장되었던 것이다. 그람시에 의하면 사회주의로의 體制轉換을 위해서는 기동전(war of maneuver 또는 frontal attack)을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통제 또는 붕괴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으며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

57) Marcia Weigle and Jim Butterfield,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The Logic of Emergency," *Comparative Politics* (October 1992), p. 4.

가라는 것은 물리적 기구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이념, 가치, 이론, 세계관의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람시는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전에 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부르조아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먼저 허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항헤게모니를 통하여 지배적 헤게모니를 허무는 戰略은 그람시에 의하면 전면전 또는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헤게모니 전쟁에서의 진지전의 특징은 진지의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면서 헤게모니의 영역을 확산하여 나가는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군대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생활방식,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도덕,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여만 국가를 정복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정복하였을 때 즉각 안정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가 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와 복종과 사회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被支配 집단이 새로운 知的 道德的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요구하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등장하는 것이다.⁵⁸⁾

陣地戰이란 대중적 조직과 문화를 통하여 국가기구를 대항적 헤

58)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p. 207; Anne Shoestack Sassoon, ed., *Approaches to Gramsci* (London: Writers and Readers Publishing Cooperative, 1982), p. 141; Giuseppe Fiori, *Antonio Gramsci, Life of a Revolutionary* (London: New Left Books, 1970); Martin Carnoy, *The State and Political The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80~82에서 재인용.

게모니로 포위하는 전략이다. 진지전이 대중을 조직화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규범, 새로운 문화의 기초로서의 조직을 擴散하는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 시민사회 이론가들의 신진화주의(new evolutionism), 반정치(antipolitics), 병렬사회(parallel society), 제2의 사회(second society),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 시민사회(civil society) 등의 개념은 모두 급진적,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그람시의 진지전의 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인민대중의 심성(mentality)에 대한 지적·도덕적 교체를 추구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시민사회 운동이론이 시민사회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한 요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市民社會 發展의 3段階

하라스치는 동구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한 단계를 세단계로 나누었다.⁵⁹⁾ 첫째가 후기스탈린주의(post-stalinism) 단계로서 공산당 국가가 점차 自由化(liberal)되는 단계이다. 억압을 점차 완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소비와 경제에서의 어느 정도의 분권화를 허용한다. 저항세력은 고립화되어 있지만 공포에 대한 저항과 자율적 여론과 당 및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행위도 증가한다. 1950년대의 동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북한은 아직 이 단계에도 못미친 스탈린

59) Miklos Haraszti,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pp. 85~87.

주의적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가 후기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단계로서 공산당 국가의 자율화를 넘어서 점차 民主化(Democratization)되어 가는 단계이다. 여론에 밀려 민주화가 진행되며 정권은 점차 방어적이다. 경제를 실용주의적 기초로 전화하고자 하는 공식적 시도가 이루어진다. 과거의 정치적 모델이 소멸하고 사회의 주도로 자율적 체제가 모색된다. 시민사회가 본격 발달하는 단계이다.

셋째가 後期共產主義(post-communism)단계인데 공산당 국가가 완전히 崩壞된 단계이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사회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자본주의에 대한 追擊發展의 모델로서 자본주의보다 도덕적·경제적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주장되었던 사회주의는 인민들에 의하여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방식으로 抵抗을 받았다. 시민사회 운동은 사회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지적·도덕적 헤게모니의 기초를 와해시킴으로써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市民化(civilized)되고 말았다. 체제의 변화는 이와 같이 대중적 心性(mentality)의 변화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 위기는 개혁·개방의 동인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적 위기만으로는 체제전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代案的 政治勢力的 形成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실패하고 시민사회가 발달하여 밑으로부터의 체제저항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전개는 대체로 세가지 방향으로 權力엘리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첫째, 기존의 권력엘리트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였다. 둘째, 반체제 인사 및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항적 社會勢力들이 대안적 政治勢力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셋째, 동구,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엘리트 내에서 개혁지향적인 새로운 엘리트를 등장하게 하였고 엘리트들간의 노선투쟁을 야기시켰다. 각각의 경우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국가에 전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정당성, 체제의 우월성, 메시아적인 사명감, 군사력에 대한 무적성(invincibility)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을 때나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관료 내에서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자신감의 위기가 깊을수록 체제의 붕괴는 가까운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문제가 악화될수록 자본주의 체제는 건강하다는 인식이 권력엘리트들을 불안하게 하고 自信心을 잃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서독, 일본,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 기술발전, 수출의 팽창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측근의 한 사람인 야코블레프(A. N. Yakovlev)는 1990년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南韓에서의 노동생산성이 北韓보다 10배 이상이며, 西獨의 국민들은 東獨 국민들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⁶⁰⁾

權力の 정당성 상실과 권력엘리트의 사기저하는 군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소련붕괴의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일부의 보수파 지도자들이 보수회귀를 위한 쿠데타를 감행했을 때 군부가 보수회귀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고 또한 쿠데타에 저항하는 군중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를 거부한 것에 기인한다.

둘째, 권력엘리트들의 이러한 自信感 상실은 대항적 사회세력을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했다. 지도자들이 대안적 세력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도 하였다. 가령 소련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개혁에 대한 반대세력의 제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체제에 가장 불만이 많은 지식인, 과학자, 기술자들(총계 약 1500만명)을 개혁의 바리케이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⁶¹⁾ 고르바초프와 소비에트 지도부는 정치적 개혁없이 경제개혁이 불가능함을 인식했고 정치개혁의 목표는 개혁에 반대하는 중간층 관료들의 권력을 분쇄하는 것이다.⁶²⁾ 개혁은 당관료들의 완강한 저항을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수반하는 결정을 수행하기를 주저하는 많은 기업 관리자들과 직업의 안정과 평등한 임금 그리고

60) Quoted in *The New York Times*, July 8, 1990, p. 4;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383~385에서 재인용.

61)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 p. 110.

62) Howard J. Sherman, "The second soviet revolution or the transition from statism to socialism," *Monthly Review* (March 1990), p. 18.

작업의 성과와 상관없는 보너스를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뿌리깊은 견고한 정신풍토까지 타파해야 되기 때문이다.⁶³⁾

셋째, 舊蘇聯과 東歐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붕괴하거나 개혁·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한 특징은 경제위기 극복을 둘러싸고 엘리트들 간에 노선갈등이 있었으며 그 노선갈등으로 인하여 지도체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여 밑으로부터의 체제도전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共產主義 엘리트들이 획일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한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되기 위해서는 권력엘리트가 분열되어 파벌이 발생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헝가리의 경우, 라코시를 중심으로 하는 스탈린주의자 강경파와 나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정주의자간의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국가에 대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공산당의 權威의 실추는 혁명적 상황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연설은 공산당의 권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⁶⁴⁾

소련의 경우도 파벌주의와 노선갈등이 발달했었다. 우선 스탈린 사후 스탈린 격하운동과 修正主義가 극단적인 專制主義를 비판하고 다원주의적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구소련에서 파벌의 형성에 미

63)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 p. 106.

64)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p. 71.

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分權化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특히 경쟁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점이다.⁶⁵⁾ 또한, 구소련에서 파벌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고권력자의 권력교체가 여러 차례 있었고 前任者에 대한 노선비판과 대안적 노선선택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사회에서는 권력승계 이후 전임자에 대한 노선비판과 격하운동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중국의 경우도 毛澤東 時代나 鄧小平 時代에도 경쟁적인 파벌이 존재하고 노선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後任者는 전임자에 대한 노선비판과 체제개혁이 있었다.⁶⁶⁾

경제가 흔들리고 밑으로부터 집단적 저항을 하며 권력엘리트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다면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은 필연적인 것이다.

VI. 資本主義 世界體制에의 再編入

資本主義에 대한 追擊發展 전략으로서, 그리고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體制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했던 사회주의체제가 失敗한 시점에서 당연한 대안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하는 것이다. 맑스·

65)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p. 455.

66) 안병만, “소련 권력엘리트의 구성과 내부정치,” 『中蘇研究』, 제10권 2호 (1986 여름), p. 90.

레닌주의 또는 스탈린주의, 마오이즘을 폐기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를 재도입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핵심인 것이다.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실패에 직면한 사회주의 經濟學者들과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장기제를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교역, 투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의 핵심이다. 소련은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분리된 이래 73년만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개혁정책의 이론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孤立은 罪惡이다. 경제적인 교섭을 가져야만 정치적 우호관계를 쌓아올리기 위한 物質的 土臺가 이루어진다. 경제적 교섭으로 생겨난 상호이익은 정치무대에서 도움이 된다. 소·미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무역을 늘리고 현재 불충분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를 계속해 나가면, 상호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을 것이다.”⁶⁸⁾ 고르바초프에게서 개혁의 본질은 고립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더이상 ‘따

67) Abel Aganbegyan, *The Economic Challenge of Perestroika*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1989), p. 47; *Monthly Review* (April 1990), p. 12.

68)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gki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Row, 1987), p. 235.

라잡고 추월하자'는 대결적 슬로건에 부응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경제발전의 전세계적인 과정에 좀 더 유기적으로 편입되는 방향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련이 이 영역에서 다른 한편과 대립하지 않고 그것과 협력해서 고유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풀기위해 노력한다면 소련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⁹⁾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軍備競爭을 종식하는 것이며 엄청나게 값비싼 비용을 치루는 이웃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는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소련의 군사지원에 대한 언질이 없어지자 대중적 支持를 획득해 본 적이 없었던 東歐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들이 일시에 무너졌던 것이 그 증거이다.⁷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르바초프가 왜 그러한 戰略을 채택했는가? 왜 그러한 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는가? 소련의 자본주의 체제 재편입을 촉진한 두 가지 요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배운 교훈, 미국의 對社會主義圈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소련의 개혁은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소련의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장인 Bogomolov는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결정한 개방정책은 소련 공산당의 1985년 4월 중앙위원회 총회와 같이 중국의 운명에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 결정은 중

69) Ibid., p. 34.

70) Paul Sweezy, "U. S. Imperialism in the 1990s," *Monthly Review* (October 1990); _____, "Nineteen Eight-nine," *Monthly Review* (April 1990), p. 20.

국경제에 확실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⁷¹⁾ 고르바초프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1987년 말에 고르바초프 자신이 중국의 주간지 「瞭望」의 질문에 답하기를 소련은 중국의 경제·정치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비슷함으로 경험교류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⁷²⁾ 1959년 흐루시초프와 모택동 사이에 對美政策과 동맹관계를 둘러싸고 대립이 생긴지 30년만인 1989년에 중국과 소련이 화해를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

소련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재편입을 촉진시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資本主義 세계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美國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美·蘇間의 과도한 군비경쟁은 소련체제를 붕괴시켰지만 미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⁷³⁾ 사회주의를 봉쇄시켜 사회주의를 고사하고자 한 미국의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과의 오랫동안 泥田狗鬪 끝에 미국도 쇠퇴해 버린 것이다. 스워지⁷⁴⁾는 세계

71) Bogomolov, “변모하는 사회주의의 실상,” 계간 사상문예운동 편,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서울: 풀빛, 1989).

72) 모리카즈코 저, 김하림 역,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90), p. 188.

73) Tim Luke, “The other “global warming”: the impact of perestroika on the U. S.,” *Telos*, no. 81 (Fall 1989); Andre Gunder Frank, *The Political challenge of socialism* (Paper Presented at Round Table, 1985); Arthur MacEwa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instability,” *Monthly Review* (February 1989).

74) Sweezy, “U. S. Imperialism in the 1990s.”; _____, “Nineteen Eight-

체제에서 미국의 위상변화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로 미국이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기; 제2단계는 1960년대 초부터 내부적, 외부적으로 쇠퇴의 징후가 나타나고 1973~1974년의 경제불황과 월남전의 패배에서 쇠퇴의 징후가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 제3단계는 1970년대 후반에 쇠퇴가 계속되는 시기; 제4단계는 레이건 시대(1981~1988)로서 '위대한 시대'로의 회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쇠퇴만 가속화된 시기; 제5단계는 1990년대 이후로서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제국이 약화되고(disintegration) EC(또는 독일), 일본 등 경쟁적인 3대 제국들로 대체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美國經濟의 衰退가 결정적으로 가속화된 것은 레이건 시대(1981~1988)이다. 과거의 위대한 시대의 복원을 꿈꾸고 軍備強化를 더 가속화한 것이 경제를 더 악화시킨 것이다. 1970년대의 국방비는 8천 8백 70억 달러였는데 1980년대에는 22조 8천 4백 50억 달러를 지출하여 222%로 증가한 것이다. 군수산업이 미국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주장과는 반대로, 레이건 시대의 경제는 급격한 쇠퇴를 경험했다.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무렵만해도 미국은 세계최대의 債權國이었으나 레이건이 대통령직을 떠날 무렵에는 세계최대의 債務國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미국의 헤게모니의 독무대가 아니라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3두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다. 1970년대 초의 브레튼우드 체제의 붕괴와 OPEC의 등장, EC의 독자노선 이후 미국의 지위는 소련에 의해 위협받는 것 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경제적 분열로 더 많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⁷⁵⁾

더욱이 오늘날 美國은 帝國을 유지하는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이익은 감소할 뿐이다. 미국이 세계 각지에 군대를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 15년에 걸쳐서 겪어오고 있는 곤란이 1990년에 들어서 냉전체제의 종식을 원하고 있는 이유이다.⁷⁶⁾ 이것이 1974년에는 SALT II의 비준을 거부했던 미국이 1989년 12월에 몰타에서 소련과 더불어 알타 냉전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게 한 구조적 요인이다. 동시에 미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編入을 환영하게 된 것이다. 월러스타인⁷⁷⁾에 의하면 EC, 일본 등이 미국의 헤게모니하에 있기를 거부하는 이상, 1990년대에 미국의 가장 거대한 상품시장은 사회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체제는 실제로 어떻게 資本主義 세계체제에 재편입되었는가? 1989년 이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사회주의 이념의 포기,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체제이행을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개방 또는 재편입을 정치적

75) Luke, "The Other Global Warming," p. 51.

76) Arbatov and Oltmans, *The Soviet Viewpoint*, pp. 78~79.

77)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p. 65.

이데올로기 및 무역관계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서구세계와의 모든 형식의 人的인 關係가 광범하게 확대되었다. 특파원 교환, 전화통화, 인적인 회합, 비즈니스, 과학 및 학술, 문화 등 공적 여행 및 사적인 여행도 개방하였다. 유학생, 연구원, 교사, 예술인들이 외국에서 수년씩 체류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며,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도 허용되었다. 서양의 라디오 방송의 청취도 허용되었으며, 서방의 문학, 영화, 잡지가 유입되는 것도 허용되었다. 서방의 댄스뮤직, 의류패션, 소비품들도 유입되었다. 대중들 특히 젊은층이 오랫동안 동경해오던 서방의 文化가 일시에 허용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의 정치경제적 관심을 판데로 돌릴 수도 있었다. 이러한 개방들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영향은 중단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열등한 체제라는 이데올로기적인 神話가 완전히 깨어져버린 것이다. 이것이 개방의 가장 큰 결과인 것이다.⁷⁸⁾

對外交易 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식의 표현을 빌면 서방에 대한 開放이다. 대외개방의 의도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금융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開放을 통하여 서방으로부터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기술 및 경영방법, 생산의 노우하우이다. 둘째, 서방의 借款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내자의 부족을 메우는 것이다. 수입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는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市場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본주의 市場에

78)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424~425.

대한 輸出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외자는 수출의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넷째, 이 모든 상호보완적인 효과는 시장사회주의를 통한 분권화를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기업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자본주의 수출 및 수입시장에 대한 적응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⁷⁹⁾

지금까지 체제의 생성에서 자본주의체제에로의 재편입에 이르는 사회주의체제의 도정(trajecory)을 일반화된 이념형의 차원에서 살펴해보았다. 많은 경우에 東歐와 蘇聯의 경험을 근거로 살펴보았는데 中國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주의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구와 소련의 변화의 물결의 영향을 직접 받았고 또 변화의 내용과 속도는 다소 상이하더라도 거시적으로 볼 때 변화의 방향은 서로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모두를 하나의 사회주의권으로 前提할 수 있다. 이하의 사례분석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나 변화의 道程이 어떻게 서로 공통적이고 또 서로 다른지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79) Ibid., pp. 553~554.

빈 면

第 Ⅲ 部

社會主義體制 變化的 事例

빈 면

第1章 舊蘇聯 및 러시아

I. 蘇聯 社會主義體制의 形成過程

1. 볼세비키 革命理論

1917년 10월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은 마르크스가 상정하고 있던 공산주의 혁명의 일반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즉 마르크스가 상정한 共產主義 革命의 條件은 ① 고도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 ② 보통선거권 확립 등 민주주의를 통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높은 사회의식이었으나,¹⁾ 러시아는 이러한 전

-
- 1)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의 전제조건을 말하면서 물질적·객관적 전제조건(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대공업생산의 지배)과 계급적·주체적 전제조건(양대계급으로의 사회적 분열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숙)을 지적하지만, 혁명의 담당자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숙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생산력 발전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성숙을 보장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유물사관에서는 계급투쟁도 생산력과 생산관계간 모순의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생산력 증대에 따라 계급의식이 비례적으로 아무런 다른 영향없이 성장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革命에 이르는 條件으로서, 그리고 혁명 이후 공산주의 사회를 구현해 나갈 담당자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높은 사회의식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제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위로부터의 혁명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공산주의 발전을 한계짓는 기본적인 제약요인으로서 그 이후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인 生産力 增大를 위하여 레닌은 스스로 ‘자본주의에로의 전략적 후퇴’라고 명명한 新經濟政策(NEP)을 추진하였으나, 스탈린은 이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한 重工業發展戰略으로 이룩하려 하였다. 이러한 스탈린의 중공업발전전략은 유일한 사회주의 발전모델로서 전세계에 보급되었으며, 스탈린 시대 이후 소련에서는 중공업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차례의 경제개혁정책이 모색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중공업발전전략에 입각한 경제모델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편 고르바초프 시대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 발전모델을 레닌의 신경제정책으로 회귀하여 資本主義的 要素의 도입을 통한 생산력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혁명의 두번째 조건은 레닌에게 있어서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 승리 이후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혁명이라는 二段階革命論으로 이어졌으나, 레닌은 1917년 2월혁명으로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혁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의 도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콤포트형 국가와 나아가 국가사멸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높은 사회의식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성취되었음을 공언하고, 민주주의를 통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 의식이 결코 고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제에 착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였으나, 혁명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할 근로인민대중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관료주의적으로 왜곡된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관료주의적 왜곡을 시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政治改革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레닌은 엥겔스의 國家死滅論을 수용하여 국가가 사멸되는 과정으로서의 분업국가론을 완성하고, ‘읽고 쓰고 셈하기’ 만을 알면 누구든지 관료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누구든지 관료가 될 수 없는 이른바 ‘관료의 비관료화’ 이론을 강조하였다.²⁾ 레닌은 인민대중이 국가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으나, 혁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통치를 위해 ‘부르조아 전문가’(bourgeois experts)를 기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³⁾ 이에 따라 레닌은 인민대중의 능력 부족으

2) 레닌의 論旨는 다음과 같다. 階級對立이 해소되어도 公的 權力이 分業國家로서 잔존하는데 公務를 맡을 직업 공무원의 존재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업이 지양되어 직업공무원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사람이 國家管理에 참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게 된다. 이를 레닌은 “만인에 의한 즉각적인 통제와 관리 감독의 도입, 그래서 만인이 한동안 官僚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누구도 官僚가 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Collected Works*, vol. 25, p. 486.

로 모든 사람이 관료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이 인민대중을 선도하여 그런 능력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당의 지도를 강조한 前衛黨理論은 결국 專制的 一黨獨裁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레닌이 스스로 규정하였듯이 소비에트국가의 官僚主義的 歪曲은 레닌의 인식으로는 문화적 후진성, 경제적 후진성, 半아시아적·前近代적 후진성에 기인한⁴⁾ 당면한 러시아의 현실에서 ‘필요악’이었

3) 레닌은 볼셰비키黨이 사회주의 실현을 향해 ‘러시아의 관리를 조직’하고 ‘경제적 기초를 새로이 조직’하는 ‘가장 곤란한 임무’에 직접 착수하여야 한다고 파악하고, 이 임무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부르조아 전문가의 이용’이라는 정책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들을 국유기업의 管理·經營職에 임용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獨裁的 全權’을 부여하여 單獨責任制 原則下에 직무를 수행할 것을 제기하였다. Lenin, “The Immediate Tasks of the Soviet Government,” *Collected Works*, vol. 27, pp. 242~243. 즉 레닌은 혁명으로 짜르 관료를 축출하였으나, 노동자와 농민의 낮은 문화수준 때문에 “곧 다시 그들을 소비에트 기관의 새로운 부서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Lenin, “Report on the Party Programme, March 19, 1919, Eighth Congress of the R.C.P.(B.),” *Collected Works*, vol. 29, pp. 182~183.

4) 文化的 後進性에 대해서는 Lenin, “Report on the Party Programme, March 19, 1919, Eighth Congress of the R.C.P.(B.),” pp. 169, 178~179, 182~183; —, “Deception of the People with Slogans of Freedom and Equality, May 19, 1919, First All-Russia Congress on Adult Education,” *Collected Works*, vol. 29, pp. 365~369; —,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C.P.(B.), March 27, 1922, Eleventh Congress of the R.C.P.(B.),” *Collected Works*, vol. 33, pp. 287~288, 298, 309 등을 참조하고, 經濟的 後進성과 半아시아의·

다. 그러나 레닌은 ‘당의 지도’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관료주의는 척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관리를 ‘당의 지도’에 의존하면서 당의 기능과 역할이 당연히 비대해지고, 게다가 당에 의한 국가기관 인사권 행사는 黨員의 官僚化를 조장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권력기관인 소비에트는 형식화되고 당 지도하의 기관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며, 관료주의의 병폐는 레닌의 상상을 넘어서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레닌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랜 시일을 요하는 관료주의와의 끊임없는 투쟁”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으나, 관료주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현상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통제불가능한 관료주의를 완화시키고 관료주의적 병폐의 폭발을 억제하는데 주력할 뿐이었다. 이른바 “遺稿”에서의 反官僚主義도 그런 맥락에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려는 의지에 불과하였고, 또한 勞農監督部의 개조 등의 방책으로 관료주의적 병폐가 극복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國家의 官僚主義化는 스탈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흐루시초프의 개혁도 관료주의를 발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개혁이었다고 볼 수는 없었으며, 더욱이 브레즈네프에 의해 흐루시초프가 제거된 이후에는 정권의 보수성과 함께 관료주의적 병폐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그후 고르바초프 시대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발단시킨 배경

前近代的 後進性에 대해서는 Lenin, “The Tax in Kind(the Significance of the New Policy and its Conditions),” *Collected Works*, vol. 32, pp. 349~352 참조.

으로 되었으나, 문제의 소재는 관료주의 그 자체라기 보다는 관료주의를 배태시킨 현존 사회주의 이념 자체였다고 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개념 규정은 마르크스 이래로 적지 않은 변질이 이루어져 왔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도기를 전제할 뿐이었으나, 레닌은 그 過渡期를 社會主義로 등치시켜, 이후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라는 도식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레닌은 사회주의 단계를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로 간주하지는 않았으며, 성장해 가는 공산주의적 생산양식과 소멸해 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병존하는 과도기로 규정하였다.

스탈린은 過渡期로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 단계를 종료하고 共產主義로 移行하는 독자적인 단계로서 社會主義를 위치시켰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사회주의 단계를 발달한 사회주의 건설단계와 공산주의의 전면적 건설기로 나누고, 브레즈네프는 공산주의의 전면적 건설기를 발달한 사회주의로 규정하였다.⁵⁾

이는 기본적으로 스탈린 모델을 수용한 단계규정이며, 현실적으로 사회주의를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로 보아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5)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발전단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	과도기 (프롤레타리아독재)		
레닌	사회주의		
스탈린	과도기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점진적 이행기)	
흐루시초프	(프롤레타리아독재)	발달한	공산주의의 전면적건설기
브레즈네프		사회주의 건설기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지향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공산주의를 보다 먼 장래에나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실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왔다는 의미에서 고르바초프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관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2. 레닌 時代의 社會主義 建設과 發展

가. 反官僚主義 鬭爭

레닌은 말년에 이르러 적지않은 병고에 시달렸다. 1922년 5월 동맥경화증으로 첫 위기를 맞았으나, 긴 요양 끝에 10월 초에는 다시 직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해 12월 다시 발병하여 결정적으로 은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레닌은 정치국을 장악하고 있던 스탈린의 명령에 의하여 간병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레닌은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체계화하여 이를 건전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⁶⁾을 시작하여, 마침내 몇 편의 遺稿(testament)를 남겼다.

레닌의 遺稿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국가의 官僚主義化를 沮止하기 위한 일련의 改革案을 제시하고 있는 “노동감독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⁷⁾(1923. 1. 23)와 “보다 적게, 그러나 보다

6) Moshe Lewin, *Lenin's Last Struggle* (London: Faber and Faber, 1969), p. 70.

중계”⁸⁾(1923. 3. 2) 등이었는데, 레닌의 遺稿에서 나타난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레닌의 마지막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⁹⁾

勞農監督部¹⁰⁾ 改造: ① 당중앙위원회 총회를 당의 대표최고회의로 만들어 두 달에 한번씩 中央統制委員會의 참가하에 개최한다. ② 노동자와 농민 가운데 75~100명의 새로운 중앙통제위원을 선정하여 중앙위원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③ 노농감독부를 12,000명에서 300~400명으로 감축하여, 「보다 적게, 그러나 보다 좋게」 한다. ④ 노농감독부와 당중앙통제위를 결합시켜 외교인민위원회보다 결코 낮지 않는 높은 권위를 갖게 하여, 勞農監督人民委員會로 한다. ⑤ 노농감독인민위원회는 12개 이상의 고급 노동조직연구소와 부분적으로 결합 또는 협조한다.

黨指導 改善: 중앙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고, 당기관을 개선하고, 소

7) Lenin, “How We Should Reorganise the Workers’ and Peasants’ Inspection (Recommendation to the Twelfth Party Congress),” *Collected Works*, vol. 33, pp. 481~486.

8) Lenin, “Better Fewer, But Better,” *Collected Works*, vol. 33, pp. 487~502.

9) 이하는 양링의 要約에 의한다. 양링은 레닌의 이러한 民主化 改革 構想이 集團指導體制를 강조한 것으로서 오늘날 中國의 政治體制 改革과 政治民主化 建設에 지도적 이론으로서 意義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楊玲, “論列寧晚期的民主思想,” 「馬克思主義, 列寧主義 研究」(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9. 9), pp. 69~70.

10) 노농감독부는 레닌의 제안에 의해 관료주의적 병폐 극복차원에서 1920년 2월 보통 노동자와 농민 및 부인의 管理·行政 參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레닌은 勞農監督部가 反官僚主義를 위한 ‘약간의 權威’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Lenin, “How We Should Reorganise the Workers’ and Peasants’ Inspection (Recommendation to the Twelfth Party Congress),” p. 490.

수에의 權力集中을 防止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원수를 증가한다. 이를 위해 중앙위원의 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노동자 위원을 증대한다.

결국 레닌은 국가기구의 개선문제가 “매우 어려우나, 그러나 대단히 절박한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방책으로서 노농감독부 개조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즉 “진정코 근대적인 인재를 특히 신중하게 양성하여 노농감독부에 집중”하고, 그것을 “국가기구를 개선하는 도구로서 진정코 규범적인 기관으로 개혁”하고,¹¹⁾ 그것을 당의 통제기관(통제위원회)과 결합시켜, ‘대단히 높은 권위’¹²⁾를 갖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방안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레닌이 제12차 당대회에 제출한 이러한 改革案은 승인되어 레닌의 제안대로 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으로 관료주의적 병폐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개혁안에 대한 스탈린의 형식적인 추진도 문제였지만, 중앙위원 증원과 노농감독부 개조 등의 개혁안 만으로 진실로 인민대중으로부터 유리하여 그 위에 서서 그들을 관리·지배하는 특권관료와 기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11) Lenin, “Better Fewer, But Better,” p. 489.

12) Lenin, “How We Should Reorganise the Workers’ and Peasants’ Inspection (Recommendation to the Twelfth Party Congress),” p. 482.

나. 新經濟政策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국가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과제 실현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물질 토대를 변혁·파기하고,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制에 입각한 계급없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말할 나위 없이 레닌도 소비에트국가의 목표로서 그것을 선언하였고, 內戰期에는 그것을 전시공산주의의 여러 정책들¹³⁾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공산주의시대에 실시된 식량의 할당징발제(prodravvyorstka)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소비에트정권에 대한 공공연한 반발로 표면화되고, 내전이 종식된 1920년 말에는 각처에서의 농민봉기로 비화되었다. 더욱이 1921년 2월에는 크론슈타트에서 적군병사들이 공산당에 의한 사실상의 一黨獨裁를 批判하고 언론·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반란을 일으켰다.¹⁴⁾ 따라서 소비에트국가의 당면 목표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소비에트정권은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을

13) 戰時共產主義는 ①경제결정권의 중앙집권화, ②상업·금융적 수단 대신에 配給制와 現物去來 등에 의한 경제 운용으로 특징지어진다.

14) E. H. Carr,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1921*, vol. II (London: Macmillan, 1968), pp. 270~271.

차지하는 농민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할 필요에 직면하여, 1921년 3월 개최된 제10차 당대회에서 식량의 할당징발제를 현물세로 대체하고 私的 去來의 自由를 승인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추진된 1921~1928년간¹⁵⁾ 新經濟政策(NEP: novaya ekonomicheskaya politika)은 전시공산주의를 청산하고 국가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混合經濟時代로 이행한 것이었으며, 소비에트국가의 직접적인 목표를 사회주의경제 기초의 건설¹⁶⁾로 전환한 것이었다. 레닌은 소부르조아적 요소가 지배적이고 인구의 절대 다수가 소상품생산자인 상황에서 國家資本主義가 불가피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¹⁷⁾

신경제정책은 농민에 대한 잉여 곡물 등의 賣買自由化 政策 뿐만 아니라, 소·영세기업의 경영 자유화를 포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이권(유전, 광산, 삼림개발) 제공으로부터 국내자본에 대한 국유화기업의 임대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에 의하면, 당과 정부는 “충분한 정치권력”과 함께 “기본적인 경제력, 즉 모든 결정적인 대기업, 철도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하여 생산의 부흥과 재건을 도모하고, 사회주

15) 新經濟政策은 1928년 스탈린에 의해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종언되었다.

16) Lenin,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C.P.(B.), March 27, 1922, Eleventh Congress of the R.C.P.(B.),” p. 268.

17) Lenin, “The Tax in Kind(the Significance of the New Policy and its Conditions),” pp. 331, 364.

의경제 기초의 건설에 충분히 접근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⁸⁾

신경제정책의 본질은 레닌이 영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논하였듯이 자본주의적 발전이 후진적이며,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인민대중의 문화수준도 미숙한 단계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명백하게도 레닌은 신경제정책에 즈음하여 러시아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아무런 조건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였으며, 자신이 그때까지 가져 온 혁명이론의 모순을 스스로 반성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전제조건인 생산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다. 그것이 資本主義로의 戰略的 後退인 신경제정책이었다.¹⁹⁾ 이리하여 레닌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부활을 추진하는 동시에,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자주성을 고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경제정책은 소부르조아층으로서의 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양보하여 자본주의의 부활·강화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국유기업의 獨立採算制로의 이행에 따른 임노동의 부활, 따라서 해고와 실업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었다.²⁰⁾

18) Lenin,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C.P.(B.), March 27, 1922, Eleventh Congress of the R.C.P.(B.)," p. 288.

19) 고르바초프는 新經濟政策에 대하여 "그것은 자본주의와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마땅히 실현하였어야 했을 것을 소비에트권력 아래에서 이룩하려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M. S.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yka," *Pravda*, 26 noyabrya 1989g.

20) 松田秀人, "レーニンとソビエト國家," 「福岡教育大學紀要」, 第38號 第2分冊 社會科 編(1989年), p. 67. 그러나 新經濟政策이 기본적인

미그라난이 논하고 있듯이, 신경제정책은 시민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시킬 목적에서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관계가 우세해지는 상황하에서 개인과 전문가집단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창의성이 저절로 발현될 수 있는 소비에트국가를 추구한 것이었으나, “산업화와 집단화의 형태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회의 생명활동 등 모든 측면의 總體的 劃一化가 초래되었고, 개인과 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자기실현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²¹⁾

신경제정책은 소련에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을 창출한 시기였으나, 신경제정책은 그 정책결정 자체가 사실상 좁은 당중앙위원회의 틀 속에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외의 비판과 토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내의 비판과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고 추진되었으며, 스탈린 체제의 형성과 함께 개인과 집단의 자주적인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말았던 것이다.

로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소련의 농업생산력은 복구되어 역사상 전례없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공업생산도 크게 향상되었다.

21) Andranik M. Migranian, “Interrelations of the Individual, Society, and the State in the Political Theory of Marxism,” *The Soviet Review* (Jan/Feb. 1989), p. 47.

3. 스탈린 時代 一黨獨裁體制의 鞏固化

신경제정책 기간 동안에는 국가자본주의적 정책과 함께 볼셰비키 주도하의 통일적인 질서 형성이 추구되어 통제가 강화되었다. 제10차 당대회에서는 당내의 분파(fraktsiya)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 「당의 통일에 대하여」가 채택되었고, 그때까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던 여타 정당(에스 에르, 멘셰비키)에 대한 새로운 탄압이 시작되었다.²²⁾

특히 결의 「당의 통일에 대하여」는 스탈린주의적 一黨獨裁를 공고화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 결의는 제6항에서 “여러 정강에 기초하여 형성된 그룹들”을 모두 예외없이 즉시 해산할 것, 모든 당조직은 어떠한 분파주의적 언동도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결의를 위반하는 자는 무조건 즉시 당에서 제명될 것 등을 규정하고, 제7항에서 중앙위원회에 黨員 處分權을 부여하여, 법률 위반과 분파성의 부활 내지 용인의 경우에 제명을 포함한 모든 벌칙수단을 가하며, 중앙위원의 경우에는 후보위원으로 격하하고 비상수단으로 除名處分(중앙위·통제위 합동총회의 2/3 다수결)까지 규정하였다.²³⁾

22) Jerry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87, 101~102.

23) 藤井一行, 「民主集中制と黨内民主主義」(東京: 窓社, 1978), p. 157. 제7항은 “정세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특별히 취한 비상조치”였으므로 비공개로 하자고 레닌이 제안하여, 당시 제7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결의는 레닌 말년에 이미 당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스탈린에 의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23년 10월 8일 트로츠키가 黨改革을 호소²⁴⁾하는 편지를 당중앙위에 보내고, 이어 1주일 후 46명의 당원이 연서로 정치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중앙위·중앙통제위 합동총회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1924년 1월에는 제13차 당협의회가 열려, 결의 「토론의 총괄과 소부르조아적 편향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그것은 1923년 트로츠키의 편지로 발단이 된 이른바 「新路線」을 둘러싼 黨內 鬭爭에 대하여 트로츠키와 지지자들을 ‘분파주의,’ ‘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 ‘소부르조아적 편향’ 등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반대파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아직 없었으나, 무엇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제10차 당대회에서 비공표되었던 결의 「당의 통일에 대하여」의 제7항을 공표하기로 한 조치였다. 제7항의 공표조치는 다음 기회에 그것을 적용하려는 사전포석이었다.

이어 스탈린은 동년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에서 레닌의 당 이론으로서 “분파의 존재와 양립하지 않는 의지의 통일로서의 당”

24) 이는 당시 소비에트정권과 당이 직면하고 있던 중대한 경제위기 및 그것으로 인해 당내외에서 야기되고 있던 지도부에 대한 불만 등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노동자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었다. トロツキ, 藤井一行 譯, 「新路線」(東京:拓植書房, 1989), p. 208(譯者解題).

이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스탈린에 의하면, 당의 鐵의 規律은 “의지의 통일, 모든 당원의 행동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일” 이외에는 있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의지의 통일로서의 당’이라는 명제가 확립되고, 스탈린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반대파가 일소된 단계인 1934년 다시 스탈린은 당지배의 항구화를 위해 黨의 統一과 分派禁止에 관한 조항을 規約에 포함시켰던 것이다.²⁵⁾

물론 스탈린이 금지한 분파활동은 의견표명의 자유를 금지한 것이었고, 그것은 당연히 지극히 비민주주의적인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黨內 民主主義는 무시되고 ‘단일적 당’(monolitnaya partiya)이 강조되어 당지배가 黨獨裁로 확립되었던 것이다.²⁶⁾

한편 1920년 말 내전 종료 시점에 소비에트정부는 지방소비에트를 위시한 말단기관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집행위원회는 종종 중앙의 법령에 위반하는 독자적인 입법을 행하는 등 극도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소비에트정부는 통일적인 국가질서를 수립하는 동시에 勞農同盟을 확보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농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지방권력기관

25) 藤井一行, 「共産黨組織のペレストロイカ」(東京: 窓社, 1989), pp. 31~34.

26) 결의 「당의 통일에 대하여」의 성격과 스탈린에 의한 악용과정은 고르바초프 시대 소련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재론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Rem N. Blyum, “Obrashchayas’ k istokam: Fridrikh Engel’s o vnutripartiynoy demokratii,” *Kommunist*, no. 2, Yanvarya 1988g.; Roy Medvedev, “O Staline i stalinizme,” *Znamya*, no. 4, 1989g. 등이다.

및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활동가들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지방집행위원회에서는 에스 에르와 멘셰비키가 여전히 적지 않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트정부는 이를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²⁷⁾ 이에 따라 스탈린 체제의 형성과 함께 中央集權的인 統制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은 1922년 4월 서기장이 된 이래로 당과 국가에 대한 人事權을 掌握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당이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레닌에 의해 마련된 조치였으며, 스탈린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여 갔다. 레닌이 사망한 후 이른바 ‘레닌入黨’이 이루어져 192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당원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확하게 말하여 ‘레닌입당’이 아니라 ‘레닌 以後 入黨’이었으며, 명백하게 스탈린의 지지자들이었다. 이리하여 당간부는 이른바 레닌 친위대(Old Bolsheviks)와 정치적 관점에서 스탈린에 의해 선발된 스탈린 친위대로 분열되었으며, 양자간의 갈등과 투쟁은 불가피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33년 이래의 大肅清으로 마침내 舊볼셰비키는 몰락하고 스탈린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가 탄생하였던 것이며, 스탈린의 권력은 확고부동하게 되었다.²⁸⁾ 이 과정 속에서 레닌의 ‘당의 지도’는 ‘당의

27) 小田博, 「スターリン體制下の權力と法: 社會主義的合法性原理の形成過程」(東京: 岩波書店, 1986), pp. 70~71.

28) 辛承權, “蘇聯階級構造에 있어서의 政治엘리트의 特權: 노멘클라투라를 중심으로,” 「中蘇研究」, 10권 2호 (1986 여름), pp. 55~56;

독재'로 확립되고 있었다. 즉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구가된 직후인 1934년 12월 키로프 암살사건을 계기로 대숙청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스탈린의 확고부동한 권력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1930년대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공업사회의 토대를 정비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農業의 集團化와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重工業의 육성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와 스탈린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이 소련 역사발전의 필연적 결과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부정한 바탕위의 스탈린 체제는 신경제정책으로 도모되고 있던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의 발전 가능성을 좌절시키고, 단일적인 당 통제하에 위로부터의 명령에 의존하는 일원적인 중앙집권주의사회를 확립하여, 민주주의 발전가능성을 스스로 근절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스탈린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강력한 당통제하의 국가권력에 입각한 中央集權的 全體主義 내지 權威主義體制를 유지하였다. 스탈린주의의 비민주성은 당내 민주주의의 부정, 소비에트의 형식화, 개인과 집단의 자발성 근절로 나타났던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이 대중의 혁명적 조급성과 모든 대중운동에 고유한 유토피아적·평등주의적 경향, 그리고 소기의 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려고 한 전위들의 의욕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고

Michael S. Voslensky, 佐久間穆·船戸満之 譯, 「ノーマンクラツ
ーラ: ソヴェエトの赤い貴族」(東京: 中央公論社, 1981), pp. 114~
127.

평가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과 대안들을 토론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어 획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점차 권위주의적, 명령적·관료주의적 행정체계의 모습에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²⁹⁾ 고르바초프에 의해 지적된 스탈린 체제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의 正當性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사회주의의 완성된 모델을 사회의식 속에 주입함으로써 실천을 정당화하였다. 둘째, 위대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非人間的인 수단도 정당화하였다. 정치적 합목적성이 형식적 합법성의 우위에 있다고 공식 인정되었는데, 이는 정치에서 도덕적 기초를 박탈하였다. 셋째,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관에서의 핵심인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인간'관을 상실하게 만들었다.³⁰⁾

29) M. S.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yka," *Pravda*, 26 noyabrya 1989g.

30) Ibid.

II. 스탈린 時代 以後의 改革政策

1. 흐루시초프 時代

가. 共產主義的 社會的 自治와 民主化

1980년의 공산주의 도래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기되고 있던 흐루시초프 시대에는 全人民國家(obshchenarodnoe gosudarstvo)라는 계급대립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質의 국가, 國家死滅에의 過渡的 段階로서의 국가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전인민국가는 “점점 ‘非國家’의 특질이 나타나는 국가이며, 점점 국가성과 사회주의적 자치의 특질이 융합하여 가는 국가”이며, “공산주의적 사회적 자치에의 직접 발전이 계속되는 정치조직”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지고,³¹⁾ ‘공산주의적 사회적 자치’(kommunisticheskoe sotsial’noe samoupravlenie)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던 것이다.³²⁾

이 이론은 공산주의하의 국가사멸의 구체적 형태를 제시한 것으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가 발전하고 인민의 관리에의 참가가 확대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이 사회적 자치기관으로 전화하

31) N. P. Farberov, “Obshchenarodnoe gosudarstvo: zakonomernyy rezul’tat razvitiya gosudarstva diktatury proletariata,”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7, 1962g., s. 23.

32) 自治로 번역되는 러시아어의 samoupravlenie는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사회주의’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자주관리’라고도 번역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 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단체에 국가기능이 위임되어 간다고 보았다. 예컨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은 노동조합으로,民警의 기능은 人民自警隊로, 재판소의 기능은 同志裁判所로 이양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것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적自治의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소비에트의 활성화로 반영되어진 地方自治(mestnoe samoupravlenie)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에트가 국가권력 중앙집권화의 일환이라는 종래의 주장에서 한걸음 발전하여 地方의 自律(mestnaya avtonomiya)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자치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사회주의적 사회적 자치’(sotsialisticheskoe sotsial’noe samoupravlenie) 또는 ‘인민자치’(narodnoe samoupravlenie)라고 불리워졌다.³³⁾ 당연히 이런 자치론의 발전은 흐루시초프 시대의 이상주의적인 모든 공상적·주관주의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個人崇拜에 대한 批判 이후 소련은 레닌주의적 원칙의 회복이라는 명제 아래 집단지도체제³⁴⁾를 채택하고, 당과 국가생활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였다. 당대회

33) A. K. Belykh, “KPSS i formirovanie kommunisticheskoe samoupravlenie,”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10, 1963g., s. 15; Yu. A. Tikhomirov, “Razvitie sotsialisticheskoy gosudarstvennoy vlasti,”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5, 1963g., s. 32.

와 당중앙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되고, 의사록도 공개되었다. 의사록의 공개는 '전인민의 당'으로서의 당과 인민대중간의 재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주의의 해악이었던 특권과 부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고, 당간부의 실무적 자질을 평가하여 定期的交代제도 제도화되었다. 게다가 당은 늘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진실로 대중적 전위정당으로서 黨이 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기능도 정상화되고 문화면에서의 '해빙'도 이루어졌다. 기업 자주권이 확장되고, 노동조합의 권한도 제고되었으며, 특히 지방소비에트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행정 참가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1956년 2월 제20차 당대회에서 행해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스탈린 개인의 권위주의와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스탈린주의의 광범한 부의 유산을 청산하지는 못하였으며, 이와 함께 추진된 경제개혁은 스탈린 시대 이래의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방식의 토대는 변화하지 않은 채, 이른바 리베르만 방식으로 대표되는 부분적 이윤추구의 허용 및 성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 등 물질적 보상에 국한된 생산촉진정책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로 말미암은 보수적이고 스탈린주의적 정치적 상부구조의 잔존과 변화에 대한 저항은 공산주의적 사회적 자치를 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스탈린 체제는 스탈린 개인독재였으나, 스탈린의 의지를 대변하

34) 물론 이 때에도 黨의 指導的 役割은 강조되어 집단지도체제에서도 제1서기인 흐루시초프가 말렌코프 수상보다 우위에 있었다.

고 있던 당과 국가기관의 전횡과 대행주의(podmena 또는 dublirovanie, 특히 당의 국가기관 대행)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행주의가 만들어 낸 음울한 현상인 대량 탄압만이 고발되어 그 재현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강조되었을 뿐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제 20차 당대회는 스탈린 체제의 어두운 면과 최악적 왜곡을 제거하고 탄핵하였으나, 전체로서의 官僚主義 體系 자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하지 못하였다. 스탈린 체제의 극단적 왜곡이 제거되기만 하면 사회주의의 해방된 에너지가 가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의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새로운 환상도 관료주의의 존속을 도와주었다”³⁵⁾고 말하면서, 관료주의적 병폐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호루시초프 개혁에 대한 官僚主義의 抵抗은 심각하였으며, 마침내 이는 1964년 호루시초프 축출과 브레즈네프 반동으로 이어졌다.

나. 經濟改革 措置

(1) 소브나르호즈 制度의 導入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스탈린식 명령경제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다변화 및 1960년대의 불황과 경제의 질적 변화, 경제규모의 확대 등의 경제상황 변화에 중앙통제가 효율적

35) M. S.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yka.”

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즉 계획의 작성과 운영이 생산현장과 유리되고, 각 부처간의 관료주의·관할주의는 기업상호간의 조정을 방해하였으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 상승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제계획 및 관리제도의 결함이 현재화되었다. 이에 따라 中央集權的 計劃管理制度에 대한 비판이 표면화되고 경제개혁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중앙집권적 계획관리제도에 대한 비판이 표면화되어,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格下運動과 함께 흐루시초프는 조심스러운 개혁을 시도하고 나섰다. 1957년 5월 10일 소연방 최고회의는 법률「공업 및 건설관리기구의 개선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집중적 지도를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이 단일한 국가경제계획에 의해 규정된다는 전제하에 경제현장에서의 자치를 보다 확대하는 조치였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사회주의적 사회적 자치’를 실현하는 일환으로서 고려되었다.

결국 종래의 중앙직할지도를 크게 완화하고 공화국 및 지방 각급소비에트와 경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地方分權措置였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분권화조치는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브나르호즈(sovnakhoz, 국민경제회의)라는 지방관리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진정한 분권화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전국을 105개(후에 103개로 조정)의 經濟行政地區로 구분하여 소브나르호즈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소브나르호즈가 다른 모든 산업을 관리하도록 하였다.³⁶⁾

이와 같은 소브나르호즈에 의한 관리시스템은 각 경제지구의 소브나르호즈가 관할지역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지방주의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또한 소브나르호즈 상호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다른 경제지구간의 원료·자재 조달이 곤란해지고, 이에 따라 각 경제지구에서 생산비를 무시하고 원료·자재를 자급자족하는 폐해가 생겨,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생산을 누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2년 11월 흐루시초프는 경제개혁을 재차 단행하여 소브나르호즈의 수를 47개로 통합·정리하고, 중앙관리기구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1962년 개혁은 오히려 中央集權化의 방향으로 역전하고 당의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 리베르만 經濟改革案

흐루시초프 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동안 1962년 9월 9일 하르코프대학 경제학 교수 리베르만이 “계획, 이윤, 상여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프라브다」에 발표하여, 경제계획 및 관리에 관한 改革을 제안하였다.³⁷⁾ 리베르만 경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36) 흐루시초프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Oleg Hoeffding, “The Soviet Industrial Reorganization of 1957,”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49, no. 2 (May 1959) 참조.

37)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에 대해서는 Morris Bornstein and Daniel

같다.

첫째, 중앙계획 당국이 결정하던 計劃指標를 축소하여 생산량, 품종계획, 인도기일, 인도상대의 4가지 부문으로 통합·조정하고, 노동자 수, 노동생산성, 노동임금, 자본투자, 생산비 등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利潤率을 기업의 경영능률 평가의 지표로 한다. 이윤율에 의한 기업 평가는 기존의 이윤·원가관계가 아닌 이윤·기업성적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기업경영자는 자본 절약에 노력하여 자본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며, 또한 기업의 생산능력 과소신고 및 원자재의 계획이상 보유 등의 폐해가 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윤율의 실적에 따라 기업에 報償基金을 확립하여 기업장의 재량에 따라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리베르만 개혁안은 과도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制度를 간소화하고 利潤率을 기업평가의 중요 지표로 하며, 또한 노동자에 대한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勞動 인센티브를 자극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리베르만 개혁안은 터부시되어 오던 이윤개념을 사회주

Fusfeld, eds., *The Soviet Economy: A Book of Readings*, 3rd ed. (Homewood, Ill.: Irwin, 1970), pp. 360~366; Myron E. Sharpe, ed., *Planning, Profit and Incentives in the USSR*, vols. 1 and 2 (White Plains, N. 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1966); Alfred Zauberman, "Liberman's Rules of the Game for the Soviet Industry," *Slavic Review*, vol. 22, no. 4 (December 1963), pp. 734~744 참조.

의체제 내에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더구나 기업의 자율권 부여는 필연적으로 중앙권한의 축소를 야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黨內에서 심한 反撥을 불러 일으켰다.³⁸⁾ 따라서 리베르만의 개혁안은 브레즈네프시기의 코시긴 개혁에서야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2. 브레즈네프 時代

제23차 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는 흐루시초프를 비판하여, “당의 지도형태와 방법의 주관주의적 오류와 당·소비에트기구 및 경제기관을 근거없이 개조한 주관적인 과오를 시정한다”³⁹⁾고 흐루시초프 개혁을 부정하였다. 흐루시초프 시대에 개조된 당기구, 경제관리제도, 소비에트 집행기관을 다시 복구하는 동시에 당규약도 개정하여 정치국과 서기장제⁴⁰⁾를 부활시키는 등 흐루시초프 정책을

38) 코시긴 개혁이 실시되기 이전 리베르만 개혁안에 대한 논란에 관해서는 M. E. Sharpe, ed., *The Liberman Discussion: A New Phase in Soviet Economic Thought* (White Plains, N. 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1965); Michael Kaser, “Kosygin, Liberman, and the Pace of Soviet Industrial Reform,” in George R. Feiwel, ed., *New Currents in the Soviet-Type Economies: A Reader* (Scranton, Pa.: International Textbook, 1968), pp. 337~338; Jere L. Felker, *Soviet Economic Controversies* (Cambridge, Mass.: MIT Press, 1966), chaps. 3 and 4.

39) 野村 進, “革命70年: ソ連共產黨大會の軌跡,” 「海外事情」, 第35卷 第11號 (1987. 11), p. 86.

철저하게 수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흐루시초프를 부정하고 시작된 브레즈네프 정책은 기본적으로 관료의 특권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전문가의 충원으로 체제의 安定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결국 브레즈네프 반동에 의해 소비에트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점차 대규모화하는 경제의 외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온 경제적 조건의 고갈간의 모순이 증대되면서 경제운영 메카니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개혁의 억지, 스탈린 비판의 중단으로 시작한 브레즈네프 정권이 이러한 改革을 실행할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였다. 국내적으로 그러한 모순은 경제침체와 사회기강의 해이로 반영되어졌다.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제로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점차 하락하고 있었고, 사회전체에 걸친 規律 弛緩과 腐敗現象이 만연되었다.

가. 브레즈네프 憲法과 民主化

고르바초프 이후 소련에서의 민주화를 염두에 둘 때, 고르바초프 민주화가 역사 속에서 계승한 연속성을 찾는다면 1977년의 브레즈네프 憲法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브레즈네프 헌법이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그 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중대한

40) 1966년의 당규약 개정은 부분적인 것이었다.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自治論의 부활과 政治體系論의 등장이었다.

첫째, 自治論은 브레즈네프 시대의 출범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으나, 브레즈네프 憲法 前文에서 “소비에트국가의 최고의 목적은 무계급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며, 그곳에서는 사회적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할 것이다”고 규정되면서, 다시 부분적으로 부활하였다.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사회적 공산주의적 자치’ (obshchestvennoe kommunisticheskoe samoupravlenie)는 흐루시초프의 ‘공산주의적 사회적 자치’(kommunisticheskoe sotsial’noe samoupravlenie)와는 표현이 조금 달라졌으나, 브레즈네프 헌법의 이 규정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사회 이전의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자치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것이 고르바초프 시대의 자치론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보수적인 브레즈네프 체제는 경제와 사회침체현상에 직면하여 危機局面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生産關係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브레즈네프 시대에 추진된 개혁이 발전을 위한 올바른 생산양식 수립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정 규제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었으나, 반면에 노동의 창조적 요소를 위축하고 노동자의 경제적·기술적 이니셔티브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노동자의 관심을 가정과 여가를 포함한 개인경제활동에만 향하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요컨대 결정의 실천에 인민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결정과정에 인민대

중을 참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아직 불완전한 형태이나마 사회주의하에서의 自治論의 發芽였으며, 결국은 참여민주주의의 강조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소련연구자 R. J. 힐은 직접 자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브레즈네프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가일층 발전을 말하였을때, 그는 공허한 레토릭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체계에 있어서 개혁 요구, 특히 행정기관의 합리성과 책임, 그리고 일반 주민의 정치과정에서의 참가를 보다 요구한 것이었다.”⁴¹⁾

민주주의 발전과 페레스트로이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두번째 要因으로서의 政治體系論(theory of political system)의 등장은 소련 사회를 다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브레즈네프憲法 前文에는 발달한 사회주의사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이며, 그 정치체제는 모든 사회적 업무의 효과적인 관리, 국가생활에의 근로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가, 시민의 실제적인 권리 및 자유와 시민의 사회에 대한 의무 및 책임과의 결합을 보장한다.” 이 규정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설명한 것이나, 시민의 정치참여 즉 民主主義의 實現을 보장하는 장치가 ‘정치체계’ 즉 ‘발달한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체계’(politicheskaya sistema razvitogo sotsialisticheskogo obshchestva)라는 설명으로 해석되며, 이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다. 따라서

41)ロナルド J. 힐, 菊井禮次 譯, 「ソ連の政治改革」(東京: 世界思想社, 1984), p. 189.

이후로 소련 학계에서는 ‘발달한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체계’의 개념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다.

‘정치체계’ 개념은 1965년 2월 부라츠키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⁴²⁾ 동년 6월 13일자 「프라브다」⁴³⁾가 종래 國家學의 결함⁴⁴⁾을 지적하면서 국가보다도 광의의 개념으로서 정치체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후 1969년 칼렌스키에 의해 이스톤(David Easton)의 政治體系論이 소개되고,⁴⁵⁾ 이스톤 이론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⁴⁶⁾

이리하여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한 정치체계론이 당시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를 나타낸 ‘발달한 사회주의사회’ 개념과 합성되어 ‘발달한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체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성되었던 것

42) E. V. Tadevosyan, “Diskussiia o politicheskoy nauke,” *Voprosy Filosofii*, no. 10, 1965g., s. 164.

43) “O razrabotke problem politicheskikh nauk: obzor pisem chitateley,” *Pravda*, 13 iyunya 1965g.

44) 소련에서는 혁명 이래 국가연구를 「국가·법이론」(teoriya gosudarstva i prava) 차원에서 연구하여 왔으며, 그것이 唯物史觀에 기초한 해석연구에 불과하였으므로 정식으로 自立한 학문영역으로서의 국가학(gosudarstvovedenie)은 존재할 수 없었다. 中村逸郎, “ソ連の「國家學」と政治改革: 國家認識の變化と國家の自立性をめぐる試論,” 「スラヴ研究」, no. 35 (1988), p. 55.

45) V. G. Kalenskiy, *Politicheskaya nauka v SShA: Kritika burzhuznykh kontseptsii vlasti*, Moskva, 1969g., s. 24~29, 稻子恒夫 監譯, 「現代의アメリカ政治學」(東京: 青木書店, 1976), pp. 25~28.

46) 이스톤 이론을 적극 수용한 것은 부라츠키였다. F. M. Burlatskiy, *Lenin, gosudarstvo, politika*, Moskva, 1970g., s. 118~119; F. M. Burlatskiy i A. A. Galkin, *Sotsiologiya, politika, mezhdunarodnye otnosheniya*, Moskva, 1974g., s. 20~21, 172~176.

이다. 이 개념은 헌법규정에 따라 소련학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즉 발달한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체계는 정치권력을 조직하고 기능하게 하고, 정치지도를 행하며, 사회주의사회를 관리하고, 상호 연관되어 작용하는 전인민국가·공산당·사회단체·노동집단의 복합체이며, 그 基本的 機能은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이익의 집약과 조정, 사회발전의 목표와 과제의 설정, 사회의 모든 에너지의 통합, 자원배분, 노동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다.⁴⁷⁾

전인민국가·공산당·사회단체·노동집단 등의 下位體系(sub-system)를 통합한 정치체계의 개념은 따라서 정치를 권력자에 의한 일원적 지배로서가 아니라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간의 상호관계의 체계로서 다룸으로써 소련정치를 다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즉 이 개념이 정립되면서, 특히 초법적 존재였던 공산당이 여타 정치조직의 하나로 규정되고 국가조직 및 사회단체의 기능을 共產黨이 대행하여 온 全權性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사회단체의 기능이 “결코 위로부터의 지령과 아래로부터의 요구의 전달

47) I. P. Il'nskiy, N. V. Chernogolovkin, “Politicheskaya sistema sovetskogo obshchestva: ponyatie i struktura,”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1, 1977g., s. 69.; トポルニン, 畑中和夫 監譯, 「ソビエト憲法論」(東京: 法律文化社, 1980), pp. 34~53; I. P. Il'nskiy, “Politicheskaya sistema sovetskogo obshchestva i osnovnye etapy ee razvitiya,”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8, 1982g., s. 126~129; 上野俊彦, “ソ連における「發達した社會主義社會の政治システム」論への一考察(二・完),” 「法學研究」(慶應義塾大學), 第57卷 第12號 (1984. 12), pp. 27ff.

에 귀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른바 ‘전도벨트론’을 부정하고, “구성집단의 특수한 요구를 집약·표출하는 동시에, 전국가적 차원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되었다.⁴⁸⁾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體系論的인 분석이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다양한 이익의 표출을 전제로 한 사회집단에 대한 利益集團的 分析⁴⁹⁾으로도 반영되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체계론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民主主義와의 相關性 문제였다. 전술하였듯이 헌법 전문에 ‘발달한 사회주의의 정치체계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논리적으로 사회의 다원화가 개인과 집단의 다원적 이해를 보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명백하게 “사회주의국가의 개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일층 발달, 국가와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의 공고화 및 공공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의미”하였으며, 따라서 “공산주의 건설은 사

48) G. Kh. Shakhnazarov, “O nekotorykh tendentsiyakh razvitiya politicheskoy sistemy sotsializma,”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1, 1978g., s. 7.

49) 西方에서의 이 分野 研究는 특히 스킬링(H. Gordon Skilling)이 유명하다.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18, no. 3 (April 1966); *Interest Groups in the Soviet Politic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이는 Franklyn Griffiths와의 공동편집); “Pluralism in Communist Societies: Straw Men and Red Herring,”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13, no. 1 (Spring 1980); “Interest Group and Communist Politics Revisited.” *World Politics*, vol. 36, no. 1 (October 1983).

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발전 즉 소비에트국가의 강화와 모든 정치조직체계(the whole system of political organization)의 전반적인 개선과 불가분적이다”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⁰⁾

그러나 소련에서의 정치체계론적 분석틀의 도입이 브레즈네프 시대의 민주화에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브레즈네프 시대는 정권의 내재적 보수성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변화에 지극히 둔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소련사회의 多元化와 民主化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발달한 사회주의의 정치체계’론이 바탕이 되어 소련사회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과학적 풍토가 배양되었으며, 그것이 브레즈네프 사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민주화정책 채택의 토대로서 작용할 수 있었고, 당연히 페레스트로이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⁵¹⁾

50) V. G. Afanasyev, et. al., *Soviet Democracy in the Period of Developed Socialism*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9), p. 5.

51) 페레스트로이카하에서 새로운 憲法改正이 이루어졌으나, 브레즈네프 憲法에 대해서는 “소비에트市民의 權利와 自由를 현저하게 확장하였다”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Vladimir Kudryatsev, “The Soviet State: Continuity and Renewal,” *Social Science* (USSR Academy of Sciences), vol. XIX, no. 3 (1988), p. 31.

나. 經濟改革 措置

(1) 코시긴 改革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 퇴진 후 코시긴 수상, 포드고르니 간부 회의장과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한 브레즈네프 제1서기는 코시긴의 주도하에 흐루시초프 개혁방식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새로운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현행 관리조직기구가 非效率的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역주의적 공업관리를 변경하여 부문원칙에 의한 관리로 옮긴 것이며, 또한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대한 것이었다. 즉 흐루시초프개혁에 있어서의 횡적인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부문별 부처에 의한 縱的인 管理制度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스탈린 시대의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코시긴 개혁은 1965년 9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코시긴 수상의 「공업관리 개선과 완전한 계획화 및 공업생산의 경제적 자극 강화에 관하여」라는 보고가 채택되고,⁵²⁾ 동년 10월 「사회주의 국영공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1966년 1월부터 '신경제관리제도'라는 이름 아래 실시된 것이었다.

52) Alexei Kosygin, "On Improving Management of Industry, Perfecting Planning, and Enhancing Economic Incentives in Industrial Production," in Morris Bornstein and Daniel Fusfeld, eds., *The Soviet Economy: A Book of Readings*, 3rd ed. (Homewood, Ill.: Irwin, 1970), pp. 387~396.

그후에도 여러가지 경제개혁에 관한 법령이 있었으나, 經濟改革의 基本方針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계획 입안의 개선, 기업의 경영이니시어티브와 경제적 자극의 강화 등과 관련한 제안이며, 다른 하나는 공업관리조직의 개선과 관련한 제안이었다.

경제의 계획지도방식과 경제적 자극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計劃指標를 종래의 20~30여개에서 8개로 축소하였다. 물론 리베르만의 4개 지표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획기적인 통합·조정이었다.

둘째, 기업이 획득한 이윤 가운데 기업적립부문을 확대하여 물질적 보상기금(material incentive fund), 사회복지·주택시설기금(social welfare and housing fund), 생산개발기금(production development fund) 등 3가지 基金을 造成하도록 하였다.

셋째, 투자자본과 이윤의 국고납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였다. 즉 무상펀드제를 폐지하고 유상펀드제를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는 장단기 銀行融資에 의해 행하고, 무이자·무상환의 재정기금을 폐지하였으며, 기업은 보유하는 고정·유동펀드에 비례하여 펀드사용료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넷째, 價格體系의 改革으로 특히 중공업 및 기계제작공업부문에 신가격을 도입하였다. 신가격의 원칙은 개별 생산부문의 계획상 손실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기업의 완전한 독립채산제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모든 부문에 필요한 이윤율을 보장하려는 것이었

다.

다섯째, 공업관리기구의 개혁에서 소브나르호즈에 의한 관리방식을 전폐하고 다시 工業關係部를 부활하여 부문별 원칙에 의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물적·기술지원국가위원회(Gossnab), 가격국가위원회(Gostsen), 과학·기술국가위원회(Gostekhnika) 등 3개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혁안에 힘입어 1966~1967년에는 경제가 호전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1968년부터 다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 1973年 改革

1973년 개혁은 1973년 4월 당중앙위와 각료회의의 공동결정인 「공업관리와 가일층 개선에 관한 몇가지 조치에 대하여」(약칭 「공업관리개선령」)에 의해 규정되었는데, 이는 企業管理의 再編成, 즉 합동이라는 기업군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공업합동, 생산합동, 과학생산합동 등 새로운 관리·생산조직단위가 등장하였다.

이는 다수의 기업을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단일관리하에 두는 超大型 企業으로 개편함으로써 소형기업의 비효율성을 대형화와 협동화를 통하여 제거함은 물론, 과학기술과 생산활동을 결합하여 생산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生産合同에 의한 경영관리는 의사결정 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녔는데, 첫째, 생산합동이 일종의 작은 정부부처(micro-ministry)의 성격을 띠므로써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意思決定의

分權化가 이루어졌으며, 둘째,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意思決定의 再集中化가 되는 것이었다.⁵³⁾

(3) 1979年 改革

‘79결정’이라 불리는 1979년 개혁은 1979년 7월 당중앙위와 각료회의가 「계획의 개선 및 생산효율과 노동의 질적 향상에 대응하는 경제메카니즘의 강화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면서 대두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계획의 개선으로써 物的 計劃 作成을 기반으로 면밀한 규제를 통하여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⁵⁴⁾ 개혁의 성격은 코시긴 개혁과 동일하였다. 둘째, 勞動과 資源의 절약과 그것의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결국 1979년 개혁은 노동의 수요를 제한하고 원재료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경제 효율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53) Abram Bergson and Herbert S. Levine, *The Soviet Economy: Toward the Year 2000* (London: 1983), pp. 357~358.

54) 1979년 개혁은 ① 기본계획으로서 年次計劃 대신에 5個年計劃을 채택함으로써 계획기간을 장기화하고,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개발 20년계획이나 경제사회개발 10개년계획 등 長期計劃의 基本方向·路線에 따라 작성하며, ③ 계획에는 부문별 계획과 지역별 계획이 포함되는데, 각 공화국은 각자의 계획을 고스플란에 제출하여 상호 조정하고, ④ 10개년계획과 5개년계획간의 均衡的 조화, 각 部門間의 주요 생산물에 대한 균형, 그리고 각 地域間의 주요 제품의 생산과 분배간의 균형 등 보다 포괄적인 균형개념을 강조하였다. Ibid., pp. 359~360.

이었는데, 계획 입안과 계획지표 및 인센티브제도의 지표를 총생산고 보다는 순생산고에 기초를 두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기된다. 그러나 이 1979년 개혁도 고스플란 및 중앙부처의 권한이 현격히 증대하게 되는 개혁의 逆作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는 經濟下部構造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기존 관료층의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브레즈네프 시대의 개혁은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력을 결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비대화하고 관료화된 소련의 체제 자체가 개혁의지를 수용하기에는 이미 신축성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안드로포프 · 체르넨코 時代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모순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한 개혁의 한계가 심각하게 고려된 것은 1982년 11월 안드로포프 집권 이후였다. 브레즈네프의 17년 통치의 유산은 이미 사상최악으로 된 경제부진현상과 타락·무사안일로 인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이었다.

안드로포프는 1982년 11월 22일 당중앙위 총회에서 소련경제의 점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발표하였다.⁵⁵⁾ 이 연설에서 안드로포프는 산업불균형, 노동생산성 감퇴, 자원문제, 인구문제, 수송문제 등을 설명하면서, 노동규율의 강화를 위한 행정권의 사용 및 무능한 경제관료의 해고 등 강경조치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⁵⁶⁾ 또

55) *Pravda*, 23 noyabrya 1982g.

56) 안드로포프는 1983년 6월 중앙위 총회에서도 공동의 목표달성에

한 1983년 7월 당중앙위와 각료회의는 공동명의로 산업생산체와 각 기업의 경제계획과 경제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종의 經濟實驗이 1984~1985년간 5개부문(중기계·운송기계 공업분야와 전자기술산업 등 연방수준의 2개 기계제작부문 및 우크라이나 식품산업, 백러시아 경공업, 리투아니아 지방산업체 등 공화국수준의 3개 부문)에서 실시될 것이라 발표하였다.⁵⁷⁾

안드로포프의 개혁은 노동규율의 강화와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통하여 소련경제를 회복시켜 보려는 시도였으며, 1983년 6월부터 8월간에 걸쳐 발표된 법률과 결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법률「기업·공공시설·조직에서의 노동집단과 그 역할 향상에 대하여」(1983. 6)는 생산의 집약화, 과학기술발전의 촉진, 사회적 생산의 생산성 향상, 복지 향상 및 개성 발달을 유도할 것을 목적으로 기업·공공시설 및 조직관리에 노동자집단이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정하며, 노동자집단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여 노동자집단의 공동작업과 상호부조를 촉진시킴으로써 규율·조직성·솔선성·적극성·기술적 창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즉 노동자의 일정한 경영참가권을 인정하는 한편, 勞動小集團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이었다.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Ekonomicheskaya gazeta*, 25 iyunya 1983g.

57) *Ekonomicheskaya gazeta*, 31 iyulya 1983g.

결정 「계획화와 경제활동에서의 공업생산합동(기업)의 권리 확대와 작업성과에 대한 책임 강화에 관한 추가적 조치에 대하여」(1983. 7)는 모든 계획책정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기술 도입 및 이윤의 재투자에 관한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주택기금·사회보장기금의 배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생산성 향상 우수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리베르만 개혁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었다.

결정 「사회주의적 노동규율 강화에 관한 작업의 강화에 대하여」(1983. 8)는 상기 노동집단법의 일부개정사항으로 노동규율 강화에 의해 무단결근·지각·음주 등을 방지하고, 나태 감소, 노동시간의 손실 삭감, 노동자원의 합리적 이용, 노동요원의 유동성(기업간 이동) 억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채택된 「노동규율 강화에 관한 추가적 조치에 대하여」에서는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보적 노동조직·자극형태의 도입, 노동관리 개선, 노동 복지 향상, 직업소개체계의 개선 및 면직처분과 물적 책임의 강화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말에 공표된 미국 CIA보고서에 의하면, 안드로포프의 경제정책은 특히 投資部門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⁵⁸⁾ 그러나 안드로포프 시대의 경제회복세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경제실험조치 보다는 노동규율 강화와 병행하여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作業班(brigada) 방식의 도입에 더욱 큰 원

58) 米CIAソ連分析部 報告書, “안드로포프政權의經濟政策: 「投資」以外はブレジネフ路線を踏襲,” 「世界週報」, 1984. 2. 7, pp. 37~41.

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반 방식은 제26차 당대회의 결의 및 1979년 7월 12일 당중앙위 및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과학적 노동 조직 도입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말단 생산현장의 조직·임금지불방식을 개선하는 集團的 勞動의 利點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린 방식이었다. 이는 말단조직에 있는 노동자집단이 일정한 작업을 청구하여 공동작업의 성과에 따라 개개인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종래에는 노동자가 자기 할당량(norma) 달성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이 방식 아래에서는 공동작업 수행에도 관심을 갖게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안드로포프의 經濟改革措置는 그가 행한 마지막 공식연설이었던 1983년 8월 15일 당간부회의 연설에서 개혁·관리·경제 메카니즘에서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⁵⁹⁾ 당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당이론지 「코무니스트」 1983년 8월호는 “시장기능이 아닌, 정치이론이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드로포프의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挑戰하고 나왔으며, 20년 이상 고스플란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바이바코프 제1부수상도 8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련경제는 기본적으로 건강하며, 따라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불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영권의 확대보다는 중앙집권화”라고 단언하였다.⁶⁰⁾ 안드로포프는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기에는

59) *Pravda*, 16 Avgusta 1983g.

60) *Pravda*, 18 Avgusta 1983g.

당내 정치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육체적으로도 너무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개혁정책을 본격적인 실천에 옮기지 못한 채 1984년 2월 사망하고 말았다.

안드로포프 사망에 이어 집권한 체르넨코 체제는 保守黨僚派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에 제동을 걸어보려 했던 체제였다. 체르넨코는 제27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전략과 전술을 밝힌 한 연설에서 “소련은 앞으로 생산성 제고와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며, 공산주의로의 단계적 변화는 유도피아적 관념, 조급성 및 비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밝힘으로써 경제문제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접근방법도 ‘사회주의경제의 객관적 발전 법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소련의 주요 당면과제는 공산주의의 함양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소련은 발전된 사회주의의 긴 역사적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여 안드로포프 정권하에 표명되고 있던 改革論議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체르넨코가 1985년 3월에 사망하고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개혁은 다시 본격화되었다.

Ⅲ. 고르바초프 時代의 改革과 開放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소련사회는 엄청난 양적·질

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所有制度의 변혁을 포함한 물질 토대의 격변뿐만 아니라 政治體制改革과 民主化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체의 革命이 일어난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yka)는 이런 점에서 단순한 개혁(reforma)이라기 보다는 社會革命이며, 고르바초프의 표현처럼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인민에 의해, 인민을 위해 실현되는 전일적 혁명과정”⁶¹⁾이었다.

사회혁명으로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경제·사회·문화·대외관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는데,⁶²⁾ 여기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양상을 개관하고, 고르바초프 시대의 社會主義에 대한 새로운 解釋問題라는 이념적 차원의 변화 및 정치·경제부문에서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1. 페레스트로이카 推進樣相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은 1985년 3월 당서기장으로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혁신적인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을 분수령으로 그 이전과

61) M. S.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yka,” *Pravda*, 26 noyabrya 1989g.

62)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고르바초프 시대 소련의 변화를 특징지은 公開(glasnost’), 새로운 思考(novoe myshlenie), 民主化(demokratizatsiya) 등의 용어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대외관계 등의 각 부문별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공개성, 새로운 사고, 민주화 등이 강조된 것이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종합되어 全一的 페레스트로이카를 이루었다.

크게 대별되는데,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우에도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까지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와 1989년 5월 인민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대체로 3단계의 변화를 보여왔다. 즉 제1단계로서 1988년까지의 ‘페레스트로이카 發芽期’, 제2단계로서 1989년까지의 ‘위로부터의 體制改革期’, 제3단계로서 그후 소련붕괴까지의 ‘밑으로부터의 社會革命期’로 대별된다.

고르바초프 시대가 시작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처음에 “주로 사회조직의 개별적 왜곡을 바로잡는 것, 지난 수십년 동안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틀을 갖춘 體制를 완전하게 더한층 改善(dal' neyshee uluchshenie)하는 것”⁶³⁾에만 관심을 두었다. 경제침체의 원인이 노동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인식하여 노동규율의 강화와 민주화에 의해 社會病理를 치유하려 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초기 조치는 브레즈네프 이래의 보수성의 연장선상에서 현실의 소비에트국가를 더한층 개선하면 공산주의의 미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見解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후 페레스트로이카는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를 기점으로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社會構造 전체를 근본적으로 改造하는 차원으로 발전하여, 실제로 所有關係, 經濟메카니즘, 政治體系를 혁신하고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기풍을 변모시키는 일⁶⁴⁾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경제·사

63) M. S.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ika,” *Pravda*, 26 noyabrva 1989g.

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제3단계로서 페레스트로이카는 1989년 5월 인민대의원대회 이후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이해를 반영한 수많은 민중조직이 형성되면서 社會的 民主化·多元化가 촉진되고, 이에 반발한 기득세력의 1991년 8월 쿠데타 기도와 민중의 저항, 그리고 기존 政治·經濟體制의 해체로 귀결되었다.

제1단계인 ‘페레스트로이카 발아기’에서는 제2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제4차 당강령 제2부의 표제(「사회주의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에 관한 소련공산당의 과제」)가 시사하듯이 현상 긍정의 保守主義와 그 ‘완성’에 의해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理想主義가 병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를 특징짓는 표현은 완성(sovshenstvovanie), 가속화(uskorenie), 발전(razvitie), 개선(uluchshenie), 확대(rasshirenie), 심화(uglublenie), 강화(ukreplenie, usilenie, uprochenie), 정확화(utochnenie), 풍부화(obogashchenie) 등으로 게다가 이들의 표현 앞에는 더한층(dal’neyshiy)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용어는 단순한 보통명사이며 특정 사상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30~40년대 이래 상투어로 상용되어 일정한 사상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아뭏든 현상을 시인하는 위에서 그 전진을 꾀한다는 保守的 發想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특히 대부분 브레즈네프 시대에도 애용되었던 표현이었다. 이 점

64) Ibid.

에서 보아도 고르바초프 시대 초기에는 여전히 브레즈네프 시대의 발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브레즈네프 시대의 용어를 계승하였으나, 그것을 역으로 취하였으며, 오히려 急進主義를 기초로 하였다. 즉 브레즈네프 시대의 社會主義 完成이란 그것을 필요하면서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원한 과정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를 정체시켰으나,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공산주의를 향하여 현실의 사회주의를 ‘더 한층 완성’시키고, 그 完成을 ‘더 한층 가속’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제2단계인 ‘위로부터의 체제개혁기’에서는 제 19차 당협의회에서의 고르바초프 보고 제2부의 표제(「정치체제 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를 퇴보시키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보증」)와 동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소비에트사회의 민주화 및 정치체제 개혁에 대하여」에서 시사되듯이, 政治體系 改革(reforme politicheskoy sistemy)이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根本的인 變革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에의 지향도 약화되고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와 혁명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1988년에 출간된 「페레스트로이카에 있어서 蘇聯共產黨」을 면밀하게 분석한 영국의 소련 연구자 존 굿딩(John Gooding)에 의하면, 500페이지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의 이 자료집에는 공산주의에로의 지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던 1986년의 당강령과 비교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은 단지 한 군데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도 “소련공산당의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 건설에 있다”⁶⁵⁾는 선언적인 언급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⁶⁶⁾ 또한 굿딩은 「고르바초프 선

집」⁶⁷⁾을 분석하여, 1967년에서 1983년간의 연설과 논문을 수록한 제1권에서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언급이 모두 28군데가 있었으나, 1985년 10월에서 1986년 7월까지의 제3권에서는 12군데로 감소되고, 1986년 7월에서 1987년 4월까지의 제4권에서는 3군데, 그리고 1987년 12월에서 1988년 10월까지의 제6권에서는 단지 2군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굿당은 고르바초프 시대의 소련이 共產主義를 拋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표현은 개혁(reforma), 재편(rekonstruktsia), 혁신(obnovlenie) 등으로 과거의 保守的인 發想을 지양하는 적극적인 용어들이 범용되었다.⁶⁸⁾

페레스트로이카의 제3단계인 ‘밑으로부터의 사회혁명기’는 복수 후보·보통선거로 치루어진 1989년 3월의 인민대의원대회 선거 이후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 다원주의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동년 5월 인민대의원대회에서 개혁파가 대거 진출하고, 각종 非公式的 組織들이 활성화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아래로부터의 革命

65) *KPSS o perestroyke: sbornik dokumentov*, Moskva, 1988g., s. 30.

66) John Gooding, "Gorbachev and Democracy," *Soviet Studies*, vol. 42, no. 2 (April 1990), p. 201.

67) M. S. Gorbachev, *Izbrannye rechi i stat'i*, Moskva, 1987~1989g.

68) 이러한 표현상의 변화에 있어서 동 협의회에 제출된 당 중앙위원회 테제가 社會主義的 法治國家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판되고, 「법의 개혁에 대하여」(O pravovoy reforme)라는 결의에서는 단지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건설이라고 고쳐졌던 것은 매우 시사적이었다.

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는 東歐에 있어서 각종 포럼(forum)과 원탁회의 등의 아래로부터의 의견 개진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존의 정치체계가 급속도로 붕괴되는 과정과 호응하고 있다. 한편 이 단계는 고르바초프 시대의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의 성격을 분명하게 관측하게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상과 같은 추진양상을 보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하여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입각하였으며, 소련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점차 社會全般의 革命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화의 경우, 과거 소련에서 형식적이었던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민주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그 범위와 심도도 점차 상승적으로 확대되고 내실화되어 政治的 民主化뿐만 아니라 社會的·經濟的 民主化를 수반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蘇聯 解體라는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부정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2. 새로운 社會主義觀의 定立

가. 社會主義的 人民自治: 參與民主主義

1986년 2~3월 소련공산당 제2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소련공산당 新綱領(제4차 강령)에는 “국가와 사회사업에 시민들이 더욱 철저하게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인민자치(sotsialisticheskoe samo-

upravljenje naroda)를 발전시킨다. 인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기관의 활동을 향상시킨다. 노동조합, 콤포소물, 노동인민 대중조직 등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모든 형태의 간접·직접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소련공산당은 모든 소비에트 활동 즉 당의 정치적 기초인 사회주의적 인민자치의 주요 요소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되어,⁶⁹⁾ 自治問題가 고르바초프 시대에서도 중요 문제로서 등장하였다. 과거의 자치론과 비교하여 볼 때, 신당강령의 자치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자치문제가 參與民主主義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⁷⁰⁾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회주의적 인민자치의 발전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으나,⁷¹⁾ 명백하게도 자치문제를 사회주의하에서 그것도 參與의 차원으로 해석한 것은 기존의 공식적 해석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69)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프로그래스출판사 편, 김정민 옮김,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전략: 소련공산당 제27차 당대회 토론자료집」 (서울: 이성과 현실, 1990), pp. 246, 265.

70) 또한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同大會의 中央委員會 政治報告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조건하에서 管理가 좁은 전문가층의 特權으로 될 수는 없다. … 사회주의제도는 인민 자신이 자기 사업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정치에 參與할 때에만 성공적으로 발전한다”고 언명하여, 자치문제를 參與次元에서 말하였다. 위의 책, pp. 101~102.

71) M. S. Gorbachev, “Zhivoe tvorchestva naroda,” *Pravda*, 11 dekabrya 1984g.

그런 시각이 갑자기 고르바초프 시대에 등장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술하였듯이 공산주의적 자치가 아니라 社會主義的 自治에 대한 논의는 이미 흐루시초프 시대 이래로 있어 온 주장이다. 또한 자치문제를 참여 차원에서 논의하여 온 역사적 배경도 흐루시초프 시대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고르바초프 시대의 社會主義的 人民自治論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자치가 단지 기업, 지방소비에트, 사회단체 등 개별적 단체들의 문제로서 뿐만이 아니라, “발달한 사회주의사회의 사회주의적 인민자치의 강화는 모든 사회적 정치체계의 民主主義 深化”⁷²⁾를 의미한다고 강조되어, 정치체계 全領域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굴리에프에 의하면,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인민자치에는 모든 社會的 水準에서의 자치, 政治的·法的 體系의 개별 구성요소 수준에서의 자치, 勞動集團 등의 가장 기초적 수준에서의 자치 등 세가지 수준의 자치가 존재한다고 한다.⁷³⁾

그러면 사회주의적 인민자치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자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단계에서의 국가관리」(1988)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인민자치는 “전체로서의 인민 및 시민의 다양한 공동체에 의해 직접 또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와 사회원리에 기초하여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사회기관을 통하여 실현

72) I. Il'inskiy i I. Rozhko, “Sotsialisticheskoe samoupravlenie naroda,” *Kommunist*, no. 2, 1986g., s. 36.

73) V. E. Guliev, “Teoreticheskie voprosy sotsialisticheskogo samoupravleniya,”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2, 1986g., s. 4.

되는 사회문제의 관리”로 설명된다.⁷⁴⁾ 전술하였듯이 新黨綱領이 社會主義的 自治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① 국가·사회의 사업에 市民를 보다 더 한층 완전하게 參加시키는 것, ② 選舉制度를 개선할 것, ③ 선거로 선출된 人民權力機關의 활동 개선, ④ 노동조합·콤소몰 등 大衆團體의 역할 향상, ⑤ 모든 대표 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 형태의 효과적인 활용 등이다.

또한 부젠코는 「인민 스스로에 의한 인민권력」(1988)에서 사회주의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方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사회적 사업의 관리에 직접 참여한다. ② 하위단위에서야 말로 直接 參與가 가능하며, 中央集權主義를 배제하고, 관리기능을 중앙에서 사회단체로 이전한다. ③ 노동조직 및 사회단체는 전국가적 수준에서도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④ 근로인민대중의 권력은 대표체계를 통해서도 실현되므로 選舉制度의 民主化가 필요하다.⁷⁵⁾

사회주의적 인민자치와 관련한 이상과 같은 논의는 인민자치가 인민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參與民主主義의 강조였다. 자치문제를 레닌 이래의 정통적인 공산주의에로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제기하

74) B. M. Lazarev, *Gosudarstvennoe upravlenie na etape perestroyki*, Moskva, 1988g., s. 32.

75) A. P. Butenko, *Vlast' naroda posredstvom samego naroda*, Moskva, 1988g., s. 171~173.

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參與 概念 자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었다. 바라바셰프에 의하면, 소련에서 참여(uchastie, souchastie)란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감독을 의미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정책집행과정뿐만 아니라, 주민 자신에 의한 결정, 정책입안이라는 의미에서의 참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참여 개념을 제기한 것이다.⁷⁶⁾

이렇게 볼 때 고르바초프 시대의 사회주의적 인민자치론은 곧 參與民主主義論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적 인민자치론은 1988년 헌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그후에도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일반화되어 왔다. 당중앙위 이데올로기 위원장 메드베제프는 “모든 권력을 근로인민대중의 손에 넘겨주고, 중앙 차원이든 지방 차원이든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黨은 이러한 작업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거대한 창조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社會的·政治的 手段이라 확신하고 있다”⁷⁷⁾고 말하여, 직접적으로 인민자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76) G. V. Barabashev i K. F. Sheremet, “Konstitutsiya SSSR i teoreticheskie problemy razvitiya Sovetov,”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5, 1985g., s. 37~38.

77) Vadim Medvedev, “K poznaniyu sotsializma,” *Kommunist*, no. 17, noyabrya 1988g., s. 11.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게다가 메드베제프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意思決定 차원이라는 점은 주목된다.

인민자치론이 참여 차원에서 인식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르바초프의 1989년 11월 「프라브다」 논문은 人民自治와 間接民主主義의 結合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찌기 시민사회론자들이 주장하여온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조정영역 분리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⁷⁸⁾

나. 人道的 · 民主的 社會主義

사회혁명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본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이루어졌다.

1990년 7월 제27차 당대회에서는 「인도적 · 민주적 사회주의를

78)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의 이용, 직접적인 의사 표현의 다양한 창구를 통한 모든 사회적 관심사에서의 시민의 활동적인 참여와 같은 장점을 가진) 사회주의적 인민자치의 이론과 실천을 (行政과 立法의 명확한 분리와 司法의 독립을 보장하는) 代議制 · 議會民主主義와 변증법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인민자치는 국가기구와 다양한 사회기구나 시민사회 기관들간의 ‘세력범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에트국가기구 내부에 自治原則이 ‘맹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맹아를 촉진하는 것은 인민대표소비에트 제도 전체의 발전이다.” M. S.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yka, *Pravda*, 26 noyabrya 1989g.

향하여」란 표제의 강령적 선언⁷⁹⁾을 채택하고, 새로운 당강령이 나올 때까지 黨의 指針으로 삼을 것임을 결의하였다. ‘인도적·민주적 사회주의’(gumannyi demokraticheskiy sotsializm)라고 공식 명명된 새로운 사회주의는 강령적 선언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인간이 사회발전의 목적으로 되어, 현대문명에 어울리는 인간을 위한 생활·노동조건이 마련되며, 정치권력과 인간이 만들어 온 물질·정신적 가치로부터의 인간의 소외가 극복되어, 사회과정에서의 인간의 적극적 참가가 보장되는 사회
- ② 다양한 소유·관리형태에 입각하여 근로자가 生産의 主人으로 확실히 되어, 생산성이 높은 노동에 대한 강한 의욕이 일어나며, 생산력의 진보와 합리적인 자연 이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확보되고, 사회적 공정성과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성이 보증되는 사회
- ③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 국민의 主權的 意思이며, 사회의 감독하에 있는 국가가 사회적 지위와 성별·연령·민족적 소속·신앙에 좌우됨이 없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 명예와 존엄을 확실히 옹호하고, 법률 속의 모든 사회·정치세력의 자유 경쟁이 이루

79) 「프라브다」, 1990년 6월 27일자에 草案이 공고되고, 부분적으로 수정 통과된 全文이 동지 7월 15일자에 게재되었다. “Proekt: K gumannomu, demokraticheskomu sotsializmu (Programmnoe zayavlenie XXVIII s” ezda KPSS),” *Pravda*, 27 iyunya 1990g.; “K gumannomu, demokraticheskomu sotsializmu (Programmnoe zayavlenie XXVIII s” ezda KPSS),” *Pravda*, 15 iyulya 1990g.

어지는 사회. 그것은 민족간의 평화적이고 대등한 협력,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할 각 민족 권리의 존중을 목표하는 사회이다.

이하에서는 ‘인도적·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명명되었던 새로운 사회주의의 성격과 특징을 사회주의발전단계에서의 위치와 물질 토대,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 社會主義 發展段階論을 둘러싼 특별한 새로운 주장은 없이 브레즈네프의 ‘발달한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이행의 지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⁸⁰⁾ 현단계도 ‘발달한 사회주의’ 단계라고 지칭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이에 따라 이 단계를 장래의 목표로서 머무는 경향까지 나타났다.⁸¹⁾ 제2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新黨綱領이 “우리나라는 인민의 엄격한 노동, 경제의 괄목한 발전, 사회적·정치적 분야와 과학 및 문화분야의 성공 등을 통해 발달한 사회주의를 여는 새로운 역사단계로 진입하였다”고 규정하였던 것은 ‘발달한 사회주의’ 단계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소련이 발달한 社會主義의 初期 段階에

80)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① 사회구성의 고도화, ② 생산력 수준의 고도화, ③ 정치적 상부구조의 고도화 등이 ‘발달한 사회주의’로의 이행 지표로 간주되었으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① 1950년대 말(1959년 제21차 당대회), ② 1960년대 중반(1966년 제23차 당대회), ③ 1960년대 말 또는 1970년대 초(1971년 제24차 당대회)로 각각 주장하는 세 가지 견해가 상반되고 있었다.

81) 西村可明, “社會主義經濟構想のペレストロイカ,” 『ソ連研究』, 第9號 (1989. 10), pp. 73~74.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흐루시초프 시대 이래로 소비에트국가론으로서 승인되어 온 全人民國家論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에도 1986년 당강령이 전인민국가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자토프는 전인민국가론은 모든 인민을 이해·의사의 완전 일치된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것이 국가와 사회 내부의 모순을 외면하고 개인·집단·계급·민족 등에 있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해 분석을 방해하여 왔다고 비판하였다.⁸²⁾ 한편 현 단계를 전인민국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즉 관료주의에 중독되어 있으므로 아직 전인민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⁸³⁾

발달한 社會主義와 全人民國家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사회주의를 이행기로서 파악하지 않고 독자적인 단계로 규정함으로써 역사발전단계에서 특정한 지표와 형식을 가진 獨自的인 社會構成體로 이해한 결과였다.⁸⁴⁾

82) V. Zotov, "Oktyabrya i sotsialisticheskoe gosudarstvo," *Pravda*, 20 noyabrya 1987g.

83) "Demokraticeskaya perestroyka sovetskoy politicheskoy sistemy,"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no. 9, 1988g., s. 3.

84)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제기하여, 사회주의를 건설 목표로서 위치시키고 현단계를 시작단계로 규정하였다. 1987년 9월 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趙紫陽 총서기는 현단계 중국을 "낙후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고, 현단계에서는 계급투쟁이 주요 모순이 아니

고르바초프는 “역사의 자로 재어볼 때, 10월혁명 이래의 70년은 새로운 사회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의 역사적 도정에서 하나의 장기적인 發展段階로 보고 있다”⁸⁵⁾고 언명하였다. 또한 브레진스키(Z. Brzezinski)가 20세기 전체를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언으로 규정하였을 때,⁸⁶⁾ 고르바초프 서기장 보좌관인 샤흐나자로프는 실제로 공산주의가 존재하지도 않았었다고 반박하면서, 브레진스키가 단지 20세기의 경험은 “공산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실증하지 못하였다”든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 예상보다 훨씬 곤란한 일임을 보여주었다”든지, “공산주의 학설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였다면 옳았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⁸⁷⁾ 결국 “공산주의는 사회발전의 현단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假說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그것은 “영원한 공상”(neizbyvnaya mechta)에 지

라, 점차 증대되는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낙후된 사회생산력간의 矛盾이 주요 모순이므로, 사회주의초급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결국 이를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趙紫陽的工作報告：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人民日報」, 1987. 11. 4.

- 85) M. S.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ika,” *Pravda*, 26 noyabrya 1989g.
- 86)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s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 87) G. Shakhnazarov, “Obnovlenie ideologii i ideologiya obnovleniya,” *Kommunist*, no. 4, marta 1990g., s. 54.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⁸⁸⁾

共産主義를 이상과 같이 먼 장래에나 실현가능한 또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현실로서의 社會主義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양식으로 규정되는 사회구성체인가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며, 이 점에서 고르바초프 시대의 새로운 社會主義像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아우잔에 의하면, 페레스트로이카를 移行期的 經濟構造로의 복귀로 간주하는 견해와 社會主義의 刷新으로 보는 견해가 대비된다.⁸⁹⁾ 이행기적 경제구조로의 복귀라 함은 흔히 新經濟政策과 비교되듯이 사회주의적 전제조건외의 창출을 의미하며, 사회주의의 쇄신이라 함은 사회주의를 새로이 해석하여 레닌적인 사회주의에로의 복귀라기 보다는 사회주의의 현대적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⁹⁰⁾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레닌으

88) Ibid., s. 54~55. 그러나 샤흐나자로프는 共産主義 理念을 매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社會的 公正성과 관련된 가장 고도의 이미지가기 때문이며, 이런 차원에서 共産主義 理念은 사회의식 속에서 영원히 자리잡은 채 인류의 정신문화, 도덕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89) Aleksandr A. Auzan, "Politicheskaya ekonomiya sotsializma perestroyka stavim problemy," *Kommunist*, no. 1, yanvarya 1989g., s. 13.

90) 아발킨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역사적 경험의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그리고 新經濟政策 초기단계의 긍정적 결과와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여러 경험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레닌의 遺産 특히 그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우리들의 견해 전체의 근본적인 전환을 인식할" 필요를 강조하였던 晩年の 著作에

로의 회귀'라는 초기의 명제에서 시사되듯이 신경체정책을 상정하여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社會主義의 現代的 概念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에 신경체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은 그간의 소련의 사회주의 발달과정이 오류였다는 인식에서 새로이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고, 사회주의의 쇄신이라 하면 신경체정책이라는 레닌의 구상만으로는 현대적 관점에서의 사회주의의 본질을 이룰 수 없다는 보다 적극적인 고려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면 社會主義의 現代的 概念은 무엇이었는가.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 상정하고 있던 사회주의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듯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적대적 계급의 소멸, 자유노동(인간에 의한 인간의 어떠한 착취도 없는 상태)”⁹¹⁾이며, 대표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로서만 한정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논점이 강조되었다.

이리하여 현대적 개념에서의 사회주의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소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L. Abalkin, “Rynok v ekonomicheskoy sisteme sotsializma,” *Voprosy ekonomiki*, no. 7, iyulya 1989g., s. 4. 한편 메드베제프는 사회주의의 레닌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회가 레닌 시대 이후 엄청나게 변화하였으므로, 현대적으로 이데올로기를 刷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 Medvedev, “K poznoniyu sotsializma,” *Kommunist*, no. 17, noyabrya 1988g., s. 6~7.

91) Eduard Batalov, “Sotsialisticheskaya perspektiva i utopicheskoe soznanie,” *Kommunist*, no. 3, fevralya 1988g., s. 79.

유형태와 결부되어지나, ‘더 많은 사회주의’(bol’she sotsializm)를 고려할 때 다른 접근법이 훨씬 유용하며, 사회주의를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회주의’(sotsializm dlya cheloveka)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지에서 사회주의는 “사회정의,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적 편안(komfort)을 향한 인류의 영원한 열망이 충족될 수 있는 사회조직”⁹²⁾이라는 무엇보다도 人間本位의 관점에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샤흐나자로프는 “사회적 소유의 존재가 사회주의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사회주의제도라고 하여도 모든 소유가 금기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계획경제가 사회주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하면서, 市場과 計劃의 結合을 강조하였다.⁹³⁾

당이론지 「코무니스트」 1989년 13호 사설은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로서 집단적·국가적·주식적·사적 소유를 포함한 混合形態를 전망하면서, 다만 그런 다양한 소유형태가 노동자의 소외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⁹⁴⁾ 또한 세계사회주의체제경제연구소 소장 보고물로프는 勞動의 解放이란 착취로부터 벗어나는 것

92) Nikita N. Moiseev, “Moi predstavleniya o novom oblike sotsializma,” *Kommunist*, no. 14, sentyabrya 1988g., s. 14~15. 모이시예프는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합리적 사회주의’(ratsional’nyy sotsializm)를 강조한다. Ibid., s. 25.

93) Shakhnazarov, “Obnovlenie ideologii i ideologiya obnoveniya,” s. 58.

94) “Diskussii: k novomu obliku sotsializma,” *Kommunist*, no. 13, sentyabrya 1989g., s. 8~10.

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물질적·정신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각 경제활동 참가자가 고도로 충분한 자유, 시장관계와 이성적 등가교환(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을 포함)의 충분한 자유를 필요”로 하는 논거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所有形態의 동등한 權利와 主權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자기 노동력에 대한 각 개인의 소유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處分權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⁵⁾

그렇다면 다양한 所有形態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社會主義的 特徵은 무엇이며,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주제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예컨대 샤흐나자로프는 “사적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규제된다면, 그리고 賃勞動이 착취의 주된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강조하였는데,⁹⁶⁾ 賃勞動의 착취도구화를 방지할 일정한 社會的 條件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다. 즉 所有制度 改革은 필연적으로 소득격차 확대 및 불로소득 증대,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적 소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資本蓄積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보고물로프는 賃勞動이 반드시 착취와 不拂勞動의 부당한 이득

95) Oleg T. Bogomolov, “Menyayushchiysya oblik sotsializma,” *Kommunist*, no. 11, iyulya 1989g., s. 38.

96) Shakhnazarov, “Obnovlenie ideologii i ideologiya obnoveniya,” s. 58.

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와 국가가 세제·사회보장 등의 유효한 통제수단을 장악하면 임노동이 착취도구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⁹⁷⁾ 정치경제학 전문가이고 당중앙위 이데올로기위원장이었던 메드베제프는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메드베제프는 민주집중제적 관리메카니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경제는 강력한 中央이 없이는 안된다. … 관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원칙으로서의 중앙집권주의는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균형된 발전을 담보하고, 시장의 균형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을 창출해 내며, 재정과 신용 및 화폐제도의 기능을 보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자로서의 개인기업이나 합동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준다. 사실상 어떠한 선진 자본주의국가도 중앙집권화된 관리기능없이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⁹⁸⁾

페레스트로이카는 民主化를 통해 經濟改革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변혁이론과 차이가 있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경제영역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상부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상부구조의 변혁을 야기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그 역의 발전

97) Bogomolov, “Menyayushchiysya oblik sotsializma,” s. 38.

98) Vadim A. Medvedev, “K poznaniyu sotsializma,” *Kommunist*, no. 17, noyabrya 1988g., s. 17.

과정을 보여주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政治改革과 政治的 意志가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前提條件이 될 수 있음을 예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새로운 사회주의의 핵심으로 논의되었다.

民主主義에 입각하여 경제관리의 관료적 방식을 경제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의 모든 차원과 영역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생산 증대를 위한 보다 나은 동기를 제공하고 생산물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고르바초프 시대의 새로운 社會主義 概念에 입각한 經濟改革이었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의 방향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계획과 관리 그리고 가격, 재정 및 기타의 경제관리방식이 변화되었던 것이다.⁹⁹⁾

민주주의는 인민의 주권이며, 사회생활의 전면적 민주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主權的 機能을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인민의 사회적 생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태도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조직적 가능성을 啓發함으로써 사회주의적 民主主義가 직접적인 經濟的 效果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¹⁰⁰⁾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가속적 발전 즉 인민의 직접적이고 광범한 참여가 사회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보증으로 되었던 것이다.¹⁰¹⁾ 결국 새로운 사회주의

99) Ibid., s. 15.

100) Viktor E. Dement'ev i Yuriy V. Sukhotin, "Sobstvennost' v sisteme proizvodstvennykh otnoshcheniy sotsializma," *Kommunist*, no. 18, dekabrya 1987g., s. 75.

101) Batalov, "Sotsialisticheskaya perspektiva i utopicheskoe soznanie," s. 86.

개념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혼란과 폐단은 “사회적 소유의 우위 사상을 지금도 앞으로도 단념하지 않는다”¹⁰²⁾는 전제와 민주주의적 관리메카니즘(국가관리와 자치)의 창출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政治體制의 變化

가. 黨內民主主義

1988년 6월 고르바초프는 제19차 당협의회 보고에서, 黨의 問題點을 자기 비판하고 “민주집중제 원리가 특정 단계에서 많은 점에서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제로 전화”하였다고 논하면서, 민주집중제의 레닌적 이해를 부활시킬 것을 강조하였다.¹⁰³⁾ 이는 스탈린 시대 이래의 관료주의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집중제의 레닌적 이해를 부활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민주집중제의 레닌적 이해를 “모든 문제의 자유로운 討論과 결정 채택 후의 行動統一”을 의미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는데, 이는 결정 채택 이전의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결정 채

102) Gorbachev, “Sotsialisticheskaya mysl' i revolyutsionnaya perestroyka.”

103) “Doklad M. S. Gorbacheva na XIX Vsesoyuznoy konferentsii KPSS: O khode realizatsii resheniy XXVII s” ezda KPSS i zadachakh po uslubleniyu perestroyki,” *Izvestiya*, 29 iyunya 1988g.

택 후의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중앙위원회 서기인 라주몴스키는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정의를 부연하여 “당협의회는 민주집중제의 레닌적 원칙 즉 자유 토론 이후 일단 다수결로 하나의 결정이 채택되고 나면 행동을 통일한다는 원칙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하였다.¹⁰⁴⁾ 결국 민주집중제의 레닌적 이해란 多數決 原則에 입각하여 당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民主性·合理性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89년 7월 19일 지방당 제1서기들과의 회의에서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당내에서의 토론의 자유와 선택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당정책문제 심의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수자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도—단 다수자에의 소수자의 필수적인 복종 하에서—소수자가 관점을 표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뿐이다.”¹⁰⁵⁾고 설명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행동통일에 ‘批判의 自由’를 부가하였다. 이리하여 민주집중제의 레닌적 이해란 自由討論·行動統一·自由批判으로 규정되었다.

민주집중제 개념에 대한 이러한 규정과 이른바 레닌적 이해의 부활은 레닌의 권위를 빌어 黨內 改革을 추진하는 正當化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나, 민주집중제라는 이데올로기

104) Georgiy P. Razumovskiy, “Demokratizatsiya vnutripartiynoy zhizni,” *Kommunist*, no. 13, sentyabrya 1988g., s. 7.

105) M. S. Gorbachev, “Perestroyka raboty partii: vazhneishaya klyuchevaya zadacha dna,” *Pravda*, 19 iyulya 1989g.

적 개념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자유토론·행동통일·자유비판 등의 원리 원칙은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시금석이었다.

민주집중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그것이 黨內에 있어서 스탈린 시대 이래로 금지되어 온 意見의 多元主義를 인정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집중제 원리의 레닌적 이해를 복원한다고 하였으나, 민주집중제의 이름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온 집중주의의 폐해를 경험해 온 대중들에게 있어 민주집중제에 대한 거부 반응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해석에도 불구하고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또한 각국 공산당이 민주집중제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공산당이 민주집중제를 고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되었다. 이리하여 민주집중제의 양면성 특히 집중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민주집중제 대신에 ‘민주주의적 당내 다원주의 원리’를 黨組織原理로서 규정하자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다.¹⁰⁶⁾

이리하여 1990년 7월 제28차 당대회에서는 당조직원리로서의 民主集中制의 공식적인 廢棄가 이루어졌다. 동 대회가 채택한 「인도적·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하여」라는 강령적 선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행정적·명령적 체계의 조건에서 조성된 민주집중제와 준엄한 중앙집권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주의적 원칙—선거제와 교대제, 글라스노스찌와 보고제, 소수파의 다수파에의 종속, 당기관지들에서 스스로의 견해를 주장하는 소수파의 권리—을 옹

106) G. K. Kryuchkov, “Politicheskiy avangard obshchestva: ego mesto i rol' v perestroyke,” *Voprosy istorii KPSS*, no. 10, 1988g., s. 28.

호한다.”¹⁰⁷⁾

고르바초프는 제1차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민주주의사회는 의견의 단일성과 태도와 이해의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반드시 意見의 多樣性과 多元主義로 특징지어진다고 강조하였다.¹⁰⁸⁾ 스탈린주의적 당의 단일주의는 공통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또는 강령·규약으로 통일되어 있으면 임의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일치는 당연하며 결정에서의 전원일치도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의견의 다원주의는 복수의 의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당내에 있어서 意見의 多元主義란 당연히 의견을 달리하는 分派 (fraktsiya)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내 분파의 인정은 의견의 다원주의에 그치지 않고 政治的 多元主義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의견의 다원주의 즉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분파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산당 내에서의 분파의 허용은 당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입장이 견지되었으나,¹⁰⁹⁾ 당내 분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어 수많은 분파가 형성되어 다원적인 이해가 표출·집약되었다.

107) “K gumannomu demokraticeskomu sotsializmu (Programmnoe zayavlenie XXVIII s’ezda KPSS),” *Pravda*, 15 iyulya 1990g.

108) “Zaklyuchitel’noe slovo M. S. Gorbacheva,” *Pravda*, 10 iyunya 1989g., s. 2.

109) 표트르 로디오노프, *What is Democratic Centralism*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8), 「민주집중제란 무엇인가」 (서울: 백산서당, 1989), p. 67.

당내 분파의 합법화 주장은 복수정당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대신에 당내 분파를 허용하고 黨의 門戶를 입당희망자에게 무제한으로 開放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하였다. 그 주장의 논거는 당조직부 부부장 크류치코프에 따르면,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데 정치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산당 입당을 제한하면서 다른 정치조직도 결성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따라서 黨의 門戶를 열어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크류치코프는 黨의 통일과 단일성의 견지에서 이런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 주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본질적인 것이며 페레스트로이카는 논리적으로 이 문제 제기에 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¹¹⁰⁾

결국 의견의 다원주의는 당내 분파의 허용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複數政黨制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나. 政治的 多元主義

複數政黨制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否定的이었다. 인민대의원 선거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는 정당이 여러개 존재하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¹¹¹⁾ 며칠

110) Kryuchkov, "Politicheskiy avangard obshchestva: ego mesto i rol' v perestroyke."

111) "M. S. Gorbachev: vyvory 1989g. prodvigayut nas daleko vpered," *Pravda*, 27 marta 1989g.

후의 매스콤 관계자들과의 회합에서도 다당제를 주장하는 ‘정치적 투기’를 비난하고, 민주주의는 정당의 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¹¹²⁾ 인민대의원대회에서도 다원주의를 언급하면서, ‘건설적인 야당’이나 ‘정치적 다원주의’ 사상 등을 부정하고, “소비에트 정치제도의 틀 속에서도 민주화와 글라스노스찌에 입각하여 다양한 견해의 가장 광범위한 비교 검토,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일치된 해결책의 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¹¹³⁾

이와 같이 소련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8년 가을 소련 학술지 「사회학연구」에서 개최한 사회주의적 다원주의에 관한 원탁회의에서는 意見의 多元主義가 행동·조직의 다원주의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政治的 多元主義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글라스노스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의견도 공공연히 발표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行動의 多元主義, 組織의 多元主義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¹¹⁴⁾ 한편 이 원탁회의에서 개혁과 행정학자 쿠라쉬빌리는 의견의 다원주의는 미숙한 단계이며, 반드시 정치적 다원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의 틀 속에도 다양한 노선의 선택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左派路

112) “Vystuplenie M. S. Gorbacheva na vstreches rukovoditelyami sredstv massoooy informatsii, 29 marta 1989g.: Na perelomnom etope perestroyki,” *Pravda*, 31 marta 1989g.

113) “Zaklyuchitel’noe slovo M. S. Gorbacheva,” *Pravda*, 10 iyunya 1989g.

114) “Sotsialisticheskiy plyuralizm: kruglyy stol,”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ya*, no. 8, 1988g., s. 12, 19.

線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경제 및 그 밖의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반면에, 右派路線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사회주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품·화폐관계와 민주주의의 형태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둘러싸고 다양한 절충적 노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상이한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다원주의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¹¹⁵⁾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원탁회의에서는 복수정당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후 엘친은 제19차 당협의회에서 兩黨體制가 부활될지도 모를 개인승배에 대한 보증으로 된다고 주장하였으며,¹¹⁶⁾ 또한 1989년 초 선거운동에서도 양당제를 강조하였다. 쿠라쉬빌리는 사회주의적 다당제를 “미래의 발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열쇠로 되는 요소의 하나”라고 논하고, 특히 최고회의 의장직의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효한 의회적 통제를 위해서 다당체제 즉 議會의 反對派가 필요하다”¹¹⁷⁾고 논하였다.

115) 이와 관련하여 쿠라쉬빌리는 6가지의 사회주의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전체주의체제(스탈린체제 일부, 민주캄보디아), 준엄한 권위주의체제(1930~1940년대 스탈린체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체제, 민주주의적 권위주의체제, 발전한 민주주의체제, 무정부적 민주주의체제(1981년까지의 폴란드)이다. 당시 소련은 준엄한 權威主義體制에서 權威主義的 民主主義體制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Ibid., s. 11.

116) “Rech’ tovarishcha El’tsina B. N.,” *Izvestiya*, 2 iyulya 1988g.

117) B. Kyrashvili, “Novshestva vyzyvayut somneniya,” *Izvestiya*, 15

정치적 다원주의에 반대하고 일당체제를 고수하는 입장은 당의 보수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나, 현실적으로 당내외에 정치조직이 다양하게 결성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東歐革命의 결과 공산당 지배체제가 붕괴되고 복수정당제에 입각한 민주화가 진행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소련은 결국 複數政黨制를 認定하는 방향으로 귀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마침내 1990년 2월 당중앙위 총회¹¹⁸⁾에서는 新黨綱領을 채택하고, “소련사회의 민주화는 국민의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통일에 따라 진행된다. 사회발전은 複數政黨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黨結成 節次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소련 헌법에 반영된다. … 소련공산당은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사회주의사회의 쇄신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갖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1990년 3월 개정 헌법에서는 제6조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규정을 삭제하고 “소련공산당, 기타 정당, 청년단체 그밖의 사회단체 및 대중운동은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통해서 또는 그밖의 형태로 소비에트국가정책의 작성과 국가적·사회적 사항의 관리에 참가한다”고 규정하여 共產黨이 여타 조직과 同一한 地位를 가짐을 분명히 하

noyabrya 1988g.

118) 여기에서 르이지코프 수상, 프로코피예프 모스크바시당 제1서기 등은 복수정당제가 이미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있다고 발언하였다.

였으며, 제7조에서 “①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중운동은 그 강령과 규약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헌법 및 소비에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② 소비에트의 헌법체제 및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일체성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국가의 안전을 파괴하며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불화를 부추길 목적을 지닌 정당과 단체 및 운동의 설립과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한편 소련사회의 다원주의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다양한 이해를 반영한 수많은 民衆組織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¹¹⁹⁾ 페레스트로이카가 진전되면서 소련에서는 강력한 세력의 인민전선이 출현하는 등 다양한 독자적 조직과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다.

소련에서 非公式集團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브레즈네프 시대 말기부터였다.¹²⁰⁾ 1988년 제19차 당협의회가 있기 직전에 공산당 기관지 「코무니스트」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다룬 논문¹²¹⁾을 실었는

119) 美아이오아주립대학 모세스 교수는 이러한 民衆組織이 소련사회 내의 장기적인 민주화 추진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이를 시민사회의 전면 개화로서 평가하고, 소련이 민주주의적인 시민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Joel C. Moses, “Democratic Reform in the Gorbachev Era: Dimensions of Reform in the Soviet Union, 1986~1989,” *The Russian Review*, vol. 48, no. 3 (July 1989), pp. 267~269.

120) Thomas Remington, “A Socialist Pluralism of Opinion: Glasnost and Policy-Making under Gorbachev,” *The Russian Review*, vol. 48, no. 3 (July 1989), p. 296.

121) 이 논문은 당시 민중조직에 직접 관여하고 있던 9명의 언론인,

데, 그것에 의하면, 브레즈네프는 처음 20여년 동안에는 大衆活動을 콤소몰과 노동조합 전문활동가의 지도를 받는 여가활동에 한정하였으나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도시에서 보다 교육받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환경오염과 문화재 보존 등에 관심을 가졌고, 지방정부관리의 관료주의로 좌절되어 있었는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14세 이상의 도시 인구의 7~8%가 당시 그러한 민중조직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¹²²⁾

위의 논문에서는 소련의 공식조직들이 관료주의적 획일성으로 개인의 개체성을 질식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이러한 조직들이 개인의 자기실현, 개체성, 참여를 위한 출구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소련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규범, 태도, 가치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촉매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논한 동시에, 이러한 市民組織

학자, 조직지도자들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민중조직의 출현을 소련사에 있어서 당연한 민주주의적 열망의 출구라고 간주하였다. "Samodeyatel'nye instsiativy: neformal'nyy vzglyad," *Kommunist*, no. 9, 1988g., s. 95.

- 122) Moses는 1989년 중반 현재 30,000개 이상의 組織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며, "Democratic Reform in the Gorbachev Era: Dimensions of Reform in the Soviet Union, 1986~1989," p. 267. Remington은 198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술직 노동자의 40%, 노동계급의 25%가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A Scholar Approaches Unofficial Groups," Interview by A. Afanas'ev with Evgenii Levonov, *Komso-mol'skaya Pravda*, December 11, 1987; Remington, "A Socialist Pluralism of Opinion: Glasnost and Policy-Making under Gorbachev," p. 296.

과 기존의 政治的 權威와의 葛藤은 소련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권위주의적 엘리트 정치문화의 현실 간의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대중사회운동’은 향후 소련정치의 민주주의적 발전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공급할 원천이라고 논하였다.

소련의 비공식조직을 분석한 브로프킨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소련사회가 자각하는 징후이며, 1917년 이전 政治社會의 再生을 의미하는 것이고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철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²³⁾

다. 權力分立에의 摸索

소련에서 법의 지배(gospodstvo zakona) 개념은 부르조아 개념으로 거부되어져 왔으나, 1988년 5월에 발표된 제19차 당협의회에의 당중앙위 테제에서 社會主義的 法治國家(sotsialisticheskoe pravovoe gosudarstvo) 건설이 당의 공식 과제로 제기되고,¹²⁴⁾ 동 협의회에서

123) Vladimir Brovkin, "Revolution from Below: Informal Political Associations in Russia, 1988~1989," *Soviet Studies*, vol. 42, no. 2 (April 1990), pp. 253~254. 비공식조직 활동에 대한 보고는 Valentina Levicheva, "Unofficial Parties, Fronts, Clubs Burgeon," *Nedelya*, no. 7, February 12~18, 1990, pp. 13~14, tr. by CDSP, vol. 42, no. 8, March 28, 1990, pp. 5~8, 28가 상세하다. 한편 「이즈베스찌아」, 1990년 2월 24일자에는 非公式組織을 관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논문이 실렸다. V. Dolganov, A. Stepovoy, "Na temy dnya Kollektivizatsiya demokratii?," *Izvestiya*, 24 fevralya 1990g.

채택된 결의 「법의 개혁에 대하여」 속에서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건설이 당의 공식목표로 정립되어,¹²⁵⁾ 마침내 “법치국가의 건설, 그것은 소비에트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의 하나이다”¹²⁶⁾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개념 명확화와 법 위계 질서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權力分立(razdelenie vlastey)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입법과 행정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서는 법률과 행정명령의 개념적 구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에서는 그동안 權力分立 개념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機能配分’(raspredelenie funktsiy) 즉 국가기능의 분업은 필요하나 권력분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권력분립론은 하나의 국가 내에 복수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 복수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본질은 階級的 權力인 것이며, 계급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소비에트국가에서 권력은 당연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온 소련에서 복수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전자의 전제는 부정될 수 밖에 없었다.

124) “Tezisy ChK KPSS k XIX Vsesoyuznoy partiynoy konferentsii,” *Pravda*, 27 maya 1988g.

125) “O pravovoy reforme,” *Izvestiya*, 5 iyulya 1988g.

126) V. N. Kudryavtsev, E. A. Lukasheva, “Sotsialisticheskoe pravovoe gosudarstvo,” *Kommunist*, no. 11, iyulya 1988g., s. 55.

또한 견제와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도 종래 소련에서는 권력이 제기하는 정책의 정당성은 의심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것은 정책을 능률적으로 실현하는 분업뿐이며,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올바른 정책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적어도 1988년 말 이전의 權力分立主義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부정적 내지는 유보적이었다. 옥스포드대학 브라운(Archie Brown)에 의하면, 권력분립 개념의 도입이 소련에서 최초로 주장되었던 것은 1987년 2월 소련정치학회에서 였다고 한다.¹²⁷⁾ 이후 권력분립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개혁파 정치학자 부라츠키(F. Burlatskiy)는 “입법·사법·집행 권력의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적 이념이 이유도 없이 버려져 왔다”고 비판하고, 機能配分의 원칙을 權力分立의 원칙으로 發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말에 이르기까지 권력분립을 주장하는 논조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의 공식 목표로까지 제기된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결국 권력분립론이 승인되게 되었다. 중대한 전환은 1988년 11월 말 고르바초프 연설과 동년 연말의 憲法改正에서 견제와 균형 내지는 권력분립이 긍정적으로 지적되면서 이루어졌다.

127) Archie Brown,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World Policy Journal* (Summer 1989), p. 478.

128) F. Burlatskiy, “O sovetskom parlamentarizme,” *Literaturnaya gazeta*, 15 iyunya 1988g.

즉 고르바초프는 헌법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社會主義的牽制와 均衡體系가 형성될 것이다”고 명언하였던 것이며,¹²⁹⁾ 또한 1988년 헌법개정은 헌법감독위원회 설치¹³⁰⁾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인민대의원대회 대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었다. 헌법96조에 의하면, 소련방·가맹공화국·자치공화국 각료회의 각료(의장 즉 총리는 제외), 지방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의장 제외), 관청 및 지방집행위원회 部·課의 책임자, 재판관, 국가중재관은 그들을 임명하고 선출하는 소비에트 대의원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집행·사법권의 담당자는 대표기관 대의원으로 될 수 없다는 규정이었다.¹³¹⁾

129) “Doklad M. S. Gorbacheva na sessii Verkhovnogo Soveta SSSR 29 noyabrya 1988g.: K polnovlastiyu sovetov i sozdaniyu sotsialisticheskogo pravovogo gosudarstva,” *Pravda*, 30 noyabrya 1988g.

130) 憲法監督委員會는 法의 위계질서를 잡고 법률위반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에는 法律을 폐지하거나 또는 憲法과 法律에 모순되는 다른 法律을 제정할 권리는 없으며, 법률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 法律制定機構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자동적으로 그 法의 執行을 중지시킬 權限을 갖는다. 또한 위원은 “정치학과 법률 전문가 가운데 선출되도록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것은 이 위원회는 자의적인 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관련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Boris Lazarev,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Soviet State’s Experience,” *Social Sciences*, vol. 20, no. 4 (1989), p. 57.

131) 이 헌법 규정 특히 집행기관 간부의 대의원 겸직금지에 대해 「프라브다」 사설은 “법치국가 형성의 要諦인 입법·행정·사법권력간의 機能과 責任의 엄격하고 일관된 分立의 필연성에 따라 채

이리하여 소련에서 권력분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입법권력인 소비에트의 의회화와 執行權力인 대통령제의 확립 및 司法權力인 헌법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실질적인 조치로서 발전하였다.

우선 소비에트의 의회화와 관련하여, 과거 소련에서는 모든 권력이 말단의 시(구)소비에트와 村소비에트로부터 정점의 소연방 최고회의에 이르는 代表機關으로서의 소비에트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最高會議은 2~3일의 회기로 1년에 2회 소집되고, 共和國最高會議은 1~2일, 州소비에트의 경우에는 4~5시간(연4회)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대의원은 근로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존재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직업적 의원이어서도 안된다는 의미에서 짧은 회기 동안 이외에는 자신이 대표하는 현장에 머물러야 했다(물론 이는 소비에트 대의원이 인민대중과 유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외에도, 現場에서 權力 執行에 참가·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이와 같이 짧은 회기와 당연히 국가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의원의 立法能力은 全無할 수 밖에 없었고, 각처에 분산된 대의원은 현장에서의 권력집행에 무력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소비에트는 집행권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입법권까지 상실하여, 최고회의는 ‘그럴듯한 선전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¹³²⁾ 이리하여 제19차 당협의회에 제출된

택되었다”고 해설하였다. “Pazvivaya narodovlastie,” *Pravda*, 13 noyabrya 1988g.

132) “Kakoy deputat nam nuzhen?, *kruglyy stol*,” *Literaturnaya gazeta*, 8 fevralya 1989g., s. 10.

당중앙위 테제는 執行委員會가 소비에트의 기능을 찬탈하고 대의원에게는 사실상 미리 예정된 문제를 추인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¹³³⁾ 또한 동 협의회에서 고르바초프도 소비에트가 집행위원회의 補助機關으로 되어버렸다고 비판하였다.¹³⁴⁾

1988년 말 개정헌법은 人民代議員大會(연1회 개최)를 신설하고 그것을 국가 最高權力機關으로 규정하였으며, 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한 기관으로서 最高會議을 설치하였다. 최고회의는 ‘국가권력의 상설 입법·처분·통제기관’으로 규정되어, 입법기능에 한정되지 않는 全權力機關으로서의 소비에트라는 전통적 인식이 반영되었다. 새로운 최고회의가 종래의 최고회의와 다른 점은 정례회의가 연2회 개최되나, 1회의 회기가 3~4개월로 길어진 것이었다. 이는 最高會議의 常設化를 의미하였는데, 이 이후로 상설화된 최고회의가 일반적으로 ‘소비에트議會’(sovetskiy parlament)라고 호칭되었다. 이는 분명히 소비에트의 의회화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민대의원의 지위에 대한 규정이었다. 1990년 6월 최고회의는 2차에 걸쳐 인민대의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인민대의원을 專門職議員으로 확정하였다.

집행권력의 확립과 관련하여, 소비에트의회에의 권력집중과정에 따라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이 最高會議 議長을 兼職하게

133) “Tezisy Chk KPSS k XIX Vsesoyuznoy partiynoy konferentsii,” *Pravda*, 27 maya 1988g.

134) “Doklad M. S. Gorbacheva na XIX Vsesoyuznoy konferentsii KPSS,” *Izvestiya*, 29 iyunya 1989g.

되었으며,¹³⁵⁾ 그후 의회의 집행권력을 분리하여 강력한 大統領制를 신설함으로써 권력분립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990년 3월 임시 인민대의원대회에서는 소비에트의 권력집중을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설치에 관한 법안이 공고되고¹³⁶⁾ 3월 15일 이 법안이 확정됨으로써 대통령은 국가의 最高首班으로서 규정되었다.

한편 1989년 12월에 설치된 연방 헌법감독위원회는 구소련 해체 시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비밀법들을 무효화하고 거부등록제도를 헌법위반으로 인정하는 등 획기적인 역할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시대의 권력분립주의 즉 사회주의적 권력분립주의가 西方의 상식적인 권력분립 즉 三權分立論과 동일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135) 당서기장·최고회의 의장 겸임문제는 고르바초프가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에서 소비에트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인물이 최고직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제기되었다.

136) "Zakon ob uchrezhdenii posta Prezidenta SSSR i vnesenii sootvetstvuyushchikh izmeneniy i dopolneniy v Konstitutsiyu (Osnovnoy Zakon) SSR," *Pravda*, 6 marta 1990g.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수반으로 규정하고, 각료회의 의장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 자문회의를 구성하며, 비상대권을 발할 수 있고, 유고시에는 최고회의 의장이 대행한다는 등이다. 이리하여 선거 결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고르바초프는 기존의 최고회의 의장직을 사임하였다. 권력분립주의에 비추어 당 서기장이 국가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인 동시에 소비에트 의장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입각하여 명백한 권력분립이 강조되고 법적 조치들을 통하여 보완되고 있었으나,¹³⁷⁾ 입법·집행 양권을 통합한 콤문형 소비에트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으로 입법권이 여타 권력보다 강력하여야 한다는 공인된 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고르바초프 시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소련의 권력분립주의는 의회중심적 권력분립주의에서 三權分立으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經濟體制의 變化

전술하였듯이 페레스트로이카는 일반적으로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와 1989년 5월 인민대의원대회를 분기점으로 3단계의 변화를 보였으나, 경제개혁에 한정하여 살펴볼 경우,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위로부터의 체제개혁을 야기시킨 배경으로 작용하여 經濟改革構想과 國營企業法이 발표된 1987년 6월 당중앙위 총회를 분기점으로 2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인민대의원대회가 신설되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진행된 이후 所有權改革 등 근본적인 경제체제 개혁이 모색된 1989년 12월 인민대의원대회를 분기점으로 3단계로

137) 사법권 문제는 V. Kudrachev, "The Law-Governed State: Growing Pains," *Moscow News*, no. 40 (October 1988)과 Boris Lazarev, "Seperation of Powers and the Soviet State's Experience," *Social Sciences*, vol. 20, no. 4 (1989)가 자세하게 논하고 있으며, 사법권 확립은 서구적 권력분립에 가장 유사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발전하였다.

현실의 소비에트국가를 개선하면 공산주의적 미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에서 출발한 제1단계에서는 경제침체의 원인이 노동생산성 저하에 있으며 노동규율을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제1단계 경제개혁은 노동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1985년 5월 節酒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류의 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생산과 판매가 제한되고 근무중 음주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었다. 그 결과 주류 소비량은 그후 2년간 半減하게 되었으나, 술을 좋아하는 소련시민간에는 주류 暗去來와 密酒 제조가 횡행하였으며, 주세 세입이 감소하여 財政赤字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더 이상 계속 추진할 수 없었다.

이어 제2단계에서 고르바초프는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탈린 시대 이래의 명령·행정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여 企業의 自主性을 대폭 인정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채택하였다. 기업을 구속하여 온 국가 발주를 감소하고 경영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한편, 赤字企業의 倒産을 명시한 「국영기업법」, 소유형태를 다양화한 사기업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법」과 「개인영업법」, 그리고 서방 선진국들로부터의 자본·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기업과의 공동경영을 인정한 「합영기업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경제개혁조치도 기대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전국적인 생산·유통구조에 혼란을 유발시켰다. 물자부족과 인플레이가 발생하여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식료품과 소비물자가 배급제로 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소비생활을 압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본격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하게 되어 제3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제3단계 개혁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市場經濟 移行計劃

시장경제 이행계획은 당초 ‘계획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1990년 5월 르이지코프 총리가 최고회의에 제출한 政府案에서는 ‘조정된 시장경제’로 변화하였으며, 동년 10월에 채택된 最終案에서는 ‘국민경제의 안정화와 시장경제이행의 기본방향’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모든 제한을 삭제하여 버렸다. 심의를 거듭하면서 소련경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市場經濟메카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결과였다.

또한 1990년 7월 제28차 당대회에서는 1991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계획이 제안되지도 않았으며, 이에 따라 1928년 제1차 5개년계획 이래 62년간에 걸친 5개년계획에 의한 계획경제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1) 政府案

르이지코프 총리는 1990년 5월 24일 최고회의에 「국가의 경제정세와 조정시장경제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라는 報告書를 제출하였다.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4단계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각 단

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즉 제1단계(1990년)는 시장경제의 법적 기반 형성, 제2단계(1991~1992년)는 가격제도 개정, 새로운 세제 도입, 금융체제 변화, 재정적자 축소, 제3단계(1993~1995년)는 행정적 방법에 의한 경제관리분야의 축소, 비국유화 확대와 기업 간 경쟁 촉진, 제4단계(1996년 이후)는 정비된 시장메카니즘의 기능 개시, 생산구조의 개혁, 경제성장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은 관료의 지배체제를 온존하려 하고 있으며, 기업의 민영화템포가 지연되고 있고, 제1단계에서의 빵 소매가격 3배 인상은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심의결과 부결되어 회송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7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측은 “가격제도 개혁없이 경제개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식료품과 소비물자의 대폭 가격인상은 끝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 改革派案: 「500일 계획」

엘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등 개혁파는 1990년 7월 20일 이른바 「500일 계획」을 발표하였고, 샤탈린 그룹은 「시장에의 이행」이라는 長文의 보고서와 1990년 9월 7일자 「이즈베스찌아」에 게재한 “인간, 자유, 시장”이란 논문을 통하여 500일 계획(샤탈린안)을 구체화하였다.¹³⁸⁾

138) 샤탈린, 야블린스키, 페도로프, 페트라코프, 야신 등 13명이 연서한 「이즈베스찌아」 논문은 도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명료하게 시장경제로의 이행 필요성과 이행방안을 설명한 것이었으

이는 500일간 4단계의 급진적 변화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① 최초 100일 동안 經濟活動을 自由化하여 국영기업 민영화와 토지 사유화를 추진하고, 정부보조금을 폐지하고 자유가격제를 촉진한다. 군과 KGB 예산을 10~20% 삭감한다. ② 250일까지 價格 自由化를 촉진하여 주식회사를 증설하고 소매업과 식료품생산기업의 50%를 민영화한다. ③ 400일까지 생산부문의 30~40%, 수송부문의 50%, 상업활동의 60%를 株式會社化한다. ④ 마지막 100일 동안 공업기업의 70% 이상, 건설·수송·상업기업의 80~90%를 비국유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시된 개혁과안은 정부안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시장화 속도와 관련하여 개혁과안이 1년반내에 시장경제의 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 정부안은 수정안에서도 3년의 이행기간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國營企業의 民營化에 대해서는 개혁과안이 500일 동안 공업의 70%, 건설·수송·상업의 80~90%를 민영화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부안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 국영기업의 60%~70%를 서서히 민영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인플레이 원인이 되는 過剩購買力에 대해서 정부안이 행정적인 小賣價格 引上으로 흡수하려 한 것에 대하여 개혁과안은

며, '시장으로의 이행'은 13명 이외에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14개 공화국 대표도 포함하여 출간되어 공화국간의 합의를 강조하였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다. 야블린스키·페도로프·샤탈린 외, 한종만 옮김,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서울: 열린책들, 1991).

國有財産의 賣却으로 흡수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안을 작성한 르이지코프 총리를 비롯한 연방정부는 개혁과안을 “경제활동의 급격한 침체를 초래하고 대량의 실업자와 생활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인 바, 민생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고, 개혁과는 정부안에 대하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관료기구를 온존시키려는 官僚的 發想의 산물”이라고 반론하였다.

물론 샤탈린안은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으나,¹³⁹⁾ 고르바초프가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의향을 무시하고 고르바초프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3) 最終案

최초 시장경제에의 이행을 서둔 고르바초프는 1990년 9월 샤탈린안을 거의 99% 수용한 대통령안으로서 최고회의에 제출하였으나, 연방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¹⁴⁰⁾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최고회의는 9월 24일 정부안·개혁과안·대통령안을 종합한 통

139)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8월 1일 개혁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8월 29일 TV 공동인터뷰에서 시장경제 이행계획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40) 연방정부의 反論은 「정부공보」(1990년 39호)에 게재된 “소연방의 입장”이라는 長文의 論文에 잘 집약되어 있으며, 이를 분석한 논문은 井澤正忠, “ソ連:市場經濟への移行:そのプロセスと展望,” 「海外事情研究所 報告」, 第25號 (1991), pp. 139~140 참조.

일안을 10월 15일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학자 아간베간을 의장으로 하는 「시장경제 이행대책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고르바초프는 10월 16일 동 위원회가 작성한 통일안 「국민경제의 안정화와 시장경제 이행의 기본방향」을 최고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최고회의는 19일 이를 표결에 부쳐 채택하였다(찬성 356, 반대 12, 기권 26).

最終案은 1년반에서 최대한 2년의 4단계를 거쳐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제1단계에서는 재정적자의 삭감, 토지개혁, 대외경제관계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긴축재정과 유연한 가격정책에 의해 3분의 1은 국가의 통제가격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장가격으로 이행하고 중소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제3단계에서는 시장 형성을 목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제4단계에서는 경제 독점을 금지하고 루블화의 태환성을 부여하며 외국자본에게 우대조치를 강구하여 經濟安定期間을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최종안은 샤탈린안의 표현을 대부분 채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르이지코프 정부의 반대를 수용하여, 이른바 總論은 샤탈린, 各論은 정부안으로 타협한 것이었다.

나. 고르바초프 改革의 成果와 限界

1990년 후반부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발표한 일련의 大統領令

은 대부분이 행정명령적 요소가 농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 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종언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식량·소비재 수송보관에 있어서 노동자 통제(1990. 11), KGB·내무부 직원의 기업감찰(1991. 1) 등의 대통령령은 고르바초프가 거듭 강조하여 온 “행정적 방법으로부터 경제적 수단에 의한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련 정국의 保革 葛藤構造 속에서 고르바초프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따라 經濟危機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1991년 6월 12일 엘친의 러시아 대통령 선출 이후 급진개혁세력의 강력한 도전과 이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이 8월 쿠데타로 표출되고 마침내 소연방은 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와해되었던 것이다.

(1) 파블로프 總理의 「經濟危機 脱出計劃」

1991년 1월 총리로 취임한 파블로프는 1991년 4월 “요구는 억제하고 먼저 일을 하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정쟁금지, 법과 질서 회복을 기초로 經濟安定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개혁에 의한 市場經濟體制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제위기 탈출계획」을 발표하였다.

「위기탈출계획」을 4월 22일 최고회의에 설명한 파블로프 총리는 소련경제의 현상을 ‘전반적 위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위기로 간주하였다.¹⁴⁾

첫째, 生産低下 문제이다. 국민소득의 경우, 1990년에는 전년대

비 -4%로서 소련경제 최초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공업생산은 1990년 -1.2%, 1991년 1/4분기 -5%, 농업생산은 1990년 -2.3%, 1991년 1/4분기 -13%에 달하였다.

둘째, 소비재 부족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이였다.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비롯하여 소비재생산에 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생산은 전체 공업생산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1991년 1/4분기 동안 전년동기 대비 -3%를 보였다.

셋째, 국가예산에서의 대폭적인 稅入不足 문제였다. “91년 1/4분기 동안 연방세입예산의 40%밖에 충당되지 않아 1/4분기만으로 연간 적자예정한도를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원인이 있었으나, 각 공화국의 연방예산 부담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넷째, 外貨不足 문제이었다. 석유 감소·가격인하로 인해 수출수입이 감소한 한편, 대외채무 변제액은 증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발표된 파블로프의 「위기탈출계획」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것으로써 1991년간 모든 정쟁을 금지하고, 발전·통신·수송분야에서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며, 物流와 연방예산 부담을 저해하는 각 공화국 결정을 동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관계자를 처분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 사유화를 추진하고 가격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파블로프 총리는 와병하여 퇴진한 전임총리 르이지코프에 비하면 훨씬 強硬保守的인 인물이었으며,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인 「위기탈출계획」은 개혁과 진영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¹⁴²⁾

(2) 法律 整備 및 非國有化 推進

연방과 공화국의 대립, 군부·보수파 대두 등 개혁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정비 작업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1990년 12월에 성립된 「國立銀行法」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최고회의에만 보고의무를 진다)을 확정하고,¹⁴³⁾ 1991년 1월의 「就業基本法」은 종래 인정되지 않았던 ‘실업의 자유’를 공인하는 것이었다.¹⁴⁴⁾

또한 1991년 4월 4일부터 실시된 「사적 기업활동 기본법」은 추상적인 표현이나 事業活動의 自由를 보증하였다. 실업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련사회주의에서 터부시되어 온 ‘고용노동’을 사용한 사업을 인정한 것으로 획기적인 조치였다.¹⁴⁵⁾

142) 심지어 고르바초프 측근인 페트라코프도 1991년 4월 파블로프의 가격한상조치에 대해 “이는 파블로프가 르이지코프 시대에 구상한 것으로 당시 이 案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지금 파블로프는 자신의 낡은 방식을 전혀 변경하지 않은 채, 탱크처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Rabochaya tribuna*, 16 aprelya 1991g.

143) *Ekonomika i zhizn'*, no. 52, 1990.

144) *Ekonomika i zhizn'*, no. 6, 1991.

보수와 신문 「라보차야 트리부나」가 파블로프 내각의 소유제도 다양화조치를 ‘기업활동의 청신호,’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원조하는 정책’ 등으로 소개하였듯이,¹⁴⁶⁾ 당시 연방정부의 명백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IV. 엘친 時代의 體制變化過程

1. 蘇聯邦의 解體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집권 이래 추진되어 온 페레스트로이카에 따라 소련 국내정세는 정치적 민주화로 사회가 다원화된 반면에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결과, 다양한 정치조직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게다가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정치활동의 자유화는 소연방 각지에서 민족분쟁을 분출시켰으며, 민족문제는 결국 新聯邦條約 체결에 의한 연방체제 쇄신문제로 집약되고 있었다.

1991년 8월 19일 당·군·KGB의 강경보수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는 고르바초프의 일방적인 군병력 감축과 국방비 삭감, 엘친 러시아 대통령(1991. 6. 12 당선)의 共產黨 活動規制 布告令(7. 20), 미·소 정상회담(7. 30~31)에서의 軍需産業의 民需轉換 합의 등의 사

145) *Pravda*, 11 aprelya 1991g.

146) *Rabochaya tribuna*, 17 aprelya 1991g.

태발전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연방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강경보수세력의 권력 약화를 의미하는 新聯邦條約의 체결 예정일(8. 20)이 닥쳐왔기 때문이었다.¹⁴⁷⁾

그러나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8월 21일 무산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권력 약화와 옐친의 부상, 그리고 발트3국을 비롯한 분리주의적 공화국의 脫蘇獨立 요구 등 聯邦權力的 危機를 초래하였다.

쿠데타 실패 직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방 최고회의가 개최되어, 쿠데타 사후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9월 2일부터 5일까지 소연방 인민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 신연방조약의 전망에 관한 결정과 신연방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도기 권력기구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연방을 유지한다는 구도에서 新聯邦條約(정치동맹) 草案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공화국간의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를 보완할 연방차원의 경제조정을 강조하면서 공화국간 經濟共同體協定(경제동맹) 체결을 모색하는 한편, 過渡期 權力機構로서 연방최고회의, 국가평의회, 공화국간 경제위원회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147) 新聯邦條約 締結問題는 1989년 9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민족강령」에서 1922년 舊연방조약을 수정하여 新연방조약을 체결한다는 基本方針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1월 제1차 신연방조약안이 공표된 이래 1991년 3월, 6월, 8월에 각각 2차, 3차, 4차안으로 조정되었다. 이 4차안을 기초로 1991년 8월 20일 마침내 新聯邦條約 조인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동맹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10월 18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8개 공화국간의 경제공동체협정 체결로 일단락되었으나, 정치동맹 결성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10월 초 각 공화국에 송부된 신연방조약 초안에서는 국가명칭이 「자유주권공화국연방」으로 되어 있었으나, 11월 14일 국가평의회에서는 신연방조약안을 기본적으로 승인하면서도 국명을 「主權國家聯邦」(Soyuz Suverennykh Gosudarstv)으로 변경하여 느슨한 國家聯合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1월 25일 국가평의회에서 자발적인 국가의 연합체로서의 주권국가연방에 관한 최종적인 조약안이 확정되었다.

국가평의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최대의 이론적 쟁점으로 되었던 것은 신연방이 연방인가 아니면 국가연합인가라는 점이였으며, 결국 “주권국가연방은 국가연합적(konfederativnyy) 민주국가이다”는 표현이 채택되었다. 즉 국가유형상 연방이 아니라 國家聯合이라는 것이며, 이 점에서 4차안 이전까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중요사항은 연방과 가맹국이 공동 관할하에 결정하고, 연방통일군과 함께 가맹국에도 공화국군을 창설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12월 3일 연방 최고회의 共和國院이 조약안을 심의하고, 이튿날에는 聯邦院이 이를 심의한 후 주권국가연방 창설을 위한 신연방조약 조인을 지지하는 동시에, 각공화국에서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대국인 우크라이나가 12월 1일 실시된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 약 90%의 지지로 독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신연방조약 조인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하면서 사태가 급변하였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선거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연방 조약을 조인하지 않고 독자군과 독자통화를 창설하면 러시아도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었는데, 옐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없는 연방의 존재는 불가하다고 인식하여 결국 연방을 해체하기로 하였다.

연방해체 움직임은 이미 러시아 내에서도 표면화되고 있었다. 1991년 4/4분기는 연방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공무원의 봉급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각 공화국이 독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스스로가 연방 관할이라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조차 분담금을 각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90년 12월 聯邦國立銀行法 제정 이후 연방국립은행이 통화를 증발하기 위해서는 연방 최고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은 905억 달러의 대정부 융자를 승인하도록 최고회의에 제안하였으나, 이를 위해 소집된 11월 28일의 연방 최고회의는 러시아측 선출의원 등의 결석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으며, 결국 11월 29일 연방국립은행의 연방예산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연방 예산적자의 대부분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주권국가연방이라는 연방존속의 길보다는 自國의 利益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¹⁴⁸⁾

이러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시 브레스트市에서 열린 러시아대통령, 크라브추크 우크라이나대통령, 슈슈케비치 벨라루시 최고회의 의장 등 슬라브3국 頂上間의 會談이 개최되어, 「독립국가연합」(Sodruzhestvo Nezavisimykh Gosudarstv) 결성 협정이 조인되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2년 舊聯邦條約의 調印國인 이들 3국은 “소연방이 국제법상의 주체로서도 지정학적 현실로서도 그 존재를 종언하였음을 확인”하고, 새로이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주권과 민족의 평등권, 인권을 옹호한다. 정치·경제·문화 그 밖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軍事戰略圈의 合同司令部를 유지한다. 調停機關을 두고, 외교·공동경제권의 형성, 관세정책, 환경보전, 출입국관리, 조직범죄와의 투쟁, 체르노빌 대책 등에 대해 조정·협력한다. 본 협정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교섭에 의해 해결한다. 가맹국은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 조인시부터 구소련 규범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맹국은 구소련의 국제적 의무 이행을 보증한다. 구소련 구성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는 이 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 구소련의 모든 연방기관 활동은 종료한다. 독립국가연합 조정기관의 소재지는 민스크시로 한다.

이 협정과 동시에 독립국가연합 결성에 관한 3국 정상의 공동성명과 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3국 정부수반의 공동성명이 발표되

148) 그 후 러시아측이 양보하여 12. 3 최고회의에서 긴급용자가 결정되었다.

었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은 12월 9일 국영TV를 통하여 브레스트협정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독립국가연합을 新聯邦條約案의 하나의 변형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연방소멸선언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다민족국가의 운명을 3개 공화국 지도자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12월 10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의 최고회의가 개최되어 브레스트협정이 비준되었으며, 러시아 최고회의도 12월 12일에 개최되어 이 협정을 압도적 다수로 비준한 동시에, 1922년 소연방 결성조약의 파기를 결정하였다.¹⁴⁹⁾

이날 고르바초프는 크레믈린에서의 기자회견에서 “聯邦이 없게 되면, 辭任한다”고 언명하고 사실상 퇴진을 표명하였으며, 12월 13일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지야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투르크메니스탄 아시하바드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평등참가 원칙을 조건으로 공동체 가맹을 표명하자, 마침내 “공동체 창설과정이 연방의 모든 주권공화국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가 소련의 법적 계승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체를 승인하고 모든 연방권한을 이관할 의향임을 표명하였다.

이리하여 1991년 12월 21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시·카

149)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最高會議(12. 12)에서 자기들이 蘇聯邦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연방은 이미 事實上 崩壞하고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카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지야·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몰도바 등 11개국 정상은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아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독립국가연합 창설 협정에 조인하는 동시에, 소연방 해체를 선언하였다.¹⁵⁰⁾ 또한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은 12월 25일 중앙TV를 통하여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따른 현하의 정세에서 나는 소련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을 정지한다”고 辭任을 정식 천명하였으며, 연방 최고회의 共和國院은 12월 26일 의원집회 형태로서 회의를 개최하고, “인민의 의사에 따라 독립국가연합 창설 협정이 모든 가맹국에서 비준된 순간에 蘇聯邦은 消滅한다”고 선언한 동시에, 최고회의 자체의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소련은 명실공히 소멸하였던 것이다.¹⁵¹⁾

150) 11개국 정상은 유라시아의 정치·경제공동권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알마아타선언 등 6개 문서에 조인하였으며, 또한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석을 단독 계승하고, 모든 가맹국이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시·카자흐스탄 등 4국은 ①모든 참가국에 의한 핵무기 공동 관리, ②선제 불사용, ③핵정책 공동 책정 등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벨라루시·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는 1992년 7월 1일까지 전술핵 철거를 보장하고, 중앙의 기지에 집적한다”고 하는 등 핵무기 통일관리를 규정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한편, 그루지야는 독립국가연합에 읍저버로 참가하였다. 그루지야의 공동체 불참 이유는 옐친의 러시아 최고회의 연설(12. 25)에 의하면, “그루지야가 인권을 경시하고 있어 다른 11개국 정상이 참가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51) 연방 최고회의는 러시아議員團의 召喚에 관한 러시아 최고회의 결정(12. 12)에 따라 이미 기능정지상태에 있었으므로 정식회의

2. 엘친의 體制改革政策

가. 政治體制 轉換: 民主化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러시아는 1989년 10월 選舉制度를 민주화하여 인민대의원대회 및 새로운 최고회의를 창설함으로써 議會制度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보리스 엘친이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6월의 헌법 개정으로 共產黨의 지도성 원칙이 부정되었으며, 12월의 헌법 개정으로 소유제도가 개정되어 사적 소유와 유사한 ‘市民 所有’ 개념이 도입되었다. 1991년 5월에는 大統領制가 도입되어, 6월 12일의 선거에서 엘친이 당선되었으며, 5월에는 憲法裁判所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입법권(최고회의), 집행권(대통령), 사법권(헌법재판소)의 權力分立體制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구소련 해체와 독립국가연합 창설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

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연방 인민대의원대회는 러시아 領內에서의 聯邦 人民代議員 직무를 1992년 1월 2일자로 정지시킨다는 러시아 최고회의 결정(12. 27)에 따라 자연 소멸되었다. 한편 12월 19일 러시아가 크레믈린을 접수한다는 러시아 大統領令이 발령됨에 따라 12월 26일부터 크레믈린에서 소련국기가 하강되고 러시아의 三色旗가 게양되기 시작하였으며, 12월 27일 크레믈린의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집무실이 폐쇄되고 엘친 대통령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시아 국가구조는 이때 형성된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체제의 유동성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확립과정에서의 혼란 때문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난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또한 정치세력간의 갈등에 유리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어 行政府를 더욱 비대화·복잡화시켜 왔기 때문이었다.

이하에서는 소연방 해체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정치현황을 개관한 후 1993년 10월 의회 강제해산 후 헌법개정과 정계개편문제를 고찰함으로써 러시아에서의 정치체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政局 現況

러시아 정치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기본적으로 政治體系가 정비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1990년 인민대의원대회가 선출·구성되었을 당시 議會는 각각 40% 정도의 대의원을 확보한 民主블럭과 共產主義者블럭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엘친은 의회내 여당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초법적인 大統領權力 확보에만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세력도 구심점을 잃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1991년 8월 쿠데타를 거치면서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이 사임하고 소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정치구도에 복잡한 변화가 생겼

던 것이다.

엘친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채 8월쿠데타 이후 조성된 막연한 國民的 支持를 배경으로 실라예프 등 러시아 지도부내 연방유지파를 축출하고 부르블리스와 가이다르 등의 젊은 독립파를 중심으로 정권을 성립시켰다. 정권을 장악한 엘친그룹은 소연방의 틀 속에서 보다는 러시아 일국에서의 市場改革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편, 최고회의와 루츠코이 부통령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엘친의 대통령 권한이 명실공히 강화되기 시작하여 1991년 11월 제5차 인민대의원대회에서는 엘친이 1992년 11월 말까지 비상대권을 보유하면서 강력한 집행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親政體制가 확립되고 스페르들롭스크 마피아 등 엘친 측근그룹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

그후 인사조치에서 소외당한 의회내 민주파는 엘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엘친의 대통령 권력 강화를 우려한 원내파별간의 새로운 정치적 제휴가 이루어져 대통령 권한을 의회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일찌기 엘친 대통령의 밀접한 협력자였던 루슬란 하즈블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反對派까지 생겼다. 한편 11월 신정부 수립 이래 루츠코이 부통령은 엘친 대통령이 자기를 배제한 채 권력을 강화하자 엘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으며, 軍需産業 보호를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시장의 돌진’을 반대하는 동시에, 또한 구소련 구성국가에서의 러시아인 보호를 표방하면서 ‘러시아愛國主義

의 재생'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엘친이 非常大權에 기초하여 1992년 1월 초에 실시한 급진적 가격자유화조치가 인플레이를 조장하여 국가경제를 일시에 대혼란에 빠트려 국민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자, 광범위한 반엘친 불만 계층이 생성되었다. 즉 엘친의 충격요법은 국민의 불만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엘친 권력의 잠재적 지지세력인 지방정부와 경제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집단을 이반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성된 반엘친 세력은 1992년 4월 제6차 인민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대통령 권한 축소와 급진적 경제개혁 저지를 위한 압력을 가하여 엘친의 總理 兼職을 포기시키고 제1부총리 부르블리스와 샤흐라이 등 주요 보좌관들을 경질시켰다.

그후 中道派 聯合團體인 「시민동맹」이 결성(1992. 6)되면서 엘친에 대한 반대가 보다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만료된 후 개최된 1992년 12월 제7차 인민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반엘친 세력은 가이다르 총리서리를 퇴진시키고 중도파의 체르노미르진을 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최고회의가 大統領令·命令에 대한 違憲 與否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경우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외무·국방·보안·내무장관 임명도 최고회의의 승인 사항으로 한다는 憲法改正을 채택하는데 성공(12. 9)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친은 현행 헌법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제약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고 신헌법제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

표를 설정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7차대회에서 1993년 4월 1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때까지 개정헌법을 발효시키지 않는다는 합의(12. 12)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3년 3월 개최된 제8차 임시 인민대의원대회에서 국민투표 실시 중지가 결정(3. 13)되자, 엘친은 改正憲法 發效를 우려하여 3월 20일 비상통치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개최(3. 26)된 제9차 임시인민대의원대회에서 결국 「비상통치」 철회와 4월 25일 국민투표 실시가 합의되어, 마침내 러시아 정치권은 국민투표 정국에 돌입하게 되었다.

국민투표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엘친은 G-7의 434억 달러 원조를 약속받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기업단체·경영자층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심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① 엘친 대통령에 대한 신임, ② 1992년 이래의 대통령·내각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신임, ③ 대통령선거 조기실시 여부, ④ 의회선거 조기실시 여부 등 모두 4개 문항으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엘친은 첫째 문항에서 58.7%, 둘째 문항에서 53.0%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¹⁵²⁾

그후 엘친은 국민투표에서의 신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권력재

152) *Rossiyskaya gazeta*, 6 maya 1993g. 非憲法的 事項인 ①과 ②문항은 투표자 과반수로 결정되나, 憲法的 事項인 ③과 ④문항은 유권자 과반수로 결정되었으므로, 셋째 문항(유권자 31.7%), 넷째 문항(유권자 43.1%)은 각각 부결되었다.

장악을 시도하면서 新憲法 채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엘친은 우선 반대파 제거를 착수하여 4월 28일 최대의 정적인 루츠코이 부통령을 「반조직범죄·汚職鬪爭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¹⁵³⁾ 5월 11일 스코코프 안전보장회의 서기와 히자 부총리를 전격 해임하는 한편, 4월 29일 사흐라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작성한 새로운 헌법초안을 공표하고 신헌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대표와 대통령 및 의회대표로 구성되는 별도의 「헌법협의회」(Konstitutsionnoe Soveshchanie)를 소집하였다.

이에 대해 最高會議은 4월 28일 부패조사 특별위원회를 의회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29일 최고회의내 헌법위원회를 중심으로 新憲法案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채택하기 위한 제10차 인민대의원대회를 11월 17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민투표 이후의 일련의 변화된 정세 속에서 지방자치체와 정치세력의 상당수가 이미 엘친 주도의 「헌법협의회」 참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측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월 5일 각계 대표 7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헌법협의회는 7월 12일 엘친 초안을 중심으로 헌법 최종안을 채택하자, 최고회의는 7월 31일 헌법위원회에서 의회측 초안을

153) 엘친은 이미 4월 23일 루츠코이의 農業政策責任者 職位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루츠코이는 공식적인 擔當 職務를 상실하게 되었다.

중심으로 헌법안을 확정하고, 8월 6일 옐친의 민영화포고령을 부결하고 옐친 辭任을 要求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옐친은 8월 10일 민영화작업에 대한 정부통제 강화 포고령을 발표하였으며 의회는 포고령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상정하였다.

이리하여 옐친과 의회 쌍방간의 쿠데타說이 떠도는 등 러시아 政情은 극도의 혼미상황에 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옐친과 행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으로 상당히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첫째, 옐친은 초헌법적 수단에 의한 議會 解散과 의회를 우회하여 新憲法案을 강행 채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헌법은 합법적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정당성을 갖지못한다”면서 법률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주장을 논파할 수 없었다.

둘째, 7월 24일의 舊루블지폐 使用禁止措置로 국민의 지지도가 급격히 저하하였다.¹⁵⁴⁾ 옐친은 최고회의 관할하에 있는 중앙은행의 이 조치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 강변하면서 완화조치를 발표하였으나,¹⁵⁵⁾ 옐친이 취소조치가 아니라 완화조치를 발표하였고 중앙

154) 이 조치는 1993년 이전 발행지폐를 7월 26일부터 통용 중지하고, 8월 7일까지 은행에서 1인당 3만 5천 루블까지 1993年券으로 교환하고, 한도초과분은 6개월 만기계좌에 예치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 루블환율이 거의 2배로 폭락하고 극심한 사재기현상이 나타나는 등 경제혼란을 야기시켰다.

155) 옐친은 舊지폐를 8월 말까지 최대 10만 루블까지 新券으로 교환하고, 1992년 발행한 1만 루블券은 상한선에 관계없이 자유교환

은행 총재 게라시첸코가 옐친의 사전인지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옐친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민투표로 얻어진 개혁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던 것이다.

셋째, 대통령부와 정부내 不協和音과 不正腐敗 혐의로 인해 정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었다. 옐친은 샤포쉬니코프 CIS통합군 총사령관을 스코코프 안전보장회의 서기의 후임으로 임명하였으나 샤포쉬니코프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서기서리로 있다가 결국 사직하였으며, 7월 27일 바란니코프 보안장관을 국경경비 태만을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바란니코프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독립신문」에 발표하고 자신은 폴토라닌과 부르블리스 등 정권내 「초급진파」의 음모에 의해 추방되었다고 비판하였다.¹⁵⁶⁾ 그리고 8월 21일 글라지예프 대외경제장관은 자신의 부패혐의가 거론되자 이에 격렬히 반발하면서 직접 거명은 피하였으나 ‘두명의 각료’가 자신의 실각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사의를 표명하였다.¹⁵⁷⁾ 또한 옐친 측근인 폴토라닌 정보센터 소장이 同 센터 폐지 의향을 표명하면서 1992년 12월 자신이 사임한 출판정보장관으로 다시 복귀할 것을 희망하자, 페도로프 장관이 항의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閣僚間의 軋轢은 옐친 정부에 대한 국

을 허용하였다.

156) *Nezavisimaya gazeta*, 1 sentyabrya 1993g.

157) 이에 대해 각료회의는 글라지예프의 汚職嫌疑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면서 發言을 문제삼아 견책처분을 내렸다. 글라지예프는 옐친의 9월 21일 의회해산령 직후 抗議 辭任하였다.

민적 신임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무엇보다도 옹친 정권을 동요시킨 것은 汚職事件이었다. 7월 말 베를린의 구소련 과학기술관을 외국기업에 부정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사무실을 수색당한 폴토라닌은 9월 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슈메이코 제1부총리도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받았다. 이외에도 전술하였듯이 대외경제관계장관의 부패혐의가 보도되고, 샤프라니크 연료·에너지장관도 독직혐의를 받고 있었다.

다섯째, 9월 1일 옹친은 루츠코이 부통령의 부패혐의로 정부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면서 루츠코이 부통령에 대해 일시적 停職處分을 내리고,¹⁵⁸⁾ 대통령부 경호국을 동원하여 크레믈린내 부통령 집무실을 증거은닉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폐쇄하여 버렸다. 이에 대해 최고회의는 9월 3일 부통령 정직조치를 違憲으로 결정하고 무효화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며, 검찰청도 옹친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대통령에게 발송하자, 옹친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11월 예정의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탄핵의 근거로 될 것을 우려하여 9일 조르킨 헌법재판소 소장의 관저까지 봉쇄하여 버렸다. 이로써 옹친은 루츠코이와 조르킨을 적으로 공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正當性을

158) 이와 함께 슈메이코에 대한 정직처분도 동시에 취해졌다. 停職處分の 공식 이유는 부패혐의로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다. 헌법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부통령을 해임할 권한이 없으나,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옹친은 헌법규정상의 空白과 부패혐의를 이용하여 最大政敵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다.

완전히 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옐친은 표면적으로 의회와의 화해를 모색하면서 실질적으로 의회를 강제해산시킬 준비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9월 9일 옐친은 자신의 헌법초안과 의회측의 헌법초안을 종합하여 통일안을 작성하는 작업팀을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최고회의 헌법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의회와 타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유화적인 접근에 따라 의회측도 양보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어 옐친은 18일 크레믈린에서 열린 지방행정장관·의회대표자회의에서 의회 早期選舉를 먼저 실시하고, 그 반년 후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는 의회측의 의회·대통령 同時選舉 주장에 대해 대통령선거는 불필요하며 특히 동시선거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왔던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양보한 것이었다.

한편 옐친은 의회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의회해산을 준비하여, 우선 8월 10일 옐친은 의회와의 권력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9월중에 '중대 결단'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9월 결전'을 경고하였으며,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바란니코프 보안장관을 해임하고, 모스크바 교외에 주둔중인 제르진스키 사단 등 군부대를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충성을 다짐받는 등 軍部에 대한 指揮權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후 옐친은 9월 21일 밤 대국민 TV 演說을 통하여 갑자기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회의를 해산하는 동시에, 공화국·주 등 지방대표에 의한 연방평의회를 새로운 의회의 上院으로 하고, 下院에

상당하는 國家會議 선거를 12월 11~12일 양일간 실시할 것을 포고하는 등 전격적인 헌정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반엘친 세력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여 즉각 엘친을 파면하고 루츠코이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하는 한편, 국방·내무·보안장관 등 핵심각료 3명을 해임하였다. 그러나 서방측이 강력한 엘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軍이 中立 또는 엘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그리고 88개 지방자치체 가운데 단 5개 지방만이 엘친에 반대하자, 23일 하즈블라토프는 “엘친 대통령의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면서 패배를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친은 23일 대통령선거를 1994년 6월 12일에 실시하고 최고회의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여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布告令을 발표하였으며, 24일 최고회의 경비대의 무장해제와 의사당내 대의원의 철수를 명령하였고, 28일 내무부 소속부대가 의사당을 완전 봉쇄하는 한편, 29일 하즈블라토프에게 10월 4일 오전 0시까지 의사당에서 철수하고 무장해제하도록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고회의는 의사당 방어를 위해 2개 대대 병력을 편성하였으나, 이미 대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기에 몰린 반엘친 세력은 10월 3일 약 1만여명의 시위를 조직하고, 모스크바시청과 오스탄키노방송국을 폭력으로 점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流血事態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반엘친 세력의 유혈도발은 결과적으로 엘친 대통령에게 강경대응의 구실로 작용하여 엘친은 모스크바에 非常事態를 선포하고 대규모병력을 모스크바로 진입시켰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엘친은 의회를 武力 鎮壓하는 한

편, 하즈블라토프 의장과 루츠코이 부통령을 체포·구금하였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옐친은 議會 總選舉와 新憲法 개정을 위한 國民投票을 12월 12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한편, 선거에서의 승리와 권력 공고화를 위해 자신의 여당을 창당하고 중앙과 지방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있다.

이로써 1991년 12월 독립국가로 재생한 러시아에서 거듭되어 온 정치적 위기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1,452명의 적극 저항자를 구속함으로써 일단 진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친의 不法的 行爲에 대한 평가, 12월 선거를 둘러싼 혼미 재연 가능성, 경제난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남기게 되었다.

(2) 憲法 改正問題

1978년에 개정된 러시아 헌법은 1977년 소연방 「브레즈네프헌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것으로서 그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에트권력의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레닌 시대 이래의 전통이 계승되어 행정·입법·사법간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러시아헌법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 5월의 헌법개정에 의해 도입된 러시아의 大統領制¹⁵⁹⁾ 제도적으로 議會와 대립할 潛在的 可能性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대통령은 헌법

159) *Vedomosti S"ezda narodnykh deputatov RSFSR i Verkhovnogo Soveta RSFSR*, 30 maya 1991g., no. 22, s. 776.

121조 5항에 따라 인민대의원대회 및 최고회의에 대한 解散權 또는 活動停止權을 갖지 않으나, 121조 10항에서는 대통령이 憲法·法律·자기의 宣誓을 위반한 경우 해임되며, 대통령 해임결정은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또는 양원의 어느 일방의 發議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裁定에 기초하여 인민대의원대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따라서 立法部는 大統領 解任權과 內閣不信任權을 갖고 있는 반면, 행정부의 수장인 大統領의 議會解散權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러시아 헌법 제121조 5항에 따라 최고회의에서 채택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으나, 재심의된 법률이 최고회의 各院의 재적의원 過半數로 채택될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소연방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을 재채택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규정한 舊蘇聯 憲法의 소연방 대통령의 거부권보다도 약한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정치제도는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할 경우,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제도였던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의회는 大統領制 성립부터 1991년 8월 쿠데타 직후까지 이른바 짧은 ‘밀월기’가 끝난 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제약을 받아 왔으며, 특히 1992년 12월 제7차 인민대의원대회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최고회의가 대통령령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삭감하여 버렸기 때문에,¹⁶⁰⁾ 엘친은 의회의 권한을 제한

하는 강력한 大統領中心制의 新憲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이 결국 1993년 9월 말~10월 초 議會 強制解散이라는 위헌적 강경조치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의회해산 이후 러시아의 憲法改正問題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議會案과 大統領案으로 나뉘어 대립하여 오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헌법개정문제는 7월 12일 「헌법협의회」(Konstitutsionnoe Soveshchanie)에서 옐친 초안을 중심으로 확정된 最終案을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10월 15일 포고된 대통령령은 新憲法 채택에 관한 國民投票를 양원제 연방의회 선거와 동시에 12월 12일 실시하고, 국민투표에서 新憲法이 승인될 경우, 투표결과가 公布되는 即時 發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옐친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할 때, 국민투표에서의 신헌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헌법안은 「헌법협의회」 協議過程을 통하여 1993년 6월 5일 「헌법협의회」 소집 첫날 옐친이 최초 제출하였던 原案에 대해 무려 500개소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나,¹⁶¹⁾ 기본 골격은 변화되지 않

160) 특히 제7차대회에서 채택된 憲法 109조(대통령령 정지), 110조(내각의 법률발의권), 121조 6항(대통령의 국가체제 변동시 권한 정지)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였다. *Izvestiya*, 17 marta 1993g.

161) "Address by President Boris Yeltsin to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Constitutional Conference," *Moscow Radio Rossii Network*, July

았다.

엘친 憲法草案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과 관련하여, ① 대통령은 國家元首이고 헌법과 인권의 保證人이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調整하고 연방구성주체간의 紛爭 仲裁者이다. ② 任期는 5년간 2기를 초과할 수 없다.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10년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이 입후보자로 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聯邦院에 總理 및 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위해 후보자를 제안한다. 內閣의 신임·총사직을 연방원에 제기한다. 聯邦院과 협의 후 閣僚와 聯邦機關의 長을 任免하다. 연방원에 의한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중재재판소의 각 판사와 최고사법회의 판사 및 檢察總長의 임명을 위해 후보자를 제안한다. 지방의 大統領全權代表를 任免한다. 러시아軍 最高司令部를 任免한다. ④ 대통령은 聯邦議會 選舉를 고시한다. 연방의회가 組閣을 위한 결정을 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국가권력의 위기가 헌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연방원·국가원 각 의장과 협의 후 연방의회를 解散한다. 國民投票를 고시한다. ⑤ 대통령은 러시아軍의 最高總司令官이다. 침략 또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은 戒嚴令을 내리고 이를 즉시 연방의회에 통고한다. ⑥ 대통령은 헌법, 연방조약, 연방의 헌법적 법제에 정해진 상황과 절차에 따라 非常事態를 도입하고, 이를 즉시 연방의회에 통고한다. ⑦ 대통령의 국가반역, 국가체제 파괴 또는 인권과 자유 멸시 등과 같은 헌법위반

을 國家院이 고발하고 최고사법회의가 違憲判斷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聯邦院에 의해 解任된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 연방원 의장이 임시로 직무를 대행한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총리가 대행한다.

둘째, 立法權과 관련, 聯邦議會(Federal'noe sobranie)는 聯邦院(Sovet Federatsii)와 國家院(Gosudarstvennaya дума)의 兩院制로 구성되는데, ① 연방원은 연방구성주체로부터 각 2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가원은 균일대표원칙에 따라 지역선거구에서 3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② 연방원과 국가원 議員 任期는 4년이다. ③ 연방원은 조약을 비준·파기하고, 전쟁·평화문제를 해결하며, 계엄령·비상사태 등 大統領令을 승인한다. 또한 총리를 임명하고 정부를 신임한다. ④ 대통령 해임결정은 연방원 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채택된다. ⑤ 국가원에서 채택된 법안은 연방원에 송치되고, 연방원이 10일 이내에 부결할 경우 兩院 協議委員會를 구성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國家院이 재차 법안을 심의한 결과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이 채택된다.

셋째, 司法權과 관련, ① 聯邦憲法裁判所는 위헌법률을 심사하고 연방기관간 권한분쟁을 해결한다. ② 聯邦最高裁判所는 민사·형사·행정 및 그밖의 사건에 관한 최고 재판기관이다. ③ 聯邦最高仲裁裁判所는 경제분쟁 및 중재재판소에 의해 심리되는 그밖의 사건 해결에 관한 최고 재판기관이다. ④ 聯邦最高司法會議는 헌법재판소·최고재판소·최고중재재판소의 소장과 제1부소장 및 대통

령 제안에 의해 연방원이 임명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헌법 해석, 대통령 탄핵판결 등의 사법 관련 중요 문제를 관할한다.

넷째, 地方自治와 관련, 지방자치는 각 지역적 단위의 경계 내에서 國家權力으로부터 분리되어 獨立的·自主的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憲法改正은 대통령, 정부, 연방구성주체 및 연방의회 각원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하며, 연방의회 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택되고 연방구성주체의 3분의 2이상 비준으로 시행된다.

이상과 같은 草案의 골격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헌법 협의회」에서 수정된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¹⁶²⁾

첫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하여 修正案은 대통령중심제 연방국가를 지향하는 등 기본적으로 초안과 다를 바 없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여 ‘입헌군주제’ 시비가 나오는 등 批判 輿論을 인식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였다. 즉 ① 대통령임기를 5년에서 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조정하였고, ② 국가원수라는 대통령의 지위는 그냥두었으나, 권력기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조정절차(soglasitel'naya protsedura)를 취한다”는 대통령의 ‘국가기관간 조정자’ 역할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③ 의회 해산 권도 양원이 아니라 下院인 國家院에 한정하였다.

둘째, 최대 현안이었던 共和國·州 등의 地位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제5조의 “공화국의 주권행사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모순될

162) Ibid., pp. 20~26; *Nezavisimaya gazeta*, 10 iyulya 1993g.

수 없다”는 초안 규정을 “공화국은 러시아연방내 主權國家(suverennoe gosydarstvo)이다”로 수정하여 주 또는 그 이하의 연방구성주체(sub“ekt RF) 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제65조 1항을 신설하여 연방과 지방간의 공동관할영역에서 연방권력과 지방권력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 지방의 자체 법규정에 따라 권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셋째, 그 이외에도 立法權과 관련하여 연방원의 구성은 동일하나, 국가원의 인원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연방원이 아니라 國家院이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 임명에 동의하고, 내각 사퇴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國家院의 權限을 확대하였다. 또한 司法權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Konstitutsionnyy sud)의 판사 인원을 18명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열린 대통령은 의회 강제해산 후 10월 23일 야로스라블리市的 記者會見에서 「헌법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을 수정하여 12월 국민투표에 회부할 新憲法案을 작성할 것이라면서, 공화국과의 지위 격차에 반발하는 다른 연방구성주체들의 立場을 고려하는 동시에 聯邦分裂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하였다.

이에 따라 공화국과 여타 지방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라토프, 샤흐라이 등 연방정부 대표 2명과 공화국 대표 2명, 기타 지방자치체 대표 2명으로 이루어지는 6人 共同委員會가 구성되고,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마침내 이 규정은 공화국에 대한 주권국가라는 정의를 삭제하고, “러시아연방은 공화국, 변경, 주, 대도

시, 자치주, 자치관구 등 평등한 聯邦構成主體(sub"ekt RF)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후 옐친은 의회해산이라는 새로운 유리한 상황을 반영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2期 連任으로 조정하는 內容을 포함한 新憲法案을 11월 3일 공포하고 연방구성주체들에게 제시하였다.

(3) 政界改編 問題

옐친은 政治報復을 개시하여, 의사당 함락 직후 「구국전선」, 「노동러시아」 등 8개 共產·民族系 政治組織의 非合法化를 표명하고, 군부와 지방의 반대세력을 숙정하는 동시에, 10월 7일 ‘판사의 정원부족’을 이유로 新憲法 採擇時까지 憲法裁判所 활동을 정지시키는 대통령령을 포고하였다.¹⁶³⁾

특히 옐친은 軍部內 反對派 肅正과 관련하여, 의사당공격을 적극 지휘하였던 국방차관 콘드라찌에프(Georgiy G. Kondrat'ev) 대장 등이 ‘대통령에의 충성심 결여’를 보인 장교집단에 대한 경질작업을 가이다르 제1부총리의 지휘하에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¹⁶⁴⁾ 군

163) 10월 6일 조르킨은 옐친측의 압력에 의해 헌법재판소 소장직을 사임하였으며, 부소장 니콜라이 비트루크(Nikolay V. Vitruk)가 소장대행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164) 옐친은 10월 15일 모스크바로의 군부대 진입명령(10. 3)을 거부한 모스크바군관구 사령관 쿠즈네쑨프(Leontiy V. Kuznetsov) 대장을 해임하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참모본부의 중앙기관 근무자를 포함한 군부 전체로부터 장군·장교의 약 20%가 조만간 경질될 것이라고 한다. *Komsomol'skaya pravda*, 27 oktyabrya 1993g.

부뿐만 아니라 內務部와 保安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숙정작업을 전개하여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 강제해산에 저항한 지방권력기관의 지도자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보복인사에 단행하여 중앙과 지방의 양방향에서 일시에 권력을 공고화하고 있다.

한편 엘친은 10월 11일 인민대의원대회 소멸에 따른 새로운 연방의회 구성을 위해 연방의회의 聯邦院과 國家院 선거를 동시에 12월 12일 실시한다는 大統領令을 공포하였다. 또한 10월 22일 엘친은 변경·주·대도시·자치주·자치관구 등 地方議會 選舉를 1993년 12월에서 1994년 3월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 대통령령은 공화국을 제외한 68개 지방에서만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공화국에 대해서는 선거를 명령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령을 고려하여 의회를 재편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大統領選舉와 관련하여 엘친은 그동안 1994년 6월 大選 實施를 공약하여 왔으나, 11월 3일 새로운 헌법안을 공고하면서 대통령의 任期를 2期 連任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早期 大選을 실시할 의향이 없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 요구가 총선 유세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反撥이 적지않을 것이나, 현재 정치세력들의 주요 관심이 總選에 집중되어 있어 엘친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에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政黨 및 政治勢力間의 離合集散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⁶⁵⁾ 「구국전선」과 「노동러시아」의 활동금지

165) 10월 14일 러시아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선거참가 가능한 정당과 단체로 고시한 政黨·團體의 數는 총 91개이다. *Rossiyskaya*

조치로 保守派는 거의 궤멸상태에 있으며, 中道派도 「시민동맹」의 분열과 루츠코이의 체포·구금에 따라 와해되고, 中道派 연합단체인 「시민동맹」, 「조국을 위한 합의」, 「신러시아기업가연합」 등은 세력규합에 실패하여 대체로 개별 정당별로 독립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改革派 勢力은 의회해산 후 강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4월 국민투표 이후 옐친 대통령의 政黨으로서 부르블리스(Gennadiy E. Burbulis) 前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4·25 동맹」(Soyuz 25 aprelya)이 최근 「러시아의 선택」과 「러시아통일합의당」으로 分黨되어 각각 12월 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나. 經濟體制 變革: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1991년 10월 28일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市場經濟化를 위한 急進改革(충격요법)을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발표하였으며, 이 제안은 11월 2일 최고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후 12월 21일 구소련이 붕괴하고 독립국가연합이 발족한 후, 1992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衝擊療法은 강행되었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즉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의 핵심요소인 固定價格制度를 정면에서 와해시킴으로써 구체제의 파괴와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엘친 정부가 급진적인 충격요법을 취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1991년의 러시아경제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 파국적인 사태에 빠지고 있었다.¹⁶⁶⁾

첫째, 생산의 대폭적인 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GNP는 전년대비 -11%로 되어, 국내총생산은 -9%로 하강하였다. 工業生産高는 -2.2%로 떨어지고 農業生産高는 -5%로 저하하였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구소련의 단일경제권이 붕괴되면서 수십년에 걸쳐 중앙과 지역경제를 연결하여온 산업부문간 또는 지역간의 다각적인 産業連繫가 붕괴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經濟圈의 統一性を 유지하는 위에 기능하여 온 재정·금융제도가 붕괴하여 財政赤字가 증대하였다.

셋째, 1991년 4월의 國定價格 引上에 따라 화폐수요가 증대하여 通貨가 증발되고 루블화의 구매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제품 공급을 둘러싼 契約義務 不履行事態가 증대하고 去來의 現物經濟化(바터거래)가 진행되었으며 分業體制가 와해되면서 産業聯關이 파괴되었다.

넷째, 국가계획위원회 및 국가자재·기계공급위원회 등을 통하여 행정명령제도에 의해 실시되어 온 원료·자재·기계 등에 대한 配分機能이 마비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都賣市場이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체계가 기능중지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166) 森本忠夫, “特集·離陸できないロシア: 早くも壁に突き当たった エリツイン改革,” 「世界週報」, 1992. 5. 19, pp. 15~16.

가운데 다수의 중개업자에 의한 비공식 경로를 통한 高價의 轉賣 行爲가 만연되었다.

다섯째, 상품거래소·증권거래소·어음유통 등 市場經濟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여섯째, 새로운 기업경영을 위한 要員 양성이 지연되어, 시장경제적 기업경영에 불가결한 중요한 人的 資源이 부재하였다.

일곱째, 經營法規가 남발되어 상호 모순되는 법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혼란이 생기고 있었다.

여덟째, 에너지자원의 대폭적인 생산 감소에 따라 外貨 획득이 급감하고, 그 결과 貿易이 감소하였다.

아홉째, 정치·경제정세 악화에 의해 社會的 緊張이 고조되어, 이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었다.

위기적인 상황에 봉착하고 있던 것은 消費市場이었다. 거의 모든 소비재, 특히 食料品 생산이 일제히 저하하여, 전체적으로 -9%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식품산업내부의 產業聯關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食料加工企業에의 원료인 농산물 入荷가 감소하여 納入契約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名目貨幣所得이 증대하여 인플레이가 격화하고, 국민의 實質生活水準이 대폭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衝擊療法의 目標은 붕괴하고 있던 매크로경제의 均衡을 회복하고, ① 물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자유화하고, ② 막대한 가격차 보조금과 군사비 등 財政支出을 대폭 삭감하고 부가가치세와 누진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과탄을 방지하며, ③ 강력한 緊縮政

策(투자억제·금리인상)를 도입하고, ④ 貿易活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⑤ 중소기업의 사유화를 촉진하고 赤字 콜호즈·소포즈를 해체하여 자영농가를 창설하고, ⑥ 국영기업에 대한 國家 發注를 삭감한다는 등이었다. 특히 ①의 목표는 가격 형성을 市場메카니즘에 맡김으로써 국영상점, 생산기업·조직, 농장에 은닉되어온 물자를 시장에 나오도록 만들어 暗市場에 유입되고 있는 물자를 정상적인 市場으로 역류시켜 국영기업과 농장 생산에 자극을 주어 物資不足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에 대처하기 위해 賃金 統制를 철폐하고 社會的 弱者層에 대한 報償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옐친 대통령이 가격자유화를 앞두고 1991년 12월 29일 국민의 생활상태가 반년~8개월간 악화될 것이나 그후에는 소비시장이 윤택하게 되어 1992년 가을에는 經濟安定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하였듯이, 처음부터 물가상승 등 경제질서의 혼란이 일정기간 동안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예컨대, 충격요법 시나리오를 주도한 가이다르가 「이즈베스찌아」지에 발표한 當初 豫測에 의하면, 1992년 1~2월간 物價上昇率은 월간 약 100%로 되어 최초 3개월 동안은 3배 정도의 상승이 예상되며, 물가 상승으로 통화수요는 급증할 것이나, 2월에는 소비시장이 안정화로 향하고 3~4월에 걸쳐 물가상승율이 저하되어 10~1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이와 동시에 所得上昇率도 떨어져 지금까지 국가통제가격으로 유지되어 온 일부 상품의 가격도 자유화될 것이다. 그리고 6월에는 안정적인 루블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通貨安定化基金이 창설된다. 이 동안 생산저하와 실업증가는 계속될 것이나, 연말까지는 물가상승율이 수 %대로 떨어지고 루블환율은 안정되어 외화유입이 촉진되는 낙관적 조건이 조성될 것이다. 1992년을 통하여 생산저하가 10~12% 정도로 그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空想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 動向(국민의 반발)에 의해 보상 요구가 격화될 경우, 임금상승율이 물가상승율에 근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월간 50%를 넘어 경제가 現物經濟化하여 바터거래체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었다.¹⁶⁷⁾

가이다르의 이러한 전망은 폴란드에서 1990년에 이미 실시한 衝擊療法을 근거로 하여 서방측 원조에 의한 通貨安定基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었으나, 이 자체가 이미 러시아가 自力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또한 폴란드의 경우에도 民營化가 예측대로 진전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위기 속에 생산이 계속 저하되고 失業도 증대하여, 1991년 초 일단 진정화되었던 인플레이션이 1992년 여름 이래 재연되어 년 70~80%에 이르고 있었음을 간과하고,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충격요법 실시 후 러시아경제는 계속 침체상을 노정하고 있어, 1992년 국민총생산(GNP)은 전년대비 19% 감소, 공업생산은 18.8% 감소, 농업생산도 8% 감소하였다. 1991년 12월부터 1992년 12월까

167) *Izvestiya*, 9 yanvarya 1992g.

지 1년간 소비자물가는 26배 폭등하였으며, 임금 상승은 12.3배에 이르렀다. 대외무역도 축소되어 1992년 총액은 73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하여 23% 감소하였으며, 1990년도에 비하면 52%로 반감하였다.¹⁶⁸⁾ 1993년에 들어서도 이러한 러시아경제 상황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¹⁶⁹⁾

衝擊療法的 經濟改革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競爭條件을 창출하지 않고 성급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마추빈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가 신문 인터뷰에서 비판하였듯이 현재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폴란드型的 衝擊療法은 러시아의 경제체질에 적합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며, 商品 增産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물가 폭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충격요법의 제창자인 가이다르의 過誤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미국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政府가 우선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國家獨占體를 해체하고 企業間·農場間에 競爭條件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것은 몇년의 세월을 필요로 할 것이나, 그전에 價格自由化를 실시해 버린 것은 큰 과오라고 주장하였다.¹⁷⁰⁾

러시아 경제 회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은 G-7 등 서방선진국의 經濟支援이나, 러시아 경제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동원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 효과도 일석일조

168) *Ekonomika i zhizn'*, no. 4, yanvarya 1993g.

169) *Ibid.*, no. 17, aprelya 1993g.

170)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13, 1992.

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보다 중장기적인 계속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방측은 대규모적인 對러시아 支援·投資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러시아측의 支援與件 整備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IMF는 對러시아 資金支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前提條件을 제시하여 왔다. 즉 ① 재정적자 축소와 경제분야에서의 정부의 간섭 축소, ② 通貨增發 억제와 적자기업에 대한 貸出 統制를 통한 인플레이 억제, ③ 자유시장과 사유화에 필요한 法的 制度 구축, ④ 생산증대를 통해 외화소득을 높이기 위한 農業 및 에너지분야의 개편, ⑤ 부채상환을 위한 外換保有高 動員體制 구축, ⑥ 현실적 수준으로 단일화된 市場換率 설정 등이다.¹⁷¹⁾ 그러나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經濟政策은 화폐유통량을 늘림으로써 상품유통 증대와 생산감소 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비용을 증대시켜 생활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緊縮과 通貨抑制를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IMF의 조건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다소 완화된 긴축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를 억제하고 루블 兌換化를 서두르느냐, 아니면 대규모 도산과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크게 완화시킴으로써 경제개혁의 궤도 수정을 감행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하는 岐路에서

171)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April 28, 1992.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경제의 未來는 러시아 經濟政策方向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러시아의 經濟沈滯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3. 展望

현재 러시아는 의회 강제해산조치 이후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상징되어온 政治的 危機를 일단 해소하였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의 將來가 반드시 안정적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

12월에 치뤄질 選舉에서 「러시아의 선택」과 「러시아통일합의당」 등 親엘친 勢力을 중심으로 엘친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통일합의당」 내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軍産複合體의 영향력은 1992년 6월 '시민동맹' 형성 이후 러시아 政治圈內에 벌어졌던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 재연되어 가이다르티프의 충격요법적 급진경제개혁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條件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선택」을 중심으로 급진개혁정책이 재차 시도된다면 러시아의 경제가 混亂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政治·經濟的 危機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길은 엘친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같은 극단적이고 불타협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民主主義 原則에 입각하여 反對派와 妥協해 나가

면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現實을 강조하는 중도 내지 보수파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漸進的 解決을 모색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연방내 民族主義 대두현상과 관련하여 소연방에 이어 러시아聯邦 解體危機가 논의되고 있으나, 地方分權 또는 自治요구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지만 소연방처럼 解體될 가능성은 현재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민족국가’로서 존재한 적이 없으며, 러시아의 국가적 아이덴티티는 러시아제국 이래의 國民的 自負心과 결부되어 왔다. 둘째, 인종적으로 볼 때, 러시아 내에서는 광범위한 混血과 文化的 混合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극소수의 民族共同體集團을 제외하고 혈통적으로 民族性을 구분하기 어렵다. 셋째, 연방내 공화국, 자치주 등은 經濟的 自立能力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분리주의운동은 地方自治次元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엘친이 4월의 미·러 정상회담에서 “현정권이 무너지면, 구 공산세력이 부활한다”고 말하였으나, 엘친 반대파를 모두 保守·反動勢力이라 간주할 수는 없다. 분명히 保身主義와 소련型 社會主義體制 부활을 목표로 개혁에 저항하는 극단적인 보수·애국주의 세력은 존재한다. 그러나 엘친 반대파의 중심세력은 中道·實務派이며, 시장경제를 지지하면서 구소련시대의 유산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면서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러시아가 일시에 과거

로 역류할 가능성은 적다. 옐친 지지는 **善**이요 반대는 **惡**이라는 단순논리로 러시아정세를 파악하면 러시아에 대한 큰 오해인 것이다.

즉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葛藤과 對立이 大混亂의 양상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러시아가 확실히 현재 대혼란의 와중에 있는 것도 틀림없으나, 이를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되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여도 脫共產主義化·市場經濟化·民主化는 이미 大勢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방향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시장경제체제를 목표하는 것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急進改革派가 아니가 中道穩健改革派가 강화되면, 그만큼 混合經濟的 體制가 강화되고 改革의 速度가 완화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국의 변화방향과는 별개로 경제자체의 논리에 의해 경제의 정치로부터의 자립, 따라서 국가에 의한 중앙통제의 약화는 부단히 진전될 것이다.

V. 結 論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 러시아는 마르크스가 혁명의 조건으로 상정하고 있던 고도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과 보통선거권 등 민주주의를 통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높은 사회의식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소련에서는 공산주의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즉 생산력 증대와 인민대중의 사회의식 향상을 위하여 레닌은 스스로 ‘자본주의로의 전략적 후퇴’라고 부른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스탈린은 이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한 중공업발전전략으로 이룩하려 하였다. 그후 스탈린식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흐루시초프 시대와 브레즈네프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개혁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스탈린의 중공업발전전략은 철저한 국가관리를 통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켜 외연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내포적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브레즈네프 말기에 이르러 소련경제는 경제성장이 저하하는 등 심각한 침체현상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는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와 1989년 5월 인민대의원대회를 분기점으로 대체로 3단계의 발전과정을 보였다.

제1단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가속전략으로서 경제침체의 원인이 노동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인식하여 노동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병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제개혁의 성과를 현실화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제2단계에 접어들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개혁

과 정치개혁을 병행 추진하면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그후 인민대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이해를 반영한 수많은 민중조직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민주화·다원화가 촉진되었다. 더욱이 국가이념 자체를 재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져 이른바 ‘인도적 민주적 사회주의’ 개념까지 정립되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기독교인들이 1991년 8월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함양된 민중의 민주의식은 쿠데타를 실패시킨 동시에 마침내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해체로 귀결되었다.

결국 소련사회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으나,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에서 정치개혁이 추진되어 점차 사회 전반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보다 政治改革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 범위도 넓어졌다. 예컨대 民主化의 경우, 과거 소련에서 형식적이었던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민주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그 範圍와 深度도 점차 상승적으로 확대되고 내실화되어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를 수반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화는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민중의 기대수준을 상승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공개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연방 해체라는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부정으로 발

전하였던 것이다.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일순간에 전환할 수는 없으므로 1992년 초의 가격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과도기적 혼란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 면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일당지배체제에서 다원적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혼란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第 2 章 東유럽

I.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의 形成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은 각기 그 人的, 경제적 발전상황과 규

〈표 3-2-1〉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의 現況 比較

	연도	유 고	헝가리	폴란드	동 독	체 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인구 (백만명)	1989	23.7	10.6	37.8	16.5	15.6	9.0	23.2	3.2
면적 (천km ²)	1989	255.8	90.0	310.7	108.0	127.9	110.9	237.5	28.7
GNP (억달러)	1960	·	465	1,211	999	815	265	455	·
	1970	727	464	1,170	1,035	832	356	505	·
	1980	1,188	603	1,659	1,376	1,093	470	739	·
1인당 GNP(美 달러)	1960	·	4,650	4,502	5,842	5,949	3,354	2,473	·
	1970	3,564	4,505	3,600	6,053	5,818	4,188	2,463	·
	1980	5,327	5,636	4,660	8,240	7,385	5,341	3,329	·
연간경제 성장율(%)	1961	·	3.4	4.2	3.1	2.9	5.8	5.2	·
	~70								
	1971 ~80	5.0	2.6	3.6	2.8	2.8	2.8	5.3	·

출처: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 C.: US GPO, 1990).

모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도 폴란드는 人口 3천 8백만으로 東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고 알바니아는 3백 20만에 불과한 작은 국가이다. 동독의 1980년도 1人當 GNP는 8천 2백사십 달러인데 비해 루마니아는 약 3천 3백 달러에 달할 뿐이다. 이처럼 국가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성 과정을 歷史的으로 고찰해 보면 각 국가들은 각기 다른 國內的, 國際的 요인을 안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2次大戰 기간중에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서 형성되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의 정권 수립과정에서 蘇聯, 蘇聯軍의 進駐가 각 개별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自生的 공산주의자들이 對獨抗爭에서 승리한 후에 독자적으로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경우와 소련군의 進駐에 따라 소련식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東유럽 각국은 경제 면에서는 스탈린式 명령형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하고 私有財産制를 폐지함으로써 中央集權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전후 東유럽을 西方의 침투에 대한 防波堤로 설정했던 소련은 이들 東유럽 8개국을 한 그룹으로 엮어 상호경제협력 및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地域安全保障機構를 결성하여 서방에 대하여 고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1. 東유럽 社會主義 政權 樹立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의 進駐에 따라 형성된 移植型 사회주의 國家群과 자체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된 自生的 사회주의 국가군으로 나눌 수 있다.

자생적 공산주의 정권은 2次大戰 당시 점령국인 독일, 이탈리아에 대한 무력항쟁을 전개한 경험이 있고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戰後 자력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이다. 多民族國家인 유고슬라비아는 2次大戰中 티토가 영도하는 빨치산 인민 해방군을 중심으로 점령국에 대해 무력으로 저항을 지속했고 1944년 10월 15일 소련과 연합으로 독일군을 영내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유고를 해방시켰다.¹⁾ 1945년 4월 소련과 우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이어 11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결과 공산당과 크로

1) 유고슬라비아의 對獨抗爭 단체는 세르비아 중심의 체트니크(Cetniks)와 공산주의자 티토(Josip Broz Tito)를 중심으로 1941년 7월 2일 결성된 빨치산(Partisan)이 있었는데 티토는 소유고슬라비아인을 포괄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고 주도권을 확보하였으며 1942년 11월 26일 ‘유고슬라비아 國民解放 反파시스트評議會’(The Anti-Fascist Council for the National Liberation of Yugoslavis: AVNOJ)를 결성하고 그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人民委員會를 구성해 나갔다. 티토는 1943년 AVNOJ를 통해 유고슬라비아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그 수반에 취임함으로써 전후 유고슬라비아의 정치구도는 티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李淑子, “유고슬라비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편, 「헝가리·유고슬라비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89), pp. 151~154.

아티아 農民黨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人民戰線이 유권자의 9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유고슬라비아연방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²⁾ 연방공화국은 소련의 스탈린 憲法을 모델로 하여 1946년 1월 31일 자체 연방헌법을 채택, 공포함으로써 연방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유고는 정권 수립에 있어 소련의 직·간접적인 원조와 협조가 있었으며 동시에 체제 자체가 소련식을 모방하여 구성되었음에도 전쟁 기간중 자력으로 조국을 해방하였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알바니아 共產黨은 이미 1941년 11월 티라나에서 단일 정당으로 통합되어 알바니아 공산주의자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엔버 호자(Enver Hoxha)가 黨 中央委 의장으로 선출되었다.³⁾ 알바니

2) 多民族國家인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인,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몬테네그로인, 알바니아인, 마자르인, 루마니아인, 터키인 등 다수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으로도 세르비아인이 주축이 된 그리스 正教(41%),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인들의 로마 카톨릭(32%), 그리고 이슬람教(12%) 등으로 거의 모든 종교가 혼재되어 있다.

3) 알바니아에는 1930년에 이미 코민테른 노선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는데 코르사(Korca)파를 비롯하여 슈코드라(Shkodra)파 및 자리(Zjarri)파 등 수 개의 공산주의 그룹이 혼재함으로써 국내 공산주의운동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강력한 對이태리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제약 요인이 되었다. 코르사파에 속하는 호자는 이들 다양한 공산주의운동 단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세력들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해방투쟁전선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尹德熙, “알바니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外, 「불가리아·알바니아: 政治·經濟·社會文

아는 티토의 유고 공산당을 모델로 채택하긴 하였으나 알바니아는 독자적으로 이태리 및 독일 점령군에 대해 무장 항쟁을 전개하였다. 1944년 5월 24일 알바니아에는 「反파시스트 民族解放 評議會 (CALM)」가 구성되고 호자는 평의회 산하 「反파시스트 위원회」 위원장 겸 민족해방군대의 참모직도 겸직하였다. 1944년 11월 민족주의자들과의 내부투쟁에서도 승리한 호자는 「反파시스트 위원회」를 알바니아 민주주의 정부로 전환시킴으로써 알바니아 공산당은 유고의 협조를 제외하고는 자력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다만 1948년 6월 말 개최된 코민포름에서 알바니아를 합병하려는 유고가 축출당하자 알바니아는 유고와 1946년 7월에 맺은 상호협조조약을 破棄하고 소련과의 同盟關係를 발전시켰다.

유고와 알바니아와 같이 自生的인 공산정권을 수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의 東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직접적인 지원하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2次大戰 당시 독일에 완전 合併되거나 同盟을 맺고 소련에 대항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들은 소련군이 이들 국가에 進駐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複合民族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⁴⁾ 2次大戰 당시 독일의 점령하에 놓여 있었는데 1940년 런던에 亡命政府를 수립하여 독일에 대

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91), p. 111.

4) 체코인이 전체의 63.4%, 슬로바키아인이 31.3%, 그리고 기타 소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항하였다. 1943년 망명정부는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독항쟁의 주도권은 地下運動을 주도하던 공산당 지도자인 고트발트(K. Gottwald)가 장악하고 있었다. 1945년 5월 9일 소련군이 단독으로 프라하에 입성함으로써 전후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⁵⁾

1946년 5월 制憲議會 선거에서 공산당이 주체가 되어 6개 정당으로 구성된 聯立內閣이 성립되었으며 1948년 공산당이 중심이 된 민족전선이 완전히 실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신헌법을 제정하여 체코슬로바키아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초대 左派 연립정부는 대통령에 고트발트를 그리고 수상에는 자포톱스키를 각각 선출하였다.

인구의 90% 이상이 마자르인인 헝가리는 1次大戰 이후 상실한 舊헝가리영토를 회복하려는 염원을 가지고 1941년 독일과 동맹을 맺고 對蘇戰에 參戰하였다.⁶⁾ 그러나 전쟁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소

5) 1945년 5월 프라하 시민들은 독일 점령군에 대해 蜂起하고 연합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美軍은 아이젠하워의 명령에 따라 체코 영토로 進軍하지 않음으로써 소련군이 단독 進駐하는 계기가 되었다. 李崇熙, “체코슬로바키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尹德熙 編,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90), p. 25.

6) 헝가리는 1次大戰 이후 東유럽 최초의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소비에트 불세비즘을 그대로 실현하였으나 곧 호르티(Miklos Horthy)提督이 영도하는 極右 反革命 세력의 강력한 도전을 받아 瓦解되면서 전형적인 파시스트 국가가 되었다. 安秉永, “헝가리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編, 「헝가리·유고슬라비아」, p. 26.

련군이 헝가리에 進駐하면서 라코시(Matyas Rakosi)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戰後 헝가리의 공산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국내 공산당의 세력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헝가리 공산당은 1944년 12월 소련의 비호 아래 小地主黨, 사회민주당, 민족노동당과 함께 4黨 연합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력확장을 이룩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45년 11월 총선거에서 小地主黨이 57%,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각각 17%, 민족노동당이 7%를 획득하여 小地主黨의 킬디(Zoltar Tildy)가 수상에 취임하였다.⁷⁾

그러나 共產黨은 小地主黨內 우익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小地主黨을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연립정부 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세력확장에 성공한 공산당은 1948년 3월 사회민주당과의 통합을 성취하여 헝가리노동인민당으로 개칭하면서 1黨 유일체제를 확립하였다. 사회주의노동당은 소위 모스크바派인 라코시가 당내 국내파를 완전 제거하면서 당권을 장악하여 헝가리는 소련에 완전 예속하게 되었다. 1949년 5월 총선거에서 단일후보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헝가리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東유럽에서 최대의 인구를 가진 폴란드는 98% 이상이 폴란드인인 단일민족국가이다. 2次大戰 기간중에 독일과 소련에 의해 각각 분할되어 점령당하기도 한 폴란드는 1944년 7월 독일이 패퇴하면서 소련이 전 지역에 進駐하였다.⁸⁾ 1944년 12월 親蘇 공산계 지도

7) 위의 논문, p. 28.

8) 2次大戰 이전의 폴란드는 한때 의회민주주의 공화국을 형성하기도

자를 중심으로 국민해방위원회란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후 1945년 6월 런던의 亡命政府와 연합하여 정부를 수립하였다. 進駐한 소련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제 정당이 난립하여 정치적 분열 양상을 보인 폴란드에서 비어루트(Boleslaw Bierut)를 비롯한 親蘇 공산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蘇聯에 대한 敵對感과 不信感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폴란드인들은 소련의 영향권하에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처럼 對蘇 적 대적 분위기 속에서 폴란드 정부는 억압적인 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다. 1947년 1월 총선거에서 승리한 폴란드 노동당은 이듬해 사회당과 합당하여 폴란드 統合勞動者黨을 결성하여 정권을 완전 장악하였다. 특히 농장집단화 등 제 문제를 놓고 급진적인 스탈린式 사회주의 건설에 반대하던 民族共產主義者인 고물카(Wladyslaw Gomulka)는 1948년 9월 共產黨 書記長職에서 해임되고 親蘇主義者인 대통령 비어루트가 書記長에 임명됨으로써 對蘇 예속화가 가속화되었다.

複合多民族 국가인 루마니아는 2次大戰 기간중에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하여 독일에 적극 협력한 반면 소련에 적대적이었다.⁹⁾ 1944

하였으나 1926년부터 專制主義에 가까운 정치체제를 유지하다가 1939년 독일과 소련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었다. 이러한 국토 상실 상황하에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해방된 조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徐丙喆, “폴란드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外, 「폴란드·東獨: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89), p. 16.

년 독일이 패하면서 소련군이 進駐함과 동시에 알타 會談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이 인정됨으로써 소련은 이 지역에 親蘇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마니아인들은 루마니아 共產黨이 非루마니아的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고 戰後 親蘇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수립된 공산당 정권 역시 소련에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이유에서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단지 루마니아 內 小數民族들 중에서 공산당 간부로 충원되는 경우 이들은 코민테른의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더욱 국민들로부터 敬遠視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 진군한 소련군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1945년 3월 6일 그로자(Petru Groza)의 인민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6년 11월 선거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民族民主戰線이 승리하여 별다른 국민들의 저항없이 共產政權이 수립되었다.

東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 중의 하나인 불가리아는 1941년 독일과 동맹조약을 맺고 연합국측에 대항하여 싸웠다. 이에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민주당, 농민당, 즈베노그롭 등이 연합하여

9) 루마니아는 인구의 9割 정도가 루마니아人이고 나머지는 소수민족으로서 헝가리人, 독일人, 불가리아人, 유대人, 우크라이나人 등이 섞여 살고 있어 대내적으로 민족간의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大루마니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의 소련과 헝가리와도 갈등관계에 있었다. 영토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대다수 루마니아계 국민들은 파시스트 정권과 對蘇戰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尹德熙, “루마니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尹德熙 編, 「체코·루마니아」, pp. 119~121.

祖國戰線을 결성하여 反파시스트 항쟁을 전개하였다. 1944년 9월 8일 소련군이 불가리아에 進駐하자 共產黨 중심의 조국전선은 쿠데타를 일으켜 新聯立政府를 발족시켰다. 공산당을 주축으로 조국전선을 결성했던 각 派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참가하였으나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당은 이들 세력을 점차로 肅清하면서 권력을 독점하였다. 1946년 의회총선거에서 공산당은 총 465席 중 277席을 차지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가 首相에 취임하였다.¹⁰⁾ 디미트로프는 과거 함께 연립정부에 참여한 祖國戰線 소속의 政派들을 제거하여 1948년에는 공산당 1黨 유일체제를 확고히하였다.

東獨은 戰後 처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독일에 대한 美·英·佛·蘇 4국 통치가 결정되면서 탄생되었다.¹¹⁾ 1945년 4월 해외망명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戰後 독일 영토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에 進駐한 소련군을 따라 귀국하여 독일내 살아남아 있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독일공산당을 복구하였다. 소련점령지 내에서 1946년 4월 독일공산당은 독일사회민주당과 통합하여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을

10) 金達中, “불가리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外, 「불가리아·알바니아」, p. 28.

11) 獨逸 共產黨은 그 역사적 역할이나 조직의 방대함으로 戰前에 소련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 나찌 치하에서 나찌에 대항하여 反히틀러 對獨戰을 고취하기도 하면서 명맥을 이은 독일 공산당은 전후 소련 점령지역에서 동독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金達中, “東獨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및 政策,” 金達中 外, 「폴란드·東獨」, p. 108.

결성하였다.

1948년 3월 20일 베를린 봉쇄가 실시된 후 西獨과 東獨은 각기 다른 신통화제도를 도입하였고 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선거를 실시하였다. 1949년 5월 15~16일 소련 점령지 내에서 인민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서독의 아데나워 정부가 1949년 5월 8일 임시헌법을 가결시키고 5월 23일 獨逸聯邦을 선언하자 1949년 3월 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한 東獨의 공산당은 같은해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은 고착되고 東獨은 독자적인 국가로서 발전하였다.

2. 計劃經濟體制의 樹立

2次大戦 이후 東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직·간접적인 지원하에 공산주의 정권을 차례로 수립하였다. 이들 東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은 소련을 모델로 한 스탈린식 헌법을 채택하였고 맑스·레닌주의를 국가의 목표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체제로는 형식상의 선거를 통해 공산당 1당 유일체제를 구축하였다. 2次大戦 이전까지 대부분 농업국가였던 東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당면한 목표는 단기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완전고용, 군사력 증강, 물가안정 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고, 정채된 생산력을 동원하고 수요와 공급간에 그리고 각 산업간에 왜곡된 구조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수정함으로써 이들간의 조속한 균형을 이룩하고자 하였다.¹²⁾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련식

계획경제를 채택하여 산업화를 이룩하되 중공업발전을 위주로 한 외연적 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

2次大戦 이전부터 東유럽의 대표적인 공업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19세기에 이미 상당한 공업발전과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였다. 공산화된 이후 기존의 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체코는 1946년부터 소련의 경제개발계획을 모델로 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우선 10~15년에 해당하는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개별 산업분야계획을 수립하였다. 장기계획과 전망에 따라 상호경제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또는 COMECON)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특히 소련과 보조를 맞추어 5년을 단위로 한 성장 및 발전모형을 수립하였다.¹²⁾ 1947년부터 1949년까지 2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한 후 1949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였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공업 등 2차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므로 기계,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꾀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계획에 의해 급속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대기업, 광산,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을 국유화하고 국가계획청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국가통제체제를 확립해나갔다.

폴란드 역시 전후 소련식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제도를 도입하여

12) Ota Sik, "Socialism - Theory and Practice," in Ota Sik, ed., *Socialism Toda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pp. 2~3.

13) 李常雨,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구조와 정책," p. 61.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면서 농업집단화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는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을 시도하였다.¹⁴⁾ 즉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광물자원부존국가로서 석탄을 비롯하여 동, 은, 유황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중공업, 특히 철강공업에 중점을 두는 사회주의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1947년부터 전후 복구사업을 위하여 경제부흥 3개년계획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1차 6개년계획을 1950년에, 그리고 1956년부터는 5개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였다.

헝가리는 공산정권수립 이후 체코나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소련식 명령형 계획경제를 도입하고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헝가리의 경우 전국토의 2/3가 평원으로서 2次大戦 이전까지는 유럽의 대표적인 농업국가였다.¹⁵⁾ 따라서 농업과 목축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적지않은 편이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연적 성장정책을 채택하여 공업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47~1949년간 제1차 3개년계획을 실시한 후 1950년부터는 5개년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자생적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한 유고는 2次大戦 이전에는 주로 지주와 부르조아에게 유리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였다.¹⁶⁾ 그러나 공

14) 김황주, “폴란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김달중 외, 「폴란드·동독」, p. 70.

15) 대외경제연구원 編, 「헝가리便覽」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1992), p. 53.

산정권 수립 이후 소련을 모델로 한 中央集權的 계획경제를 도입하여 1947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유고는 2次大戰 이전까지는 농업 등 제1차 산업이 전체의 45%를 차지할 정도의 전형적인 농업국가였으나 전후 산업복구를 위해 중공업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東유럽 국가 중 가장 후진적인 농업국가 중의 하나인 루마니아는 전쟁 기간중에 황폐화된 농업 및 기간산업을 복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¹⁷⁾ 전후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엄격한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였다. 전국토의 2/3 가량이 농지인 루마니아는 소련 및 東유럽 사회주의권의 국제분업체제가 형성되면서 농업과 석유화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49년 최초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였으나 1년간의 계획에 그쳤고 195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었다.¹⁸⁾

16) 다민족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는 이밖에도 각 종교 및 제정과들의 이해가 뿌리 깊음으로 인하여 신생 유고슬라비아정부는 이러한 분권화된 체제를 효율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었다. Sharon Zukin, "Yugoslavia: Development and Persistence of the State," in Neil Harding, ed., *The State in Socialist Society*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 p. 252.

17)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omania, 1944-1965* (Berkeley, C. 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 81~82.

18)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루마니아 정치체제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 루마니아 공산당정부가 확고한 기반을 갖추

온난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갖춘 불가리아는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생산의 50%를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다.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련형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중공업 위주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코메콘 지역분업체계가 확정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면서 1947~1948년 국가경제부흥계획이 실시되고 이어 1949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알바니아 역시 전국토의 절반 이상이 경작지인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전쟁 직후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1차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이상이었다. 1944년 12월 15일자로 사기업의 국영화를 선포하였고 1945년 농지개혁을 통해 농지를 국영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알바니아 정부는 생산수단에 대한 제한없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강력한 공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²⁰⁾ 농업국가이던 알바니아가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 되는 1949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경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었는데 주로 강력한 당·국가의 계획 아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Ibid., p. 110~113.

19) 불가리아 사회주의 정권이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목표로 제시한 것은 ① 독일제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탈피; ② 국민경제의 부흥과 자급경제 건설; ③ 국민생활 향상 등인데 이를 위해 소련형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중공업우선의 공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김황주, “불가리아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김달중 外, 「불가리아·알바니아」, pp. 45~46.

20) 李常雨, “알바니아의 경제구조와 정책,” 김달중 外, 「불가리아·알

소련 및 코메콘 국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형편이었으므로 이들과의 분업체계를 염두에 두고 이후 사회주의 경제계획에 의해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록 패하였으나 우수한 인재와 막강한 공업력을 갖춘 東獨은 전쟁 직후 전독일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나 소련은 곧 소련 점령지인 東獨에서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1945년 9월 대토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박탈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1946년 6월부터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6월 독일경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48년 6월 통화개혁을 실시함으로써 東獨만의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東獨은 여타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전쟁 패전국이었던 만큼 초기 공업화과정에 불리한 여건이 있었다. 첫째, 패전국 東獨은 소련에 대해 피해보상금으로 주요 기업체 200여개를 25개의 소련 주식회사로 전환해주었다.²¹⁾ 둘째, 東獨의 경우는 전승국들에 의해 동·서독으로 양분됨으로써 戰前에 가지고 있던 공업기반이 불균형하게 분산되었다. 셋째, 東獨內 산업의 절반 이상이 과거 서독의 산업체와 긴밀한 공급체계를 형성해 왔었는데 분단으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東獨 영내의 기초산업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인 점 등이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황폐해진 東獨으로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²²⁾ 東獨의 중앙계획은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에 의

바니아」, p. 136.

21) 이상우, “동독의 경제정책,” 김달중 외, 「폴란드·동독」, p. 212.

22) 위의 논문, p. 207.

거하여 구상되나 실제 경제계획은 1949년 최초의 2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였고 독일경제위원회를 「계획성」으로 발전시켜 제1차 5개년계획을 1951년부터 실시하였다.

3.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同盟關係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후 소련의 영향력하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고 소련형 모델을 따라 中央集權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들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기 주권을 가진 개별적인 국가로서 각자의 국가건설에 독자적으로 행동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주의의 연대를 통해 사회주의권 전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소련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가 놓여 있었다.²³⁾ 東유럽 각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와 CMEA 등을 결성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교류·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였다.²⁴⁾

유고는 사회주의 정권수립 이후 서방국가들과 격렬하게 대립한

23) Ghita Ionescu,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2), p. 40.

24) 국제공산주의를 결속시키던 코민테른이 1943년 해체된 이후 소련은 당 중앙위원회 산하 국제국에서 전세계 각국의 공산당에 대한 연락 및 통제기능을 수행했으나 공개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Adam Westoby, *The Evolution of Commun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89), p. 138.

반면 사회주의 국제질서를 창출하는데 열성을 보였다. 특히 1947년 코민포름 결성시 그 사무국을 베오그라드에 설치하는 등 東유럽 공산권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가리아는 언어 면에서 슬라브족에 속하고 국민들의 친러시아적 성향으로 인하여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련과 동맹관계를 확고히하고 있다. 정권수립 후 스탈린주의를 충실히 실행하고 소련의 외교정책과 자국의 외교정책을 일치시키는 등 소련과 밀착관계를 유지하였다. 다수의 외국인을 추방하고 1950년 2월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강경노선을 추구하였으나 바르샤바조약기구와 CMEA 동맹국들과는 관계를 강화하였다.

2次大戰 기간중 동맹국측에 가담하여 대소전을 전개하였던 헝가리, 폴란드 등은 전후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외교관계의 축으로 삼아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CMEA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선린관계 및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나갔다. 1918년 1차대전 종식된 직후 체코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의회민주주의 및 다당제를 도입하여 민주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2次大戰 후 공산정권의 들어선 후 체코는 일방적인 친소, 친사회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하였다.

東獨의 대외관계의 핵심은 東獨의 대소관계와 서독과 소련과의 관계 등으로 여타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관계와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東獨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공산주의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 소련혁명을 거치면서 역사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전후 이들은 소련의 점령을 정당화하면서 소

련과 밀착된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특히 동·서독간의 분단을 소련 및 사회주의권의 동맹관계로 정당화하였다. 소련 점령시기에는 소련통제위원회(Soviet Control Commission)의 지시, 통제에 의해 외교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던 경험을 가진 東獨은 국제공산주의, 반제·반식민 유대강화 등을 통해 서독에 대한 독자성을 유지하고 노력하였다. 반면에 소련으로서도 동·서독의 분단은 소련의 東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었으므로 소련은 東獨을 東유럽 동맹체제에 묶어두는 정책을 고수하였다.²⁵⁾

II.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問題 露呈과 改革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성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련의 지원과 협조하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모두가 소련식 모델을 따라 사회주의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였다. 집단적 차원에서 東유럽 국가들은 소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나 CMEA 등을 결성하여 상호 협력과 선린관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유고와 알바니아와 같이 자생적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한 국가들과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 소련의 지배,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

25) Ibid., p. 101.

발과 저항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스탈린식 명령계획경제 체제로의 급속한 이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인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들마다 성장의 속도와 발전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일단 초기 단계의 동원체제에서는 명령식 계획체제가 성과를 보였지만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경제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명령에 의존한 체제는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1953년 3월 6일 스탈린이 사망하고 1956년 소련의 20차 전당대회 이후 스탈린격하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과 맞물려 東유럽 각국에서는 인민봉기가 발생하고 지도층은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등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첫번째 위기에 봉착하였다. 위기에 직면한 일부 東유럽 국가들은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초기의 체제를 일부 수정하거나 개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社會主義體制 變化 1期(1948~1956)

소련은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직후부터 유고에 대하여 엄격한 무역조건 및 불리한 합작회사설립안 등을 제안하는 등 발칸지역에서의 유고의 영향력을 견제하였다.²⁶⁾ 결과적으로 소련은 1948년 6

26) 전쟁 기간중에 티토는 소련이 그의 라이벌인 Chetniks를 지지하였던데 대하여 뿌리깊은 반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불가리아와의 갈등, 소련 지도부의 균열 등으로 인하여 스탈린치의 소련과 타협할 수 없었다. Westoby, *The Evolution of*

월 28일 제2차 코민포름 대회에서 우익적·민족주의적 편향을 이유로 들어 유고를 제명하였다. 코민포름에서 제명된 유고는 대외적으로 서방세계에 대하여 원조를 청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1950년 6월 기업에 노동자평의회를 설립하고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스탈린식 명령경제체제와는 다른 제도를 구축하였다.²⁷⁾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고자 티토를 중심으로한 유고의 정치지도자들은 당관료에 의한 하향식 명령경제체제를 폐기하고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설립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관료주의적 통제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분권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소유 면에서도 국가소유제에서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실질적인 정책결정기능을 자주위원회로 이관하고 각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부문별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등이 결정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²⁸⁾

유고는 1952년 11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명을 공산당에서 공산주의자동맹으로 개칭하여 유일적 지배체제에서 분권적 사회주의를

Communism, p. 142.

27) 티토의 경제개혁 결심은 소련 및 사회주의권의 압력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지부진한 국유화 및 집단화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할 필요성과 서방세계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해서였다.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47.

28) *Ibid.*, p. 67.

지향하였다. 1953년 헌법을 채택하여 노동자 자주관리제도 및 대통령제를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티토는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다만 유고의 이같은 정치, 경제, 대외관계 면에서의 개혁은 그 자체로서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적인 개혁을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연합국에 의한 분할점령으로 분단된 東獨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농업의 집단화에 대한 반발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시되면서 과도한 작업시간, 비현실적인 목표, 숙련인력의 부족 등 각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1953년 6월 동베를린과 기타 東獨內 270여 곳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없이 높은 생산성만을 요구하는 東獨 사회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다.²⁹⁾

이같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집권당인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은 소련노선을 추종하는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쟁이 가열되었다. 黨內 反올브리히트 그룹이 결성되고 한편으로 인민들의 생활

29)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오류를 시인하였으나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노동자들의 불만은 초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다가 점차 정치·사회적 개혁요구로까지 확대되었다. Carl Beck, "Patterns and Problems of Governance,"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Center for Int'l Studies, 1975), p. 129.

수준의 향상과 개인들의 권리강화를 약속하는 등 온건노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4년 4次 黨大會를 계기로 東獨 집권당은 온건노선을 폐기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스탈린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소련군의 개입으로 인민들의 봉기는 진압되고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2차대전 당시 소련과 독일에 의해 분할 점령당한바 있는 폴란드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소련의 위성국가로 예속화되는데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공산정권수립 이후 소련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점증하였다. 반면에 과격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폴란드에 조속히 이식하기 위해 강제로 농업집단화를 추진하였다. 소련측은 1949년 농업집단화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공산주의자인 고몰카를 실각시키고 스탈린주의자인 비어루트를 黨書記長에 임명하고 국가체제를 철저히 소련 위성국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그러나 스탈린이 사망하고 그에 대한 격하운동이 일어나면서 폴란드 노동자들은 과다한 작업량, 불리한 임금조건, 빈약한 생활수준 등 경제적 불만들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1956년 10월 포츠난에서 파업을 단행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항의가 증가하자 실각했던 당 지도자 고몰카가 다시 복직되었고 대신 소련의 顧問團, 군 장교, 비밀경찰의 책임자들이 폴란드에서 철수하였다. 노동자들의 단체조직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노동자평의회와 공업협회의 설립 등으로 경직된 의사결정구조에서 분권화가 시도되었는가하면 토지를 소지주에게 상환하고 개인농장의 경영을

허용하는 최초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1957년 제8차 당대회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포함한 일련의 유화정책이 당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숙청을 폐지하며 캐톨릭교회와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검열을 완화하고 서방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고물가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개혁파와 보수강경파간의 타협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헝가리와 같은 유혈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았다.³⁰⁾

폴란드와 같이 소련에 대해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는 민주화, 자유화, 생활개선 및 민족감정의 존중 등 10여개 항목에 걸친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1956년 10월 부다페스트에서 반공·반소를 외치는 민중들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헝가리 공산당은 권력을 개편하여 임레 나지(Imre Nagy)를 수상으로 선임하고 스탈린식 당노선을 대폭 수정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중공업우선정책을 변경하고 농업집단화정책을 재검토하는 한편 농산물의 강제공출을 완화하는 등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共產黨 唯一支配體制 대신에 複數政黨制를 승인하는 등 정치분야에서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련에 대해 자주, 독립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하여 중립화할 것을 선언하였다.

30) Ibid., p. 130.

이러한 헝가리의 급진적인 개혁에 대하여 소련은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하였다. 나지 首相은 처형되었으며 1956년 11월 카다르(Janos Kadar) 黨 제1서기장을 수반으로하는 親蘇政府가 다시금 수립됨으로써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1950년대 중반까지 東유럽 국가들이 소련식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명령식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강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문별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 우선 일차적인 문제였다. 특정 부문, 특히 중공업부문에의 집중적인 강공전략의 채택은 최소한도의 소비재 생산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아 物價高와 暗去來 시장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평생 생활이 보장되는 까닭에 엄청난 비효율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反蘇 民族感情이 강한 폴란드 및 헝가리 등에서는 스탈린의 死亡과 스탈린 格下運動에 고무되어 反蘇改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變化 1期 동안에는 헝가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체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中央統制’하에서의 刺戟體制를 개선하는데 더욱 많은 비중을 두었다.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채 표출된 국민들의 불만 만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에는 懷疑를 갖거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도래할 여러 가지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였다. 단편적인 개혁과 하부 정책이나 管理 개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對內改革勢力은 제

거되고 소련에 추종하는 집단들이 권력을 재장악하게 되었고 소련 식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체제가 강화될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고 생산성은 하락하였다.

2. 社會主義體制 變化 2期(1957~1979)

東유럽 일부국가에서 경제모순의 제거와 소련의 영향력 축소를 목표로 한 矯正 노력이 대부분 실패로 종결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좌절과 불만을 경제부문에서 개혁을 통해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이는 東유럽에 지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소련 내부의 동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흐루시초프 정권이 붕괴된 소련은 政治·軍事·安保 면에서 東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보존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를 위해서 소련은 東유럽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개혁의 길을 모색하던 유고는 흐루시초프의 失脚을 전후하여 1965년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본격적인 市場社會主義體制로 전환하였다.³¹⁾ 유고는 이미 1955년 산업정책의 전환과정에서 중공

31) 유고는 흐루시초프가 집권하면서 평화공존외교를 추진함에 따라 1955년 베오그라드선언을 채택하여 양국간에 주권, 독립, 영토불가침, 평등의 제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업우선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농업생산과 소비재생산에 투자의 구조와 수준을 조정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으나 1960년대 초부터 원료와 중간재의 생산이 둔화되고 생산설비도 老朽化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1965년 개혁을 통해 「勞動者自主管理」의 원칙을 더욱 적극화하는 한편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財貨서비스의 質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불균형문제를 더욱 확대·심화시켰으며 소득불균형의 심화, 국제수지의 악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율은 저하되기만 하였다.³²⁾

東獨은 1958년 7월 第5次 黨大會에서 기존의 울브리히트 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옹호하는 ‘새로운 人間’의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이데올로기적 教化를 특히 강조하였다.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새로운 투자와 노동력의 투입없이, 그리고 賃金은 고정시킨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강화 만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므로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협동농장화를 조속히 완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농촌지역에 대한 黨의 대규모 간섭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민들 사이에 받아들여져 결국 대규모 인민들의 저항만 야기시킨채 실패로 종결되었다. 더구나 東獨 주민들의 대규모 西獨으로의 인구유출은 막대한 노동

32) Aleksander Bajt, “The scope of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in Janos Matyas Kovacs and Marton Tardos, eds., *Reform and transformation in Eastern Europe: Soviet-type economics on the threshold of change* (London: Routledge, 1992), p. 223.

력의 감소로 나타나 경제계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1949년 9월부터 무려 270萬名에 달하는 동독 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함으로써 東獨經濟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東獨은 1956년부터 제2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였으나 1958년 破棄하였고 새로이 7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계획 역시 1962년 취소함으로써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東獨에 원형 그대로 移植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東獨은 體制矯正 노력이 실패함으로써 심화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人口 流出에 대응하여 1961년 8월 국경봉쇄를 결정하고 베를린 障壁을 구축하였다. 반면에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일련의 宥和政策을 추구하였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1963년 1월 18일 제6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黨 綱領을 발표하고 「국민경제의 계획과 조정에 관한 신체제」란 新經濟政策을 채택하였다. 신경제정책은 리베르만 방식을 수용하여 중앙계획경제를 완화하고 개별 경제단체나 주체에게 경제적인 자립심과 책임감을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³³⁾ 이를 위해 첫째, 전체 계획 범위 내에서는 사업체에게 세부적인 목표량을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개별단위가 수행해야 하는 할당량을 감소시켰다. 셋째, 경제과정에서 재정적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개별사업체는 이윤 만을 경제적 효율성의 척도

33) 1962년 리베르만(J. Liberman)이 「프라우다」지에 개혁안을 기고하였는데 이는 중앙에서 제시하는 지표의 수를 줄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일 것과 기존 체제의 완성을 위하여 물질적 유인의 필요성과 이익 및 이윤 등의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로 인정하게 되었다. 넷째, 경제적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격제도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東獨은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소련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증대를 이룩하였다<표 3-2-2>.

〈표 3-2-2〉 東獨의 공업총생산의 연간 성장률(1963~1971)

연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성장률(%)	4.2	6.2	5.9	6.2	6.3	5.7	6.2	5.8	5.3

출처: 이상우, “동독의 경제정책,” 金達中外, 「폴란드·東獨: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89), p. 215.

그러나 東獨이 시도한 ‘新體制’에 의한 경제개혁은 현체제하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형성이 불가능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즉 각 기업마다 최고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高價政策을 채택하는가 하면 전체 산업분야의 통합된 체계를 위한 ‘基金制’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1970년 말 노동력의 공급부족과 산업분야별 불평등한 발전 추세로 기업의 자주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부분적인 개혁을 단행한 ‘新體制’는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즉 중앙계획기구와 같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 내에서 경제정책만을 개혁하는데 그침으로써 진정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였다.³⁴⁾

34) Jerzy Osiatynski, “Opposition against market-type reforms in centrally-

헝가리는 개혁을 추진하려던 나지 政權이 붕괴되고 카다르 政權이 들어서면서 경제부문에서 부분적인 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정치, 이념 면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경제영역에서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좌절과 불만을 경제부문에서 상대적 자유화를 이룩함으로써 무마하고자 하였다. 1968년 1월 1일부터 「新經濟機構」(New Economic Mechanism: NEM)를 도입하여 경제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는 소련식 경제체제에서 생산수단의 國家所有는 종전처럼 유지하되 엄격한 의미에서 소련식 경제체제에서 이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新經濟機構」의 요체는 첫째,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물량계획을 작성하거나 이에 의거하여 생산목표의 하달 및 물자를 공급하던 체계를 철폐하는 것이다. 대신 조세, 이자율, 賃金, 환율, 및 가격정책 등 경제적 규제수단에 의해 경제계획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요·공급 등에 따라 가격에 반응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산자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투자결정도 부분적으로 분권화하였는 바, 기업은 이윤을 감가상각기금, 노동자 소득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보하는 것과 같은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 및 국립은행 대부 투자비율은 감소하고 반면 기업주도의 투자비율은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가격제도를 개혁하여 국

planned economies,” Kovacs and Tardos, eds., *Reform and transformation in Eastern Europe*, p. 248.

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던 가격을 자유가격, 제한가격, 최고가격, 고정가격으로 구분하여 고정가격만 국가가 통제, 결정하고 (소비재의 75%, 생산재의 30%) 자유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수급관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넷째, 무역권을 분권화시키고 단일환율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외경제관계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헝가리는 新經濟機構를 도입함으로써 분권화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新經濟機構를 도입한 헝가리의 경제는 소비재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이 다소 해소되고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등 경제전반이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도 기대한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였다. 所有關係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국가에 의한 賃金의 배분방식에서도 관료적 개입행태가 지속됨으로써 목표로 제시했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창출에는 실패하였다.³⁵⁾ 더구나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국제석유위기에 따라 무역적자가 증대하고 외채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헝가리 경제는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주의체제 矯正作業을 책임맡은 폴란드의 고물카 政權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개혁을 회피하고 소련을 철저히 추종함으로써

35) Tsuyoshi Hasegawa, "Connect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Gilbert Rozman et al., eds., *Dismantling Communism: Common Causes and Regional Variations* (Washington D. 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2), pp. 73~74.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였다. 더구나 폴란드의 경제사정은 빈약한 所得創出과 속출하는 失職者, 그리고 식료품의 가격인상 등이 겹쳐 악화일로를 겪게 되었다. 폴란드의 矯正作業은 1958년 오스카 랑게(Oscar Lange)가 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파들의 반발로 인하여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한때 허용하기로 하였던 노동자들의 단체조직권은 무효화되었고 개톨릭교회와의 분쟁도 다시 재개되었다.³⁶⁾ 폴란드 執權者들은 노동자들의 消費 욕구를 무시하는 강경한 工業化 정책을 재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소비생활을 포함한 국민들의 實生活 수준은 하락하고 경제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0년 12월 노동자들의 罷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고몰카는 퇴진하고 기에레크(Edward Gierek)가 黨 第1書記에 취임하였고 그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일련의 宥和政策을 추진하였다. 헝가리의 新經濟機構와 비슷하게 폴란드의 개혁정책도 경제기구의 권력분산화를 유도하고 소비재산업을 육성하여 소비재의 공급을 증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對外開放과 관련하여 西歐技術을 대폭 도입하고 外資 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의 개혁정책도 점증하는 貿易收支 赤字와 소비재 부족의 심화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공업부문에 대한

36) Paul G. Lewis,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Poland," Neil Harding, ed., *The State in Socialist Society*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217~218.

과도한 투자는 외채증가와 식량부족현상을 심화시켰고 인플레이션 악화될 뿐이었다. 1979년 국민소득이 전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이듬해인 1980년 7월 食肉 가격인상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罷業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980년 9월 기에레크가 해임되고 11월 바웬사가 주도하는 자유노조가 등장하여 급격히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정치 및 경제분야의 개혁이 시도되면서 레닌식 1당유일체제에 의한 억압정치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1년 후 카니아를 대신하여 당 제1서기에 취임하고 1981년 10월 군총사령관인 야루젤스키는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노조를 불법화하였다. 救國軍事評議會를 구성한 야루젤스키는 사실상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종전의 中央集權的 경제체제로의 復歸를 단행하였다.

루마니아는 1965년 권력을 독점했던 게오르그 데이(Gheorghiu Dej)가 사망하고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권력을 장악하여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국명을 개칭하면서 변화가 초래되었다. 1967년 대통령에 취임한 차우세스쿠 공산당 서기장은 루마니아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대소 독립노선을 표방하면서 대내적 개혁에 착수하였다. 전후 東유럽 사회주의 블럭경제가 형성될 당시 루마니아는 블럭내 산업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농업국으로 분류되어 농업과 석유화학공업에 국한된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는데 차우세스쿠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소련 및 코메콘에 반발하면서 차우세스쿠는 1967년부터 국민경

제조직을 개편하고 개별 기업에게 보다 많은 활동상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첫째, 거시적 개혁으로서 생산재와 소비재 생산부문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둘째, 미시적 개혁의 일환으로서 관계법을 개정하여 각 개별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윤이 기업경영의 우열을 가리는 주요 기준의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셋째, 중앙계획부서와 각 기업들 사이에 중간적 기구인 「산업단」(Industrial Centrals: IC)을 설치하여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개혁조치는 본격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국민경제의 관리 및 계획상의 개선」이며 이는 명령식 계획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지하면서 가격, 조세, 이자, 신용 및 기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기술합리적으로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려던 계획도 중앙계획부서의 권한이 상당부분 유지됨으로써 이윤, 가격, 賃金 등의 경제적 수단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개혁에 머물렀다. 1975년부터 차츰 분권화를 포기하고 중앙집권제로 복귀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1978년 新經濟機構(New Economic Mechanism)를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경제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루마니아는 1970년대 중반까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

로 점차 성장이 둔화되었다. 차우세스쿠의 무리한 공업화정책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외채난을 가중시켰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력한 수입억제정책과 에너지자원의 최대한 억제라는 방침만을 고수할 뿐 새로운 경제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극심한 내핍생활만을 강요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지기만 했다.

1960년대 초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한 체코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광범한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집권 공산당 내에서는 지배엘리트간의 노선투쟁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 당내 개혁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두브체크(Alexander Dubcek)가 1968년 1월 당 제1서기로 선출되었다. 두브체크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체제민주화 작업과 경제개혁정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68년 8월 21일 브레즈네프는 制限主權論을 빌미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맹군을 동원하여 체코를武力으로 침공한 후 두브체크를 失脚시키고 구스타프 후사크를 내세워 친소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체코의 '프라하의 봄'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후사크의 체코정부는 보수적인 탄압정치를 감행하여 사회 안정화를 이룩하였다. 경제부문에서도 중앙계획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연합회의 집행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중앙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賃金 및 가격형성 등을 포괄적으로 통

제하게 되었다.

강력한 중앙계획체제로 복귀한 체코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완만하지만 건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는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仰騰하는 등 교역조건이 악화됨으로써 무역 赤字가 차츰 누적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東유럽의 유고,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석유와 자원을 서방 선진국으로부터는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악화되는 경제사정을 회복해 보려는 독자적인 경제안정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였으나 헝가리의 「新經濟機構」에 의한 경제개혁 試圖 이외에는 모두 실패하였다.³⁷⁾ 특히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은 東유럽 국가들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컨대 소련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유량이 감소하고 대서방 채무불이행에 따른 외자도입이 격감하여 외채는 증가하고 무역적자는 가중되는 이중, 삼중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기술진보가 더디고 국제경쟁력이 약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시장에서 밀려나는 동시에 농업 등 1차산업이 정체되고 낙후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실업증가, 성장을하락 등 문제점은 누적되기만 했다.

20~30년에 걸친 사회주의체제의 실험 끝에 東유럽 국가들에서

37) Wlodzimierz Brus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62.

는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뚜렷이 노정되었으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이들로 하여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새로운 제도와 방법의 도입을 시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부분적인 개혁·개방에 그치거나 경제개혁 자체가 실패함으로써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사정은 1980년대 들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3. 社會主義體制 變化 3期(1980~1988)

가. 政治的 弛緩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소련은 東유럽 지역에서의 정치, 군사, 안보 등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보존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두었다. 1956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과거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반소 저항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소련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폴란드에는 고물카, 헝가리는 카다르(Janos Kadar)를 공산당 書記長으로 선출하여 친소정부를 구성, 유지하였다. 또한 체코에서 1968년 ‘프라하의 봄’ 사태에 대처하여 소련은 바르샤바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무력 개입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독자적 개혁을 추진하려던 두브체크를 실각시키고 후사크(Gustav Husak)를 당 書記長으로 임명함으로써 東유럽 최대의 공업국가인 체코를 계속하여 소련블럭에 묶어둘 수 있었다. 1953년

스탈린 체제에 불만을 폭발시킨 노동자들의 봉기를 진압한 東獨의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정권이 이후 소련 노선에 철저히 추종함으로써 소련은 東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東獨 등을 그들의 대내적 또는 대외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東유럽 국가들을 소련이 이처럼 지배적으로 구속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³⁸⁾ 전통적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東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소련을 침공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해올 때 일정기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유럽 강대국들의 소련에 대한 침공 위협은 물리적 군사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나 인권사상 등 소련 사회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거나 변화시킬 요소들이 소련 사회 내로 침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방파제로서의 역할도 때때로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東유럽 각국은 전통적으로 민족간, 인종간, 종교간 각종 갈등 및 분규 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 등은 이러한 제 갈등으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전쟁으로까지 그 위기가 증폭되곤 하였는데 이 경우 대부분 그 여파가 소련에

38)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관심, 이해에 대하여, Karen Dawisha, *Eastern Europe, Gorbachev, and Reform: The Great Challen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25~29.

직, 간접으로 미치곤 하였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東유럽을 자신의 확실한 통제하에 뒀으로써 이 지역의 전통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소련이 東유럽 국가들을 사회주의체제로 묶어두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각국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소련식 사회주의의 정통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東獨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소련과 서방세계를 연결하는 중간적 위치에서 이들 양 지역과 또는 이들 양 지역의 교류와 교역 등을 중개해왔으며 경제적으로 소련과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입장에서 사회주의 경제권을 지탱하는 등 소련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 헝가리, 東獨 등은 특히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그들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소련의 통제를 받는 블럭경제체제 내에서 일정 정도의 정책변화와 제도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지만 이들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간에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 내에서 보다 밀접한 경제적 유대를 지속해 왔다. 대외무역에서 보더라도 전체 東유럽 국가들의 무역 거래량 중에서 소련이 차지하던 비중이 1970년대 초반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1975년 이후 약 10년 이상 꾸준히 향상된 것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東유럽 국가들의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계속 증가한 것은 이들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東유럽 국가들간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신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적지 않은 희생과 댓가를 치르더라도 東유럽 국가들과의 이러한 특수 관계를 계속 존속시켜 나갈 것을 희망했다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 정치이데올로기적 단일 지배체제와 공산당의 독점권력 향유와 같은 체제경직성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련의 東유럽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개입과 통제에 의한 구조화되고 경직된 정치체제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소련을 패권국가로 한 東유럽 정치질서는 폴란드에서 自由勞組가 결성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조직적으로 체제변혁을 요구함으로써 균열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8월부터 시작된 그단스크(Gdansk)지역의 조선소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여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당과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에 국민들은 이러한 노동자운동에 대해 지지를 보임에 따라 自由勞組(Solidarity)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自由勞組는 단 시간 내에 1천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요구사항도 경제분야만이 아닌 정치적인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었다.⁴⁰⁾ 1981년 2월 군총사령관인 야루젤스키(Wojciech Jaruzelski)가 수상직에 취임하여 自由勞組 측과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야루젤스키는 1981년 10월 카니아(Stanislaw Kania)를 대신하여 黨 書記長에

39) Ibid., pp. 173~176.

40) 김달중 外, 「폴란드·동독」, pp. 28~29.

임명되고 12월에는 戒嚴令을 선포하고 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1년여에 걸친 정치적 위기를 武力으로 수습하였다.⁴¹⁾

실제로 東유럽을 포함한 전체 사회주의권에서 인민 대중들이 대규모로 정부나 국가 또는 체제에 대해 봉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민들의 집단행동이나 대규모 항쟁을 유력한 혁명투쟁의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일단 공산정권이 형성되면 이를 각종 정치적 조직화 및 조절 방법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6년의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1968년 체코, 그리고 다시 1970년 폴란드에서의 인민봉기를 제외하고는 좀체로 정부나 체제에 반하여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쫓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이들 지역에, 특히 폴란드의 경우에 반소 민족주의

41) 1980~1981년에 걸쳐 폴란드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및 인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컸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1970년대 기에레크(Edward Gierek, 1970~1980)가 당의 제도화에 실패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70년대에 걸쳐 당의 자율성과 일관성을 수립하는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파업이 발생하자 당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이는 즉각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당이 그만큼 조직화, 제도화되지 못해서 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정치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 말에서 1981년 12월 사이에 공산당원의 수가 309만명에서 277만명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중견간부들의 상당수가 이 기간 동안 숙청 또는 교체되었다. Paul G. Lewis, "Institutionalis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Poland," in Neil Harding, ed., *The State in Socialist Society*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 pp. 239~240.

감정이 강하고 개톨릭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만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결과적으로 1980~1981년에 걸친 폴란드 사태는 야루젤스키 장군이 이끄는 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비전, 이념, 사상 및 조직 등으로 국민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고 동원하는 공산당 1당 체제가 그 효용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첫번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1980년대 東유럽의 정치질서에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소련의 최고지도자로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黨 書記長의 등장이다. 소련은 1944년과 1945년 알타와 포츠담회담을 통해 東유럽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인정받은 이래 東유럽 8개국을 그의 衛星國家化하였다. 유고와 알바니아와 같이 소련의 직접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한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東유럽 국가는 모두 소련군의 進駐에 따라 공산정권을 수립한 까닭에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으며 정치적 숙청 및 스탈린식 경제개혁 등을 강제로 移植하는 등의 지도력 조작을 통해 그 영향력을 계속 강화시켜온 바 있다.⁴³⁾ 東유럽에 대하여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함으로써 야기시킨 변화의 물결은 곧 東유럽 각국에 대한 전반적인 변

42) Ken Post and Phil Wright, *Socialism and Underdevelopment* (London: Routledge, 1989), p. 181.

43) Stephen White, *Gorbachev and af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91~192.

화를 초래할 요인으로 충분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가 書記長 직책을 맡기 바로 직전인 1984년 12월 경에만 해도 고르바초프가 그의 '新思考'를 국제관계에 적용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개방(glasnost)정책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1986년 2월 소련 공산당 27차 당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부문에 있어서도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소련의 영향권하에 있는 東유럽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고르바초프가 10월혁명 70주년이 되는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은 이제까지 공산권에서 평등 및 주권 대 사회주의 대단결간에 존재하던 갈등과 대립에 대해 보다 명확히 각국의 주권의 우월성을 지지함으로써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부터 한 발 물러섬과 동시에 앞으로 東유럽 각국의 공산당은 각자 자신의 국내사정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⁴⁵⁾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이 東유럽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초기에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르바초프의 개혁의 성격이 불명확하고 그 성패 자체가 불확실하였으며 설혹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과연

44) Ibid., p. 194.

45) Judy Batt et al., "Foreign Policy Ideology," in Gerald Segal, ed., *Openness and Foreign Policy Reform in Communist States*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2), p. 199.

東유럽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東유럽의 급진적인 경제개혁과 사회·정치적 개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⁴⁷⁾

폴란드의 自由勞組의 결성으로 시작된 1980년대 東유럽의 변화는 급기야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소련의 강력한 통제와 사회주의권의 결속, 단결을 강조하여 각국의 개혁 노력이 억압되던 시대가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이제 東유럽 각국은 각자의 책임 아래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나. 經濟危機의 深化

1960년~1970년대 소련으로서는 정치, 군사 및 안보 면에서 東유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보존이 보다 중요한 관심사였으므로 경제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각국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율권을 부

46) 고르바초프의 개혁 추진이 동유럽에 미칠 영향은 동유럽체제의 장애가 자체의 변수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체제와 신알타체제와 더불어 동유럽의 지정학적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의한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개혁은 동유럽 정치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Elemer Hankiss, *East European Alterna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130~131.

47) Ibid., p. 215.

여하였다. 東獨은 1963년에 리베르만식 개혁을 일부 도입하였고 헝가리는 1968년 新經濟機構(New Economic Mechanism: NEM) 을 도입, 실시하였고 폴란드는 1970년 물가상승에 반발하여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단행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제적 宥和政策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여타 東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미 1950년대부터 소련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여 勞動者評議會를 설립하고 노동자 自主管理制度를 실시하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1970년대에는 東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시장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同 기간에 걸쳐 東유럽에서는 소련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東유럽 각국은 대부분 소련의 예를 따라 중공업 발전을 위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중·장기 경제계획을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더구나 세계경제체제와의 단절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 내의 경제협력 및 분업의 한계가 누적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東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이 점은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東獨과 체코의 경우에서는 한층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⁴⁸⁾ 이러한 문제점들이

48) 사회주의체제의 경제 운영을 세계체제와의 단절 속에서 일종의 '추격발전' 전략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쟁아스(Dieter Senghaas)는 "사회주의가 추진하는 명령경제와 전제주의는 경제·사회가 발전

심화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1980년을 전후하여 東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표 3-2-3). 특히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산업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의 성장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東유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들 개별 국가 내에서도 경제개혁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압력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2-3〉 東유럽 主要國의 年平均 실질 GDP 成長率(1966~1985)

	1966~1970	1971~1975	1976~1980	1981~1985
폴란드	6.0	9.8	1.2	-0.8
헝가리	6.8	6.3	2.8	1.3
체코	7.0	5.5	3.7	1.7
루마니아	7.7	11.4	7.0	4.4
불가리아	8.8	7.8	6.1	3.7

출처: 홍유수, 「東歐 경제개혁의 類型과 成果」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 18.

경제체제를 개혁하게 된 배경에는 이같이 후진성의 극복과 급속한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평등, 완전고용 그리고 社會福祉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기존의 명령식 계획

하면 할수록 사회적, 경제적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저하되고 인적 자원이 질식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 자원이 낭비됨으로써 사회주의 발전이란 애초부터 난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이터 쟁아스, 한상진·유팔무 譯,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1990), pp. 250~251.

경제체제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지닌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지 않고는 더이상 성장도 분배도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유고가 1950년부터 이미 이러한 경제구조적 개혁을 시작한 이래 新經濟機構를 도입한 헝가리는 1968년부터 그리고 폴란드는 1981년부터 시장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유지하되 중앙에 의한 명령식 계획경제체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정책을 도입,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가격제도를 개혁하고 私的 소유부문을 확대하며 기업자율권의 확대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와 시장기능의 일부 도입으로 국영기업들을 운영함으로써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헝가리는 1956년 인민봉기 이후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덜 억압적이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를 개방, 개혁해온 東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특히 1968년의 新經濟機構(NEM)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소위 ‘啓蒙 絶對主義’체제를 발전시켜 왔다.⁴⁹⁾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 1970년대 全般을 통해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70년대 1차, 2차 국제원유과동과 원자재시장과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이

49) 헝가리는 1968년 경제개혁을 통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점진적 폐지, 시장기구의 주요 요소 도입, 私的 활동의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David M. Kemme and Claire E. Gordon, eds., *The End of Central Planning?: Socialist Economies in Transition* (New York: the Institute for East-West Security Studies, 1990), p. 33.

를 근거로 국가가 경제에 대한 개입을 증대함으로써 개혁이 실패함에 따라 1980년 3월 헝가리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제12차 대회를 계기로 개혁의 의지를 재삼 천명하게 되었다. 이운동기, 시장원리, 경영 창의력 등의 요소들이 상당 수준 허용하는 개혁정책으로서 1968년의 개혁안과 비교할 때 그 내용 면에서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된 것이지만 그 근본 취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⁵⁰⁾ 1981년부터 시행된 개혁은 우선 계획과 시장의 병존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주로 경제관리기구 각 수준에서 관리방식과 기업형태 양면에서 이루어졌다.⁵¹⁾ 관리방식으로는 중앙경제관리기구를 재편하고 각료평의회 직속으로 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기업감독위원회 및 대규모기업의 경영평의회를 재편, 강화하였다. 즉 기구의 개편을 통해 관료주의적 병폐를 제거하고 행정적인 간섭을 축소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형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부실한 트러스트를 해체하고 일부 사업소는 독립기업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규모기업의 경영형태를

50)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관료제와 시장과의 상호관계 또는 비중에 관한 것으로서 Brus와 Laski는 이를 'Dual Dependence'라 하여 전자가 아직까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기업이 명목상으로는 자율적인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행정적 규제를 통해 시장기능에 우선하여 자원의 배분과 기타 이익의 분배를 결정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Wlodzimierz Brus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Oxford: Clarendon Press, 1991), p. 67.

51) 박춘삼,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상황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서울: 국토통일원, 1986), p. 40.

창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2년 비농업분야의 중소기업의 신규설립을 허용하고 地下經濟를 공식 허용함으로써 기업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⁵²⁾

기업에게 결정권을 이양하면서 기대했던 바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여 지배인은 임금 및 보너스의 혜택, 노동자들은 실질 소득의 향상, 그리고 기업 자체는 적립금을 높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점이었다. 즉 시장사회주의하의 기업소 운영은 가격과 비용에 반응하는 체제로서 정착되어야 그 효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각 기업소는 이러한 이윤추구동기가 미약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각 기업소가 여전히 국가의 보조금제도에 의지하고 있으며 평등의 개념하에서 조세 납부 등을 통해 이윤이 많은 기업에서 적자 기업쪽으로 많은 자금혜택을 줌으로써 소위 연성예산제도에 의해 기업은 이윤추구동기를 상당 부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⁵³⁾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개혁은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을 부분적으로 탈중앙집권화하려한데는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의미에서의 개선 수준에 머물렀고 소유제도 등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여 경제를 市場機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編, 「헝가리便覽」, p. 74.

53)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489~493.

헝가리에서 1980년대 초 시행된 일련의 개혁조치보다 진일보한 개혁조치는 기업의 自主管理制度의 확대 실시이다. 自主管理制度는 재산소유와 협동작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公的 소유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위에서 임명되기 보다는 기업 종사자들로부터 선출된다는 점과 기업 생산물을 판매하여 생산비와 세금을 공제하고 난 소득에 대하여 종사자들이 분배받는다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⁵⁴⁾ 自主管理制度는 유고에서는 이미 1950년부터 실시된 제도이지만 폴란드(1982년)와 헝가리(1985년) 등 여타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야 시행되었으며 그나마도 유고와 비교할 때 부분적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유고의 경우 티토에 의해 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가주도로 실시된 自主管理制度는 그 용어만큼 자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측면을 많이 노정시켜왔으며 이 제도가 東유럽 여타 국가들에게 개혁의 과정에서 도입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고의 自主管理制度와는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노동의욕 고취와 자발적인 참여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유고의 예에서와 같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

東유럽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경제개혁을 논할 때 가장 결정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사적 부문의 성장이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 이념이자 출발점에 대한 하나의 변화요 도전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적 부문이 형성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개혁이자 개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고의 경우는 정

54) Ibid., p. 461.

권형성 초기에 잠시 동안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 부문이 제한되었을 뿐 1950년대부터는 농업에 있어 광범한 사적부문이 형성되었다. 私的 部門은 초기에는 터밭과 소규모 가족 농업형태로부터 농업 이외의 자영업 및 유통분야 그리고 소규모의 기업경영까지 형성되는데 東유럽에서는 유고 이외에 폴란드와 헝가리가 1980년대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헝가리는 1981년에 법으로써 소규모(15명 이내 고용) 개인기업까지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개혁 정도로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 부문이 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된다고 하여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私的 企業이 그 이운동기나 실적에 있어 國有 企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점을 감안할 때 재산권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사회주의개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東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가격제도를 개혁하였다. 생산 및 판매활동을 결정짓고 종사자들의 행태를 좌우하는 가격의 결정과정과 가격에 따른 거래의 확산은 경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혼합경제체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가격이 완전 자유경쟁시장에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행정가격, 準行政價格 및 시장가격이 상호 공존하는 가운데 어느 가격이 더 많이 적용되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할 때 사회주의체제의 경제개혁은 많은 거래가 행정가격에서 보다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있다. 유고에서는 일찍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이들 가격 개혁을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자유가격에 의해 교환이 가능해졌으나 헝가리는 1985년 이후에야 이를 시행하였으며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1980년대 말까지도 행정가격이 주로 적용되었다.⁵⁵⁾ 행정가격의 광범한 적용은 생산품의 가격구조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비용(이자율, 임금, 지대 및 환율)등에 있어서도 왜곡을 낳아 엄청난 암거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東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1980년 말 개혁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가격제도의 개혁을 통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다. 東유럽 블럭體制의 變化

東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1980년대에도 계속 沈滯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는 이들 국가들의 대외경제관계의 歪曲 또는 閉鎖性에 있다. 소련은 2차대전 이후 1949년 1월 상호경제원조회의(CMEA, 또는 COMECON)를 창설하여 회원국 상호간의 資源共有와 협동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초창기 이 기구에는 소련을 비롯하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및 헝가리 등 6개국에 참여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매년 협의를 통해 상호 무역거래를 확대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여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

55) Ibid., p. 514.

상을 목표로 하였다. 東獨이 1950년에 가입하였고 알바니아는 1961년 말 이 기구에서 탈퇴하였는데 1950년대 후반부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각 회원국간의 경제계획을 조정하고 생산을 전문화, 분업화하는 체제로 발전하였다.⁵⁶⁾ 1985년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량은 이들 국가들의 전체 교역의 약 60%에 달하는데 이는 대부분 국가의 통제하에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국가들이 국제경쟁을 통해 그들의 경제구조나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할 뿐만 아니라 헝가리와 같은 역외지역과의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의 국제경화 대차대조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⁵⁷⁾ 더구나 1980년대에는 회원국간의 발전규모나 수준에서 차이가 나고 회원국 자체가 서방국가들과의 기술 및 경제발전수준에서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서방에 대한 대항기구로서의 매력과 가치를 상실하였다. 더구나 결제수단이 國際硬貨가 아닌 소련의 루블화인 까닭에 역내 거래에서 후자를 달성하더라도 이 화폐를 소련이 아닌 역내 다른 회원국이나 서방국가들과의 거래에 사용할 수가 없어 무역을 위한 생산 확대의 동기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東獨,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국가들은 점차 이들 域內 貿易을 기피하게 되었다.

56) 이 기구에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 이외에도 몽고(1962), 쿠바(1972), 베트남(1978)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Europa Publications Limited, ed.,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London: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92), p. 128.

57) Dawisha, *Eastern Europe, Gorbachev, and Reform*, pp. 178~179.

이러한 CMEA 중심의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東유럽 국가들은 서방 자본주의체제에 편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CMEA 자체가 미국의 대공산권수출금지조치와 서유럽 경제공동체 창설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까닭에 소련은 東유럽 회원국들에게 서방 자본주의 기구인 IMF나 GATT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온 실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대외부채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MF나 World Bank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IMF에는 여타 국제경제기구와는 달리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개방된 대외경제정책을 표방할 경우에만 회원국으로 가입이 허가되는 까닭에 확고한 대외경제정책의 개혁없이 소련을 비롯한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로서는 참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유고와 루마니아 등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했고 형

〈표 3-2-4〉 東유럽 國家의 國際機構 加入 現況

	I M F	GATT
폴란드	1986년	1967년
헝가리	1982년	1974년
체코	1990년	1948년
루마니아	1972년	1971년
불가리아	1990년	1986년
유고	1945년	1966년

출처: 홍유수, 「東歐 경제개혁의 類型과 成果」, p. 104.

가리나 폴란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가입하였다<표 3-2-4>.

<표 3-2-4>에서와 같이 헝가리는 1974년에 GATT의 署名國이 되었는데 폴란드나 루마니아, 유고 등이 이미 가입된 상태였고 체코는 창설멤버인 점을 고려할 때 IMF보다는 이들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이었고 東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를 개방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헝가리는 특히 GATT에 가입하여 주요 대외무역 거래처인 EC로부터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으려 했고 1981년 11월 IMF와 World Bank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신청하여 누적된 대외부채를 청산할 방법을 모색하였다.⁵⁸⁾ 이러한 일련의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을 통한 개방 노력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東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CMEA 체제를 이탈하여 세계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CMEA 회원국들간의 유대나 체제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0년대부터 東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늘어나는 對外負債와 慢性的인 貿易赤字이다<표

58) 1980년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경제정책의 개혁내용을 보면 베트남, 중국, 소련 및 헝가리만이 이러한 개방, 개혁노선을 공식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4국은 국제노동분업체제에서의 자국의 위치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방을 통한 대외경제정책의 개혁은 국내에서의 개혁이 선행됨으로써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Gerald Segal, "Foreign Economic Policy," in Segal, ed., *Openness and Foreign Policy Reform in Communist States*, pp. 57~58.

3-2-5) 및 <표 3-2-6>. 근본적인 원인은 1970년대 이들 국가들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경화지불 물자수입이 급증한데 비해 대서방 수출은 이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 3-2-5> 東유럽 各國의 外債 現況, 1971~1988

(단위: 10억 달러)

	1971	1975	1980	1982	1984	1988
불가리아	0.7	2.6	3.5	2.8	2.2	7.8
체코	0.5	1.1	4.9	4.0	3.6	6.7
동독	1.4	5.4	14.1	13.1	12.4	20.7
헝가리	1.1	3.1	9.1	7.7	8.8	19.3
폴란드	1.1	8.0	25.0	24.8	26.8	39.2
루마니아	1.2	2.9	9.4	9.8	7.1	1.9
합계	6.1	23.2	66.1	62.3	60.9	95.6

출처: Karen Dawisha, *Eastern Europe, Gorbachev, and Reform: The Great Challen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18.

<표 3-2-6> 東유럽 各國의 對西方國家 貿易赤字

(단위: 백만 달러)

	1970	1975	1980	1985	1987	1988
불가리아	-65	-844	-22	-943	-1363	-1476
체코	-133	-579	-451	67	-529	-449
동독	-293	-1014	-1642	511	464	-
헝가리	-49	-636	-668	-546	-1106	-179
폴란드	77	-2941	-842	488	168	585
루마니아	-184	-465	-56	2303	-	-
합계	-647	-6480	-3682	1880	-	-

출처: 성백남, “東歐의 대외거래,” 김달중·정갑영·성백남 공저, 「東歐의 정치·경제」(서울: 法文社, 1992), p. 297.

대외부채와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헝가리는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외경제개혁에 착수하였는데 1986년 1월부터 무역회사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오던 1개 품목, 1개 회사 원칙을 폐지하고 무역업의 경영체질 개선과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988년에는 무역업 자격 취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 시장이 협소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수출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수지가 1982년을 기점으로하여 흑자로 전환된 폴란드는 東유럽 최대의 부채국으로서 1983년부터 서방 각국의 경기회복에 맞추어 무역제도의 분권화를 시도하여 대CMEA 수출은 축소하면서 대서방 경화수출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였다. 체코의 경우도 1987년 후사크에 이어 黨 書記長에 임명된 중도 보수주의자인 야케스(Milos Jakes)가 경제분야의 개혁에 착수하여 대외경제관계법 등 경제관련 각종 법규를 개정하면서 무역성의 통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외교역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한도까지 수출입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역의 증대를 꾀하였다.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친소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던 불가리아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의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1986년부터 경제체제를 개혁하였으며 특히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국가독점체제를 타파하고 생산기업이 대외무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외무역의 확대를 기본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다만 루마니아는 1980년 중반 이후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외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하

고 있던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 정부는 개혁에 의한 수출증대보다는 수입억제와 국민들의 내핍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할 뿐이었다.⁵⁹⁾

東유럽 국가들은 대외무역의 활성화와 동시에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는 개방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 헝가리는 1982년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고 1986년 합작기업에게 자체 생산물에 대한 대외 무역 권한을 부여하였다. 외국인 합작기업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1987년 초에 합작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였으며 1988년에는 100% 외국인 소유회사를 인정하고 각종 稅制惠澤을 주기로 하였다. 폴란드 역시 외국인 투자활동에 관하여 1982년에 제정된 법을 1986년 「外國人資本參與會社法」으로 개정하여 서방측의 新技術, 관리 및 판매기법과 자본 도입의 참여폭을 확대하였다.⁶⁰⁾ 불가리아는 비록 개혁조치가 뒤늦게 시행되었으나 1989년 합작투자조건을 개선하여 100% 외국인 출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다.⁶¹⁾ 경제개방과 관련하여 東유럽 국가들 중에

59) 김황주, “루마니아의 경제구조와 정책,” 윤덕희 편, 「체코·루마니아」 p. 190.

60) 폴란드 최후의 공산당 정부인 라코프스키(Mieczyslaw Rakowski) 내각은 1988년 12월 「外國人經濟活動參與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있어 더욱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대외경제연구원 編, 「폴란드便覽」(서울: 대외경제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1992), p. 190.

61) 실제 불가리아도 여타 동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이 경제개혁에 착수하여 1980년 3월 「불가리아 법인과 외국인의 법인 또는 자연인

서 가장 폐쇄적인 알바니아는 유고,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협력국과 차례로 관계를 단절한 채, 스탈린식 계획경제체제에 자립경제를 목표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대외무역이나 외국인 투자와는 무관한 듯 보였다. 그러나 알바니아도 19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東유럽에서 최장수 지도자였던 호자(Enver Hoxha)가 사망하기 전 서방 선진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방정책 추진을 시도하였다.⁶²⁾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東유럽의 경제침체는 東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東獨의 경우는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달리 소련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방 선진국 특히 西獨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양독관계는 1970년대~1980년대 전반에 걸쳐 東獨을 통치해온 호네커(Erich Honecker) 黨 書記長이 1987년 9월 역사적인 西獨 방문을 성사시키고 양자간에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⁶³⁾ 즉 양자간에 과학기술분야의 협력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나 1989년 본격적인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조항들이 다수 있어 합작기업 진출은 미미하였다. 산업연구원 編, 「北方地域國家總覽」(서울: 산업연구원, 1991), p. 248.

62) 윤덕희, “알바니아의 역사적 형성과 정치구조,” 김달중 外, 「불가리아·알바니아」, p. 124.

63) 金達中, “東獨의 역사적 형성과 정치구조 및 정책,” 김달중 外, 「폴란드·동독」, pp. 168~169.

1986년 체결된 문화협정에 이어 10여년을 끌어온 양독간의 대화를 마무리짓고 이로써 비록 東西獨간의 분리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東獨이 西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라. 東유럽 指導者들의 交替

東유럽 사회주의체제에서 改革, 開放이 深化되던 1980년대 中盤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였다. 소련의 변화가 東유럽 국가들에게 미친 직접적 영향은 東유럽에 대한 소련의 排他的 지배권의 拋棄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CMEA 域內 국가들의 독자적 개혁에 대해 소련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默示的으로 이들 국가들의 개혁, 개방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의 對內 경제사정은 1970년대 國際原油價 및 원자재 파동과 관련하여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참전과 미국과의 치열한 군비경쟁에 따른 國力の 消耗로 말미암아 한층 악화되었다. 따라서 東유럽 형제국가들에게 제공하던 각종 경제적 혜택도 감소하지 않을 수 없어 東유럽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1970년대 국제경제의 위기는 '단절된 追擊發展戰略'을 채택한 東유럽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외부채와 무역적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內在的·構造的 矛盾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생산성을 들이킬 수 없었으며 이는 東유럽 국가들 전체의 경제를 沈滯시켰다. 유고, 헝가리,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市場社會主義로 부분적 개혁을 이루었으나 근본적인 체제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경제난이 지속되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보였다.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충실한 新興工業國家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비교할 때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실상은 더욱 암담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東유럽 국가들은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직접 참여한 1세대들이 새로운 戰後 世代로 교체되면서 혁명적 열기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및 정당성에 대한 懷疑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당성에 대한, 체제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은 지식인들 사이에 더욱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부강한 인접 서유럽 제국과 미국,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발전상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화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뢰 감퇴는 관료들 비롯한 지도층에도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에 東유럽 각국의 최고지도자들의 빈번한 교체는 지도력의 공백현상을 초래하여 체제변화를 가속화하였다. 東유럽의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보면 보수적이고 개혁에 대해 저항하던 알바니아의 호자가 41년간 통치끝에 1985년에 사망했고, 체코의 후사크가 1987년 18년간의 통치를 마감했다. 폴란드의 기에레크와 카니아 모두 1980년, 1981년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유

고는 정치체제의 특성상 黨書記長이 1980년대 每年 交替되었다. 소련의 경우 브레즈네프의 오랜 통치가 마감되면서 안드로포프(1982~1984), 체르넨코(1984~1985), 고르바초프(1985~1991) 등으로 이어지는 빈번한 지도층의 교체가 있었다. 이러한 지도층의 교체는 체제의 개혁, 개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⁶⁴⁾

1980년대 東유럽 국가들의 발전과 위기를 살펴볼 때 개혁은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두로 시작되어 여타의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진행 범위와 수준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및 기타 제반 특성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각국의 개혁, 개방 사례는 각국마다 동일하지 않다. 특히 東유럽 사회주의체제의 핵인 소련의 변화는 이 지역의 변화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이 역시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영향은 각각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 시장사회주의를 대부분 도입, 실시한 東유럽 국가들은 멈출수 없는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되고 이는

64) 改革·開放이 미진한 국가를 보면 최고지도자가 長期 집권한 경우인 점으로 볼 때 이들이 체제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불가리아의 지브코프(Todor Zhivkov, 1954~1989)는 35년 집권하였고, 동독의 호네커(1971~1989)는 18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24년(1965~1989)간 각각 통치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최고지도자와 개혁과정에 관해서는, Alfred G. Meyer, "Communism and Leadership,"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 no. 3 (Autumn 1983); Hanson Leung C. K., "The Role of Leadership in Adaptation to Change: Lessons of Economic Reforms in the USSR and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II, no. 4 (Winter 1985).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곧이어,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수반하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⁶⁵⁾

Ⅲ.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體制轉換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體制改革期를 거치면서 체제내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인민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특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解消하기 위한 노력이 과거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단절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발전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다. 일부 東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에서 보여지듯이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전략이 보다 성공적인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한 動員式 外延的 성장정책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內包的 발전정책으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함이 판

65) Kornai는 이러한 改革의 完全性에 대하여 重疊되어 나타나는 모순들로 설명하면서 市場經濟體制로의 개혁이란 일단 시작하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진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주의체제 내의 개혁이란 결국 不可能하며 근본적인 혁명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 361.

명됨으로써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개혁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단지 체제의 변혁, 혁명적 변화만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맑스·레닌主義를 公式 이데올로기로 하여 공산당 1당체제를 유일한 정권형태로 수립한 東유럽 국가들은 1980년 말까지 이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따라 사회주의권의 개혁이 진행되고 유럽에서의 새로운 안보체제의 수립, 그리고 美·蘇間의 新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脱冷戰의 분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아시아, 南美 등에 광범하게 확산된 권위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붕괴되고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필연적인 결과인지에 대한 최종 답변은 아직 이르지만 국제관계에 있어 최소한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⁶⁶⁾ 이와 같은 신국제질서의 형성과 주변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가들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東유럽 인민들에게 점차 광범하게 유포되면서 東유럽이 고수하던 당이 지배하는 관료적 전제주의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혁의 여론이 확산되었다.

66) 서진영 編,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p. 24.

1. 東유럽 體制危機의 深化

소련의 영향하에 계획경제체제와 공산당 1黨 지배체제를 유지하던 東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經濟沈滯, 소련 영향력의 減少, 그리고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던 正統性의 根幹과 실제 행태와의 엄청난 괴리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 확산 등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하였다.

1980년대 말 東유럽 국가들의 경제사정은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外債가 누적되는가 하면 사회주의 경제권의 退潮로 인하여 각국의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경제를 회생시키고,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하여 新經濟機構를 도입하여 시장자본주의로 부분적인 전환을 시도한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유고, 헝가리, 폴란드 등은 소련의 地政學的인 構圖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인 발전 보다는 自國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돌리면서 정치적 이념적 통제를 緩和하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所有關係를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방 및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수록 관료제, 중앙계획의 不合理性, 규제가격제도의 모순 및 문제점들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념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는 더이상의 경제개혁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제개혁시도의 실패가 1989년 구체제의 급격한 몰락을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체제 자체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남으로써 집권당, 집권세력에 대한 인민과 엘리트 모두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되고 이러한 불만이 확산됨으로써

정치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경제개혁 보다는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강화하고자 했던 국가들, 불가리아, 체코, 東獨, 알바니아 등은 소련을 중심으로한 東유럽 진영에 존속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주변의 폴란드, 헝가리가 이념성을 포기하고 정치 개혁에 합의하여 정치적 다원화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민중 시위에 접할 때까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구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단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분출, 조직화되면서 이들로부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최대의 지원세력인 소련이 스스로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대외정책에서 실현에 옮김에 따라 이들 소련에 종속된 국가들은 급격히 체제 몰락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東유럽 국가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이념적 정치적 통제 수단을 주로 사용하였다.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체제는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조직적 저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낙후성이 곧바로 인민들의 집단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첫째,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엘리트 및 인민들의 묵시적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비록 반체제 엘리트에 의한 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배 엘리트들이 국가 통치수단을 동원하여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9년 초 체코의 대표적 반체제 지식인인 하벨을

비롯한 다수의 지식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체제 전반적인 동요나 조직적 인민봉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강제적 수단을 통한 통제기제가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 저항 엘리트들은 체제를 비판하고 체제 개혁을 위해 조직화를 시도하더라도 일반 인민들은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전반적인 東유럽 인민들은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만 이를 조직화, 행동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폴란드나 헝가리에서와 같이 위로부터의 타협에 의한 점진적인 정치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1989년 중반 이후 東獨,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급속한 체제 개혁 과정은 이러한 인민들의 사적 욕구, 주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주변의 상황 변화와 상승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까지 억제되었던 체제변혁의 요구가 공개화, 조직화되었던 것이다. 인민들로부터 체제 변화 요구가 제기되자 단 시간 내에 사회 전체로 확산이 되고 또한 이제까지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던 공산당 정권이 허약하게 붕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수의 東유럽 국가들에서 인민봉기가 혁명적으로 진전되었던 상황들을 볼 때 주변의 상황이 혁명의 분기점을 인위적으로 낮추었을 때 평소에는 힘이 없는 인민들이 그 잠재적 역량을 결집시켜 엄청난 동원 효과를 창출해내고 반면에 평소에 그토록 강력하게 통제를 가하던 억압 정권이 주변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그 체제유지 역량이 급속히 쇠락해졌음을 알 수 있다.

東유럽 국가들이 혁명적으로 체제 전환을 꾀지 않으면 안되었던 또다른 이유는 지배엘리트들이 체제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유고나 알바니아와 같이 자생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소련에 의한 강제 이식형 공산주의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단 체제가 확립이 된 이후 지배엘리트들은 인민들의 직접적인 동의나 정통성의 부여 없이 단지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의 달성만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가 강화되었다. 다만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과 경제적 성과, 경제 성장 및 정의로운 분배 등을 그들이 체제를 결속하고 통치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침체된 경제상황과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의 新思考 外交가 진행되면서 이들 東유럽 공산당 정권의 지배엘리트들이 스스로 정통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오로지 사회주의 동맹결속이라는 명목만으로써는 더이상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체제개혁의 요구가 점점하자 이에 대처하는 물리적 수단 이외에는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던 이들 각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소련의 지원 없는 물리적 수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으므로 루마니아와 같이 내전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스스로 체제 개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2. 對抗勢力의 成長

東유럽 국가들의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각국별로 체제에 대한 對抗勢力이 꾸준히 성장하여 체제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산주의체제는 맑스·레닌주의에 의해 이념적으로 지도되고 공산당의 유일적 영도하에 수직적으로 획일화된 사회구조를 유지함으로써 市民社會는 성장할 수 없었다. 과거 東유럽에 소련에 의해 공산체제가 이식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 형성되었던 市民社會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철저히 분쇄되었다. 그러나 東유럽 공산주의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체제의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체제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서서히 市民社會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⁶⁷⁾

東유럽에서 사회주의의 성장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할 때 첫째 단계는 黨-國家에 대항하여 私的 단체나 세력이 자율권을 확보하는 단계, 둘째, 이러한 단체나 세력들이 公的 영역에서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 셋째, 기존의 黨-國家의 정통성에 도전하여 정치화되기 시작한 사회에 대한 통치권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계, 넷째, 사회세력들의 자율권을 입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선거

67) 東유럽, 특히 中部유럽에서의 市民社會의 성장은 소련에서의 시민 사회의 성장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Marcia A. Weigle and Jim Butterfield,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The Logic of Emergence,"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1 (October 1992).

를 통해 市民社會과 국가가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련을 비롯한 東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당의 절대적 지배, 지배 이념을 중심으로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기관의 독점적 지배, 사회에 대한 완벽한 통제 등 국가가 사회에 대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전체주의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익단체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자율권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 市民社會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집단의 존재를 필수적인 요인으로 간주할 때 이들 자율적인 단체의 형성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므로 주로 지하 단체의 결성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혁명적인 민중봉기 등의 형태로 市民社會의 형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보다 자율적인 결사체로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그들의 개인적, 집단적 또는 국가적 이해를 결집시키고 이를 토대로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그 이해를 표출하는 것은 1970년대 1980년대 기간에 걸쳐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때 중부 유럽에서의 독립적인 市民社會의 형성 및 발전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市民社會 세력은 국가의 정통성 및 권위는 인정하되 그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입장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 일당지배체제의 국

가는 전반적인 정치, 경제 영역에서 통치권을 유지하는 반면에 독립적인 시민단체는 私的이고 지역적인 이해를 表出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간의 균형은 사회세력이 대안의 통치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市民社會가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을 키워감에 비추어 여전히 一黨體制를 고수하는 국가는 그 위치가 날로 위협시되면서 체제변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市民社會의 개념을 국가와 대립, 대비되는 독립적인 사회단체의 조직체 또는 연결망으로써 국가 영역 안에서 활동하지만 국가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⁶⁸⁾ 이러한 脈絡에서 본다면 東유럽의 저항적 市民社會의 발달은 정권이 가치의 창출과 전파에 실패한 결과였다. 즉 외부로부터 이식된 사회주의의 이념과 이를 기초로 한 정권은 실제 폴란드를 비롯한 中部 유럽국가·사회의 인민들을 완전히 교화시키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그 모순을 노정시켜왔다. 즉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市民社會의 내재적 가치로서 승화시키지 못했다. 이들의 공식이데올로기로서 각국의 市民社會에서 내재화시키지 못한 가치로서 국제공산주의체제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그들의 체제만에 의한 체제형성, 발전이라는 이상은 실제 각국이 사회주의 동

68) Janian Frentzel-Zagorska, "Patterns of transition from a one-party state to democracy in Poland and Hungary,"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s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Sydney, Australia: Allen & Unwin Pty Ltd., 1992), p. 41.

맹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交易 및 交流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괴리현상을 노출시켰고 이는 각 市民社會 자체의 새로운 가치·이념의 형성을 주도하였다. 산업화,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집단, 관리자, 지식인 및 노동자들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제 형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黨-國家와 社會間의 괴리는 불만과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參與를 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주창자로서의 정권의 正當性이 훼손되고 私的 이해와 公的 가치간의 괴리가 점차 증대하면서 黨의 독점적 권한(가치, 문화 및 조직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힘)에 대한 도전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폴란드에는 일찍부터 教會, 地下市民團體 및 강력한 노동조합 등이 사회세력으로 존재하면서 국가의 일방적, 독점적 지위에 대해 도전하였다. 물론 국가 역시 이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또한 1970년대 말 위기에 봉착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해 더욱 많은 자율권을 허용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여갔다. 1956년과 1968년 독자적인 사회운동의 결과 소련의 개입으로 인한 댓가를 치러야했던 헝가리와 체코는 각기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내면의 가치와 공식이데올로기의 불일치·국가의 공식 가치를 內面化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율적 市民社會를 보호하였다. 東獨의 경우 역시 국가의 공식 이념을 內面化하기를 거부하면서 平行社會·代案의 사회를 창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市民社會의 독립성을 강화시켰다.

東유럽에서 가장 먼저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지닌

채 등장한 市民社會를 우리는 폴란드의 ‘自由勞組’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폴란드의 自由勞組는 8백만명 이상이 가입한 엄청난 규모의 노동조합으로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폴란드 정부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점차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自由勞組 측이 공산당 정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요구사항이나 요구절차 등을 살펴보면 공산당 집권체제 자체에 대한 否定보다는 공산당의 정치, 경제적 위상 및 現存 사회주의체제는 인정하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권리, 그리고 집단적 의미로서의 自由勞組의 활동을 용인받으려는 타협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自由勞組 스스로 東유럽체제가 유지되는데 있어서 소련의 실체와 존재가치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산당 정권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戒嚴令이 선포되고 自由勞組가 불법화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본 입장과 자세는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헝가리의 市民社會는 폴란드의 自由勞組와 같은 강력한 市民社會 단체가 존재하지 못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 단지 정부에 대하여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자치단체의 자율성을 提高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1987년에 와서야 주로 지식인들로 구성된 市民社會 단체들은 국가에 대하여, 黨-國家體制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헝가리 시민들은 1956년의 人民蜂起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행동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가와의 초보적인 권력 분占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소규모 시민단체들이 1988년 말 경에는 무려 50여개로 증가하면서 그들의 집약된 의사를 보다 조직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⁶⁹⁾

헝가리의 시민단체들이 집권 공산당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폴란드의 경우와 흡사하다. 대표적인 ‘缺乏의 經濟’⁷⁰⁾로 알려진 헝가리의 경제상황은 1988년경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라는 二重苦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개혁을 통해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화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시민

69) 헝가리의 시민단체의 수가 1988년을 고비로 급격히 증가함에도 일부 단체는 수천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수십명 내외의 회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의 부다페스트에 근거지를 둔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었다. Laszlo Bruszt and David Stark, “Remaking the Political Field in Hungary: From the Politics of Confrontation to the Politics of Competition,” in Ivo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23.

70) ‘缺乏의 經濟’(Economics of Shortage)는 Kornai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定義한 것인데 그 典型的인 경우를 헝가리에서 찾을 수 있다. Post and Wright, *Socialism and Underdevelopment*, Chapter 3.

단체는 구성원이 각각 1만명과 1500명 정도인 ‘民主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 MDF)과 ‘自由民主主義同盟’(Alliance of Free Democrats: SzDSz)이었다.⁷¹⁾ 160명의 민중작가들을 중심으로한 온건 지식인이 주축이 되어 1987년 결성된 民主포럼은 헝가리 공산당내 진보주의자들과도 교류하면서 1989년 중반에 정당으로 재편된 기구이다. 반면에 1970년대 반체제 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자유민주주의동맹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과거 ‘自由 네트워크’(the Network of Free Initiatives)의 後身으로서 정치적 개혁을 주창하는 젊은 법학도들이 결성한 ‘青年民主主義者 聯邦’(Federation of Young Democrats: FIDESZ)과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집권당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⁷²⁾ 이들 이외에 1988년 말까지 과학과 문화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독립노동조합연맹이 조직화되었다. 이밖에 1948년 이전에 있었던 정당들을 계승하여 ‘獨立小地主黨’, ‘헝가리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등도 속속 再創黨되어 市民社會의 일원을 형성해 나갔다. 헝가리에 등장한 이처럼 많은 수의 시민단체들은 그들을 총괄할 수 있는 하나

71) Bruszt and Stark, “Remaking the Political Field in Hungary,” pp. 30~31.

72) 헝가리 반체제 지식인들의 저항운동은 체코의 77현장 그룹결성에 자극받아 이후 유인물을 통해 저항하는 사미즈다트(Samizdat), ‘날아다니는 대학’(Flying College) 이라고 이름지어진 토론회들을 개최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성진, “헝가리 체제전환에 있어서 재야민주세력의 역할,” (1993년도 韓國政治學會 月例發表會 論文), pp. 9~10.

의 母集團으로서 ‘反體制圓卓會議’(Opposition Round Table: EKA)를 결성하여 1989년 6월부터 집권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東獨의 경우는 東西獨으로 분리된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東獨 사회주의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단 직후 그리고 사회주의체제가 공고화되던 1950년대에 西獨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1960년대 초 베를린장벽이 구축되었을때 역시 東獨體制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東獨人들은 체제에 대한 저항보다는 西獨으로의 탈주를 선택하였다.⁷³⁾ 물론 東獨에서는 불법으로 국외로 탈출하려는 사람에게 5년에서 8년의 懲役に 처하고 보다 극단적인 처벌도 불사하고 있었으나 東獨人의 서방으로의 탈출은 그치지 않았다. 반면에 東獨 정부로서도 체제에 저항하는 반체제인사들을 서방으로의 추방, 또는 人間去來를 통해 돈을 받고 서방으로 방출해왔다. 1963년이후 이러한 추방을 통해 西方으로 넘겨진 東獨人은 2만 5천명에 달하고 그 비용도 10억 도이취마르크에 이르고 있다.⁷⁴⁾ 1984년 체결된 東西獨 협약에 의해 보다 많은 東獨人들이 西獨을 방문

73) 東西獨이 분리된 직후부터 1949년 동독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약 1백만명, 그리고 1961년 베를린장벽이 구축될 때까지 약 2백 7십만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베를린장벽이 구축된 이후 1984년까지 약 25만명이 합법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했으며 또 다른 17만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투옥되거나 처형될 위험을 무릅쓰고 서독으로 탈출하였다(177명이 살해되고 1만 7천명 이상이 체포, 투옥되었다). Norman M. Naimark,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 77.

74) Ibid., p. 79.

할 수 있게 되었고 西獨으로의 합법적 移民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계속 증가하여 1989년까지 약 460만의 東獨인들이 西獨으로 이주하였다.

국가의 통제와 정치적 압력에 대항하여 西獨으로의 이주를 택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東獨 내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80년대 루터교회 주위에 모여들었다.⁷⁵⁾ 1989년 東유럽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때 역시 東獨의 많은 젊은이,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변의 헝가리나 폴란드에서와 같이 체제개혁을 주장하기 보다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대규모로 西獨으로의 이탈, 탈주를 택하는 상황에서 지식인, 文化人士, 환경보호운동가 및 평화그룹활동가, 여성운동가, 교회종사자들은 9월 10일 '뉴포럼'(New Forum)을 결성하여 東獨에 잔류해야하는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며 체제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뉴포럼 결성과 동시에 '民主主義 實現'(Democracy Now)과 '左翼聯合'(United Left) 등도 대규모 민족탈출 현상에 직면하여 東獨의 現存 社會主義 노선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제기하였다.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와 教會는 東獨 전역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시위를 주도하였으나 계속되는 東獨인들의 西獨으로의 탈출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교회와 지식인을 중

75) 東獨의 주민 감시기구는 나찌 정부하의 블럭감독체제와 일치하는 엄격한 것이었으며 주민들을 감시하는 國家安全部 및 기타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만 253,000명에 이르렀다. 에르빈 카 쇼이히·우테 쇼이히, 김종영 譯, 「獨逸 통일 배경」(서울: 종로서적, 1992), p. 262.

심으로한 자율적인 시민단체들의 결성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國外移住 대열은 집권층으로 하여금 시급히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점진적이거나 改革을 추진해온 경우라면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正常化 단계를 거쳐 공산당 유일체제를 유지해왔다. 체코슬로바키아에는 1977년 헬싱키 협정의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결성된 지식인들의 모임인 ‘77현장 그룹’이나 ‘부당하게 박해받는 이를 辯護하기 위한 모임’(Committee for the Defense of the Unjustly Persecuted: VONs)이 있으나 워낙 소규모여서 대중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1987년 최초의 정치적 목적을 띤 ‘民主化 推進黨’(Democratic Initiative: DI)가 결성되어 정치적 자유화 및 개혁을 위한 대화를 정부에 대하여 요구함으로써 反體制 인사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하였다.⁷⁶⁾

체코의 市民社會가 본격적으로 對抗勢力化한 것은 프라하에서 대규모 학생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1989년 11월 중순이었다. 11월 19일 프라하의 한 劇場에서 反體制 作家인 하벨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市民포럼’(Civic Forum: CF)을 결성하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도 작가와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反暴力 民衆’(Public against Violence: PAV)을 조직하여 함께 시민들의 反政府 鬪기를 선도하였다. 물론 체코슬로바

76) Tony R. Judt, “Metamorphosis: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Czechoslovakia,” in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 97.

키아에서는 11월의 大革命이 일어나기 전에 공산당 이외의 정당인 사회당, 인민당, 슬로바키아 민주당, 슬로바키아 자유당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공산당의 友黨으로서 소위 國民戰線에 속해 있어 정부에 대한 사회비판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市民포럼’과 ‘反暴力민중’의 주도하에 11월 27일 전국적인 파업을 극적으로 성공시킨 체코의 市民社會 세력은 불과 1주일 사이에 급속히 그 세력을 확장하고 결속함으로써 공산당 유일체제를 대체할 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발칸地域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는 철저한 통제와 대외 고립화정책의 추진으로 市民社會가 성장하지 못하였다.⁷⁷⁾ 그러나 1989년 주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에 관한 소식은 전파를 통해 그리고 방문자들을 통해 이곳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며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표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적인 고립국가의 하나인 불가리아는 지브코프의 家父長的 통치와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에 대한 黨의 통제 및 우월적 입장으로 인하여 지식인들을 비롯한 市民社會가 성장하지 못하였다.⁷⁸⁾ 따라서 체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77)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自國民과 외국인들간의 모든 접촉을 금하는 布告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인민들을 탄압, 체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루마니아를 더욱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 엘리 아벨, 이근달 譯, 「동구의 붕괴」 (서울: 국제언론문화사, 1991), p. 163.

78) 불가리아의 시민사회는 1989년 11월 10일 쿠데타 이후에야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각종 政黨, 協會, 聯盟 등이 속속 설립되어

반응하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체제개혁을 요구하거나 체제에 저항하는 등의 樣態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종교계도 체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서 조용히 종교적 문제에만 국한된 활동을 함으로써 市民社會의 세력화 또는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각국의 市民社會의 형성이나 그 영향력을 각국간의 算術的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각국의 통제상황을 비롯한 각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면 극소수의 저항 움직임도 때로는 엄청난 의미와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 불가리아의 젤류 젤러프(Zhelyu Zhelev) 같은 反體制 지식인은 1988년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극히 소규모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결국 그는 불가리아의 民主化가 달성된 후 대통령으로서 체제전환의 主役이 되었음을 볼 때 이들 시민단체 운동은 조직화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결코 過小評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對抗勢力으로서 1988년 11월 터기系 소수민족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보호와 複數政黨制의 실현을 위해 ‘人權擁護를 위한 民主聯盟’(Democratic League for Defence of Human Rights)을 결성하였다.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터기系의 소수민족에 대한 지브코프의 강압적인 同化政策은 이들간의 갈등과 대결만을 조장

정치화하였다. Maria N. Todorova, "Improbable Maverick or Typical conformist? Seven Thoughts on the New Bulgaria," in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 164.

함으로써 1989년 초 東部地域에서 이들은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⁷⁹⁾

1989년 중반 이후 30만명 이상의 불가리아인들이 대거 國外로 탈주함으로써 정국을 긴장과 위기로 몰아갔으며 1989년 10월 이후 인권운동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多元化와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11월 3일 소피아에는 이제까지의 경우에서 보아 가장 큰 규모인 1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반체제 시위를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체된 불가리아에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발칸지역의 국가로서 루마니아에서도 국제적 고립화와 차우세스쿠의 철저한 탄압통치로 인하여 정권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차우세스쿠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정치세력, 집단, 인물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회를 철저히 原子化하여 분할 통치하였다.⁸⁰⁾ 이렇게 특별한 對抗勢力이 존재하지 않던 루마니아에서 헝가리 소수민족 거주지인 티미소아라의 라자로 퇴케스 목사가 당국에 의해 전격적으로 체포됨으로써 1989년 12월 16일 민중봉기가 촉발되었다. 봉기는 더욱 확산되어 나아가면서 지배층의 분열을 자극하였다. 돌발적인 민중봉기는 그동안의 침체된 경제, 국제상황변화, 주변국의 변혁과정에 관한 정보의 유입 등의

79) 최동희 編, 「유럽의 政治經濟와 韓半島」 (서울: 나남, 1991), p. 47.

80) Katherine Verdery and Gail Kligman, "Romania after Ceausescu: Post-Communist Communism?," in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 118.

요인들이 합쳐져서 12월 21일부터는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대규모 민중봉기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알바니아에서 改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 초 대표적인 과학자, 기술자, 작가 언론인 등 지식인들이 대통령 겸 노동당 第1書記인 알리아(Ramiz Alia)에게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알바니아 정부는 철저한 孤立政策을 추진해옴으로써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에 관계없이 사회주의를 固守하고자 하였으나 루마니아사태와 유고슬라비아내 알바니아 소수민족 지역의 개혁 움직임은 알바니아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5천명에 이르는 알바니아인들이 首都인 티라나의 외국 대사관등에 망명을 요청하면서 국가와 市民社會間的 균열이 가시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 1당체제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 및 청년노동자들의 시위가 더욱 거세게 확산되면서 市民社會의 대정부 규탄 강도는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들만을 다루되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점차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정당을 폐지하는 쪽으로 상황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더욱 정치적인 요구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市民社會의 성장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점차 정치화되자 각국 정부는 이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입법 및 규제활동을 전개하거나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구체제를 유지하려고 하

였다. 이러한 체제변화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지배세력 내부의 균열로 나타났다. 폴란드의 경우 黨官僚의 대거 이탈과 공산당 내부에서 強硬派들과의 노선갈등 결과 진보개혁파들의 결속이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경우 自由勞組, 헝가리의 경우 수개의 개혁집단, 그리고 체코에서는 다수 군중이 참여하는 대중시위 등의 형태로 정권기관에 도전세력이 구체화되면서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결국 중부유럽 3국에 있어 市民社會 단체들이 밑으로부터 형성되어 공산당이 독점하던 국가기구에 대해 도전하는 형상을 취하였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공산당 정권의 국가권력 독점권을 인정하는 소극적 또는 공존적 자세를 견지하였으나 이같은 균형이 결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었으며 소련의 개혁과 不干渉 원칙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 이제 이들 사회단체세력들은 쇠퇴한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적극화 해나갔다. 이들 市民社會가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 사회의 시민들이 보여준 民族主義의 열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지도자 및 기존 간부들은 市民社會의 정책참여 요구에 대해 가능한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체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이들 市民社會의 개혁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들 市民社會 세력의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에 점차 굴복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市民社會와 국가의 경계선은 점차 희미해지고 정국은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결과적으로 지배정당의 권위를 부정하는

급진적 요구를 표출시키면서 독립적인 市民社會와 일당지배체제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인식시켰다. 점차 市民社會의 정치권 진입을 표면화하고 정권에의 참여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율권 요구와 민족주의 실현욕구가 一黨支配體制의 근본 구성가치를 송두리채 흔들어 놓고 변화를 촉구하였다. 물론 이러한 가치체제의 변화는 근대화 및 산업화의 결과 都市化, 高等教育化,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사회구성의 변화도 적지않은 작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 집권세력이 이제 더이상 이들의 증대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단순한 응답으로서 체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이들 요구가 수용되기까지는 집권지도층의 전략, 의지, 선택이 작용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요구하는 市民社會 세력의 활동영역을 어느 정도 확대시켜준 정치지도자들의 전략이나 소련의 對內的 정치상황의 변화 및 對外 不干涉政策의 결과 市民社會의 급속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기회를 市民社會 단체의 지도자들은 포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활성화된 市民社會 團體들의 노력의 결과 공산정권은 붕괴하게 된 것이다.

3. 東유럽 社會主義體制의 崩壞

東유럽의 大變革, 또는 급진적인 변화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新 思考外交와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 및 폴란드의 自由勞組 운동과

같이 밑으로부터의 개혁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왔음에 기인하였음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혁의 진행 범위와 수준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및 기타 제반 특성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각국의 개혁, 개방 사례는 각국마다 동일하지 않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공산주의의 실험이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탄압, 그리고 만연된 부패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남에 따라 東유럽 각국은 정치적 多元化로 대표되는 民主主義와 시장 자본주의를 보다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진행되었다.

社會主義 이념에 의한 正統性 確保에 실패한 중부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정치경제적 성과 또는 업적에 의해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였다. 헝가리의 카다르 정권, 체코의 후사크 정권, 및 폴란드의 기에레크 정권 등이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펼친 정책들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권은 시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生必品生産 및 社會保障을 약속하였고 노동자들의 賃金 인상도 약속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국은 정치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일시적이거나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緊縮財政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긴축은 결국 그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제한적인 자유화는 그 자체 한계를 노출하게 되면서 唯一政黨體制의 모순만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결국 각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권의 정통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면서, 市民社會의 압력에 의

해서건 스스로 개혁지향적인 정권에 의해 주도되어서건, 市民社會 세력의 독립적인 公的 활동을 허용하게 되고 市民社會의 영역은 확대되었다. 즉 경제 및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고 市民社會와의 긴장 갈등관계를 축소하기 위해 市民社會의 성장을 허용하였다. 결국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가치 실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으며 市民社會의 發展期를 맞게 된 것이다. 東유럽 각국의 개혁은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두로 여타 국가로 확산되었다.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동안 점진적인 변화, 특히 경제적 효율성 提高를 위한 中央集權的 계획경제를 서서히 완화시켜오던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전반적인 통제체제의 완화와 함께 市民社會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1980년부터 自由勞組의 활동으로 강력한 市民社會를 형성한 폴란드에서는 1989년 2월 政府와 自由勞組 측이 정치 및 경제 개혁에 관한 토의를 시작함으로써 체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自由勞組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던 정부는 自由勞組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면 自由勞組를 復權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노조를 협상의 相對役으로 인정하였다.⁸¹⁾ 구체적으로 政府, 自由勞組

81) 폴란드 정부는 자유노조의 등장이 폴란드의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볼 때 국가의 약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역사적으로 폴란드인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곧 독일 또는 러시아 등 주변의 강대국이 이용할 수 있는 분열,

및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여 57인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분점하며 당면한 경제난국, 막대한 외채 및 소비재의 품귀 현상 등을 논의하는 소위 圓卓會議을 정식으로 개최하였다. 권력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해결책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自由勞組 지도자 바웬사와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안정이 필수적이며 관련된 모든 政派 및 집단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부 사이에 10여 週에 걸친 회의 끝에 양측은 잠정적으로 自由勞組가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대신 공산당 정부로서는 정권 수립 이후 최초로 실질적인 반대세력의 의회진출을 허용기로 결정하였다.⁸²⁾ 집권 공산당이 이러한 타협안에 합의한 배경에는 비록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野黨인 自由勞組의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제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공산당의 집권에는 변함이 없으리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같이 일찍부터 改革·開放을 추진해온 헝가리의 경우 東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반면에 정치적인 면에서는 경제에서의 개혁을 따라

무정부상태로 전환할 소지가 있으므로 야루젤스키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은 역사적 當爲이며 合法的이란 주장을 펼쳤다.

82) 4월 5일 폴란드 정부와 자유노조가 포괄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첫째, 자유노조의 합법화와 기타 농민조합, 농촌노조(Rural Solidarity), 독립학생연합 등의 합법화, 둘째, 6월에 실시 예정인 선거시 하원 전체의석 460석 중에서 35%를 자유노조가, 공산당이 38%, 그리고 여타 정당(주로 공산당의 자매당)이 나머지 의석을 분점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지 못하고 서서히 형성되고 있던 市民社會 단체들의 集會와 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말 눈에 띄게 침체되고 있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黨內外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黨內 세력들간의 개혁의 속도와 개혁의 범위를 놓고 路線 갈등을 서서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1988년 5월 카다르가 黨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그로스가 새로이 黨 書記長에 임명되어 당의 지배적 권한을 일부 약화시키고 언론 및 기타 이익집단들의 位相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제창하였다.⁸³⁾ 이에 대하여 黨內 개혁파를 대표하는 임레 포츠가이(Imre Pozsgay)는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市民 社會團體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헝가리의 難局을 타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黨權을 장악하고 있던 保守 強硬派들은 개혁파의 주장대로 시민단체들과의 심도있는 실질적 협상을 통해 체제개혁을 달성하기 보다는 공산당의 지배적 위상을 固守한 채 공산당 주도로 諸 정당을 설립하는 제한적 정치 多元化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黨內 개혁파와 시민단체간에 형성된 타협 분위기를 경색시켰다. 이후 黨內 보수 강경파들은 市民 社會團體의 설립을 제한하고, 조정하고, 조작하고, 차별화함으로써 市民社會를 분열

83) 黨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그로스의 이같은 개혁정책은 서방세계로부터의 원조를 추가로 획득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외채를 감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Bruszt and Stark, "Remaking the Political Field in Hungary," p. 22.

또는 그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비록 헝가리 법체제에 따라 정치적 다원화를 허용하면서도 市民社會를 無力化 또는 약화시키려고 다방면에 걸친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은 黨內 개혁파의 입지만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⁸⁴⁾ 개혁파들은 1988년 末부터 소위 개혁그룹을 결성하여 세력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당내 強硬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나갔다. 1989년 3월 부다페스트에서 1848년 혁명을 기념하여 수 만명의 시민이 소련軍의 撤收와 自由選舉를 요구하며 시위행진을 벌이기 시작하는등 市民社會단체들도 세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보수 강경파는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미크로스 네메츠(Miklos Nemeth) 首相은 그로스가 영도하는 공산당과 정부 사이에 명확한 거리를 두었다. 1989년 6월 카다르가 사망한 헝가리에서 점증하는 市民社會의 압력은 1956년 헝가리 인민봉기시에 희생된 개혁의 기수 임레 나지 수상의 재장례식을 6월 16일 성대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당내 개혁파인 포츠가이, 네메츠, 그리고 국회의장인 마티아스 즈로스(Matyas Szuros) 등의 입장이 당내 보수 강경파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당내 보수 강경파는 9개 대표적 市民團體들의 연합체인 EKA와 직접 대면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圓卓會議를 개최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미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제거한 헝가리 정부는 9월 18일 市民社會 단체들과 오랜 정치협상 끝에 향후 헝가리의 핵심

84) Laszlo Bruszt, "Hungary's Negotiated Revolution," *Social Research*, vol. 57, no. 2 (1990).

적인 정치기구가 될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 總選舉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하여 선거일정에 합의함으로써 공산당 1黨 지배체제를 종식하고 多元化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기초 토대를 확립하였다. 헝가리 국가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및 민주사회주의를 목표로 기존의 인민공화국을 종식시켰고 헝가리 공산당은 스스로 헝가리 사회주의당으로 黨名을 개칭하고 당의 지도이념이던 레닌주의를 공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원주의 정치시대에 1개 競爭政黨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미 1989년 5월 인접국인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에 둘러친 철조망을 제거하기 시작함으로써 양국간의 자유왕래를 실현한 바 있는데 헝가리를 방문한 東獨인들이 이를 통해 서방으로 탈출할 수가 있게 되었다. 9월에 이르러서는 바르샤바 및 프라하에서도 수만명의 東獨인들이 西獨 대사관에 몰려들게 되었다. 특히 東獨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란 점에서 東獨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였으며 東獨 내부에서도 차츰 민주주의 확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들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0월 초 엄청난 東獨인들의 국외탈출현상과 점차 대규모화한 반정부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東獨 정부는 체제 고수 의지를 굳건히하고 대규모 시위대에 대하여 強硬 진압을 계속하였다. 격화되는 東獨 시민들의 反政府 시위에 대응하여 東獨 공산당은 10월 18일 정치국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黨 第1書記인 호네커를 퇴진시키고 후임에 에곤 크렌츠(Egon Krenz)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대

규모 시위와 계속되는 시민들의 국외 탈출에 직면하여 체제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상실한 東獨 정부는 11월 9일 東西獨 국경을 개방하고 東獨人의 西獨 방문을 허용하였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수백만의 東獨人들이 消費財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도 西獨 및 西베를린을 방문하게 되고 그중에 수천명은 귀환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국경 탈출에 직면한 東獨政府는 더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음이 드러났고 黨 정치국원 全員은 사임하고 정부는 새로운 정치·경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東獨人들의 대량 전출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그치지 않자 東獨 공산당 지도부는 전원이 사임하고 黨名도 개칭하는 등 舊政權을 급속히 崩壞되고 다원제 정치체제로 전환되었다. 마침내 1989년 12월 말 주민들의 西獨으로의 이주가 계속되고 西獨과의 통일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와중에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이끄는 東獨의 新政府는 모든 여행 제한을 철폐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東獨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체코는 1969년 당시 공산당 書記長이던 두브 체크에 의해 주도된 ‘프라하의 봄’이 실패로 돌아간 이래 소련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철저한 소련식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였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개방 및 新思考外交가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대한 탄압을 늦추지 않았다. 1989년 초 800여명에 달하는 지식인들을 人權과 관련한 저항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하고 대표적인 반체제 作家이며 「77宣言」을 주도한 하벨에게는 9

개월의 實刑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8월에는 프라하에서 1968년 소련의 침공을 기념하는 집회에서 400여명을 체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산당 정부와 일반 시민들간의 갈등과 긴장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공산당 1黨 지배체제가 붕괴되고 自由選舉가 실시됨에 자극받은 체코 민중은 10월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정부는 이를 강제로 해산하는 등 강경책을 고수함으로써 양측의 대립은 격화되기만 했다. 11월 17일부터 체코에서는 連日 15만명 이상이 집회와 시위를 강행하고 일주일 이상 계속된 이러한 시민들의 압력에 정부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월 27일 전국적인 파업이 그 규모와 강도 면에서 상상외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공산당 정부는 그 위세에 눌려 곧바로 시민포럼과의 협상에 돌입하는 동시에 헌법상 규정된 공산당의 指導的 위치를 포기하였다. 12월 초 共產黨은 黨書記長인 야케스를 축출하고 마리안 칼파(Marian Calfa)를 수상으로하는 非共產 聯立政府를 구성하여 폭발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력교체가 불가피해짐으로 인하여 후사크 대통령은 12월 10일 辭任하는 한편 계속되는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끝에 공산당 정권은 더이상의 집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共產黨 정부가 붕괴한 체코 정국에 12월 28일 ‘人間的 얼굴을 한 社會主義’를 목표로 發芽한 ‘프리하의 봄’의 주역이었던 두브체크가 국회의장에 선출되고 12월 29일 수차례 감옥생활을 겪은 반체제 作家인 하벨이 공산당원들이 지배하는 국회

에서 大統領에 선출됨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아는 폴란드나 헝가리와 같은 원탁회의 협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체제 변혁의 길로 들어섰다. 시민포럼 측의 120명 의원이 舊共產系列의 의원들을 교체함으로써 새로 탄생한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1990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체코슬로바키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東獨에서 공산당이 퇴조하고 급격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隣接 사회주의 국가인 불가리아도 1989년 11월 변화의 물결이 파급되었다. 점차 시민들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대규모 國外 脱走는 국가의 중추세력 기관인 黨官僚, 軍, 보안당국 내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1989년 11월 10일 지브코프 黨 書記長은 플라데노프(Peter Mladenov)를 중심으로한 당내 개혁세력에 의해 전격적으로 축출되었다.⁸⁵⁾ 黨 書記長에 임명된 플라데노프는 당내 개혁파들과 함께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한채 다원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미 주변 사회주의 兄弟國들의 변화를 목격한 민중들은 首都인 소피아에서 11월 18일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自由選舉를 통한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12월 14일 공산당은 헌법에 규정된 黨

85) 플라데노프는 국방장관인 도브리 쯔로프(Dobri Dzhurov)를 비롯한 군장성들과 연합하여 지브코프를 전격적으로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Vladimir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 221.

의 지도적 역할을 폐기하고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후 共産黨과 시민단체들간의 圓卓會議를 통해 선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여 1990년 6월 10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전형적인 스탈린식 1인 독재국가인 루마니아는 주변국들의 개혁과정을 외면하고 더욱 체제를 공고화하고자 하였다. 루마니아 領內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의 헝가리 少數民族이 있는데 이 문제로 1989년 7월부터 헝가리와 협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12월에 루마니아 정부는 헝가리 少數民族 지도자인 켈빈教 라즈로 퇴케스 牧師를 구금하고 그의 주도하에 개최 예정이던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자 대규모 인민들의 저항과 봉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民衆蜂起는 곧 反政府 시위로 전환되고 이에 보안부대가 강경한 진압을 시도하자 전국적인 봉기로 확산되었다. 티미소아라에서 流血事態가 발생했던 루마니아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즉각 확산되면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계속되었다. 무력진압방법을 놓고 갈등을 보이던 정부군과 차우세스쿠 친위보안군은 사태를 內戰으로까지 발전시켰다. 12월 22일 시민들 편에 선 루마니아 정부군은 부쿠레슈티를 탈출하려던 차우세스쿠를 체포하여 1989년 12월 24일 전격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루마니아는 급진적인 체제변혁을 맞이하였다. 곧이어 일리에스쿠를 비롯한 당내 개혁파들이 주축이되어 救國戰線을 결성하여 공산당 유일체제

를 폐기하고 複數政黨을 허용함과 동시에 1990년 초 자유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였다.⁸⁶⁾ 1990년 5월 20일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救國戰線 외에도 무려 80여개의 정당이 출현하여 선거에 임하였다.

알바니아 집권 공산당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악화, 주변국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체제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리아 대통령은 대외관계 개선과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 및 人權 상황 개선 등을 포함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진적인 것이었으며 공산당 지배체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진적 개혁 노력은 보다 급진적인 정치,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市民社會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市民社會의 급격한 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급격히 세력을 확장한 市民社會의 압력에 못이겨 점차 자신감을 상실한 알바니아 공산당은 드디어 11월 중순경 ‘民主戰線’(Democratic Front)의 지도자인 베리샤(Berisha)의 多黨制 허용 요구와 12월 8일 티라나 大學의 시위에 굴복하여 12월 11일 複數政黨制를 허용하고 당내 보수 강경파를 逐出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전면 수용하였다. 곧 이어 벨리샤가 이끄는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이 설립되고 1991

86) 루마니아의 체제변혁을 돌발적인 시민들의 봉기의 결과로 보기 보다는 이미 수개월 전에 결성된 黨內 개혁파 중심의 救國戰線의 치밀한 쿠데타 음모의 결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프랑스의 日間紙 *Le Point*은 1971년부터 이러한 謀議가 있었다고 전한다. Verdery and Kligman, “Romania after Ceausescu,” pp. 119~120.

년 3월 31일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1989년 가을 東유럽 개혁의 물결은 全 東유럽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崩壞라는 大變革을 달성하였다.

IV. 體制轉換 以後 東유럽

1. 政治的 多元主義 導入

大變革 이후 東유럽 국가들은 自由選舉를 통해 민주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다원화를 이룩하였다. 정치적 다원주의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共產黨 1黨 지배체제의 崩壞로서, 公산당이 唯一 합법 정당임을 포기함과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黨名을 개칭하기도 하였다. 또다른 특징은 정당 결성의 자유가 허용됨으로써 많게는 수십개 정도의 정당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정치적 다원주의가 도입된 결과 東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 대부분 연립정권의 형태를 띤 자유민주정부를 구성하였다.

東유럽 각국의 정치적 변화는 1989년 폴란드의 制限的 자유총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 폴란드는 自由勞組와 共產黨 정부간에 이루어진 圓卓會議 결과 1989년 6월 4일 제한된 범위에서만 自由選舉를 실시하였다. 제한선거란 전체 하원의석 460석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61석만 선거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35석은 공산당 후보만이 단일 입후보한 無競爭 선거구에서 총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선거에 대한 타협책으로 새로이 상원을 구성하여 상원의석 100석을 모두 自由選舉에 의해 선출하도록 결정하였다. 선거결과는 自由勞組의 壓勝으로 끝났는데 상원의 100석중 99석을 自由勞組側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며 선거에 붙여진 하원선거구에서 自由勞組側 후보가 전원 당선되었다. 無競爭地域에서 출마한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은 전원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후보자격을 상실하였고 自由勞組측은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후보 전원이 당선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표 3-2-7〉 폴란드 下院議席 분포도(1989. 6)

정 당	공 산 당	통일농민당	민 주 당	자유 노조
의 석 수	196	76	27	161

이같은 非共產 연립정권의 탄생을 가져온 「準自由選舉」는 사실상 폴란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東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自由勞組의 독립적이고 全國的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잘 조직된 시민단체가 없었다면 결코 完勝을 거둘 수 없었으며 만일 완승을 거두지 못하였다면 폴란드 집권 보수파들의 의도대로 그들이 당분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正當性만을 부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인 만큼 실제 그 선거의 결과는 예상밖의 것이었다.

그러나 마조비에츠키가 최초의 非共産 연립정권의 首相에 선출됨으로써 최초의 東유럽 非共産 정권이 등장하면서 폴란드는 脫社會主義 다원체제로 전환되었다. 정권 담당자로서의 폴란드 공산당 지도부는 스스로 정권담당 의욕을 상실한 채 1990년 1월 黨을 자진하여 해체하여 약체인 폴란드 사회민주당과 폴란드 사회민주연합으로 분리하고 마조비에츠키의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폴란드는 1990년 12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自由勞組 지도자인 바웬사가 初代 民選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주공화국으로의 체제전환을 이룩하였다. 물론 공산당 유일지배체제에서 다원화된 정치체제로의 전환은 수많은 難關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폴란드의 경우에도 개혁정책의 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조직체로서의 自由勞組와 노동조합으로서의 自由勞組의 위상 및 성격 정립에 따른 異見으로 인하여 바웬사와 非共産系 首相인 마조비에츠키간의 대립양상은 불가피해졌으며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양측이 모두 출마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노출하였던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이같은 분열의 양상은 이들 非政權 세력이 공산정권을 패배시키고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서 더욱 확대됨으로써 안정적인 다원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오던 헝가리는 1988년 카다르가 퇴임하고 공산당내 개혁파의 주도로 1989년 4월부터 市民社會 세력들과 일련의 연속적인 圓卓會議를 개최하여 자유총선거를 통

해 개혁의 진로를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적 다원주의를 확립하는 체제전환 작업을 진행하였다. 유일지배정당이던 공산당은 1989년 黨을 스스로 해체하고 10월 18일 헌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90년 3월 25일과 4월 8일 헝가리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386석의 國民議會를 구성하였다. 1987년 결성된 대표적인 市民社會 기구인 '民主포럼'이 총 165석을 획득하여 최대 정당이 되었고 같은 市民社會 기구이면서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표방한 부다페스트學派가 중심이 된 자유민주동맹이 92석을 차지하여 第2黨으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사회당으로 개칭한 집권세력이었던 사회주의 노동당은 단지 33석만을 획득하는 慘敗를 겪었다. 5월 22일 요셉 안탈이 이끄는 민주포럼이 주축이 되어 독립 小地主黨, 기독교민주국민당 및 無所屬의 非共産 연립내각이 탄생하였다.

〈표 3-2-8〉 헝가리 國民議會 구성 분포도(1990. 4)

정 당	의 석 수	비 율 (%)
민 주 포 럼	166	43.0
민 주 동 맹	91	23.6
소 지 주 당	44	11.4
사 회 당	33	8.5
청년민주동맹	22	5.7
기 독 민 주 당	21	5.4
기 타	11	2.8

체코슬로바키아는 1989년 12월 29일 의회에서 反體制 저항지식

인인 하벨이 大統領에, 그리고 1968년 ‘人間의 얼굴을 한 社會主義’로의 개혁을 주도했던 두브체크가 국회의장에 각각 선출됨으로써 1948년 이래 최초의 비공산 정권이 수립되었다. 무려 22개의 정당이 참가하여 1990년 6월 8~9일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체코의 민주변혁을 가져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시민포럼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의 ‘反暴力民衆’ 측이 연방의회의 300석 중에서 169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한 시민포럼은 이내 개혁의 속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市民民主黨(CDP)과 온건중도파인 市民運動(CM)으로 분열되어 체코의 민주화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1989년 11월 초 閣僚 전원이 사임하고 베를린 장벽이 崩壞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종식된 東獨에서는 한스 모도로프가 總理에 취임한 후 12월 7일부터 각 정파와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지배 공산당인 獨逸統一黨(SED)으로부터 독자노선을 선언한 기독교민주연합(CDU)은 西獨의 基民黨과 관계를 긴밀히하고 1989년 창당된 사회민주당(SPD)도 역시 西獨의 社民黨과 제휴관계를 강화함으로써 東獨 내의 독자적인 정당활동보다 西獨과의 連繫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兩獨 국경선이 개방된 이후 급격한 체제변화를 겪고 있던 東獨은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총 400석의 하원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지배정당이던 사회주의 통일당이 민주사회당(PDS)으로 黨名을 개칭하여

선거에 임한 東獨 선거의 특징은 西獨의 정당들과의 광범위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선거결과 西獨과의 통합을 주장한 基民黨(CDU)이 전체 의석의 40.91%를 획득하여 원내 多數黨으로 등장하였고 西獨의 社民黨과 연계된 東獨 社民黨(SPD)이 전체의 21.8%를 획득하여 제2당이 되었다. 집권세력이었던 민주사회당은 16.33%를 획득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基民黨의 로타르 드 메지어가 5개 黨과 연합하여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西獨과의 통합기반을 수립하였다.

〈표 3-2-9〉 東獨 議會 구성 분포도(1990. 3)

정 당	의 석 수	비 율 (%)
기 민 당	164	40.91
사 회 연 맹	25	6.32
민주주의 출발	4	0.92
사 민 당	87	21.8
민 주 사 회 당	63	16.33
자 유 민 주 당	21	5.28

東獨 선거에서 승리한 CDU는 독일통일을 綱領으로 제시하여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여 東獨이 일방적으로 西獨에 흡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東獨의 경우 東獨 자체의 정치발전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이 7월 1일 東西獨의 경제·화폐통합을 통해 사실상의 통합단계에 진입하고 10월 3일 西獨 헌법에 의거하여 西獨이 東獨의 5개 州를 흡수하는 형식으로 통일을 마무리짓고 국가로서의 東獨은 소멸하였다.

불가리아는 1989년 말 지브코프가 辭任하고 페타르 플라데노프가 黨書記長 겸 國家評議會 의장에 선임됐다. 1990년 1월 제14차 임시 당대회에서 공산당의 권력독점 폐지와 黨名을 변경하여 국가 사회주의체제를 종식시키는 개혁안을 채택하고 기존의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를 폐지시켰다. 2월 11일에는 공산당의 명칭을 불가리아 사회당(BSP)로 변경하였다.

1990년 6월 10일, 17일 총 400석의 制憲議會 구성을 위한 2차례 자유총선거(비례대표 200석, 단순과반수 200석)를 실시하여 舊共產黨인 불가리아사회당(BSP)이 과반수를 넘는 211석을 획득하여 다수당이 되었고 16개 反體制 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민주세력동맹(UDF)이 144석 그리고 기타 農民黨(BAU) 및 터키系 少數民族運動(DPS) 등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표 3-2-10〉 불가리아 議會 구성 분포도(1990. 6)

정 당	의석수	비율 (%)
사 회 당	211	52.75
민 주 세 력	144	36
권리와 자유당	23	5.75
농 촌 민 족 당	16	4
기 타	6	1.5

大統領에 취임한 플라데노프는 그의 反民主的 과거 행실이 문제시되면서 7월에 사임하였다. 이에 8월 1일 비록 144석을 차지한 소수세력이지만 野黨 정치세력 연합체인 민주세력동맹(UDF)의 지도자인 젤류 젤레프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經濟難에 항의하는 대

규모 파업이 계속되면서 의회는 해산되고 무소속 출신의 미타르 포포프가 이끄는 과도연정이 집권한 후 1991년 7월 신헌법을 채택하고 9월, 12월 총선을 실시하여 민주세력동맹이 승리하여 집권 사회당 정권이 붕괴하였다. 1992년 1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젤류 젤레프 대통령이 재선되어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하였다.

루마니아의 反政府 세력들은 1주일간 계속된 유혈사태를 통해 차우세스쿠를 처형하고 사회 각 계층을 망라하여 145인으로 구성된 救國戰線評議會를 발족시켰다. 사태수습에 나선 평의회는 國名을 루마니아로 환원하고 3권분립과 정당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1990년 5월 20일 의회 및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워낙 오랜기간 동안 차우세스쿠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해온데다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閉鎖政策을 추진해 온 까닭에 반정부단체를 비롯한 市民社會의 형성이 미비하여 舊共產勢力이 주축이된 中道左派인 구국전선이 上下院 양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119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는 구국전선 후보가 92명, 그리고 387명으로 구성된 하원에서는 263명이 각각 당선됨으로써 모두 80여개의 정당이 난립하여 각축을 벌였던 선거에서 압승하였다. 53년만에 실시된 선거에서 과거 공산당원에서 자유주의자로 변신한 일리에스쿠가 총 득표의 86%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구국전선 자체가 과거 공산당원과 機會主義者들이 다수 가담하여 구성한 단체였기 때문에 1991년 6월 13일부터 부쿠레슈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시민들의 정권퇴진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일리에스쿠 대통령은

軍과 武裝鑛夫들 십 수만명을 동원하여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을 강제 진압을 시도하는 등 反共產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내었다. 1991년 10월 이러한 무력진압에 책임을 지고 구국전선의 교수출신 총리인 페트로로만이 사임하고 후임에 데오도르 스톨얀(Theodore Stojan) 前 財務長官이 총리에 임명되는 등 다원주의적 민주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완전한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東유럽을 휩쓴 大變革의 와중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알바니아는 1989년 말부터 旅行 자유화 등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적인 자유화는 곧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와 대규모 주민들의 國外脫走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체제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 7월 5천명 이상의 알바니아인들이 首都인 티라나 所在 西方 대사관으로 避身, 亡命을 요청한 데 이어 12월 말부터 6천여명이 그리스로 집단 탈주하는 사태로 확대되었다. 1985년 호자의 사망 이후 집권한 라미즈 알리아 黨 書記長은 강경파들을 제거하여 1990년 12월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複數 政黨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가장 늦게 개혁의 대열에 참여한 알바니아는 1990년 12월에 가서야 공산당 이외의 정당의 활동을 허용할 정도로 폐쇄적이었다. 12월 11일 공산당 이외의 정당의 설립이 허용되자 즉시 民主黨이 창당되었고 이후 공화당, 環境黨, 농민당, 국민당, 사회민주당, 獨立勞組 등이 잇달아 설립되어 4달 후에 있게될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1991년 3월 31일 공산당 외에 10여개의 새로운 정당들이 경쟁

하는 複數政黨制下的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고 또한 自由選舉를 위한 준비 기간이 짧은 까닭에 지배정당인 노동당이 전체 250석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169석을 획득하였다. 다만 도시에서는 野黨인 민주당이 전체 27개 선거구 중 25개 구역에서 승리함으로써 비판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표 3-2-11〉 알바니아 議會 구성 분포도(1991. 3)

정 당	의 석 수	비 율(%)
노 동 당	169	67.6
민 주 당	75	30
그리스당	5	2
재향군인회	1	0.4

비록 1991년 3월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여 계속 집권하게 되었으나 6월 全黨大會에서 당명을 사회당으로 개칭하였다. 1991년 4월에 신헌법을 제정하여 國號를 알바니아공화국으로 개칭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 1992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 사회당을 누르고 승리하여 알리아 大統領은 사임하고 4월 9일 의회선거에서 민주당 黨首인 살리 베리샤(Sali Berisha)가 5년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東유럽 7개국도 모두 공산당 1당체제를 종식시키고 多黨制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원주의로 전환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유고슬라비아에서도 東유럽체제의 변혁기인 1990년 1월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를 선언하고 多黨制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미 티토의 생존시

인 1963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하고 1974년 제정된 헌법에 의해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하였고 티토가 死亡한 1980년 5월부터 集團 대통령제를 실시해 왔다.

일찍부터 각 공화국별로 분리 독립 가능성이 높았던 유고슬라비아는 1989년에 들어서면서 민족 갈등이 표면화되고 특히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화국들은 유고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세르비아 중심의 유고연방은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유럽공동체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결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분리 독립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유고연방이 해체되는 첫번째 과정으로 슬로베니아 공화국은 1990년 4월 8일과 22일 대통령 선거와 240석의 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舊共産黨인 民主復興黨의 밀란 쿠칸이 전체의 58%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의회선거에서는 중도우파의 민주연합이 압승하여 5월 16일 非共産 內閣으로 출범하였다. 1990년 4월 22일과 5월 6일 실시된 총 356석으로 구성된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의회 선거에서는 우파세력인 민주연합측이 공산당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여타 東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多黨制 실시를 계기로 연방내 각 공화국들, 특히 세르비아의 독점적 지위에 불만을 가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1991년 6월 25일 제각기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연방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政局이 전개됨과 동시에 격심한 민족분규 및 內戰에 휩싸이게 되었다.

2. 市場經濟로의 轉換과 世界資本主義 經濟體制로의 編入

東유럽 국가들은 1989년 이후 多黨制를 도입하고 자유총선거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民主化·多元化를 이룩함과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제도를 중심으로한 자본주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다. 東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전환에서는 크게 價格自由化와 民營化를 포함한 私有財産의 허용, 外國人 투자확대 및 자본주의 국제경제기구의 가입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일찍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헝가리는 1988년 4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자유화했으며 헝가리와 같이 시장사회주의를 추구하던 폴란드도 1989년 8월 전면적인 가격 자율화 조치를 실시했다. 체코는 1990년 9월 가격 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경제개혁 계획을 채택하였고 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국가들도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기업의 自律裁量權 등을 확대하는 경제개혁 정책들을 채택,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혁 중 가장 어려운 사유화 및 기업의 민영화 조치들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채택하였다. 폴란드는 1989년 1월의 개혁 입법을 통해 私企業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10월부터는 不實 공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을 賣却함으로써 民營化를 촉진하여 1990년 7월에는 국영기업의 80% 이상을 민영화하였다. 헝가리 역시 1990년 9월 민영화법을 채택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체코는 1990년 9월부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경제개혁 계획을 채택하여 1991년 7월에는

1차로 1700여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민영화하기 시작하였다. 알바니아는 1991년 5월 사유화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계획을 발표하였고 비록 전체산업의 30%를 국유산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루마니아도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 민영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競爭力과 生産力を 높이려고 하고 있다.

東유럽에서의 본격적인 경제개혁은 경제분야 만의 개혁이 아닌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확대와 물질적 동기부여, 완전한 시장기체에 의한 가격개혁 등은 자유화,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1989~1990년의 체제전환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한 이들 東유럽 국가들은 1990년 이후 본격적인 市場資本主義體制로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사회부문에서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先頭走者인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여타 東유럽 국가들의 개혁의 추진 속도나 진행 정도는 미진한 편이다. <표 3-2-12>에서 보듯이 완전한 체제전환을 수월하게 이룩한 체코의 경우도 이들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해 私有化, 民營化 정도에 있어 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2년에 이미 IMF, IBRD 등에 가입함으로써 國際經濟體制에 편입된 헝가리는 89년 1월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新會社法을 제정하여 경제 活路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89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를 骨子로 한 개혁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체코는 1990년 9월 IMF에 복귀함과 동시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

〈표 3-2-12〉 東유럽 經濟體制의 改革 現況(1992年 初)

* 표시된 숫자는 개혁의 진행정도를 나타냄.

(0=진전없음, 4=대폭적 진전)

항 목	헝 가 리	폴 란 드	체 코
재산권/물질적 동기 부여			
사유재산권의 부여			
기 업	3	3	3
주 택	4	4	1
토 지	1	4	1
외국인의 기업소유	4	3	2
노동자관리기업민영화	3	3	3
민간부문의 비중	3	3	1
시장과 가격개혁			
보조금 제도	4	4/3	3
조세의 왜곡	3	2	2
생산요소시장의 왜곡	2	2	1
교역구조의 개선	3	3	3
외 부 성	2	1	1
동태적 효율성의 증진			
인적자본 투자	2	1	1
R & D 지원	1		0
기술 도입	3	3	3

출처: 김달중·정갑영·성백남, “중부유럽의 변혁과 신국제질서,” 「국제정치논총」, 33권 1호 (1993), p. 17.

후되고 오랜기간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던 알바니아도 1990년 8월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합작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극단적인 自給自足 정책을 고집하던 루마니아도 大變革 이후 輸入制限 정책을 폐지하여 외국과의 경제교류 門戶를 개방하였다.

西獨과의 통합을 전제로 총선거를 실시했던 東獨은 1990년 7월 1일 東獨貨幣를 폐지하고 西獨의 마르크貨를 공식 통화로 채택함으로써 西獨으로의 경제 편입을 시작하였다. 東·西獨 통합경제구축으로 東獨은 화폐발행권, 예산 편성, 세금징수권 등 일체의 경제 권한을 포기하였고 가격 자유화 및 민영화 추진 등 전면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하였다. 1990년 10월 3일 東·西獨의 통합이 이룩되면서 이후 東獨의 경제 개편은 西獨經濟에 편입된채 西獨의 주도하에 통일독일 건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3. 새로운 葛藤樣相과 東유럽의 將來

東유럽 각국은 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대부분 多黨制下에서 자유총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구성하였고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사유화를 보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두드러진 갈등의 양상은 우선 각국의 새로운 民族主義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산주의체제하에서 異民族간의 연방을 구성한 국가들의 경우 체제전환과정에서 각 민족 단위의 독립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등 6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유고연방은 각 공화국의 분리 독립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방 내에서 크로아티아공화국이 가장 먼저 1990년 12월 연방으로부터의 分離獨立을 위

해 신헌법을 채택하였고 이어 슬로베니아도 분리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이들 두 공화국은 1991년 6월 25일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유고연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시키는 등 內戰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EC 및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이 개입하여 이들 국가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休戰을 중재하는 동시에 유고연방에 대해 禁輸 조치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자 유고연방은 해체될 수 밖에 없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공화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와중에 마케도니아공화국도 연방으로부터 탈퇴하고 獨立을 선포하였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공화국도 1992년 3월 1일 분리독립에 대한 國民投票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연방 解體를 반대하던 세르비아도 1992년 4월 몬테네그로공화국과 함께 유고연방을 승계하는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유고연방은 5개 獨立國家와 2개의 自治州로 각각 분리되었다.

東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평화적으로 체제전환을 이룩한 체코 슬로바키아도 하벨 大統領의 영도하에 민주정권이 등장한 이후 잠재된 民族主義가 부활되면서 민족분규에 말려들었다.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슬로바키아공화국은 1991년 3월부터 聯邦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공화국에 대폭적인 自治權을 허용하면서 연방을 존속시키려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2년 6월 5~6일 양일간 실시된 연방 및 地方議會 구성을 위한 총선 결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분리독립을 표방한 블라디미르 메치아르가

이끄는 左翼 민족주의 성향의 민주 슬로바키아운동(HZDS)이 33.65%를 득표함으로써 최대 정당으로 부상하였고 이어 7월 17일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한 조치로써 主權宣言을 채택하였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반대로 하벨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에서 사임하고 바츨라프 체코 수상과 블라디미르 메치아르 슬로바키아 수상이 5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연방해체를 합의함으로써 1993년 1월 1일을 기해 각기 독립국가로 출범하게 되었다.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드러난 또다른 문제는 급속한 私有化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악화된 경제상황이다. 급진적인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폴란드는 內閣과 바웬사 대통령과의 경제개혁 방안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생산력은 개혁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下落하였다. 특히 46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外債을 안고 있는 폴란드는 채무액의 蕩減 및 IMF로부터 긴급융자를 신청하는 등 누적된 외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외부의 도움없이 경제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들의 대규모 국외탈주로 인하여 勞動力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불가리아는 對蘇貿易의 감소와 1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로 인하여 경제개혁에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루마니아도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소외계층의 불만 등으로 경제개혁에 따른 後遺症을 앓고 있어 경제는 躑步 상태에 놓여있다. 內戰에 시달리는 유고의 각 공화국은 역시 외채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연방해체에 따른 공화국간의 거래구조의 파괴 및 관광수입 등의 격감으

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밖에 비교적 순조롭게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와 체코도 본격적인 체제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비교적 경제가 발달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의 국가들의 1990년과 1991년의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 3-2-13>에 나와있는 거의 모든 指標에서 이들 국가들은 마이너스의 성장을 하고 있다.

<표 3-2-13> 東유럽 三國의 經濟 現況(前年比 증감율 %)

	체 코		폴 란 드		헝 가 리	
	1990	1991	1990	1991	1990	1991
GDP	-0.4	-15.9	-11.6	-8.0	-3.3	-7.0
NMP	-1.1	-19.5	-14.9	-8.0	-3.3	-7.0
공업생산	-3.5	-23.1	-24.2	-11.9	-5.0	-19.1
농업생산	-3.5	-8.8	-16.5	-2.0	-3.8	-3.0
소비자물가	10.0	57.9	617.8	70.3	28.9	35.0
총투자	7.7	-30.9	-10.1	-8.0	28.9	35.0
수출(억\$)	63.4	77.4	114.3	142.0	72.0	102.0
수입(억\$)	63.1	74.5	67.1	142.0	61.0	117.0
무역수지	0.3	2.9	47.2	0.0	11.0	-15.0
총외채(억\$)	81.0	93.0	470.0	465.0	195.0	228.0

출처: 김달중·정갑영·성백남, “中部 유럽의 變革과 新國際秩序,” p. 21.

V. 結 論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體制轉換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들 국가들이 공산독재체제 또는 全體主義의 統制와 抑壓體制下에 만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동유럽 각국은 그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스탈린식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개혁하였다. 이들의 개혁 노력은 국제적 환경에서 소련의 政治的 弛緩 현상과 맞물려 각국의 지배집단의 통치력에 龜裂과 勢力弱化 현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사회세력, 단체들의 형성과 발전은 이러한 체제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서 시민들의 대규모 국외탈출현상도 이러한 체제의 경직성에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⁸⁷⁾

各國의 對抗勢力으로서의 市民社會는 각국마다 그 발전 속도와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각국의 지배정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도 철저하지도 않았던 점이 있다. 빼 놓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東유럽의 정권기관으로서의 공산당이 軍部에 의해 또는 군부와 脈을 같이 하는 정권이 아니었다는

87) 국가가 시민사회를 회유함에 못지않게 체제 자체의 논리상 자유, 참여, 민주주의 등의 구호나 이를 표면적으로나마 정치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체제경직성이 이완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이완되었을 경우 폭발적으로 욕구가 분출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배양되어 왔음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한다. S. N. Eisenstadt,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 and the Vicissitudes of Modernity," *DAEDALUS*, vol. 121, no. 2 (Spring 1992), pp. 33~34.

데 또다른 이유가 있다. 대부분 東유럽 국가들의 군대는 소련군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함으로써 그 일차적 임무는 西유럽 NATO軍에 대한 전략적으로 대치하는 것으로서 소련체제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었을 뿐 각국의 자체 정치문제, 이념문제에 武力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副次的인 역할이었던 것 같다.

東유럽 각국이 체제전환을 이룩한 수단으로서의 자유총선거까지의 과정과 총선거 결과를 보면 東유럽 각국은 모두 각국의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와 결과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東유럽 각국의 전환과정을 보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대항세력인 市民社會와 執權 공산당과의 協商을 통해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체제전환을 이룩하였다. 그밖의 東유럽 국가들은 권력기관인 共產黨과 市民社會와의 단절로 인하여 협상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東獨,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의 국가에서는 집권자의 暴力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력해진 市民社會는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대규모 국외탈출과 같은 이탈방식을 택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不滿과 抵抗을 표출했다.⁸⁸⁾ 폴

88) Albert O. Hirschman 은 이러한 현상을 그의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라는 저서에서 Exit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탈의 통로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부터 이탈이 용인되는 시점에서 체제에 남아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탈을 택했다. 동독,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에서 대규모 시민들이 국외탈출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소수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 인사들

란드의 自由勞組와 같이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대항세력이 존재하지 않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시민들은 그들의 虛僞意識, 僞善을 통해 생존을 고수하였으나 주변 국가, 주변 사회에서 보다 덜 위선적인 삶을 살기를 택하는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순식간에 탄압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출하였다.⁸⁹⁾ 그러나 침묵과 服從으로 간주되던 非政治的 사회가 자신의 意思를 표출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순식간에 결집시켜 정치사회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한 데에는 비록 조직화되지는 못했지만 소수의 시민들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이들에 의해 운신의 폭이 급격히 늘어난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 집회, 시위가 있었기에 궁극적인 체제전환이 가능했다.⁹⁰⁾

타협에 의하든 시민의 시위에 밀리든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 채택한 체제전환의 방법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로이 참여하는 選舉를 통한 것이었다. 선거에는 집권층이 불리할 수도 있는 요소

이 국의 망명을 택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불일치, 긴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89) 하벨은 이같은 현상을 그의 ‘힘없는 자의 힘’ 이란 수필에서 야채상가에 내걸린 구호를 예들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야채상가에 걸려 있던 ‘萬國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철거되는 날 공산당 유일지배체제는 종식되고 인민의 참된 뜻을 받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의 예견은 1989년 東유럽의 大變革 과정에서 사실로 증명되었다. 바츨라프 하벨, 김정숙·임혜정 譯, 「대통령의 꿈」 (서울: 들꽃세상, 1992).

90) Ty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pp 16~26.

가 다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로서 공산지배엘리트들이 이러한 不確實한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배 執權層이 市民社會와의 협상을 통해 또는 일방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이 그들 나름의 合理的 계산에 근거했을 수도 있다. 첫째, 經濟難 등 체제위기에 봉착한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일시적으로 이들 반체제세력에게 정치권, 制度圈으로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反射的 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고수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을 수 있다. 둘째, 制限的인 정치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비조직적이고 덜 훈련된 세력들이 스스로 分裂되고 그 결과 강력한 지도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배집단이 합법적으로 계속 통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개혁 초기에는 양측이 모두 舊體制·政權의 폐기를 원하기보다는 개혁을 통해 경제 등 제반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다. 다만 폴란드의 경우는 강력한 自由勞組와 같은 市民社會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과의 대결·대치 끝에 선거를 통한 체제변화를 도출해내는데 성공한 반면 헝가리의 경우는 폴란드와 비교할 때 社會 시민단체의 세력이 훨씬 미약했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로서는 선거를 통한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형식의 전환을 가져오는데는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세력, 反體制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지배층은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결국 개혁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같은 맥락

에서 市民社會가 여타 사회에서 전개되는 상황에서 영향받은 바가 많았듯이 집권층 역시 여타 사회에서 진행되는 변화에 市民社會가 대응하는 모습에서 항상 새로운 對處 방안을 수립해 나갔던 것이다. 폴란드와 비교할 때 헝가리는 훨씬 미약한 사회세력의 對應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훨씬 취약하지만 그러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과 비교하면 이들 後者에 속한 국가들의 집권층들은 훨씬 자신있고 정확하게 정국의 추이를 진단하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집단세력의 合理的 대처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집권자들이 선거를 체제전환의 방법으로 채택한 것은 지난 40여년 동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오면서 그들이 보여준 능력의 限界와 이로 인해 그들 스스로 사회주의체제의 正當性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체제변혁에 대한 압력에 대하여 지배 집권층은 이미 그 체제의 합리성과 정당성,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목표 자체를 상실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희생과 억압을 강요할 수 없음을 절실히 認知한 때문에 선거를 통해, 그리고 그 선거를 위해 자체의 변신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東유럽 국가들의 支配政黨인 공산당이 스스로 당명을 改稱하고, 黨과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을 분리하는 등 헌법에 의해 규정된 특수 位相을 삭제한 것은 이러한 집권층의 현실 인식 때문이었다.

東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革命的 변화는 그 자체가 역시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각국의 정권들은 선거실시 방

법과 절차를 논의하는 圓卓會議 등 협상과정에 대해 법적인 대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反體制勢力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 자체가 비정치적으로 표현됐음에도 결과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협상이며 정치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선거를 통해 반체제세력 또는 사회에 대해 경쟁자로서의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東유럽에 새로운 정치사회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東유럽 국가들이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완벽한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했던 시기는 1950년대 중반까지일 뿐 그 이후는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經驗과 事情에 따라 변화된 체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이후 시기는 이들 집권당의 權力과 權限, 특히 市民社會에 대한 그들의 優越한 입장에 변화를 보인 시기이고 그 변화의 力動性이 1989년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이들 代案의 사회, 제2의 사회의 출현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 체제의 모순에 대하여 고민하고 代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다만 이들 사회가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

1980년대 말 형성된 사회, 경제적 危機와 국제환경의 變化는 이들 사회세력으로 하여금 代案의 체제를 그들의 힘으로 형성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執權者나 市民社會 모두에게 위기를 벗어날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집권층은 代案의 체제를 구상하는 市民社會 세력들을 체제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선택의 방법을 자유총선거라는 형태로 합의한 것이다. 그 결과 제도로서, 구조로

서의 複數政黨에 의한 多元主義 사회가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를 단순한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라고 보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체제변화, 그 안에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어 이런 과정에서 東유럽의 전환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서 東유럽의 변화가 革命的 변화임에도 혁명이 아니고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임에도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형상이 남아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東유럽 사회가 새로운 政治社會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사회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⁹¹⁾

東유럽 국가들이 大變革을 거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다원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당, 사회단체 등이 난립하였다. 이는 횡적인 사회 유대가 발전하기 보다는 공산당을 정점으로 한 종적인 지휘, 명령, 계획계통만이 있었기 때문에 종적인 체제가 급격히 崩壞할 때 횡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나 인물이 등장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는 분열되거나 原子化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人種的, 宗教的 복합체제인 경우는 더욱 손쉽게 분열되고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폴란드의 바

91) 東유럽 국가들이 선거를 통한 정치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집권층이 보인 양태를 대타협이라는 정치적 선택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라는 공통분모하에 黨官僚, 행정관료, 국영기업 및 협동농장 관리인, 신흥기업가 등의 新支配層이 형성되는 政治社會가 출현하였다. Hankiss, *East European Alternatives*, Chapter 9.

웬사나 체코의 하벨과 같이 全國的인 지명도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경우는 정치사회로의 전환 초기에 제기되는 위기와 문제점을 의외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항세력의 구심적 인물로서 공산체제의 崩壞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政治社會로의 급격한 전환과정에서 이들은 탁월한 指導力을 보여 주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하벨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서부터 1990년 6월 선거시까지 직면해야 했던 문제는 共產黨 唯一體制를 선거를 중심으로한 다원주의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문제, 새로운 對外關係 정립 문제, 그리고 아직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간의 民族問題 등까지 광범한 영역의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東유럽 국가에서는 대항세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정치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함으로써 정부 구성 후에 심각한 지도력의 공백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東유럽 국가들의 선거결과를 보면 우익정당들이 승리하였고 좌파정당의 경우도 이미 공산주의는 포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社會民主主義는 과거 40년 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영향을 받아오던 국가들의 경우, 그 사상, 제도, 체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 혐오 등이 겹쳐서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⁹²⁾ 그러나 공산

92)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시 선택가능한 진로들 중에는 공산주의 체제로의 복귀가능성은 희박하며 단지 서유럽 일부국가에서 보듯이 사회민주주의체제, 또는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또

당이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嫌惡感 때문에 右派가 집권한 경우에도 당면한 경제문제, 민족분규 등 불안정한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民主的 權威主義, 軍부와 教會를 비롯한 각 사회세력과 域內 少數民族들의 포괄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가 더욱 효과적임을 간과해서는 앞으로 정치체제의 극심한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東유럽의 경우 舊體制에서 新生 民主化體制로 전환되는 과정을 종합해보면 강력한 국가에 대한 강한 사회의 대응의 결과라기 보다는 폴란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약체 정권에 대한 弱體 市民社會의 대응의 산물인 것도 같다. 약체 정권은 그들 정권이 취해온 취약한 정치, 경제 프로그램과 그들이 앞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망이 항상 제약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워가면서 국가경제를 回生시키는 일이야말로 이들 東유럽 국가들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捷徑일 것이다.⁹³⁾ 이를 위해서 정치사회는 이를 뒷받침할

는 계획경제 그 어느 것도 아닌 제3의 길이 가능한 대안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단지 1989~1990년 동유럽의 체제변혁과정은 그 과정의 급격함이라든지 소련 및 주변국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유화, 민주화,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Ibid., p. 273.

- 93) 民主化와 市場經濟로의 轉換이 내포하는 어려움은 轉換 그 자체 보다는 체제전환을 이룩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느냐, 그리고 그 민주체제가 얼마만큼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민주화가 순조로이 진행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물론이고 순환적으로 이들 순조로운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들의 민주화로의 진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西유럽과의 강한 유대, 일치, 연합, 그리고 서유럽의 경제적 협력과 지원이 이들 불안정하고 균열된 東유럽 국가들의 국내 정치를 安定化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東유럽 각국은 새로운 대외관계의 정립을 중요 문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0년간 공산주의체제하에서 政治의 失蹤下에 살면서 지배엘리트들의 권력 독점하에서 일반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면서 체제에 순응해왔다. 이제 大變革 과정을 거쳐 自由民主主義를 선택한 東유럽 시민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얻어낸 민주주의체제를 키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종교적, 도덕적 정당성과 강력한 조직체를 기반으로 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가 이끄는 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새로이 정치사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이 출현한 대부분의 東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체제변혁을 가져왔던 모든 조건들이 새로이 형성된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역시 難關과 危機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體制轉換을 이룩한 東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民族

경제적 기반, 반대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부담과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확보 등이 상호 연관되면서 東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장래가 긍정적인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Adam Przeworski,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Chapter 4.

紛糾는 이들 東유럽 국가들 앞에 놓여진 또다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基督教 文化圈의 中部유럽과 비잔틴 또는 이슬람 文化圈의 東部유럽간의 긴장과 갈등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부의 少數民族 문제는 이들 東유럽 국가들이 이룩한 체제전환의 成果를 상쇄시킬만큼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간, 종교간, 문화적 갈등 및 분규를 해소하기 위하여 東유럽 각국은 건전한 市民社會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고 이들 市民社會가 활성화되어 강력한 민주정당들이 諸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共產黨 唯一支配體制로의 還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第3章 中國

I. 中國 社會主義體制的 形成過程

1. 中國革命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에 코민테른과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소수의 급진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함으로써 부강하고 자주적인 신중국을 건설하려는 혁명운동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초창기의 중국 공산당은 소련과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국공합작에 합의하고, 도시지역에서의 노동운동을 기초로 하는 정치적 변혁운동을 주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27년 국공합작의 붕괴와 더불어 도시지역에서 축출된 중국 공산당은 산간벽지와 방대한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홍군을 조직하고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이른바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도시 노동자 중심의 볼셰비키혁명과는 다른 중국적 혁명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5년 遵義會議에서 이른바 볼셰비키 28인으로 알려진 소련 유학파들이 퇴진하고, 홍군과 농촌소비에트운동의 지도자였던 모

택동이 당과 군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마침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개별 국가의 공산주의운동의 독자성과 자주성, 그리고 민족주의와의 결합이 강조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중국화를 주장하며 중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적합한 혁명전략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중국 민중들간에 항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자 국민당 정권과 제2차 국공합작에 합의하고, 이른바 신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진하였다.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으로 정식화된 신민주주의 혁명노선이란 첫째, 아편전쟁 이후 중국사회는 半封建 半植民地社會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중국혁명의 제1차적인 과제는 反封建, 反帝鬭爭을 전개하여 민족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부르조아 민주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중국의 부르조아 민주혁명은 구민주주의 혁명단계와 신민주주의 혁명단계로 구별될 수 있으며, 신민주주의 단계는 서구의 전형적인 부르조아혁명과는 달리, 부르조아계급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5·4운동 이후 급속하게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노동자와 농민계급이 주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신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계급은 부르조아계급이 실현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인 민족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쟁취를 실천하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기본전략은 노동자와 농민, 소자산계급을 기본세력으로 하면서도 민족자산계급과 개명된 향신계급 및

양심적인 지주계급을 포섭하여 광범위한 계급연합을 구축하고 극소수의 대지주와 대자본가계급만을 배제하는 신민주주의 정치질서, 신민주주의 경제, 신민주주의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택동에 의하면, 신민주주의 정치질서란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이 다같이 참여하는 계급연합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민주주의 경제란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공존, 협력하는 혼합경제를, 그리고 신민주주의 문화란 대중적, 민족적, 과학적 문화를 뜻하는 것이었다.¹⁾

이와 같은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중국 공산당은 1940년부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延安地域과 해방구에서 이른바 3·3제에 입각한 ‘민주적 대선거’를 실시하여 노동자와 빈농을 대표하는 공산당과 소자산계급을 대표하는 진보파, 그리고 민족자산계급을 대표하는 중간파가 각각 3분의 1씩 정권기구에 참여하는 연합정권의 형태를 갖추려고 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농촌지역에서 지주계급을 타도하고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려는 토지혁명과 계급혁명노선을 중단하고 지주와 부농들의 토지와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주요 재정수입을 형성하고 있는 소작료와 고율의 이자율을 적정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減租 減息運動과 累進稅制를 실시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착취구조를 개선하려는 점진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노동과 자본의 대립보다는 勞使間의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

1)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과 신민주주의혁명전략에 대해서는 서진영, 「중국혁명사」(서울: 한울, 1992), pp. 226~229 참조.

주의적 요소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는 신민주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다.²⁾

이처럼 연안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계급투쟁보다는 계급연합을 강조하면서 대중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형평성의 제고, 그리고 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신중국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국민당 정권을 대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延安經驗’은 계급적 단결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인 발전전략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1940년에서 1943년 사이에 일본군의 대규모 공세와 국민당정부의 3차례에 걸친 봉쇄정책으로 연안 정권은 심각한 경제적, 군사적 위기국면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은 대중들의 혁명적 열의를 동원하려는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테면, 연안정풍운동(1942~1944), 精兵簡政運動(1941~1943), 下鄉運動(1941~1942), 합작사운동(1942~1944), 생산운동(1943~1944) 등을 통하여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체제와 사상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대중의 혁명적 에너지를 동원, 조직화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自力更生과 勤苦奮鬪의 기치를 내걸고 모든 간부, 관료, 지식인, 당원들을 생산투쟁에 총력 동원하였고, 대중들의 혁명적 희생정신과

2) 위의 책, pp. 236~246 참조.

봉사정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의 혁명적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총력동원체제에 힘입어 연안 정권은 1943년 이후 점차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다시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속도로 확장 발전하여 마침내 1945년 중일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국민당 정권과 정면 대결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대중의 혁명적 에너지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대중운동이란 독특한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고, 인민대중의 혁명적 적극성만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혁명적 이상주의와 평등주의로 특징되는 연안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³⁾

따라서 중국의 혁명경험은, 특히 연안시대의 혁명경험은 신민주주의론으로 대표되는 계급적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개혁주의 노선과 대중의 사상혁명과 정치주의에 입각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대중동원노선이란 두 가지 상이한 전통을 남겼다고 하겠다. 이 두 가지 중국혁명의 전통이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스탈주의적 고전적 사회주의체제와 결합하여 모택동 시대의 중국적 사회주의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3) 중국공산당의 연안 경험과 연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246~259 참조.

2. 人民民主主義와 中國의 社會主義의 建設

중국 공산당의 전국적인 승리가 임박한 1949년 6월 30일 창당 28주년을 기념하여 모택동은 「人民民主專政論」을 발표하여 공산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권의 성격과 과제를 밝혔다. 모택동에 의하면, 신정권은 기본적으로 신민주주의론의 연장선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기초로 하면서도 도시의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급적 연합에 기초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며,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과제는 소수의 착취계급과 정치적 반동계급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고, 교육과 민주적 설득의 방식으로 농민과 민족자산계급들의 개조를 추진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경제회복과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모택동은 중국의 낙후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산계급과 중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자본주의의 소멸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 유용한 모든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민족자산계급과의 단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

이와 같이 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론은 신정권의 임시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강령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공동강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자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여 “민주적 제 계급과 국

4)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選集 第4卷」(北京: 人民出版社, 1969), pp. 1357~1371 참조.

내의 각 민족을 결집한 人民民主專政을 실행하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하며 중국의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을 쟁취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공동강령은 신중국에서 각종 경제 형태, 이를테면 국영경제와 합작사 경제, 농민 및 수공업자들의 개인경제, 그리고 도시 상공업자들의 사적 자본주의경제 등이 국영경제의 지도 아래 분업, 협력하며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공동강령은 신중국에서 관료자본의 몰수와 점진적인 封建的 및 半封建的 토지소유제의 농민적 토지소유제로의 전환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신정권은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이다.⁵⁾

이처럼 건국 초기에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신민주주의 혁명론의 연장선에서 계급적 연합과 단결에 기초한 공산당 중심의 연합 정권기구의 구축과 새로운 정치질서의 건설, 그리고 국가경제의 회복과 사회질서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49년에서 1952년 사이에 공산당의 지도하에 다양한 민주정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기초로 각급 수준에서 각계의 대표로 이루어진

5) 1949년 9월에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공동강령 전문은 Harold Hinton, 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A Documentary Survey*, vol. I (Wilmington, Delaware: Scholarly Resources, Inc., 1980), pp. 51~55 참조.

인민대표회의를 조직하고, 각급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 물론 중앙과 지방의 인민정권의 구심점은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기구의 장악에만 만족하지 않고, 중국사회 각 분야에까지 급속도로 당조직을 침투, 확장하였다. 노동조합이나 농민협회와 같은 각종 대중조직을 매개로 중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부문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정권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부문과 사회영역에 대한 조직적인 침투와 재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개혁과 반혁명 진압운동, 3反 5反運動, 그리고 사상개조운동 등 대중운동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신정권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抗美援朝運動을 전개하면서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대대적인 토지개혁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1950년부터 1952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토지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매년 30만명 이상의 당원, 간부, 지식인들로 구성된 공작대를 편성, 농촌에 파견하여 貧農과 雇農을 중심으로 농민협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주계급에 대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토지에 대한 재분배를 실행하였다.

이같은 토지개혁으로 신중국에서 지주계급은 소멸되었으며, 약 3억명에 달하는 농민들에게 약 7억 畝(약 4천 6백만 헥타르)의 토지와 생산수단이 분배되었다. 이러한 토지개혁으로 농촌지역에서 봉건적 착취구조가 파괴되었고, 지주와 부농 중심의 농촌경제를 자

작농 중심의 신민주주의 경제로 개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토지분배에 참여한 광대한 빈농과 고용농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확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조직과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지배력을 급속도로 확장,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⁶⁾

또한 중국 공산당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관료주의의 병폐를 척결하고 국민경제의 질서와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시의 상공업자와 관료들을 상대로 하는 3반 5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전쟁의 特需로 번창하던 사적 자본주의 영역에 대한 당과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이용, 제한, 개조”의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지식인들의 사상개조운동을 통하여 이른바 구지식인들의 부르조아 반동사상의 영향을 제거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에 대한 당의 이념적 체계모니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은 건국 초기에 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권이 관철되는 전제에서 계급적 연합의 성격을 반영하는 정권기구의 수립,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공존을 용인하는 신민주주의 경제의 발전, 그리고 소수의 반동계급을 제외한 대다수 인민들의 단결과 협력을 바탕으로

6) 토지개혁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와 그로 인한 농민들의 새로운 자각과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William Hinton, *Fanshen: A Documentary of Revolution in a Chinese Villag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6) 참조.

정치적 안정과 국민경제의 회복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목표는 비교적 빠른 시일안에 성취되었다. 건국 3년 만에 중국 공산당은 국가기구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건설함으로써 당국가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전후 경제질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경제발전을 실현하였다. 1952년의 중국경제는 모든 면에서 해방 전의 최고수준을 회복함으로써 1949년 이후 3년간을 ‘중국경제의 부흥기’라고 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건국 초기의 이같은 성공의 밑바탕에는 오랜 전쟁과 혼란에 시달린 중국 국민들의 안정 기대심리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동시에 신민주주의론 = 인민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건국사업을 추진한 중국 공산당의 유연한 정책노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국 초기의 국민적 지지와 성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953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소련의 발전모델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적인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을 추진하면서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선언한 ‘과도기 총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1953년 8월에 모택동에 의하여 정식화된 ‘과도기 총노선’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서부터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하나의 과도기”이며, “이 과도기에서 당의 총노선과 총체적 임무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

의 상공업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⁷⁾

‘과도기 총노선’에서 제시한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에 대한 구상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건국 초기에 이미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들은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모택동은 「人民民主專政論」에서 중국경제의 낙후성과 공업화의 필요성, 그리고 점진적인 사회주의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준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모택동을 비롯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먼 장래의 일’이며, 중국의 형편을 고려할 때, 신민주주의 단계는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중국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당한 정도의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적 개조의 ‘물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즉 先工業化, 後社會主義的改造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革命的轉化를 선언한 과도기 총노선, 즉 신민주주의 혁명단계의 종결과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그리고 ‘사회주의 공

7) ‘과도기 총노선’에 대해서는 毛澤東, “黨在過渡期總路線,” 「毛澤東選集 第5卷」(北京: 人民出版社, 1966), p. 89;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 중국공산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서울: 사계절, 1990), pp. 203~205 참조.

업화와 사회주의 개조의 동시적 추진'을 선언한 1953년의 과도기 총노선은 과거의 신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급진적인 노선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당시의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사회주의 이행론을 완전히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과도기 총노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공업화의 착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1953년 당시 중국 지도부는 최소한 3차례에 걸친 5개년 경제계획을 달성함으로써 비로소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촌사회에서도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결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5개년계획과 과도기 총노선을 선언한 직후에도 여전히 중국사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혁명'의 방식에 입각하여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 관리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현대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스탈린적 발전정책의 집약적인 표현인 제1차 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의 정치와 경제제도는 급속도로 전형적인 당국가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변모되었다. 즉 1953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일원적 영도를 제도화하는 전형적인 당국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체제정비에 착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3년에 중

양과 지방에서 인민대표대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마침내 1954년 9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여 과도기 총노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명시한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에 기초한 당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련의 코스프란에 해당되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관리체제의 집중과 통일적 관리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가 완비되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당국가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고 1차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부 내부에서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특히 농촌사회에서 사회주의 개조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毛澤東과 鄧子恢의 논쟁은 스탈린과 부하린의 논쟁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하겠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이며 동시에 당의 농촌공작 부장으로서 농촌정책의 실무 책임자였던 등자회는 중국의 농촌사회에서 소농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개체경제와 부농경제를 이용하여 농촌사회의 경제발전과 안정을 구축하여야 하며, 농업집단화는 공업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대량의 기계와 비료공급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등자회는 현대공업 중심의 급진적인 산업화정책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파괴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현대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강조하는 급진적인 산업화정책은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설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농촌경제의 발전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농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농업과 공업의 동시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모택동은 농업집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력을 개체경제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비약적인 농촌경제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업화와 농촌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모택동은 공업화와 집단화의 상호 관련성을 간과하고 점진적인 농촌경제의 발전을 강조하는 등자회와 같은 일부 당간부들의 점진주의적이고 단계적인 사회주의적 개조론을 보수적인 견해라고 비판하였다.⁸⁾

이와 같은 모택동의 논리, 즉 급진적인 공업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부터 안정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모든 국가의 자원을 현대공업부문에 집중하면서도 농촌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집단화를 통한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동원과 관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모택동의 논리는 등자회의 점진적이고 단계론적 관점보다는 당시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더 호소력이 있었던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건국 초기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열망하던 중국 공

8) 농촌경제정책과 집단화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서진영, “중공의 농업정책,” 『아세아연구』, 25권 2호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pp. 4~6 참조.

산당의 지도부는 1955년 봄부터 1956년 사이에 농촌사회에서 대대적인 사회주의적 개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거에 거의 모든 농가들이 초급합작사에서 고급합작사로 전환되었으며, 동시에 도시 지역에서도 사영 상공업과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단행되었다.

이같은 급진적인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의 동시적 추진으로 중국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와 조직’에 의한 개편이 단행되었고 중국사회에 대한 당국가의 침투와 통제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계획적인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모든 국력을 집중함으로써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에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⁹⁾ 사실 1차 5개년계획은 1956년 8차 당대회에서 劉少奇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들의 적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업부문은 5년 동안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과거 중국에서 전혀 발전되지 않았던 분야, 이를테면 비행기와 자동차산업, 대형기계와 정밀기계 공업, 발전설비 제조업 등이 건설되었으며, 조강과 석탄 등 주요 공업부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공업노동자도 640만명에서 1천 300만명으로 증가되었다.¹⁰⁾

9)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조직’에 의한 중국사회의 개편에 대하여는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참조.

10) 1차 5개년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Nicholas R. Lardy, “Economic

이처럼 1차 5개년계획은 현대공업, 특히 중공업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이란 성과를 산출했지만, 동시에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과도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와 당국가체제에서 비롯되는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스탈린식 발전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모택동은 1956년 정치국 확대회의와 최고국무회의에서 「10대 관계론」을 제창하면서, 중공업, 경공업 및 농업의 관계, 연해공업과 내륙공업의 관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공산당과 민주당파간의 관계, 중화민족과 소수민족의 관계, 중국과 외국과의 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10대 관계, 또는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소련모델에서 파생되는 결점과 오류를 경계하였다.¹¹⁾ 또한 모택동은 ‘인민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명한 ‘雙百政策’(百花齊放과 百家爭鳴)을 천명하였고, 정치적으로 민주당파들과의 ‘장기공존과 상호감독’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1956년 당시 모택동은 급진적인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의 문제

Recovery and the 1st Five-Year Pla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4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144~184;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율김, 「정통 중국현대사」, pp. 215~219 참조.

- 11) 「10대 관계론」의 작성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Stuart Schram, “Chairman Hua Edits Mao’s Literary Heritage: On the 10 Great Relationships,” *The China Quarterly*, no. 69 (March 1977), pp. 126~135;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율김, 「정통 중국현대사」, pp. 219~222 참조.

점을 인식하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방식보다는 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론의 정신에 기초한 균형발전을 다시 모색하려고 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진주의와 온건주의 노선에로의 전환은 1956년 9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의 결의에도 반영되었다. 1945년에 개최된 7차 당대회 이후 11여년 만에 열린 8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승리와 전진을 위한 당대회였다. 지난 10년 동안 내전에서 승리하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기간에 성취했다는 점에서 8차 당대회는 승리의 당대회였으며, 동시에 급진적인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로 파생된 인민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당대회였다. 더구나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평화공존과 평화적 이행을 강조함에 따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8차 당대회는 새로운 국내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당의 지도이념과 지도체제, 그리고 발전전략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전환기적 당대회였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역사적 의미는 8차 당대회의 결의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8차 당대회는 첫째, 사회주의적 개조의 결정적 승리로 말미암아 중국사회에서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사이의

모순은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수천년을 지속해 온 계급 착취체제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종식되었고, 사회주의 제도가 이미 기본적으로 건설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둘째, 이같은 성과로 말미암아 중국이 당면한 주요 모순도 당연히 변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민들의 물질적 요구와 문화적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낙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모순이 바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모순이며,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과제도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셋째, 8차 당대회에서 周恩來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차 경제계획의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면서 지나친 冒進을 경계하였고, 각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였다. 넷째, 당과 국가의 활동과 관련하여 8차 당대회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과 국가제도의 민주화와 법제화의 필요성과 대중노선의 견지를 강조하였다. 끝으로 8차 당대회에서는 개인숭배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집단지도체제를 강조하였고, 모택동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에서 삭제하였다.¹²⁾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를 이미 기존

12) 중국공산당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당지도부의 주요 연설, 특히 당시 당부주석이었던 劉少奇의 「정치보고」, 당시 당 총서기로 선출되었던 鄧小平의 「당규약 개정보고」, 그리고 周恩來 총리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등의 영역 전문은 Hinton, 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pp. 360~333 참조.

사실로 수용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생산력의 발전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비교적 자유롭고 민주적인 당국가체제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8차 당대회 노선은 신민주주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제2차 5개년계획(1958~1962)의 내용을 분석하면, 그 핵심은 여전히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건설, 집단소유제와 전민소유제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주요 공업분야에서 생산목표량을 계획기간 내에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야심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차 5개년계획의 기본구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1956년 8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스탈린주의적 발전정책과 당국가체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단기간에 부강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란 목표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大躍進運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56년을 전후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스탈린주의적 발전모델에 따라 급진적인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국적 실정에 알맞는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것은 신민주주의 혁명시대의 경험에 입각하여 인민대중들과 다양한 계급들간의 단결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모택동은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결된 단계에서 중국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원칙적으로 ‘비적대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방식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며, 지식인과 민족자산계급들도 불만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하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에 참여하는 길을 개방한다면, 헝가리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적극성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른바 ‘百花齊放, 百家爭鳴’이란 자유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지식인들과 민주당파들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물론 이같은 지식인들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자유화정책에 대한 당내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공산당의 당풍쇄신운동 과정에 지식인들이나 민주당파와 같은 당외 인사들 동원,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당 관료들의 불만과 저항은 대단히 컸다. 그러나 모택동은 당의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지식인들과 민족자산계급들의 적극적인 비판을 오히려 장려하였다.¹³⁾

그러나 ‘인민내부의 모순’에 대한 모택동의 기대는 너무나 낙관적이었던 것이 곧 증명되었다. 백화제방과 백가쟁명의 방침에 따라 지식인들에게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자 이들은 모택동이 기대했

13) 모택동의 쌍백정책에 대한 당내의 불만과 저항, 그리고 당내에서의 논쟁에 대해서는 Roderick MacFarquha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Contradictions among the People, 1956-1957*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74) 참조.

던 건설적인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 공산당의 黨天下에 대한 혹독한 비난과 더불어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고, 심지어 공산당의 타도를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¹⁴⁾ 이와 같이 지식인들의 적대감이 예상 외로 큰 것에 놀란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맑스주의자는 어떤 사람의 비판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유연한 태도를 포기하고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1957년에 대대적인 反右派鬪爭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신민주주의 혁명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식인과 민족자산계급들의 협력을 얻어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실현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따라서 모택동은 또 다른 중국혁명의 경험, 즉 연안 공산주의의 전통에 입각하여 인민대중, 특히 농민들의 혁명적 열의와 잠재력을 동원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새로운 대규모적인 실험인 대약진운동을 추진하였다.

제2차 5개년계획의 첫 해인 1958년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중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1차 5개년계획 당시와 같은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과 스탈린 격하운동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도 白花齊放政策의 좌절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식인들

14) 백화제방운동 당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불만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Roderick MacFarquhar, ed., *The Hundred Flowers Campaign and the Chinese Intellectuals* (New York: Praeger, 1960) 참조.

이나 민족자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급속도의 공업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즉 제2차 5개년계획의 실천목표를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노선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도시부문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농촌경제의 ‘대약진’을 실현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대한 모택동의 응답이 바로 3面 紅旗運動, 즉 社會主義 總路線과 大躍進, 그리고 人民公事運動이었다. 이미 모택동은 1955년의 합작사운동 과정에서 당간부들이 농민대중들의 잠재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같은 ‘보수적 사상’을 극복하고 농민들의 혁명사상을 적극적으로 동원, 조직하면 농촌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1958년의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은 1955년의 小躍進運動의 확대판이었다. 다시 말해서 대약진운동은 농민대중의 무한한 혁명적 잠재역량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연안 공산주의의 전통을 원용하여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딜레마, 즉 자력갱생에 의한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모택동의 대실험이었다.¹⁵⁾

15) 대약진운동과 연안공산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Victor D. Lippit, “The GLF Reconsidered,” *Modern China*, vol. 1, no. 1 (January 1975), pp. 92~115; Kazuma Egashira, “Chinese-Style Socialism: Some Aspects of Its Origins and Structure,” *Asian Survey*, vol. 15, no. 11

그러나 대약진운동이나 인민공사운동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구상되었던 것은 아니다. 모택동이나 일부 지도자들은 1957년 후반기부터 모든 경제부문에서의 ‘大躍進’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추진했다기 보다는 농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분야에서 생산증대를 위하여 열의를 다하자는 일종의 생산배가운동의 형태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58년 초에 2차 5개년계획에 착수하면서 중국의 지도부는 「人民日報」를 통하여 “열의를 다하여 앞장 서서 전진하자”는 내용의 사설을 발표하고 모든 경제부문에서 ‘大躍進’을 쟁취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면서 통상적인 생산배가운동보다 강도 높은 증산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지방당 조직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수리사업과 기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업과 공업의 동시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농촌사회의 공업화운동과 더불어 토착적인 방식의 강철 제련운동이 전개되었다.¹⁶⁾

이런 과정에서 연안 공산주의의 정신, 즉 자력갱생과 집단주의 정신, 그리고 대중들의 자기 희생과 근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새삼 강조되었다. 특히 모택동은 대중들이 비록 빈곤하고 문화적인 수준도 낮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혁명적인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一窮, 二白)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적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들의 무한한 잠재적 생산력을 동원, 조직할 수만 있다

(November 1975) 참조.

16) 人民日報 社說, “鼓起幹勁, 力爭上游,” 「人民日報」, 1958. 2. 2.

면, “15년내에 영국을 따라 잡을 수도 있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인민들의 사상을 해방’시키고 인민대중들의 혁명적 열의를 고취하기 위한 대담한 제도개혁과 정책들이 실험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불평등,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下放政策, 소규모적이고 토착적인 지방공업의 건설, 대중교육과 문화시설의 확산, 그리고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확대 실시등은 모두 농민대중들의 혁명적 적극성을 고취하려는 것이었다. 人民公社도 바로 이같은 혁명적 발상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1958년 8월에 발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농촌에서 인민공사를 설립하는 문제에 관한 결의문」에 의하면, 농촌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협력, 조직의 군사화, 행동의 전투화, 생활의 집단화가 대중의 행동지침이 되고, 5억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과업은 기존의 농업생산협작사로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工, 農, 商, 學, 兵이 상호 결합되어 있는 政社合一의 人民公社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농촌사회에서는 불과 수개월 안에 종래의 고급협작사를 통합하여 대규모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가지는 人民公社가 등장하게 되었다.

모택동은 이와 같이 규모가 크고, 공유화의 정도가 높은(一大, 二公) 인민공사와 같은 조직체의 잇점은 우선 농촌의 노동력과 자원을 최대한도로 동원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농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자급자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농촌사회에서는 인민공사를 바탕으로 농민들의 혁명역량을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 활용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공산주의 사회에 이행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인 기대감이 팽배하면서 평등주의적인 분배와 집단주의적 생활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혁명역량을 동원하여 일거에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이룩하고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의 유토피아적 기대감은 곧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1959년에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을 비판하다가 숙청당한 당시 국방부장 彭德懷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급격한 농촌조직의 개편과 과도한 공유화의 확대, 그리고 지방간부들의 ‘좌익 모험주의와 뽀띠 부르조아적 열광성’에서 과생되는 평등주의와 이른바 共產風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급격히 위축되고, 농촌사회가 일대 혼란에 휩싸인 데다가 1959년과 1960년에 연이은 자연재해는 농촌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안겨 줌으로써, 대약진운동은 그야말로 대실패로 끝나게 되었다.¹⁷⁾

이처럼 자력갱생과 혁명정신, 그리고 인민공사와 같은 대규모 조직을 통한 대대적인 대중동원으로 농업과 공업의 동시적 대약진을

17) 대약진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팡덕회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彭德懷 國防部長の 毛澤東主席あての 意見書,”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中國大躍進政策の 展開-資料と 解説 下卷」(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4), pp. 358~360 참조.

달성하고, 공산주의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모택동의 발전전략의 실패가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대중에게 준 손실과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농촌경제의 와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식량난이 초래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영양실조와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¹⁸⁾ 또한 경제적인 효율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경제정책의 추진과 운영은 중국경제 전반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기인된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리더쉽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농촌 실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부까지 동요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건국 이래 최대의 정권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택동의 권위와 지도력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 노선투쟁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18) 일부 서방의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약 1천 6백만에서 2천 7백만명이 1958년부터 1963년 사이에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한 식량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농촌인구의 사망을 증가에 대해서는 Nicholas R. Lardy, "The Chinese Economy Under Stress, 1958-1965," Twitchett and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4, pp. 360~397 참조.

4. 文化大革命과 中國的 社會主義의 危機

1959년과 1960년의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모택동도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1961년에 대약진운동으로 초래된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른바 ‘8자 방침’, 즉 ‘조정, 공고, 충실, 향상’을 채택하고, 劉少奇, 鄧小平, 陳雲 등이 전면에 나서서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수습하고 경제회복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신경제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2년 1월에 중국 공산당은 ‘7,000인 대회’로 알려진 대규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도부의 자아비판을 실시하였다. 모택동도 대약진운동 과정에서 당중앙이 범한 과오를 인정하는 자아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의 기본노선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지방당 간부들의 착오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소련의 돌연한 지원중단과 같은 요인들이 대약진운동의 좌절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劉少奇를 비롯한 실무관료들은 대약진운동의 기본노선과 그 방법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정치사상 우선주의, 대중운동을 통한 경제발전전략, 과도한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조건과 경제법칙을 간과한 경제정책, 그리고 인민공사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비현실성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문제점 등이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¹⁹⁾

이와 같이 대약진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국 지도부 내의 견해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지만, 劉少奇, 鄧小平, 陳雲과 같은 실무 지도자들이 모택동의 권위와 모택동 사상의 좌경적 오류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모택동 사상과 구별되는 뚜렷한 이념이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현안이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조정정책과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 노선과 구별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것도 어떤 이념적인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편의적이고도 현실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1960년대 중국이 당면했던 심각한 경제위기는 실무책임자인 유소기, 등소평, 진운 등으로 하여금 경제회복과 사회질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정책이든 시도하려는 편의적이고도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입장은 등소평의 이른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론(黑猫, 白猫論)’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들은 ‘경제법칙’과 ‘객관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약진운동의 유토피아적 경향성을

19) 1962년 1월 11일부터 2월 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7천인 대회’에 대해서는 宇野重昭 外 이재선 옮김,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학민사, 1988), pp. 176~180;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 pp. 329~334 참조.

비판하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치와 사상혁명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紅에 대한 專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문 기술자와 관료, 경영계층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이 모든 경제활동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으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기업과 사업을 정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대약진운동 당시에 추진되었던 대규모 수리사업과 건설사업 등을 취소하고, 방만한 지방공업을 폐쇄하였으며, 대규모 인민공사를 축소, 조정하여 이른바 생산대와 생산대대, 그리고 인민공사의 3급 소유제로 정비하면서 그 중에서 최하위 단위인 생산대를 기본으로 삼았고, 분배정책에 있어서 평등주의적 경향을 억제하였다. 또한 이들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농민들의 自留地, 農家副業, 그리고 自由市場을 확대, 허용하였다.²⁰⁾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집단화와 사회주의적 경제의 통제력과 기능은 약화되고, 일부 농촌사회에서는 개별 농가

20) 인민공사제도의 정비와 농촌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경향성의 대두에 대해서는 Frederick W. Crook, "The Commune System in the PRC, 1963-1974,"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 Reassessment of the Economy*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pp. 366~310; Ahn Byung-joon, "Adjustments in the Great Leap Forward and Their Ideological Legacy, 1959-1962," in Chalmers Johnson, ed., *Ideology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3), pp. 257~300 참조.

에게 경제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單幹風이나 호별생산책임제가 실시됨으로써 인민공사가 해체되기도 하였다.

또한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은 경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예와 학술 영역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상당한 자율권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일부 지식인들은 계급투쟁보다는 계급적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여러가지 문예형식을 빌어 간접적으로 모택동의 과오를 풍자하기도 하였다. 특히 북경시 부시장이며 저명한 역사학자인 吳晗은 대약진운동 당시 이를 비판하다가 숙청당한 전 국방부 부장이었던 彭德懷事件을 풍자한 「海瑞罷官」이란 역사극을 발표하여 모택동과 좌파를 자극함으로써 마침내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중국사회 각 분야에서 모택동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던 대약진운동의 당노선에 대한 비판과 모택동 사상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더불어 실무 1선에서 물러난 모택동은 유소기와 등소평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었던 신경제정책의 ‘수정주의적 경향성’에 대하여 일찍부터 경고하였다. 1962년 9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8기 10중전회에서 모택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계급은 존재하며, 계급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통하여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역사적 시기”에 당의 기본노선은 계급투쟁과 계속혁명이며, 자본주의의 부활과 수정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²³⁾ 또한 모택동은 중소분쟁과 관련하여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당과 국가의 지도부까지 자본주의 세력이 침투하

여 이른바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走資派가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²²⁾

이처럼 계급투쟁과 계속혁명론을 강조하면서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중운동 방식의 경제발전정책을 여전히 후원하였다. 이를테면, ‘농업은 大慶에서 배우자’ 그리고 ‘공업은 大慶에서 배우자’라는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 집단주의와 대중적 자발성을 기초로 共同富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모택동은 팽덕회의 후임으로 국방부 부장으로 임명된 林彪를 중심으로 군부에서 모택동사상 학습운동을 전개하게 하였으며, ‘인민해방군으로부터 배우자’는 운동을 통하여 인

21) 1962년 9월 중국공산당 8기 10중전회에서 행한 모택동의 연설,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론에 대한 부분은 「新中國年鑑」(東京: 大修館書店, 1963), p. 321 참조; 문화대혁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과 계속혁명론에 대한 모택동의 견해가 형성, 구체화된 과정에 대해서는 加加美光行, 「現代中國のゆくえ - 文化革命の省察 II」(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86), pp. 139~160 참조.

22) 1960년대에 중소분쟁이 확대, 심화되는 과정에서 「人民日報」는 1963년 9월 6일부터 1964년 7월 14일까지 9회에 걸쳐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같은 중국측의 입장은 대부분 모택동이 직접 집필했거나, 또는 모택동의 지도하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중에서 1964년 7월 14일자 「人民日報」와 「紅旗」에 공동으로 발표된 “호루시초프의 가짜 공산주의와 그것이 세계에 주는 교훈”이란 글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지속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공산당내부에서 주자파 등장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대혁명시대의 논리를 이미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민해방군의 혁명사상을 사회 각 부문에 전파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 중국은 계급투쟁과 계속혁명론을 강조하는 모택동과 일부 급진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임표의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소기와 등소평이 대표하는 실무관료세력들로 구성된 實用主義派 혹은 右派가 형성되면서, 이들 두 세력간의 ‘숨은 노선투쟁’은 경제 정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예정책과 지식인 정책, 그리고 군사 안보 정책분야까지 확대, 심화되었다. 이처럼 대약진운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축적된 지도부 내부의 분열과 정책적, 노선적 차이와 갈등이 공개적이고도 폭력적으로 폭발한 것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11월 10일 상해의 급진적 문예비평가인 姚文元은 「신편 역사극 ‘海瑞罷官’을 평함」이란 글을 상해에서 발간되는 「文匯報」에 발표하고, 모택동의 대약진운동노선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吳晗과 吳晗의 지원세력을 격렬하게 비난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의 첫 포문을 열었다.²³⁾ 이와 같이 지식인 사회와 당 일부에서 확산되고 있

23) 姚文元, “新編歷史劇〈海瑞罷官〉を評す(1965년 11월 10일),” 東方書店 出版部 編, 「中國プロレタリア文化大革命 資料集成 第1卷」, pp. 217~218; Hint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pp. 1463~1472;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이 글은 모택동의 부인 강칭의 요청으로 당시 상해 시당위원회 선전부장이었던 張春橋의 추천을 받아 요문원이 집필하였고, 여러 차례 강칭을 통하여 모택동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 pp. 188~190 참조.

는 ‘수정주의적 사상’을 비판한 姚文元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劉少奇와 鄧小平, 그리고 彭眞의 영향하에 있었던 중앙당 선전부와 북경시당위원회, 그리고 팡진을 조장으로 한 문화혁명 5인소조는 姚文元의 글이 「人民日報」 등 중앙지에 게재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가급적 학술적 논쟁의 차원에서 축소 처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택동은 팡진과 북경시당위원회, 당선전부의 오류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이들의 해임과 개편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모택동은 1966년 5월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문화대혁명의 강령적 문건인 「5·16통지」를 통과시키고 陳伯達, 江青, 張春橋 등 좌파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대혁명 5인 소조를 개편함으로써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관습의 타파와 신사상, 신문화, 신풍속, 신관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화대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²⁴⁾

그러나 당내외에서 모택동과 좌파의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유소기와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당내 실권파들은 각지에 공작조를 파견, 문화혁명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당내 실권파의 소극적 방해에 직면하자 모택동은 造反有理의 기치를 내걸고 청년과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로 구성된 홍위병을 동원하여 당관료들의 저

24) 吳晗과 그 외의 반당, 반사회주의 부르조아계급의 대표자들을 비판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당내 실권파들과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한 「5·16 통지」의 전문은 Hint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pp. 1548~1551 참조.

항을 분쇄하려고 하였다. 특히 1966년 8월에는 「사령부를 포격한다-나의 대자보」를 공표하고 홍위병들로 하여금 당내 실권파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모택동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도자는 반동 부르조아 계급의 입장에 서서 부르조아 독재를 실행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질풍노도와 같은 문화대혁명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혁명적 대비관을 전개하고,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을 접수하는 脱權運動을 감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모택동과 좌파들의 주도하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8기 11중전회에서는 문화대혁명의 목표와 성격을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를 타도하고, 부르조아 계급과 일체의 착취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교육을 개혁하고, 문예를 개혁하고,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에 맞지 않는 모든 상부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즉 문혁의 목표는 실권파의 타도와 상부구조의 개혁에 있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²⁵⁾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양 각색의 홍위병들이 조직 동원되어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관습에 대한 파괴운동이 전개되었고, 각급 수준에서 실권파와 부르조아 대표자들에 대한 造反과 脱權運動이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과 국가기관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유소기와 등소평과 같은 대표적인 실권파들은 홍위병들에 의하여 굴욕적인 학대를 받고 숙청당했다. 상해와 같은 곳에서는 장춘교의 지휘하에 기존의 당과 국가기구를 타도하고 파리콤문의 이상에

25) 모택동의 대자보와 8기 11전중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Ibid., pp. 1553, 1565~1569 참조.

따라서 새로운 국가기구를 건설하려는 시도도 추진되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좌파의 공격과 탈권운동에 대한 반발과 저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각급 수준에서 구관료와 구간부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홍위병을 조직하거나 지방군의 지원을 받아 좌파의 공격에 대항하였으며, 이해관계와 이념적 성향이 대립하는 각종 홍위병과 대중단체들간의 갈등과 충돌이 확산, 심화됨으로써 중국은 순식간에 天下大亂의 상태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자 모택동은 1967년 군부개입을 지시하였고, 군부 주도하에 이른바 3결합의 원칙, 즉 혁명적 간부와 대중단체 대표, 그리고 군 대표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를 기초하여 당과 국가기구를 재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군부 주도하의 당과 국가기구의 재건이 강조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각급 수준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급성장하였다. 특히 임표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영향력은 모택동의 지도력에까지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따라서 모택동은 1971년 주은래의 지원을 받아, 임표 세력을 숙청하고 당과 국가의 재건과 정상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1973년에 등소평을 비롯한 일부 구간부들의 복권을 허용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혁명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

26) 상해에서의 탈권운동과 콤포문국가에 대한 희망과 좌절에 대해서는 渡邊一衡, “上海コミュニンの希望と挫折,” 加加美光行, 「現代中國のゆくえ-文化革命の省察 II」(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86), pp. 79~118 참조.

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여전히 문화혁명의 기본노선과 정책을 옹호하였으며, 江青, 張春橋, 姚文元, 王洪文 등 문화대혁명 4인방을 등용함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주은래와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파와 문혁 4인방의 좌파노선간의 권력투쟁과 정책논쟁, 그리고 노선투쟁이 계속되었다. 이같은 중앙 지도부의 분열은 각급 지방수준에까지 확산됨으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당과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중국사회에 대한 당국가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중국을 일대 혼란으로 몰고간 문화대혁명 10년(1966~1976)의 영향은 심각한 것이었다.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의 노선투쟁이 중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모든 분야와 지역에서 대립과 갈등이 확대, 심화됨으로써 중국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피해는 지역과 분야, 그리고 계층별로 조금씩 차별성이 있었다.

대체로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당정기구와 사회문화, 교육 분야에서 문화대혁명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1980년 당시 당조직부장을 역임하던 胡耀邦에 의하면, 1957년 반우파운동과 문화대혁명 10년간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약 1억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약간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도시인구 중 약 절반이, 또는 거의 모든 노동인구들이

문화대혁명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와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고급지식인들과 기존의 당정간부들은 대부분 홍위병들에 의하여 수정주의자, 또는 走資派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고, 숙청되었다. 지방당 고위간부 중에서 약 70~80%, 중앙당 간부 중에서 약 60~70%가 문화대혁명중에 숙청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300만명의 당정간부들이 문화대혁명과정에서 숙청되었다가 1970년대 말에 복권되었다. 이것은 전체 당정간부의 약 20%에 해당되는 숫자이었다.²⁷⁾

이처럼 문화대혁명은 도시지역과 지식인 사회, 그리고 당정간부들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사회의 발전에 엄청난 좌절과 후퇴를 초래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표면적으로 문화대혁명은 중국경제에 생각보다 덜 피해를 주었다고 하겠다. 대약진운동과는 달리 모택동과 좌파 지도자들은 문화대혁명이 생산분야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려고 하였고, 당권파들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대약진운동 당시와는 달리, 이상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구조개혁이나 분배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대혁명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그 이전 시기에 비교하여 발전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예상보다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²⁸⁾

27) 문화대혁명과정과 그 피해에 대해서는 Harry Harding, "The Chinese State in Crisi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pp. 107~117 참조.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대혁명이 중국경제의 구조적 발전을 저해한 것은 사실이다. 자력갱생과 대중들의 희생정신을 강조하면서 소비보다는 축적을, 개인의 창의성과 물질적 동기보다는 집단의 공동이익과 혁명사상을, 전문적 기술개혁보다는 대중운동 방식을 중시하는 모택동의 경제발전전략은 중국경제의 폐쇄성, 비효율성, 그리고 낙후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모택동과 좌파들은 대중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강조하면서 대중들의 생활개선 요구를 계속 유예하고, 여전히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高蓄積, 低消費政策을 추구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불만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二重性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중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모택동 개인숭배와 당의 일원적 영도를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造反有理와 같은 비판적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에 대한 교조주의적 경직성과 획일성을 강요함으로써, 전형적인 당국가제도와 전제주의가 결합된 봉건적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을 띠게 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자력갱생과 개인과 집단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도 엄격한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함으로써 대중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연안 공산주의와 스탈린주의적

28)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업적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Dwight H. Perkins, "China's Economic Policy and Performance,"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pp. 475~439 참조.

사회주의체제가 결합된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이중성은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켰고, 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信心의 危機를 자초함으로써 모택동의 사망과 더불어 덩소평의 대담한 개혁정치가 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겠다.

II. 鄧小平의 改革政權 登場과 歷史的 路線轉換

오늘날 중국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중국 맑시즘 60년 역사중에서 두 차례에 걸친 비약을 성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번째의 역사적 비약은 신민주주의론의 창출과 신민주주의 혁명의 성공이고, 두번째의 비약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추진된 덩소평 정권의 '제2의 혁명'이라는 것이다.²⁹⁾

이런 주장은 건국 이래 거의 30년 가까이 지속된 모택동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덩소평 정권이 등장한 이후 추진된 개혁·개방노선의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덩소평 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

29) 이같은 주장은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전당대회에서 당시 총서기였던 趙紫陽이 행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는 보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조자양의 연설 전문은 「中蘇研究」, 11권 4호 (1987 겨울), pp. 245~280 참조.

택동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중국적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제2의 혁명’ 또는 ‘중국 맑시즘의 제2차 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소평 정권이 등장한 이후 모택동 시대의 이데올로기, 정책, 제도 등에 대하여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등소평 시대의 중국은 모택동 시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대담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있는 개혁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개혁파들은 중국 인민들에게 일대 재난을 가져다 준 문화대혁명 10년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대담한 개혁정치가 등장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대혁명이 중국사회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당정간부와 지식인계층들은 문화대혁명과 좌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모택동과 좌파노선에 대하여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택동의 사망을 계기로 모든 반좌파세력들이 등소평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좌파에 대한 일대 반격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등소평은 바로 이같은 반좌파 연합세력을 규합하여, 모택동 시대의 계승을 강조하는 화국봉 체제를 밀어내고 ‘歷史的 路線轉換’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 華國鋒 政權에 의한 鄧小平의 復權

1970년 초 임표의 군부세력이 숙청된 이후 중국정치는 문화대혁명의 이념과 정책을 대변하는 문화대혁명 4인방과 그들의 추종세력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국무원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해 온 주은래와, 임표사건 이후 복권된 등소평이 대표하는 실무관료계급들이 대립 축을 형성하여, 이 두 세력간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이 지속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모택동과 주은래 등은 모두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간의 권력투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발전되었다.

문화대혁명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江靑과 張春橋, 姚文元, 王洪文 등 문혁 4인방은 대체로 이념과 선전부문을 장악하고 계급투쟁과 계속혁명론을 강조하면서 각종 대중운동을 통하여 주은래와 등소평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며, 주은래와 등소평 등은 기존의 관료와 간부세력들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단결, 그리고 경제발전을 강조함으로써 4인방의 공세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날카롭게 대립되는 두 세력간의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는 가운데 華國鋒과 葉劍英 등은 좌우파 모두와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1976년 1월 8일 주은래 총리의 사망은 문혁좌파와 실무관료파간의 권력투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은래의 뒤를 이어 어떤 세력이 국무원을 장악하느냐

는 문제는 양대 세력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4인방은 주은래의 후원을 받아 이미 제1부수상의 자격으로 국무원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등소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실무관료파들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던 주은래 추모 대중운동을 이용하여 좌파들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좌파와 실무관료파간의 갈등이 심화, 확대되자 모택동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국봉을 국무원 총리 대행으로 임명하였다. 모택동의 의도는 문화대혁명의 이념과 모택동사상을 견지하면서도 문화대혁명 4인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화국봉을 중심으로 중도세력을 규합하여 문혁 4인방세력과 실무관료파를 모두 견제하려고 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³⁰⁾

그러나 화국봉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이른바 4·5 천안문사건이 폭발하였다. 1976년 4월 4일 淸明節을 전후로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천안문에 모여 주은래를 추모하면서 모택동과 좌파를 비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4월 5일 북경시 당국은 민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군중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중폭동적인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좌파는 군중폭동의 배후인물로 등소평을 지목하고, 등소평의 숙청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따라서 4월 7일에 개최된 당중앙 정치국은 등소평을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시에 화국봉을 제1부주석 겸 국

30) 화국봉과 중도세력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Chang Chen-pang, "Why Hua Kuo-feng?," *Issues and Studies* (August 1976), pp. 15~30 참조.

무원총리로 공식 선임하였다.³¹⁾ 이와 같이 좌파는 등소평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들의 승리는 곧 반전되었다.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이 사망하였고,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6일 화국봉과 섭검영 등이 전격적으로 문화대혁명 4인방을 체포했기 때문이다.

화국봉에 의한 4인방 체포는 당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화국봉이 문화대혁명의 수혜자이었고, 문화대혁명 옹호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 화국봉은 건국 이후 모택동의 출신지인 호남성韶山을 관리하는 지방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모택동의 추천을 받아 1969년에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었으며, 1973년에 정치국원으로 발탁되고, 1974년에 국무원 공안부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대혁명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문화대혁명 受惠派이었고, 문화대혁명의 이념과 정책을 지지하는 범좌파세력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주은래의 후계자로서 화국봉이 임명되면서 문화대혁명 4인방과 화국봉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모택동의 사망을 계기로 당과 국가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4인방의 ‘음모’에 대하여 화국봉은 섭검영, 왕동홍 등 군부와 공안세력의 협력을 받아 4인방을 선제공격하였다.³²⁾

이와 같이 등소평과 문혁 4인방이 모두 숙청되거나 제거된 상황

31) 1976년 4·5 천안문사태와 화국봉의 등장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 pp. 400~403; 高阜·嚴家其, 「文化大革命 10年史: 1966-1976」(北京: 人民出版社, 1988), pp. 568~559 참조.

32) 4인방의 ‘음모’와 화국봉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660~708 참조.

에서 화국봉은 첫째,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공식 선언하고, 4인방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이른바 清查工作에 착수하였고, 둘째, 정치적 안정과 단결, 그리고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농업과 공업부문에서의 ‘대약진’을 제안하였고, 셋째, 무엇보다도 모택동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화국봉은 4인방을 숙청한 직후, “당과 군부, 그리고 인민 내부에 대혼란을 조성한” 4인방의 범죄를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안정과 단결, 그리고 무산계급독재의 바탕에서 天下大治를 이룩하는 것이 신정권의 목표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4인방세력의 청산을 주장하면서도 화국봉은 문화대혁명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산계급 독재하의 계속혁명론’을 옹호하였고, 또한 4인방에 대한 비판운동도 제한하려고 하였다. 즉 4인방에 대한 비판운동은 “철학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4인방을 부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공격의 목표를 4인방과 소수의 추종자들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좌파에 기초한 화국봉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었다.

사실 모택동 사상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화국봉의 입장에서 문화대혁명과 4인방에 대한 과도한 공격과 비판은 곧 자신의 권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대혁명과 4인방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더욱 강조하였다. 따라서 화국봉은 혁명과 생산을 대립적으로 파악한 좌경노선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혁명은 생산력

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적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되어야만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정치체제도 튼튼한 물질적 기초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산계급전정의 기본과제는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인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는 것이다.³³⁾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자들이 과거에 주장하던 唯生産力論의 관점을 수용하여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모택동 시대의 발전전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하였다. 다시 말해서 화국봉은 대중의 혁명적 능동성을 고취하는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강화하고 집체경제의 우수성을 발휘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대약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화국봉 정권의 정통성이 모택동의 유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모택동 시대의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계승, 발전하려고 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화국봉은 집권 초기에 「毛澤東選集 第5卷」을 편찬, 출판함으로써 모택동 사상의 계승자로서의 입장을 과시하였고, 동시에 유명한 2개의 凡是論을 제창하였다. 즉 1977년 2월 7일자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을 통하여 “무릇 毛主席이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가

33) 4인방을 숙청한 직후인 1976년 12월 10일에 북경에서 대규모 ‘全國大寨大會’를 소집하고, 기조연설을 통하여 화국봉 정권의 기본 구상을 체계적으로 발표하였다. 화국봉이 ‘전국대채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 전문은 「人民日報」, 1976년 12월 27일에 게재되었고, 이에 대한 간략한 분석은 서진영, “중공의 농업정책,” 「아세아연구」, 25권 2호 (1982. 7), pp. 43~45 참조.

굳건히 유지해야 하고, 무릇 모주석이 내린 모든 지시는 우리 모두 줄곧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대혁명 4인방에 대한 청산작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모택동 시대의 계승을 강조하는 화국봉 정권에 대하여 문화대혁명 4인방과 모택동의 좌경노선으로 폄박을 받았던 수많은 구관료와 간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화국봉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 문화대혁명 受害派들은 한편으로 4인방의 죄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비판과 청산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4인방에 의하여 숙청을 당한 등소평을 비롯한 구관료들의 복권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사실 화국봉 정권의 최대 난제 중의 하나는 등소평의 복권문제였다. 화국봉은 정권초기에 4인방에 대한 비판운동과 더불어 등소평에 대한 비판운동도 전개함으로써, 등소평의 복권을 가급적 지지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등소평의 지지세력은 당과 군부 내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1976년의 천안문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중적인 수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권력기반이 취약한 화국봉으로서는 등소평의 복권 요구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곧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화국봉 정권은 1977년 4월 경에 등소평의 복권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7월에 열린 제10기 3중전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소평의 전면적인 복권을 결정, 공표하였다.

2. '歷史的 路線轉換'

등소평의 복권을 결정한 1977년 7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0기 3중전회는 외형적으로 화국봉과 등소평 지지세력간의 타협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등소평을 과거의 모든 직책, 즉 당중앙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 복권시키는 공식 결정을 내렸으며, 또 한편으로 화국봉이 국무원 총리 겸 당중앙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하는 것을 추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소평의 복권에도 불구하고 화국봉은 외형적으로는 당과 군, 그리고 정부를 모두 장악한 막강한 위치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등소평의 복권을 계기로 화국봉의 정치적 입지는 실질적으로 급속도로 약화, 와해되었다.

등소평이 복권되면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모택동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광범위한 구관료와 당간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反左派聯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등소평은 이들의 정서와 요구를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기관 내부에 남아 있는 좌파세력에 보다 철저한 비판과 정풍을 요구하였고, 구관료와 간부들의 복권과 명예회복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모택동 사상과 모택동 시대의 정책을 계승하려는 화국봉의 凡是論을 공격하였다. 등소평은 이미 1977년 4월 당중앙에 보내는 서한에서 모택동 사상에 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모택동 사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교조적인 해석을 비난하였다.³⁴⁾

따라서 좌파와 화국봉의 범시론에 대한 비판운동은 등소평이 복

권한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테면 모택동 사망 1주년을 기념하는 1977년 9월 10일자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 3대 신문 합동사설을 통하여 등소평 지지 세력은 모택동 사상의 교조화를 비판하고, 모택동의 지시를 시간과 장소와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좌파와 화국봉의 범시론을 동시에 비판하였다.³⁴⁾ 특히 등소평은 모택동 사상의 핵심이 實事求是의 정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택동의 정책과 사상도 현실적 실천의 검증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이러한 등소평과 반좌파연합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1978년 5월 「光明日報」에 발표된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논문 발표를 계기로 공개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등소평의 후원을 받아 中央黨校 교장으로 복권된 胡耀邦의 지휘하에 작성된 이 논문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기준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쟁 과정에서 반좌파 개혁연합세력은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사회적 실

34) 등소평의 서한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 p. 445.

35)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 共同社說, “毛澤東思想求放光芒,” 「人民日報」, 1977. 9. 10.

36) 「實事求是」라는 기치를 내걸고 모택동 사상을 재평가하고 범시파의 이데올로기적 오류를 지적한 등소평의 주장에 대해서는 「鄧小平文選」에 수록된 「兩個凡是 不合馬克思主義」(1977. 5. 24), 「完整地準確地理解毛澤東思想」(1977. 7. 21), 「高舉毛澤東思想旗幟, 堅持實事求是的原則」(1978. 9. 16) 등을 참조할 것.

천뿐이며, 그런 점에서 맑시즘과 모택동 사상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모택동 사상의 교조화, 신비화를 추진한 좌파사상과, 모택동 사상의 맹목적인 수용을 강조한 화국봉의 범시론을 모두 非科學的이고 反맑시즘적이라고 혹평하였다.³⁷⁾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강화하면서 반좌파연합세력은 모택동 시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내의 좌파 세력을 숙청 하면서 좌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화국봉 지지세력을 무력화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숙청당한 주요 간부들의 복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1978년에는 당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반좌파 연합세력이 당 중앙위원회의 다수파를 장악한 가운데 1978년 12월에 중국공산당은 제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期 3中全會)를 개최하고,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였다.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 지지세력은 “대규모적인 대중적 계급투쟁”의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계급투쟁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모택동 시대의 좌경적 노선과의 결별을 명확히하였고,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그리고 국방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시기의 총체적 과업”이라고 규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長征”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개혁연합세력들은 1978년의 11기 3중전회에서 지난

37)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 pp. 444~450 참조.

1956년 8차 당대회의 결의문 정신, 즉 중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모순은 더 이상 계급간의 모순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향상을 바라는 대중들의 요구와, 이에 부응할 수 없는 중국의 경제적 낙후성에서 파생되는 것이란 점을 재확인하고, 계급투쟁보다는 계급간의 단결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당과 국가의 최대, 최고의 과제로 설정한 개혁과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담한 개혁과 개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3중전회는 첫째, 인민들의 ‘사상해방’을 제창하였고, 둘째, “생산력의 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모든 관리방식, 활동방식, 사상방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셋째,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주주의를 떠나서 중앙집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너무 적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法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끝으로 11기 3중전회는 중국의 문호개방을 선언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는 것이다.³⁸⁾

38) 1978년의 중국공산당 11기 3중대회 결의 내용은 「人民日報」, 1978. 12. 25 참조.

3. 改革聯合勢力的 内部的 葛藤과 鄧小平의 中國的 社會主義

등소평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혁연합세력이 11기 3중전회에서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한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즉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11기 3중전회의 ‘사상해방’ 정신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문화대혁명 좌파들의 교조주의적 사상을 비판할 것을 권장하였고, 그동안 신성시되었던 모택동 사상에 대해서도 實事求是의 정신에 기초하여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택동 시대에 실시되었던 좌경적 경제제도와 경제정책도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폐지하거나 수정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과거 20여년 동안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농민들의 개인부업과 자유시장을 허용하고, 개별 농가에게 일정한 생산량에 대한 책임만을 부과하는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1958년의 대약진운동 이후 중국의 농촌사회를 지배하던 인민공사제도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혁명적인 정책전환을 실시하였다.³⁹⁾ 또한 문호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39) 11기 3중전회 이후 농촌경제정책의 변화, 특히 농업생산책임제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인민공사제도의 붕괴에 대해서는 서진영, “등소평체제의 농촌경제정책,” 『亞細亞研究』, 27권 2호 (1983), pp 89~106 참조.

국가들로부터 자금과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개혁파들은 문화대혁명으로 폐지되었던 당과 국가 기구를 재정비하고, 좌파적 성향을 지닌 지도자들과 당 간부들에 대한 정리, 정돈에 착수하였다. 이를테면 문화대혁명 과정에 폐지되었던 중앙서기처를 부활하고 총서기제를 부활하여 개혁파의 胡耀邦을 신임 총서기로 선정했는가 하면, 역시 문화대혁명 당시 좌파에 의하여 박해를 받았던 陳雲을 중심으로 中央紀律檢查委員會를 개편, 강화하여 당풍쇄신을 추진하면서, 과거 문화대혁명 4인방이 조장한 “당내의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극복하려 하였고, 과거 좌파노선으로 폄박을 받았던 구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권과 명예회복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1982년 중국공산당 12차 전당대회 이전에 이미 화국봉의 지지세력은 당과 국가의 고위직에서 거의 숙청되었으며, 화국봉 자신도 당중앙 주석, 국무원 총리, 당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 자연스럽게 해임되고,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연합세력이 당과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처럼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연합세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순조롭게 당과 국가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정력적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채로운 당 경력과 권력자원을 소유한 등소평이란 구심점이 존재하였고, 등소평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좌파세력이 단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과 좌파들의 교조주의적인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 그리고 경제생활의 개선을 바라는 대중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하여 화국봉은 비록 모택동 말년에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당과 국가부문에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소평의 정치적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화국봉의 권력기반이 범좌파세력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문혁 4인방을 숙청함으로써 좌파세력 내부의 분열을 자초하였고, 모택동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국봉은 문화대혁명의 이념과 모택동 시대의 정책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모택동이 사망한 이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한 반좌파연합세력의 이념적, 정치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반좌파연합세력은 모택동의 사망과 문혁 4인방의 숙청, 그리고 등소평의 복권을 계기로 좌파의 영향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제거하였고, 과거의 실용주의적 노선의 연장선에서 3중전회의 결의에 쉽게 합의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의 신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다.⁴⁰⁾ 그러나 반좌파연합세력이 모두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좌파노선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40)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교정이란 차원에서 개혁정치의 기원을 분석한 것으로는 Lowell Dittmer, "The Origins of China's Post-Mao Reforms," Victor C. Falkenheim and Ilpyong J. Kim, eds., *Chinese Politics from Mao To Deng* (New York: Paragon House, 1989), pp. 41~65 참조.

성향이 다른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좌파가 제거되고 개혁과 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대하여 개혁 연합세력 내부의 견해 차이가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3중전회에서 제기된 사상해방과 모택동 사상의 평가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체제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반좌파 연합세력 내부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와 이념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담하고도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는 진보적 개혁파와 기존의 체제와 이념을 고수하는 범위 안에서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을 주장하는 보수적 개혁파간의 異見은 개혁정치 초기 단계부터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개혁 연합세력 내부의 異見과 葛藤을 촉발시킨 첫번째 사건은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있었던 ‘북경의 봄’이라고 알려진 반체제적 지식인들의 민주화운동이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당국가체제에 대한 비판운동의 역사는 짧은 것은 아니다. 1956년 ‘白花齊放과 白家爭鳴’의 시기에 이미 黨天下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1973년에는 관료특권계급의 지배와 사회주의 파시즘을 통렬히 비난하는 이른바 ‘李一哲 大字報’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⁴¹⁾ 따라서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들은 1978년 3중전회의의 개혁,

41) 중국의 반체제운동에 관해서는 Susan L. Shirk, “Going Against the Tide: Political Dissent in China,” *Survey*, vol. 24, no. 1 (Winter 1979); Kjeld Erik Brodsgaard, “The Democracy Movement in China, 1978-1979,”

개방노선에 의하여 고무되고, 또한 대담한 사상해방을 표방하는 당내 진보적 개혁파의 정책에 자극을 받아 「4·5論壇」, 「北京之春」, 「探索」 등 비판적 잡지를 출판하고,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활발한 비판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반체제운동 내부에서도 분열되어 있었지만, 광범위한 인민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대담한 체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魏京生과 같은 반체제인사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초 위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사회구성원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건설이야말로 4개 현대화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던 王希哲은 중국의 봉건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관료특권계급의 독재와 사회주의 파시즘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맑스의 파리콤문 정신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²⁾

Asian Survey (July 1981); Stanley Rosen, "Guangzhou's Democracy Movement in Cultural Revolution Perspective," *The China Quarterly*, 101 (March 1985), pp. 1~31; James D. Seymour, ed. *The Fifth Modernization: China's Human Rights Movement, 1978-1979* (New York: Human Rights Publishing Co., 198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42) 왕희철에 관해서는 江振昌, "大陸青年民主闘士 王希哲," 「匪情月報」, 24卷 8號 (1982), pp. 39~44; Edward Friedman, "The Societal Obstacles to China's Socialist Transition: State Capitalism or Feudal Fascism," in Victor Nee and David Mazingo, eds., *State and Society*

이와 같이 반체제 민주파들은 사회주의체제, 특히 당국제도와 계획경제체제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급진적인 정치적, 경제적 체제개혁을 요구하였다. 물론 이같은 급진적인 민주화와 체제개혁의 요구는 아직 중국사회의 광범위한 계층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중국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이 팽배하였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대중들의 생활개선에 실패한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보수적인 지도자들은 급진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이 사회주의에 대한 信心의 危機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체제 민주파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11기 3중전회의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반체제 민주파들의 급진적인 체제개혁운동이 확산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연합세력 내부의 보수파의 반발이 고조되자, 덩소평은 ‘극단적 민주화’와 ‘무정부적 사상’을 경고하면서 魏京生과 같은 반체제인사를 체포하고, ‘민주의 벽’을 규제하는 동시에, 1978년 헌법에서 보장된 4대 자유, 즉 ‘大鳴, 大放, 大辯論, 大字報’의 규정을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덩소평은 이른바 「4個 基本原則을 堅持하자」는 연설을 통하여 개혁·개방과

in Contemporary Chin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148~171 참조.

사회주의의 견지라는 원칙을 동시에 표방하였다. 즉 덩소평은 1979년 3월에 개최된 당의 이론사업 원칙연구회에서 ‘4개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첫째,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무산계급 독재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4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개혁정치가 사회주의의 포기이거나, 또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⁴³⁾

따라서 덩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개방으로 상징되었던 11기 3중전회의 정책노선과 덩소평이 1979년에 제시한 4개 기본원칙의 견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이때부터 덩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를 ‘1개의 중심(경제발전과 현대화)과 2개의 기본점(개혁·개방과 4개 원칙의 견지)’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경제발전과 현대화라는 중심적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담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그것은 4개 기본원칙 견지라는 범주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덩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정책노선, 개혁과 개방노선과 4개 기본원칙의 견지가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중전회의 정신이 자유화, 개방화, 다

43) 덩소평의 이른바 4개 원칙에 대해서는 「鄧小平文選」(北京: 人民出版社, 1984), pp. 144~174 참조.

원화에 있었다면, 4개 기본원칙은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란 점에서 상호 갈등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정치는 덩소평의 리더쉽이 관철되는 가운데 3중전회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대담한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적 개혁파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보존하려는 보수적 개혁파간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타협을 통하여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Ⅲ. 中國의 改革政治와 中國的 社會主義의 發展과 試鍊

‘1개의 중심과 2개의 기본점’을 표방하는 덩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경제발전 제일주의의 관점에서 대담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도 현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려는 일견 모순적인 정책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런 모순적인 정책노선은 반좌파 연합세력 내부의 진보적 개혁파와 보수적 개혁파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천하려는 덩소평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이런 점에서 개혁정

44)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갈등과 노선 투쟁, 그리고 조정과 균형자로서의 덩소평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진영, “고뇌하는 중국적 사회주의,” 『新東亞: 별책부록』 (1991. 1), pp. 160~172 참조.

치에 대한 등소평과 고르바초프의 전략적 접근법의 차이점이 있으며, 경제개혁 중심의 중국의 개혁정치와 정치개혁 중심의 소련의 개혁정치의 차별성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⁵⁾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등소평의 경제개혁 중심의 단계적인 개혁정치는 소련과는 달리,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지도부 내의 異見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정치적 타협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던 등소평의 리더십의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개혁 연합세력들 내에 경제발전 제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확대되고 기존의 체제와 이념의 문제가 대두하면서 개혁연합세력 내부의 진보적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모순과 밑으로부터의 체제변혁 압력의 증대,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등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도 중대한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1989년의 천안문 유혈사태는 이같은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를 표출한 것이었다.

45) 중국과 소련의 개혁정치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Nicolas Lardy, "Is China Different? The Fate of Its Economic Reform,"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91), pp. 147~162 참조.

1. 妥協과 調整의 改革政治(1979~1984)

1978년의 3중전회에서 중국의 개혁 연합세력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빠져 있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여 인민대중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농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좌파의 농촌경제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물론 이 당시 등소평을 포함하여 개혁 지도부는 인민공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민공사와 같은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제단위보다는 개별 농가나 소규모 생산집단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의 사적 경제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 허용하였으며, 평등주의적인 분배정책을 비판하고 '일부 지역, 일부 농민들이 먼저 부유해 지는' 차등적 발전을 장려하였다. 특히 개혁 지도부는 일정한 경작지와 생산량을 개별 농가에게 할당하고, 책임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업생산책임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농업생산책임제는 토지와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집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용권을 개별 농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농업생산책임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농촌사회의 경제

활동을 통제해 왔던 인민공사제도의 기능이 사실상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초기에 중앙정부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한하여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하려고 하였고, 집체경제의 골격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업생산책임제와 개체경제는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여 급속도로 중국의 농촌사회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와 동시에 인민공사제도가 해체됨으로써 모택동 시대와 같은 집체경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하겠다.⁴⁶⁾

이와 같이 농촌경제정책의 개혁은 지도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모택동 시대의 사회주의적 농촌경제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 중국의 농촌사회는 실질적으로 1950년대 초, 농촌합작사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부 보수파 지도자들과 농촌지역 간부들은 개혁파의 농촌경제정책이 건국 이후 천신만고 끝에 건설한 사회주의적 집체경제 구조를 하루 아침에 파괴하였고, 그것은 여러 가지 反社會主義的인 副作用을 산출했다고 비난하였다. 사실 농민들의 ‘자본주의적 성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등소평 정권의 농촌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농촌사회에서는 그 어느

46) 농업생산책임제의 실시에 따른 인민공사의 해체와 사회주의적 농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Kathleen Hartford, "Socialist Agriculture is Dead," in Elizabeth Perry, ed.,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Cambridge: Th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 31~61; 小島麗逸, "農業, 農村組織 40年," 山内一南 等 編, 「中國經濟の 轉換」(東京: 岩波書店, 1989), pp. 111~151 참조.

때보다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었고,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공동체의식이 파괴되고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 체제의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경제개혁은 일반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과거 20여년 동안 정체되었던 중국의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농촌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했기 때문에 보수파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사실 1978년 이전 26년간 농업 총생산량의 평균성장율은 2.6%에 불과했는데, 1978년 이후 1988년까지 10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6.5%이었고, 특히 1978년에서 1984년 사이에 괄목할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농가소득도 1978년에서 1984년 사이에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⁴⁷⁾

이와 같은 실적으로 말미암아 등소평 체제의 농촌경제 개혁정책에 대한 보수파들의 반대는 별로 설득력을 획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농촌경제 개혁정책에 대한 지도부 내부의 異見과 葛藤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이념과 체제문제에 대한 개혁연합세력 내부의 異見은 일찍부터 표출되었다. 특히,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의 평가문제, 그리고 정치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견해 차이는 심각하였다.

이를테면 진보적 개혁파들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꺾박을 받은 많은 계층들의 정서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47) Liu Guoguang, "A Sweet and Sour Decade," *Beijing Review* (January 2-8, 1989), pp. 22~29 참조.

모택동과 좌파노선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도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의 오류에 대한 보다 철저 비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혁명과정에서,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과정에서, 모택동이 담당했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에 대한 비판운동을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을 추진하듯이 할 수 없다는 데에 개혁파들의 고민이 있었다. 더구나 보수적 개혁파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모두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택동 사상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같은 보수파의 견해는 1979년 9월에 葉劍英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30돐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에 반영되었다. 이 연설에서 葉劍英은 중국혁명과정과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모택동의 공로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모택동의 지도하에서 이룩한 업적은 “위대한 것”이며, 만일 “이 위대한 성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葉劍英은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었고 ... 인민들이 기울인 간고의 노력에 비하여 볼 때, ... 우리가 거둔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모택동을 비롯하여 과거의 당 지도부의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모택동 사상이란 모택동 개인의 창조물이라기 보다는 “당과 인민의 집체적 지혜의 결정체”라고 주장함으로써, 모택동 개인의 과오와 당의 지도이념인 모택동 사상과의 분리를 시도하였다.⁴⁸⁾

葉劍英의 이와 같은 논리는 그후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1981년 6월에 개최된 제11기 6중전회는 「建國 이래 黨의 약간의 歷史問題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1949년 이후 당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국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30여년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모택동의 공과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민들에게 '대재난'을 가져다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과 같은 과오를 비판하는 타협안을 채택하였다.⁴⁹⁾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에 대한 평가 문제와 함께, 중국 개혁정치의 중요한 논쟁점 중의 하나는 정치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진보적인 개혁파들은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당과 국가제도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이었던 廖蓋隆은 西歐의 3권분립 원칙을 도입하여 당과 국가기구의 대담한 제도개혁을 실천

48) 葉劍英, “在慶祝 中華人民共和國成立 三十周年大會上的 講話,” 「人民日報」, 1979. 9. 30.

49) 1981년 6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통과·공포된 「關於建國以來 黨的若干 歷史問題的 決議」의 본문은 「人民日報」 1981년 7월 1일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역사결의」의 전문 번역은 중국공산당 중앙문헌 연구실 편, 허원 옮김, 「정통 중국현대사」, pp. 17~64 참조;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설은 David S. G. Goodman, “The 6th Plenum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ook back in Anger,” *The China Quarterly* (September 1981), pp. 518~527을 참조할 것.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⁰⁾ 등소평도 「目前的形勢와 任務」, 「黨과 國家 領導制度의 개혁」이란 연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법제의 강화를 강조하였고, 黨政分離와 집단지도체제의 확립, 그리고 老幹部의 은퇴를 제도화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였다.⁵¹⁾

그러나 이와 같은 진보적 개혁파들의 의욕적인 정치개혁 방안은 당 내부의 보수파들의 견제로 말미암아 축소, 조정되었다. 보수파들은 중국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는 기존의 당국체제의 제도적인 결함에서 유래한다기 보다는 민주집중제와 같은 레닌주의적인 당의 전통이 문화대혁명으로 와해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1956년의 제 8차 당대회에서 확립된 당국가체제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권력집중과 관료주의와 같은 문제는 당의 정치공작과 조직공작을 강화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보수파의 반대로 말미암아 진보적 개혁파들의 대담한 제도개혁 구상은 상당히 후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82년에 개최된 12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中國共產黨 章程」과

50) 이른바 「庚申改革方案」으로 알려진 廖蓋隆의 체제개혁론에 대해서는 廖蓋隆,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방향,” 柳世熙 編, 「오늘의 中國大陸」(서울: 한길사, 1984), pp. 135~153; 曲國藩, “中共體制改革的 措施與發展,” 「匪情月報」, 25卷 2號 (1983), pp. 11~23을 참조.

51) 등소평의 연설문 전문은 「鄧小平文選」, pp. 203~237, 280~302에 수록.

1982년의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된 「中華人民共和國 憲法」은 기존의 당과 국가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의지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되었던 당과 국가기구의 재정비와 조직의 합리화, 제도화를 강조하는 것이 되었다.⁵²⁾

물론 1982년의 新黨憲과 新憲法이 진보적 개혁파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을 대폭 확충하였다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 점, 그리고 고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노간부의 점진적인 퇴진을 제도화한 것 등은 진보적 개혁파들의 정치개혁의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치개혁의 내용은 진보적 개혁파들이 구상했던 대담한 제도개혁, 즉 기존의 黨國家體制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52) 1982년에 통과된 당헌과 헌법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적 개편과 인사개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서진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서진영 편, 「현대중국의 정치와 사회변동」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6), pp. 39~97 참조.

2. 改革·開放의 深化(1984~1989)

중국의 개혁정치는 개혁을 주도하는 지도층 내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이견이 노출되면서 3중전회의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타협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기존의 맑스·레닌주의, 그리고 모택동 사상이 여전히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강조되었고, 당국가제도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제도개혁만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2년 12차 전당대회 이후 당과 국가의 영도간부에 대한 세대교체 작업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간부의 노화현상을 극복하고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젊고,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실무간부의 등장이 요구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혁파는 당과 국가의 각급 수준에서 세대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新進 技術官僚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1985의 임시당대회에서 이같은 세대교체 작업이 당과 국가의 고위급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葉劍英을 비롯한 많은 老幹部들이 제2선으로 물러나고 胡耀邦, 趙紫陽, 李鵬과 같은 이른바 第2梯隊의 인물과, 40~50대의 第3梯隊에 속하는 신진세대들이 당과 국가의 영도적인 지위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⁵³⁾

이와 같은 세대교체로 일선 개혁파들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가운데, 개혁파들은 정치개혁보다 경제개혁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53) 1985년 임시 당대회 이후 인사개편과 세대교체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pp. 78~95 참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중국의 지도층은 예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지만,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보수적인 지도층 까지도 생산력의 발전을 중국이 당면한 최고, 최대의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의 수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개혁파 지도자들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농업생산책임제의 성공에 힘입어 도시부문의 국영기업에까지 생산책임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4년 10월에 중국공산당 제 12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전면적인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개혁파들은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제창하면서, 상품경제의 발전과, 시장과 계획의 결합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영기업을 비롯한 도시부문의 경제관리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야심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⁵⁴⁾

「경제체제에 관한 결정」에서 개혁파 이론가들은 그동안 중국에서 사회적 생산력의 증가속도가 늦고, 고도의 노동생산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당과 행정기구가 지나치게 기업활동을 통제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경제의 역할, 가치법칙과 시장의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과 기업의 분

54) “中共 中央, 關於經濟體制改革的 決定,” 中國共產黨 中央文獻研究室, 「11屆 3中全會以來 重要文獻選讀 下卷」(北京: 人民出版社, 1987), pp. 766~795 참조.

리와 기업의 자율권 확대를 강조하였고, 확실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상품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개혁파들은 1984년 이후 경제계획, 경제관리, 가격 및 임금구조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즉 계획경제의 영역을 축소 조정하고, 시장경제의 영역을 점차로 확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의 가격정책에 묶여있던 상품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고, 민간기업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국영기업에서도 ‘계약책임제’ 등을 실시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자율화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같은 경제개혁으로 말미암아 중국경제와 중국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1987년 여름의 통계에 의하면 12,398개의 대형 국영기업 중에서 약 75%가 청약책임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국가에 의하여 할당된 책임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私企業의 비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78년 당시 사기업은 모두 30만개 정도이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력도 약 33만명에 불과하였는데, 1988년에는 사기업의 수가 1,413만개로 증가하였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력도 2,624만명에 이르게 되었다.⁵⁵⁾

55) 천안문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사기업이나 개인경영 기업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Thomas B. Gold, "Urban Private Business in China," i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2, no. 2 and 3 (Summer · Autumn 1989), pp. 187~202 참조.

이와 같이 대담한 경제체제의 개혁안에 반영된 개혁정신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자본주의적인 요소’라고 비판을 받았던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적 요소를 전국적으로 도입, 실시하려는 개혁파의 이같은 시도는 당연히 중국의 지도층 내부에서, 그리고 중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과 논쟁을 촉발하였다. 농촌경제개혁에 이어 도시부문의 국영기업의 개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같은 개혁은 중국사회의 모든 계층들의 직접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경제의 체제개혁은 농촌경제개혁보다 그 파급 효과도 크고 심각하였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개혁정치로 나타났던 농업경제의 성장율이 1985년을 계기로 둔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추진된 도시경제의 구조개혁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혼란을 더욱 악화시켰고, 그동안 개혁의 성과에 가려져 있던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한꺼번에 표출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지도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정치의 범위와 속도, 그리고 방향과 관련하여 심각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경제는 앞에서 말한 도시부문의 경제체제 개혁이 확대 심화되면서, 경기과열과 통화팽창,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

되면서 지역적, 계층적 분화와 갈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하였으며, 관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황금만능의 사조가 팽배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信心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1978년 이후 꾸준히 확대해 온 문호개방정책의 결과, 서방세계와의 접촉과 교류가 증가되면서 ‘정신오염’과 ‘자산계급 자유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보수적 지도자들은 경제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고 ‘자산계급 자유화 사조’에 대한 사상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보수파의 견해는 1986년 9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2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社會主義的 精神文明 建設의 指導方針에 對한 決議」에 반영되었다.⁵⁶⁾

사회주의 정신문명에 대한 강조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82년 12차 전당대회에서 胡耀邦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중국적 사회주의의 두 가지 과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 덩소평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1986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에 대한 당의 결의가 반드시 보수파의 견해만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중국의 지도층 내부에서 개혁정치 속도와 방향과 관련하여 심각한 정치적,

56) “中共中央 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 指導方針的 決議,” 「11屆 3 中全會以來 重要文獻選讀 下卷」(北京: 人民出版社, 1987), pp. 1152~1169 참조.

이념적인 논쟁이 재연되는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교육운동을 강조하는 보수파의 견해를 반영한 당의 결의가 채택되었다는 것은 개혁정치의 장래와 관련하여 暗影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 당시 당의 지도층 내부와 지식인 사회에서는 개혁의 심화나 또는 개혁의 축소조정이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진보적인 개혁파의 입장은 1984년 12월 7일자 「人民日報」에 발표되어 물의를 일으켰던 “理論과 實際”라는 논문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이 논문에서 진보적인 개혁파들은 맑스·레닌주의가 언제나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4항 기본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⁵⁷⁾ 또한 이들은 개혁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이를테면 관료의 부패라든가 물가불안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新舊體制의 과도기에 불가피하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수파들은 1985년 6월에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彭眞의 연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젊은 세대가 부패해 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를 떠나서는

57) 人民日報 評論員의 이름으로 발표된 「理論與 實際」의 전문은 「人民日報」, 1984. 12. 7. 참조; 이 논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서진영,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모택동과 등소평의 마르크스주의 비교,” 「이론」, 제3호 (1992 겨울), pp. 94~113 참조.

그 어떤 해결책도 강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4항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개혁으로 파생된 문제를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지도층 내부에서 개혁정치의 장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86년 12월에 安徽省 合肥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사태는 당내 보수파로 하여금 급진적 개혁파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合肥에서 약 5000명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자, 중국의 보수파 지도자들은 강경한 反資產階級 自由化運動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보수파들은 학생시위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이유로 당시 진보적 개혁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호요방 총서기를 ‘정치원칙상의 중요한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퇴진을 강요하였다. 이같은 보수파의 정치적 공세로 말미암아 호요방은 1987년 1월에 자아비판을 함과 더불어 총서기의 직책에서 사임하였고, 당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던 당내 진보적 지식인들 중에서 方勵之, 王若望, 劉賓雁 등이 제명되었다.

3. 天安門 民主化運動과 中國的 社會主義의 危機(1989~현재)

1986년의 反資產階級 自由化運動과, 1987년의 호요방의 퇴진 등

으로 표출된 것처럼 개혁정치에 대한 보수파의 반발이 당내에서 고조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개혁파의 완전한 정치적 패배나 개혁 정책에 대한 후퇴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개혁파들은 호요방의 후임으로 임명된 趙紫陽 總書記를 중심으로 개혁의 심화를 계속 주장하였다.

198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조자양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는 연설을 통하여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제창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근본임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중국의 빈곤과 낙후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산력 발전을 모든 공작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조자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체제 개혁의 전개와 심화에 따라 정치체제의 개혁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⁸⁾ 이같은 개혁파의 정책노선에 따라서 13차 전당대회 이후에도 경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식제도의 도입과 금융제도의 개혁, 가격 및 임금구조의 개선 등이 실현되었고, 개혁파들은 이른바 國際大循環論을 제기하면서 沿海岸地區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의 심화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혼

58) 13차 당대회에서 조자양이 제기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서진영,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중국적 사회주의,” 「國際政治論叢」, 제29집 2호 (1989), pp. 283~294 참조.

란이 극심한 양상으로 나타남으로써 개혁정치는 일대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개혁정책의 부산물로 나타난 경기과열과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1988년에 심각한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1988년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17.7%에 달했고, 주요 도시의 경우, 30%를 넘게 되었다. 이같은 물가양등의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와 투기현상마저 촉발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1988년 9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3기 3중전회는 개혁의 심화와 함께, 보수파의 견해를 반영한 治理整頓의 정책, 즉 경제환경의 정비와 경제질서의 정돈을 강조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李鵬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실무관료 경제팀이 등장하여 개혁과가 주도했던 가격개혁을 연기하고, 긴축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진보적인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갈등이 이로써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심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개혁파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는 보수파 사이의 정책논쟁과 권력투쟁은 더욱 격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실 1988년에 경제환경의 정비와 경제질서의 정돈을 강조하는 이붕의 경제팀과 여전히 개혁의 심화를 강조하는 조자양의 개혁파들 사이의 논쟁은 당의 각급 회의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안정 속의 개혁과 발전의 논리를 강조하는 보수적 견해와 정치적 민주화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견해가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특히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점차로 보수화로 기울고 있는 당의 개혁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소련에서 전

개되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동구에서의 변혁운동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경제개혁의 심화와 더불어 보다 과감한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보수적인 지도자들을 자극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문사건이 폭발하게 되었다.

1989년 4월 15일 호요방 前總書記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 천안문광장에서의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 초기 단계에는, 그것이 1919년의 5·4운동에 비견할 만한 대규모 군중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호요방 전총서기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일부 지식인들의 천안문광장에서의 시위에 대한 당의 대처가 보수파와 진보파의 견해차이로 지연되면서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급속도로 대규모 민중운동으로 발전됨으로써 등소평 정권 최대의 정치적 위기국면을 초래하였다.

물론 천안문시위에 참가한 대중들이 모두 민주화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부분 시민들은 이른바 官倒라고 알려진 관료의 부정과 부패,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엄청난 물가고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민주화운동과 결합하여 천안문사건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들의 불만에 정치적 성격을 부여한 것은 역시 학생과 지식인들의 민주화운동이었다.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부정과 부패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관료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특히 당내의 노선투쟁에서 조자양을 지지하던 진보적 지식인들은 보수파에 의한 조자양의 정치적 패배가 분명해지자, ‘노인정치’의 종언, ‘독재와 전제정치의 매장’을 주장하면서, 등소평과 보수적인 원로들을 직접 공격하였으며, 일부 급진적인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공산당 타도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천안문의 민주화운동이 급진적인 정권타도와 체제변혁운동으로 발전해가자 등소평을 비롯한 당내의 보수파들은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반혁명세력에 의한 ‘동란’으로 규정하고 무력진압을 결심, 단행함으로써 중국에서 민주화운동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

결국 천안문 유혈사태는 그동안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 조정하던 등소평이 민주화시위를 체제위기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후계자로 지원해왔던 조자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진보적 개혁파의 유화적 해결책을 배척하고, 보수파의 강경노선을 수용, 무력에 의한 진압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등소평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대하여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보수파의 정책노선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천안문사태 직후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의 3중전회의 노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趙紫陽의 後任 總書記 선출과정에서도 보수파를 대변하는 李鵬이나 楊尙昆의 등장을 저지하였다. 등소평은 비교적 개혁적이라고 알려진 上海市長 姜澤民을 새로운 총서기로 추천하면서, 강택민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도층들이 단결하여, 1987년 당대회에서 결정된 방침, 즉 治

理整頓과 深化改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⁹⁾

그러나 덩소평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간에 천안문사태 직후 전개된 東歐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그리고 소련의 정치적 혼란과 붕괴 등은 중국의 지도층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천안문사태 이후 한동안 개혁의 심화보다는 정치사회와 경제적 안정을 더욱 강조하였다. 즉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안정과 단결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역설하면서 姜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체제를 강화, 안정화시키려고 하였고, ‘반자산계급 자유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治理整頓’의 정책노선에 따라서 경제환경의 안정과 경제질서의 정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성장보다 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과열에서 벗어난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이완된 중앙의 거시적 경제 통제력의 재강화, 그리고 자원 분배상의 혼란 극복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에서도 수출의 장려와 수입의 억제 등을 통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안정과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지도부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경제개혁과 개방의 심화를 계속 실천하였다. 즉 일부 상품에 대하여 가격조정과 가격 자유화를 단행하여 가격메카니즘의 적용범위를 점차

59) 천안문사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수습방향에 대해서는 서진영, “북경사태, 중국사회주의는 어디로?,” 『新東亞』 (1989. 7), pp. 290~303 참조.

로 확대하는 가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금융시장과 노동 시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시장경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가 하면, 趙紫陽이 제기했던 沿海地域의 경제발전전략을 다시 강조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실천하였다. 이를테면 “外資企業에 의한 토지 종합 개발 경영”에 관한 잠정규정 등을 제정하였고,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소를 상해와 심천에 개설하였으며, 상해의 浦東地區와 海南省의 洋浦開發區 등을 건설하여 외향형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욕을 과시하였다.

이같은 안정적 발전전략으로 중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천안문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나름대로 정치적,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⁶⁰⁾ 무엇보다도 도시 민중들의 불만을 촉발시켰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성공하였고, 한때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중국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반전되면서 다시 놀랄 만한 고도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반체제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조직적인 민주화운동을 봉쇄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경제제재나 ‘평화적 이행’ 압력도 중국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덩소평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개혁과 개방의 심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60)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안정적 발전전략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서진영, “덩소평 사회주의의 운명,” 『新東亞』 (1992. 6), pp. 366~377 참조.

특히 1992년 초 덩소평이 심천과 광둥성을 순회하면서 ‘경제발전 우선, 개혁과 개방의 가속화, 그리고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좌파에 대한 경고’를 강조했다. 「南巡講話」가 발표되면서 보수파에 대한 개혁파의 정치공세가 강화되었고, 마침내 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에서 강택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덩소평의 후계정권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전면적인 개혁·개방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⁶¹⁾

이와 같이 덩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동구와 소련의 몰락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천안문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정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적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적 사회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는 점점 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와 같은 경제개혁과 개방의 심화와 확대는 결국 중국의 당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산출함으로써,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61) 14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서는 김익수, “중국 개혁, 개방의 가속화와 한-중경제협력의 신전개,” 「지역경제」(1993. 1), pp. 34~53 참조.

IV. 結 論

1949년 중국공산당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택동은 중국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부강한 신중국”의 건설을 위하여 모두 다 쫓기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모택동의 호소는 대단히 설득적인 것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제국주의 세력의 끊임없는 침략과 군벌통치의 암흑시대, 그리고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시달려 온 중국인민들의 입장에서 나라의 자주독립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모택동의 신중국 건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사업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짧은 시일 내에 정치안정과 경제복구를 달성하였고, 1953년부터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경험, 특히 스탈린의 발전모델에 입각한 급진적인 산업화와 사회주의 개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의 구조적 변혁과 더불어 전형적인 당국가제도와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적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업화정책은 팔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지만, 동시에 ‘인민 내부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산출하였다. 특히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적 체제와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은 엄격한 관료적 지배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문제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업과 농업의 불균등 발전을

초래함으로써 농촌 중심의 평등주의적 혁명전통을 가진 중국공산당의 정서와 모순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택동은 일찍부터 소련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국의 실정과 특징, 그리고 혁명경험에 부합되는 중국적 사회주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모택동은 1958년에 소련의 지원이나 국내 민족자산계급과 지식인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안공산주의의 경험을 원용하여 대중들의 혁명적 적극성을 개발, 조직, 동원함으로써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달성하려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66년에는 모택동 사상과 모택동의 리더십에 비판적인 당과 국가의 관료계급들과,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사회의 ‘자본주의의 부활 위험성’을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문화대혁명을 추진하였다.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표출된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대중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역사의 일정한 단계에서 생산관계의 변화는 생산력의 해방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근거로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맑스·레닌주의, 그리고 스탈린주의적 접근방식과 구별될 수 있는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여전히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도 맑스·레닌주의라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독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일원적 영도권을 보장하는 당국가제도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제의 원칙에

입각한 계획경제체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택동의 발전전략도 여전히 중공업 중심의 급진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란 점에서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발전전략과 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택동 시대의 중국적 사회주의도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적 동원체제’는 국가건설의 초기단계에 구질서가 붕괴된 상태에서 강력한 ‘위로부터의 혁명’의 방식으로 대중적 에너지를 집중적,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급진적인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신질서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다원성이 증대되면 점차로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나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국가건설단계에서 급진적인 산업화와 기존 사회질서의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후기단계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전체주의적 동원체제’가 공유하고 있는 획일성, 경직성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체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에서 파생되는 信心의 위기, 일원적인 당국가체제가 낳는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비민주성에서 파

생되는 정통성의 위기,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중공업 중심의 불균등 발전전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적 경제침체와 소비생활의 개선을 위한 대중들의 욕구 증대 등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위기들은 후기단계의 모든 '현존 사회주의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체제위기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 시대의 중국적 사회주의가 당면한 체제위기 중에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달리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도 있다고 하겠다. 즉 일반적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위기 요인 이외에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과 같은 중국적 사회주의의 '대실패'에서 파생된 위기는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에서 발생한 체제위기의 성격과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개혁정치가 등장할 수 있게 한 '중국적' 배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대중들에게 '대재난'을 초래했다는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는 무엇보다도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를 노출시킴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신념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하겠다. 즉 사회주의 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 물질적 토대가 성숙하기도 전에 지나치게 사회주의적 이념과 제도를 확대, 실시하려고 한 '窮過渡'는 오히려 인민대중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발전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대약진운동 과정에서 共同富裕의 理想을 강조하면

서도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의 개선을 가시적으로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빈곤 속의 평등’과 등치시키는 결과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군부와 일부 혁명 간부들의 독단적인 통치를 초래했으며, 모택동 사상과 모택동 개인의 절대적 영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혁명적, 봉건적 전체주의’라는 기묘한 정치질서를 산출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信心의 위기와 냉소주의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중국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위기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택동 이후 개혁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과 동력을 산출했다고 하겠다. 즉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심화된 지도부의 분열과 노선투쟁은 모택동의 사망을 계기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반좌파 연합세력이 형성, 등장할 수 있게 하였고, 이들 반좌파연합세력들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표방하면서 모택동 시대와의 결별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중국의 파위 엘리트들과 지식인사회에서 모택동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무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인 정책노선이 형성됨으로써 문화대혁명 이전에 이미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

에서 미묘한 노선투쟁의 양상이 노출되었다. 이같은 지도부 내부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은 마침내 문화대혁명으로 폭발하였고,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중국사회 전체에 확산됨으로써 ‘天下大亂’의 상태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격렬한 정치적 혼란과 갈등, 사회적 균열 속에서 모택동과 좌파들에 의하여 숙청당하거나 피해를 받은 당과 국가기관의 간부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반좌파적 성향이 등소평의 역사적 노선전환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의 개혁 사회주의는 역설적으로 모택동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고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개방을 표방한 등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모택동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중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등소평의 개혁정치도 그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개혁연합세력 내부의 정책논쟁,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급진적 변화 요구 등이 등소평의 개혁정치를 끊임없이 동요시켰다. 그러나 등소평은 이른바 ‘1개의 중심과 2개의 기본점’을 표방하면서 진보적 개혁파와 보수적 개혁파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경제발전 제일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꾸준히 개혁정치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사회를 엄청나게 변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등소평의 경제발전 제일주의에 입각한 대담한 경제개혁은 대단한 성과를 산출하였다. 중국경제는 지난 10여년간(1980~1990) 연평균 8.9% 이상의

GNP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1992년도에는 12.8%의 실질 GNP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경제로 부상하였고, 국민들의 경제생활도 과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⁶²⁾

물론 이같은 경제발전 제일주의정책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황금만능주의의 팽배와 부패와 부정의 만연,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등구조의 심화 등 경제개혁의 부작용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등소평의 개혁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불균등 발전에서 파생되는 위기라고 하겠다.

등소평의 대담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경제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으로 말미암아 소유형식의 다원화와 더불어 사적 경제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경제의 '시장화'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제영역은 점

62) 지난 10여년간의 중국경제의 성과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은 K. C. Yeh, "Macroeconomic Issues in China in the 1990s," *The China Quarterly*, 131 (September 1992), pp. 501~544 참조; 개혁·개방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소비생활의 다양화,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Joseph C. H. Chai, "Consumption and Living Standards in China," *The Journal of China Quarterly*, 131 (September 1992), pp. 721~749 참조.

차로 축소되고 경제주체의 자율영역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정치는 경제영역에서 다원화, 자율화, 시장화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의 근대화와 다원화도 촉진하였다. 이를테면 도시인구의 비율은 1978년에 11.9%이었지만, 1991년 현재 29.9%로 증가하였고,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도 놀랄 만한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⁶³⁾

이와 같이 등소평의 경제개혁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사회의 다원화, 자율화, 개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공산당의 일원적 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는 기존의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적 요구'를 증폭시킴으로써 등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문사태는 바로 이같은 위기의 극적인 표현이었다.

등소평은 경제개혁과 더불어 대담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압력을 무력으로 분쇄하고, 여전히 1개의 중심, 2개의 기본점이란 방향을 고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불균등 발전에서 파생되는 위기를 극복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개혁과 개방이 진행될수록 정치사회의 다원화, 자유화, 민주화의 요구는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등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된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 10여년간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불균등 발전전략에

63) 등소평의 경제개혁의 성과와 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통계와 분석에 대해서는 서진영,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는 무엇인가?," 「계간 사상」 (1993 가을), pp. 9~34 참조.

내포된 모순과 갈등을 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등소평의 리더십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등소평의 ‘1개의 중심, 2개의 기본점’이란 중국적 사회주의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 이후 중국적 사회주의는 본격적인 시련기에 들어 갈 것임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개혁정치의 장래는 중국의 파워 엘리트 내부의 단합과 갈등의 정도와 ‘밑으로부터 분출되는 시민사회적 요구’간의 역동적인 힘의 관계에 따라서 ‘新權威主義 政權’으로 이행하든지, 또는 현존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天下大亂’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第 4 章 베트남

I. 베트남 社會主義體制의 形成過程

이 절은 베트남 舊體制의 마지막 우옌(阮) 왕조가 붕괴된 이후 근 1세기 만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 수립되는 과정을 개관한다. 베트남이 전통적인 봉건왕조로부터 근대적 사회주의 민족국가로 一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모티프(motif)는 독립과 혁명, 그리고 전쟁과 통일이었으며,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은 베트남 현대사의 주역이자 최종 승리자였다. 베트남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다.¹⁾

1) 최근 베트남의 주요 인구·지리학적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토는 33만 평방 킬로미터를 약간 상회하고, 인구는 1991년 말 현재 6,768만여명이다. 전체인구의 88%가 베트남族인 가운데 베트남語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1년 현재 공산당원의 숫자는 2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Country Profile 1992-93*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1993), pp. 2,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지역센터, 「베트남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pp. 21~48.

1. 民族解放運動과 베트남民主共和國

4000여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19세기 말까지 중국을 패권국가(hegemonic state)로 한 동아시아 세계제국(East Asian World-Empire)의 일원으로 존재했다.²⁾ 베트남은 중국의 침략과 간섭에 부단히 시달리면서도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민족의식은 오히려 단련되고 강화되었다.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기 이전의 베트남에는 농업중심의 자급자족적인 自然經濟가 발달해 있었고, 중앙집권적 관료정치 체제하에서도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은 락이라고 불리는 혈연공동체로서의 村落이었다.³⁾ 구체제의 마지막 우옌 왕조시대에 있어서 베트남 사회의 기본모순은 봉건지배계급과 농민계급간의 관계로서, 19세기 말에 이르러 토지소유관계의 불평등을 둘러싸고 농민봉기가 빈발하

2) 세계체제와 대비되는 세계제국의 개념은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 (Orlando: Academic Press, 1974), p. 348 볼 것.

3) 락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는 베트남의 전통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락社會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유인선, 「베트남사」 (서울: 민음사, 1983), pp. 20~22 및 In Sun Yoo, *Law and Societ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90), pp. 2~3 볼 것. 락사회는 베트남의 전통적 사회구조의 기초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화정책에 대해 꾸준히 저항할 수 있던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Ken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One: An Interrupted Revolution* (Belmont: Wadsworth Pub., 1989), pp. 22~23 참조.

였다.⁴⁾

1883년 우옌 왕조가 프랑스를 앞세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개방 압력에 굴복하면서 베트남은 식민지로 전락하였다.⁵⁾ 프랑스의 인도차이나半島 점령에는 지정학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인 의도가 강했다. 식민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프랑스는 1887년까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를 묶어 佛領 인도차이나聯邦을 구성하는 작업을 끝마쳤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북부의 톤킨, 중부의 안남, 그리고 남부의 코친차이나로 인위적인 영토분할을 단행한 다음에 직접통치와 간접통치를 병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식민지하 베트남에서는 지역주의가 구조화되었다.

아울러 프랑스 식민당국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강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통적 생활공동체인 락은 해체되고 鄉村 엘리트의 권위 역시 제한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직접 장악하게 되었다. 덧붙여 식민지 전기간을 통해 인종주의가 견지되었으며, 프랑스는 베트남 토착의 제도와 문화를 존중하는 이면에서 현지인의 정치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매우 교묘한 식민지 통치술을 구사했다.⁶⁾

4) 유지열 편역,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서울: 이성과 현실, 1986), p. 17.

5) D. R. SarDesai, *Vietnam: The Struggle for National Identity*,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1992), pp. 31~42; Joseph Buttinger, *Vietnam: A Political Story* (N. Y.: Frederick A. Praeger, 1968), pp. 101~116.

6)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 30.

경제적 측면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상품판매와 원료획득, 그리고 투자시장으로 전략시켰다.⁷⁾ 프랑스는 베트남의 봉건제적 自然經濟에 자본주의적 市場經濟를 접합시켰다. 우선 농업에 있어서 토착지주 세력을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여 봉건적 지대와 전근대적 농업생산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프랑스 자본에 의한 상업적 농업경영을 확대한 결과, 1930년에는 베트남 전체 경지의 1/6을 차지하게 되었다. 광업부문에 있어서도 기계화가 아닌 저임금의 현지 노동력 착취가 기본 전략이었다. 프랑스 자본은 또한 저임금과 고가격, 보호관세제도를 통해 베트남 현지 시장을 독점하여 토착 수공업을 점차 파괴하였으며, 베트남의 무역 역시 원료상품의 수출과 공업제품의 수입을 위해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프랑스에 의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강제 편입된 베트남이 전형적인 주변부 저발전 국가로 전략하면서 베트남에는 민족주의운동이 태동하였다. 베트남 민족주의운동의 제1막은 186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전개된 전근대적 勤王蜂起運動이었다. 주도세력은 舊우옌王朝의 士大夫 階層이라고 할 수 있는 文紳(lettre)들이었으며, 프랑스를 축출하여 구체제를 부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復古主義的이었다. 베트남 민족주의운동의 제2막은 그 이후 1930년대까지,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와 중국의 신해혁명으로부터 감화를 받은 일부 開明 文紳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개혁과 근대화 지향의 베

7) 위의 책, pp. 23~28.

트남 민족주의운동에는 크게 보아 혁명적 민족주의운동과 개량주의적 민족주의운동이라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⁸⁾

한편 1920년대에 들어와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민족주의운동이 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우선 식민지화 이후 일반민중의 궁핍화가 크게 두드러져 사회적 불만이 팽배하였다.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새로운 식민지 경제정책의 합성은 베트남의 소작농과 농업노동자들을 고율의 소작료와 저임금에 허덕이게 만들었고, 화폐 및 상품경제의 발달은 현금수요를 증가시켜 그들을 고리대금의 희생자로 만들었다.⁹⁾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정부가 조세정책에 있어서 人頭稅를 실시하고 술과 아편 및 소금 등에 대해 소비세를 무겁게 책정한 것은 식민지치하 베트남

8) 이 가운데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은 베트남의 손문이라고 불리우는 판 보이 쩌우(潘佩珠)가 주도하였는데 그는 무력봉기를 위한 일본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베트남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시켜 선진 기술과 문명을 배우게 하는 등으로 이른바 ‘東遊運動’을 전개하였다. 판 보이 쩌우는 신해혁명이 발생한 다음에는 廣東에서 국민당 정부를 모델로 한 ‘베트남 부흥협회’를 결성하여 베트남 내의 무장투쟁을 유도하였다. 한편 개량주의적 민족주의운동의 주역은 판 쩌 진(潘周楨)이었다. 그는 외국의 도움을 호소하는 대신 국내에서 청년층과 대중의 계몽과 근대교육의 보급에 정력을 쏟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은 일본의 慶應義塾과 유사한 東京義塾을 하노이에 설립한 일이었다. 유인선, 「베트남사」, pp. 248~258;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51~58; SarDesai, *Vietnam*, pp. 45~46;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One*, pp. 37~45.

9)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33~38.

민중들의 생활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갔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자연경제가 파손되고 촌락공동체가 소멸하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정신적 안정감도 상실되었다.

또한 프랑스 식민지화 이후 새로운 민족주의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회계층이 성장하였다. 프랑스 자본의 침투에 의해 광공업 및 농업분야에 걸쳐서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던 것이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공업생산력이 감퇴되면서 경공업 및 상업분야에 베트남 민족부르조아들이 대두하였는데 프랑스의 탄압에 의해 이들 역시 민족주의적 지향이 비교적 강했다. 이에 덧붙여 프랑스 식민체제가 기술인력과 하급관리의 양성을 위한 근대교육을 실시한 결과 과거 文紳階級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지식인 계층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식민지민으로서 불리한 취업기회와 고용조건에 맞서 프랑스 통치에 대한 저항운동의 불씨로 자라났다.¹⁰⁾ 베트남 민족주의운동의 제3의 물결, 곧 공산주의운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조건에 병행하여 한 걸출한 공산주의 혁명가, 곧 호 치 민(胡志明)의 지도력을 간과할 수 없다.¹¹⁾ 호 치 민은 20세기 초 베트남 사회를 풍미했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에 눈을 뜬

10) 위의 책, pp. 41~43.

11) 유인선, “호지명과 베트남 공산주의 - 공산주의의 초기 수용과정,” 『아시아문화』, 제7권 (1991), pp. 143~171; SarDesai, *Vietnam*, pp. 49~53;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One*, pp. 51~75.

다음, 1911년 조국을 떠나 프랑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착취를 목격하였고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부터 강렬한 감명을 받은 끝에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했다. 호 치 민은 처음부터 맑스보다 레닌에게 더욱 더 매료되었다. 그 까닭은 레닌이 식민지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농민계급의 혁명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23년에 호 치 민은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대학에서 맑스·레닌주의이론과 볼셰비키전략을 공부했다.¹²⁾

1924년에 코민테른은 호 치 민을 중국 국민당의 정치고문이었던 미하엘 보로딘의 통역 자격으로 광둥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호 치 민은 광둥에서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의 嚆矢라고 부를 수 있는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탄 니엔, 青年)를 조직했다.¹³⁾ 탄 니

12) 이때 호 치 민이 레닌으로부터 배운 내용 가운데 후일 베트남혁명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두 가지 전술은 적대세력간의 내부적 갈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혁명의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Robert F. Turner, *Vietnamese Communism: Its Origins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e Press, 1975), pp. 13~14.

13) 탄 니엔은 정규적인 공산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국민당으로부터의 지원을 얻고 있었으며, 일정한 당조직 기법을 활용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운동을 결합한 소규모의 망명 청년지식인 結社였다. 베트남공산당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산하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김종욱 역, 「베트남공산당사 - 베트남인민의 반제·반봉건 투쟁에서 해방후 사회주의 건설까지」 (서울: 소나무, 1987), pp. 22~25; Douglas Pike, *History of Vietnamese Communism, 1925-1976*, 녹두편집부 역,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사연구」 (서울: 녹두, 1985), pp. 23~29;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75~

엔 시대에 있어서 호치민은 혁명의 전위부대로서 간부요원을 철저히 훈련시켰고, 베트남版「공산당선언」으로 간주되는「혁명의 길」을 저술하여 베트남 민족주의혁명의 구체적인 강령과 진로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조직적이고 분산적이며 또한 명확한 이데올로기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던 초기 베트남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크게 진일보한 것이었다.

탄 니엔은 그러나 표류했다. 왜냐하면 간부 및 당원들간에 지역주의가 남아있었고, 민족독립과 계급투쟁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 분열이 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공합작 실패로 호치민마저 1927년에 광둥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1928년에 있었던 제6차 코민테른 회의의 결과로 탄 니엔이 베트남 국내에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개한 것은 당시 베트남 계급구조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 따른 전술적 오류였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9년 5월에 홍콩에서 소집된 전국대회는 오히려 탄 니엔의 마지막 집회가 되고 말았다.¹⁴⁾

그 이후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은 세 갈래로 분열되었으며,¹⁵⁾ 그 통

80;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10~11.

14) Huynh Kim Khanh, *Vietnamese Communism, 1925-194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pp. 113~119.

15) 탄 니엔 대표들 가운데 베트남 북부출신은 1929년 6월에 인도차이나공산당을 독자적으로 결성하였다. 이들은 도시집중적이며 산업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던 퉁킹지방에서 고전적인 공산주의운동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이에 맞서 탄 니엔의 중남부 출신은 10

합작업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 다시 호 치 민의 과업이 되었다. 1930년 2월, 호 치 민은 홍콩에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대중조직'인 베트남공산당(Vietnam Communist Party)을 결성하는데 성공하였고, 10월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공산주의운동을 병행하라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들여 당명을 인도차이나공산당(Indochina Communist Party)으로 바꾸었다.¹⁶⁾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1930년을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 사실상의 기점으로 평가한다.

1930년은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타이밍이었다. 곧,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종속되어 가던 베트남경제는 1920년대 말의 대공황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입었으며, 때 맞추어 연속적으로 발생한 가뭄과 홍수는 베트남 농민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난을 더욱 더 가중시켰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인도차이나공산당은 과격한 투쟁을 전개하여 급속한 세력확장을 이룩했다.¹⁷⁾ 농민 폭동과 노동자시위가 속출한 가운데 1930년 9월에는 안남의 예안城과 하판城 등지에서 소비에트 인민정권이 수립되기도 했다.

월에 안남공산당을 조직하였으며, 이듬해 1월에는 인도차이나공산 연맹이라는 이름의 제3의 공산주의단체가 출현했는데 이것은 부르조아 성향이 다소 강했다. Ibid., p. 15.

16)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 18;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86~90;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25~28.

17) SarDesai, *Vietnam*, p. 49;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20~21;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95~101;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31~32.

그러나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적극적인 抗佛攻勢는 오히려 성급한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프랑스 정부는 베트남에서의 노동자·농민반란과 공산당운동에 대해 무차별 白色테러를 감행했던 것이다.¹⁸⁾ 1931년에 이르러 인도차이나공산당은 사실상 궤멸했고 그 해 6월 호 치 민도 홍콩에서 영국경찰에 체포되어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까지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사의 前面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1930년대 초, 호 치 민이 주도하던 인도차이나공산당의 활동이 와해되어 있던 동안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이 출현했다. 이들 대부분은 남부 남끼地域의 뽀띠부르조아 출신으로서 프랑스 유학을 경험한 자유주의적 인물이었다. 이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 내에 당시 국제공산주의 운동노선을 둘러싼 스탈린파와 트로츠키파간의 대립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세는 농민투쟁보다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그리고 일국사회주의 건설보다는 세계공산주의의 완성을 지향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도시노동자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도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¹⁹⁾

1930년대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의 상대적 약진에는 외부적인 영

18) 위의 책, pp. 34~36;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100~101.

19) 위의 책, pp. 104~117; Khanh, *Vietnamese Communism*, pp. 189~231;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21~26.

향도 있었다. 우선 1935년 8월에 열렸던 코민테른 제7차 세계대회는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계급투쟁을 잠시 미루고 그 대신 노동자, 농민, 지식인, 부르조아계급을 망라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1936년에 식민지 모국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연합세력인 인민전선(Popular Front)이 집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9년 프랑스의 인민전선정부가 失脚하자 베트남내 사회주의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재개되었다.

비록 1930년대에 들어와 베트남의 항불·독립운동의 주도권이 종래의 開明 유학자와 개량주의적 민족주의자들로부터 공산당의 수중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1930년대 말에 이르러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의 운명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1940년 봄,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같은 해 가을에 일본이 북부 프랑스領 인도차이나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에는 통치력의 공백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1941년 5월, 베트남에는 과거 인도차이나공산당을 주축으로 하여 베트남 독립동맹(베트민, 越盟)이 결성되었다.²⁰⁾ 이 때 주역은 10년만에 베트남 정계에 복귀한 호 치 민이었으며, 그는 베트민을 반불·반일운동의 구심체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베트민은 계급투쟁 대신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여 민족해방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으며, 성급한 전면적 무장봉기

20)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46~49;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122~129;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28~34; SarDesai, *Vietnam*, pp. 53~56.

대신 게릴라활동과 선전·선무활동을 통하여 북부 산악지대에서부터 해방구를 하나 하나 증대시켜 나갔다.

1945년에 들어와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주축국의 패배가 점차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1945년 3월에 일본이 프랑스의 식민지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황우옌왕조의 바오 다이 황제를 앞세운 괴뢰정부를 수립하는 쿠데타를 감행한 것은 베트남의 할 일을 대신해 준 고무적인 사태발전이었다.²¹⁾ 이때에 호 치 민은 전면적 무력투쟁을 자제하는 대신, 일본이 도시거점만 확보하는 뒷전에서 사실상의 무정부상태로 방치된 농촌지역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트남이 전면적인 무력봉기를 통하여 일본군을 퇴치하고 바오 다이황제를 퇴위시킨 일을 흔히 '8월 혁명'(The August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²²⁾ 그리고 1945년 9월 2일에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의 독립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베트남공산당 결성 이후 15년만의 일이었고, '植民地 및 半封建國家 最初의 人民民族民主革命'으로 자부되었다.²³⁾

21) Khanh, *Vietnamese Communism*, pp. 290~322.

22)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36~43; SarDesai, *Vietnam*, pp. 55~58;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One*, pp. 113~141; Khanh, *Vietnamese Communism*, pp. 290~338.

23)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57~60.

2. 베트남戰爭과 베트남社會主義共和國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前途는 그러나 밝은 것만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강대국정치의 전개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45년 9월부터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해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하여 북부에는 중국의 국민당 군대가, 그리고 남부에는 영국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장개석은 베트남에 공산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으며, 영국군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프랑스에 위임함으로써 프랑스의 베트남 복귀를 사실상 방조했다.

호 치 민은 신생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산당이 권력을 독식하기보다 비공산계 민족주의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블록과의 연대를 통한 연립정부를 모색했다.²⁴⁾ 1945년 11월에 인도차이나공산당은 자진 해산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 요직에 비공산계 민족주의 인사를 대거 임명하였으며, 1946년 1월에는 불완전하나마 총선거를 실시하여 혁명정권의 합법성을 제고하였으며, 5월에는 리엔 비엣(聯越)이라는 정치연합을 구성했다.

동시에 호 치 민은 대외적으로도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다. 중국의 국민당정부가 1946년 2월에 체결된 중·불협정에 의거하여 북부 베트남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 공백을 프랑스가 채우려

24) 위의 책, pp. 64~66.

하자,²⁵⁾ 호 치 민은 프랑스와 외교적 타협을 모색했다. 1946년 3월에 체결된 베트남·프랑스 협정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도차이나 프랑스연방의 일원으로서 사실상의 독립국으로 승인하는 것과 프랑스군의 베트남 주둔을 5년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안남과 코친차이나 지역의 장래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등으로서, 내용상으로는 호 치 민 정부가 대폭 양보한 결과였다.²⁶⁾ 그러나 그해 7월,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지역에 대한 독립자치령을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호 치 민 정부와의 약속을 배신했다. 1946년 말에 이르러 비공산계 민족주의 세력과 聯政을 구성하려는 호 치 민의 노력도, 프랑스와 외교적 타협을 계속하는 일도 모두 무망해져갔다.

1946년 11월 하순, 하이퐁港에서 프랑스군과 북부베트남군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을 발단으로 하여 양국은 전면전에 돌입했다.²⁷⁾ 개전 초기의 戰勢는 ‘돌아온 제국주의’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

25) 프랑스는 국공내전에 돌입한 중국 국민당정부에 대하여 중국 영토내 利權拋棄 등의 유화정책을 구사했다.

26) 이에 대해 호 치 민이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를 사실상 프랑스 식민지하에 방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호 치 민의 입장은 당시의 현실적인 국제정세하에서 우선 북부지역의 해방이라도 확실히 쟁취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프랑스 역시 코친차이나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반쪽만이라도 계속 지배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리영희, 「베트남전쟁: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서울: 두레, 1985), p. 19.

27)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74~88;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65~66.

하게 전개되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는 12월에 하노이를 떠나 장기적인 게릴라 전투체제를 갖추었다. 1949년 3월에 프랑스는 홍콩에 망명중이던 바오 다이를 다시 옹립하여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대항국가로서 베트남국(Associated State of Vietnam)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호 치 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계급투쟁을 당분간 유보하는 대신 베트남 전체인민의 지지 기반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면서 프랑스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抗佛戰爭을 통해 베트남內의 인도차이나공산당 持分은 크게 늘어났으며 1951년에는 당명을 베트남노동당(Vietnam Workers' Party)으로 바꾸었다.²⁸⁾ 또한 1940년대 말 '세계사회주의 혁명의 잇따른 승리'도 호 치 민에게는 고무적인 사태발전이었다.²⁹⁾ 특히 중국의 군사적·전술적 지원에 힘입어 1950년대에 들어와 戰勢는 점차 프랑스에게 불리해졌다. 1953년에 호 치 민은 프랑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이듬해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결정적으로 궤멸시키는데 성공했다.

프랑스를 상대로 하여 8년간이나 진행된 제1차 베트남전쟁은 1954년 7월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및 소련이 소집한 제네바 협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제네바협정은 그러나 베트남

28) Ibid., pp. 67, 75~79.

29) 동구 사회주의의 등장, 소련의 급속한 경제성장, 1948년 9월의 북한정권의 성립, 그리고 1949년 10월의 중국공산당정부 수립을 지칭한다.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 81; SarDesai, *Vietnam*, p. 60;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pp. 200~202.

의 독립을 약속하는 대가로 베트남의 분단을 초래하고 말았다. 제네바협정의 주요 내용은 북위 17도선을 임시 군사경계선으로 하여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공화국간의 교전행위를 종식하고, 1956년 7월에 남·북 베트남을 통괄하는 총선거를 실시하여 베트남의 정치적 통일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협정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데 미온적이었고, 미국은 협정에 조인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이었다.³⁰⁾ 베트남문제에 대한 미국의 직접개입을 우려한 중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한국식 해결’에 동의한 것도 적극적인 의지의 발로는 아니었다. 결국 제네바협정은 死文化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제네바협정 직후 당시 자국에 망명중이던 고 딘 디엠을 베트남에 불러들였다.³¹⁾ 바오 다이의 반민족성과 무능 및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미국은 베트남國에 고 딘 디엠 內閣을 발족시켰는데, 친미·반공주의자로서의 고 딘 디엠은 ‘베트남의 이승만’이었다. 이어서 미국은 1955년 10월에 바오 다이를 퇴위시키고 형식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王國이던 베트남國 대신 고 딘 디엠을 대통령으로 한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 RVN)을 수립하였다. 이로서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제네바협정을 계기로 하여 그 상대가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되었다.³²⁾

30)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100~108; SarDesai, *Vietnam*, pp. 65~66.

31)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162~168; SarDesai, *Vietnam*, pp. 66~69.

미국이 지원하던 남부의 디엠 정권은 제네바협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총선거 실시를 비롯한 협정의 준수를 거부했다. 또한 ‘베트남의 李承晩,’ 고 딘 디엠은 정치적 부패에 관한 한 ‘베트남의 蔣介石’이었다. 베트남공화국의 정치적 기반은 매우 협소했는데, 특히 농민층과 불교도 및 소수인종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이에 대해 디엠 정권은 정치적 탄압 및 경제적 失政으로 일관했으며, 1956년에 예정된 총선거가 무산되자 남부 베트남에는 민중봉기에 의한 일종의 내란상태가 야기되었다.³²⁾ 1957년부터 농촌과 도시에서 반정부 폭동과 테러가 그치지 않았고, 그에 비례하여 디엠政府의 정치적 탄압은 度를 더해갔다. 1959~1960년에 절정을 이룬 디엠 정권의 폭압정치는 북부 베트남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32)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對인도차이나 정책은 과도기적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의 트루만 독트린을 통하여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은 공식화되었고, 1949년에 중국에서 공산주의정권이 수립되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베트남 및 인도차이나半島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크게 증대하기 시작했다. 베트남과의 8년전쟁에서 미국은 이미 프랑스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네바협정 직후 미국이 남부 베트남에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한 것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본격적인 봉쇄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One*, pp. 221~226 볼 것.

33) 리영희, 「베트남전쟁」, pp. 46~52;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106~107; SarDesai, *Vietnam*, pp. 71~73;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nam, Volume Two, Viet Nam Divided*, pp. 84~149.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로였다.³⁴⁾

호치민 政府는 디엠 정권의 失政으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거두어 들고 있었다. 사실상 1950년대 말까지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남부 베트남에 대해 무력해방 대신 정치투쟁과 경제건설에 전념했다. 하노이정부는 1954년부터 이른바 민주개혁과 함께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또한 1955~1957년 사이에는 경제재건 3개년계획이, 그리고 1957~1959년 사이에는 사회주의적 개조 3개년계획이 각각 추진되었다. 그 결과 북부 베트남에서는 농업의 협동화와 상공업 생산관계의 전반적인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1959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완성되었다.³⁵⁾

1960년 9월에 열린 베트남공산당 제3차 대회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과 함께 민족의 재통일을 결의했다.³⁶⁾ 북부 베트남을 사회주의 기지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드디어 남부의 해방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1960년 12월에 베트남 남부에서 디엠政府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이 결성되었다.³⁷⁾ 민족해방전선은 租稅나 徵兵 등의 行政力量 면에서 디엠政府를 많은 지역에서 능가했다.³⁸⁾ 그리고

34)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181~189, 192.

35) SarDesai, *Vietnam*, pp. 69~71;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One*, pp. 260~292, *Volume Two*, pp. 15~83.

36)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109~116.

37) 위의 책, p. 108;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Two*, pp. 300~362.

북부 베트남은 민족해방전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를 통틀어 더욱 강력해졌다. 그런만큼 남부의 디엠政權은 베트남 민중들 사이에 섬(島)처럼 고립되어갔다.

제3세계 親美國家의 리더쉽에 관한 미국의 고질적인 고민은 당시 베트남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곧, 강력한 반공주의와 권력자의 독재 및 부패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1962년에 미국의 케네디정부는 디엠政府에게 족벌 권위주의체제의 쇄신과 사회경제적 개혁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1963년 6월에 발생한 소위 ‘베트남版 4·19’도 한국에서와는 달리 무위로 끝났다. 미국의 다음 手順은 예의 쿠데타 지원이었다. 그해 11월, 미국은 마침내 디엠政權을 붕괴시켰다. 그러나 남부 베트남의 政情은 혼미에 혼미를 거듭했다. 1965년 6월에 구엔 반 티우와 구엔 카오 키 등 소장파 장성이 주도한 쿠데타가 성공할 때까지 베트남에서는 평균 1년에 두차례씩 쿠데타 및 기도가 발생했던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모색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³⁹⁾

1964년 8월의 소위 통킹灣 事件을 통하여 미국은 군사력 사용의 빌미를 확보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 사태는 소위 제2차 베트남전

38) 리영희, 「베트남전쟁」, pp. 55~59.

39) SarDesai, *Vietnam*, pp. 79~81;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Four, The Failure of Counter-Insurgency in the South*, pp. 146~217.

쟁으로 확대되었다.⁴⁰⁾ 전쟁의 초기에 미국의 전략은 공중폭격을 중심으로 북부 베트남을 ‘石器時代’로 환원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 치 民政府는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과 민심의 향배를 활용하는 게릴라 전술로 미국에 抗戰했다. 전쟁의 성격은 점차 地上戰으로 변모했고, 주월 미지상군 병력은 1965년에 25,000명, 그리고 1968년에는 5만명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戰況은 좀처럼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⁴¹⁾ 1968년 초에 있었던 호 치 民軍隊의 구정 공세(테트)는 하노이政府의 승리를 보장하는 베트남전쟁의 분수령이었다.

미국이 1968년 5월부터 파리에서 호 치 民政府를 상대로 한 강화회담을 시작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은 和·戰 양면의 성격을 띠었다. 이어서 1969년에 공포된 닉슨 독트린이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를 표방함으로써 미군의 ‘명예로운 철수’가 모색되었다. 전쟁이

40) 통킹만 사건은 1954년 제네바협정 이후 꾸준히 증대해온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본격화되는 계기였다. 1964년 이전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케네디 정부의 표현을 빌면 ‘특수전쟁’(Special War)이었다. 그 의미는 디엠 정권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지원’을 통해 베트남인에 의한 베트남전쟁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유지열,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사」, pp. 169~172;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116~124;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Four*, pp. 246~331.

41) 선전포고없이 개시된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은 명분마저 약한 것이었다.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내의 국론은 크게 분열되었고 한국전쟁 때와는 달리 미국을 지원하는 국제적 군사협력 체제도 한국과 필리핀 등 일부 태평양 지역의 국가에 제한되었다.

서서히 종결국면으로 접어들던 1969년 6월, 남부 베트남에서는 민족해방전선을 기반으로 하여 임시혁명정부가 선포되었다. 마침내 1973년 1월에 5년을 끝낸 미국과 베트남 민주공화국간의 휴전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었다.⁴²⁾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은 프랑스에 이어 미국을 축출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격 목표는 남부의 베트남공화국이었다. 미국은 베트남 영토로부터 철수하는 대신, 남부의 티우 政府 군대의 戰力강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티우가 이끌던 베트남공화국은 무능과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더군다나 원조경제가 끝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 함께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었다. 북부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남부의 베트남공화국과의 內戰, 혹은 제3차 베트남전쟁을 서두르지 않았다. 하노이 政府는 사이공 政府에 대한 무력행사를 자제하는 대신, 후자의 부패와 失政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정치공세를 앞세웠다. 아울러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1974년부터 2개년 경제복구 계획에 착수하는 등, 급속한 흡수통일을 시도하기 보다는 북부 베트남의 내부적 통일역량 강화에 주력했던 것이다.⁴³⁾

그러다가 1974년 12월에 이르러 남부 베트남 전역에 ‘해방’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하노이 政府는 2년 정도를 예상하고 베트남 남부의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사이공 政府 ‘호 치 민 作戰’라고 불리는 1975년의 춘계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해버렸다.⁴⁴⁾

42) Turner, *Vietnamese Communism*, pp. 456~487.

43)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p. 154~158.

1975년 4월 30일, 장장 30년에 걸친 베트남전쟁은 마침내 종결되고 베트남 공산주의의 반외세 독립 및 통일운동은 최후의 결실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하노이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의 통일은 예상보다 빠른 것이었고, 통일의 방식 또한 남부의 자생적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부의 군사적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예상과는 달리 통일과정에서 유혈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⁴⁵⁾

영토의 통일 직후만 해도 북부 베트남 당국은 남북 베트남의 실질적 통합을 재촉하지 않았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남북간에 엄존하는 생산양식과 사회구조의 차이 및 이질화된 국민의식을 감안하여 민족 통합과정을 약 15년으로 예상했다.⁴⁶⁾ 그러나 통일 베트남경제의 전후회복과 발전이 시대적 급선무로 부상됨에 따라 1975년 말부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남북통합이 착수되었다. 그해 1975년 11월 남쪽의 임시혁명정부 대표와 북측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대표들은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통하여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및 헌법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 4월에 전국총선거가 실시되어 최고인민회의가 성립되었고, 6월에는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44) 위의 책, pp. 163~172.

45) William J.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Updated ed. (Athen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Ohio University, 1989), p. 12.

46)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pp. 59~64.

Republic of Vietnam: SRV)이 하노이에서 선포되었다. 12월에는 베트남노동당은 남·북 당조직을 통합하여 베트남공산당(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이로서 베트남에는 독립과 통일,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이 모두 완성되었다.⁴⁷⁾

베트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특질이 발견된다. 첫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대내적으로 강력한 정통성의 기반을 갖고 출범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베트남의 해방과 통일과정에

47)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憲法前文은 멀고도 험했던 베트남 사회주의운동의 歷程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회어린 회고를 하고 있다. “... 1930년부터 호 치 민主席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공산당의 영도 및 위대한 러시아혁명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인민은 일본, 프랑스, 미국 제국주의자들 및 그들의 추종자들을 성공적으로 분쇄하였다. ... 1945년에 8월혁명을 成事시킨 다음, 호 치 민주석은 독립선언을 선포했다. 이로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노동자·농민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 미제국주의의 지원으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다시 침범했다. ... 그러나 디엔 비엔 푸戰鬪의 승리로 抗佛戰爭을 종식하고 ... 1954년의 제네바협정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자주, 통일과 영토적 통합이 서명되었다. ... 그러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대신 미제국주의자들이 다시 들어왔고 ... 그들은 베트남을 상대로 야만적인 전쟁을 벌였다. ... 우리 인민은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비하여 조국을 통일하기로 작심하고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1973년의 파리협정에 의거해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냈다. 1975년 봄, 베트남인민은 역사적인 호 치 민作戰에서 절정을 이룬 전면적인 공세와 봉기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다. ...”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p. 271~225.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였으며, 사이공政府의 부패와 失政으로부터 파생된 반사적 이익에 기인한 것도 없지는 않았지만 농민을 위시한 베트남의 대다수 민중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체제였다. 곧, 정권의 출생과정에서 베트남 사회주의체제는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체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공산주의라는 공통적 기반 위에서도 베트남은 통일을 완수함으로써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중국과 북한의 경우와 차별적이다.

둘째, 베트남의 사회주의혁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족주의와 괴리되지 않았다. 곧, 계급모순의 해소를 보류하거나 연기하면서까지 민족모순의 해결을 우선적 과제로 내세웠던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맑스·레닌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그것이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에 대해 가지는 수단적 가치에 연유한 바가 크다. 해방과 전쟁과정에서 베트남 민족주의는 크게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베트남 사회주의체제는 단순한 국가건설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건설의 과제까지 동시에 완수한 것이다.

셋째, 민족해방과 통일과정에 있어서 베트남공산당 지도부는 호치민의 생전은 물론이고 1969년 그의 사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리더쉽을 견지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에서 흔치 않은 경험이다. 또한 개인숭배와 같은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 작업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경우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체제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며, 호치민의 정신적 유산하에 집단지도체제의 조기확립을 통해 정치적 안정

을 일찍부터 이룩했다. 이것 역시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독특한 資産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베트남 사회주의운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혁명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약소국 입장에서 강대국 정치를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교조적인 이념대결 대신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實事求是的인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실용주의적인 전통은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사를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그것으로부터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II. 統一 直後 베트남 社會主義 經濟發展의 挫折과 實驗的 改革

이 절은 남북 베트남의 정치적 통합이 완성된 1976년 이후 도이 모이가 시작되는 1986년까지 10년 동안 전개된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좌절과 실험적 개혁과정을 분석한다. 이 기간 동안 스탈린식 경제발전이 베트남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후일 도이 모이의 前身이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개혁·개방조치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1. 스탈린식 社會主義 發展戰略의 挫折

가.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目標와 成果

1976년 12월에 열린 베트남공산당 제4차 당대회는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 대회는 “자신감과 단결, 그리고 희망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통일 베트남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주의체제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남부 베트남경제를 북부가 주도하는 중앙계획체제에 흡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⁴⁸⁾ 베트남공산당은 1965년 이래 유보되어왔던 장기 경제개발계획 개념을 전베트남을 대상으로 하여 10년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1976~1980년을 제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다.⁴⁹⁾ 이 때 채택

48)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p. 27~39; Vo Nhan Tri and Anne Booth,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Vietnam,”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vol. 6, no. 1 (May 1992), p. 17; William S. Turley, “Vietnam Since Reunification,”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2 (March-April 1977), p. 46.

49)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60년 제3차 당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1961년부터 1965년까지 북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비록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지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동안 베트남의 사회총생산은 9.1%, 농업생산은 4.2%, 그리고 공업생산은 13.6% 각각 성장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Country Profile, 1992-93*, p. 16. 1966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전쟁이 대미전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계획은 유보되었다. 통일 이전 북부 베트

된 발전전략은 전형적인 스탈린모델에 입각하고 있었다.

당시 팜 반 동 수상은 당 대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여 베트남경제를 소규모생산에서 대규모 사회주의 생산으로 전환시키며, 농업과 경공업은 동시에 개발하는 차원에서 국가주도하의 중공업 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전국의 농업과 공업을 하나의 농·공업 경제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⁵⁰⁾ 이 때만 해도 베트남공산당은 독립과 통일과정에서 이룩한 사회주의 승리의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30년 전쟁의 결과로 疲弊해진 베트남 경제의 급속한 복구를 戰後 베트남공산당의 시대적 급선무로 인식했다.

그 결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야심적이었다. 동계획 기간 동안 투자총액은 300억 동(약 162억 달러)으로 계상되었는데,

남의 경제발전예 관해서는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Ch. I과 Post, *Revolution,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Viet Nam, Volume Three, Socialism in Half a Country* 볼 것. 한편 같은 기간 남부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보기 위해서는 Nguyen Anh Tuan, *South Vietnam, Trial and Experience: A Challenge for Development* (Athen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Ohio University, 1987) 참조.

- 50)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pp. 73~75; 안승욱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권 2호 (1986 가을), pp. 59~61;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1989 봄), pp. 49~51 참조.

그 가운데 35%와 30%를 공업과 농업에 각각 투자할 계획이었다. 또한 국민총생산의 연평균성장율은 14.5~15.5%, 국민소득은 13~14%, 농업총생산은 8~10%, 공업총생산은 16~18%,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7.5~8%로 각각 책정되었으며, 노동자의 실질수입과 농민수입은 각각 30~35%, 15~20%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⁵¹⁾ 그리고 이것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3대 혁명’ 노선이었다.⁵²⁾

첫째는 생산관계의 혁명으로서, 남부베트남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여 전국 규모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남부 베트남의 자본주의경제를 해체하여 북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통합하는데 역점이 주어졌는데, 1977년 9월에 남부에 집단농장과 협동조합 등을 발족시키고, 1978년 3월부터는 자본주의적 상공업활동을 일체 중지시켰다. 둘째는 이념·문화혁명이었다. 이것은 봉건의식의 잔재와 서구 부르조아적 유산을 일소하여 베트남 주민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해 주민을 교화하거나 당과 국가가 문학·예술을 통제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끝으로 과학·기술혁명은 생산의 대규모화를 이룩하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사회주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업부문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편제하고 농업부문의 기계화 및 과학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

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p. 151; Turley, “Vietnam Since Unification,” p. 46.

52)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p. 28~33.

을 뿐만 아니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계획 자체가 흐지부지해졌다.⁵³⁾ 우선 투자 면에서 볼 때 동기간 동안 총투자액은 176.8억 동으로서 계획수준의 58.9%에 불과하였다. 또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주요 경제수치의 연평균 성장율을 보면 국민소득은 4.5%, 공업총생산은 5.7%, 그리고 농업총생산은 2.9%로서 이들 모두 계획의 1/3을 달성하지 못했다. 1980년의 경우 국내총생산은 1976년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76년의 101달러에서 1980년에는 91달러로 하락했다. 전후 첫 5년 동안 베트남은 연평균 1.5%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의 인구성장율 2.2%를 감안하면 베트남경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담보 내지 퇴보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⁵⁴⁾

나.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敗因과 教訓

베트남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패로 끝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통일 이후에도 남북 베트남 경제 사이의 구조적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⁵⁵⁾ 통일 직후 베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p. 151; 안승욱,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p. 56.

54) Tetsusaburo Kimura, “Vietnam - Ten Years of Economic Struggle,” *Asian Survey*, vol. 26, no. 10 (October 1986), p. 1040.

55) Melanie Beresford, *National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London: Macmillan, 1989), pp. 7~15; Melanie Beresford and Bruce McFarlane. “Unification Versus Balkanization in the Socialist

트남정부는 북부 베트남 모델을 남부에 이식하여 남북간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는 문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남북이 같은 뿌리라는 신념과 전쟁 당시 하노이정부에게 보여준 남부 베트남주민의 높은 지지도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통일만 되면 남부의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북부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경제적으로 보완·결합하여 ‘자주적인’ 경제발전이 쉽게 이룩될 것이며, 특히 북부에서 지난 수십년간 구축된 사회주의 기지는 남부 경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이공정부의 붕괴가 남부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정치적 통일에도 불구하고 생산, 교환, 분배, 유통 등에 걸친 경제적 통합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남부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해 추진된 농업의 집단화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70~80%를 달성할 것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크게 밀돌아, 1980년까지 남부 농민의 9% 정도만이 집단화되었다.⁵⁶⁾ 농업의 집단화가 극히 저조했던 까닭은

Countries: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ast Asian Socialism: ‘The Four Little Dragon’ or Eastern Europ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 Project, Research School of Pacific Studie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anuary 1993), pp. 13~15.

56)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Country Profile, 1992-93*, p. 20; Ngo Vinh Long, “Some Aspects of Cooperativization in the Mekong Delta,” David G. Marr and Christine P. White, eds.,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우선 베트남정부가 과도한 도시인구를 분산하여 농촌에 재배치하기 위해 추진했던 소위 ‘新經濟區’(New Economic Zones: NEZ)의 설치가 정책 미숙으로 말미암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또한 사이공정부하에서 꾸준히 진행된 토지소유에 대한 개혁은 어느 정도 토지소유의 평등화와 중농층의 성장을 초래하여, 남부의 베트남농민들이 농업의 집단화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요인은 경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서, 스탈린 모델의 명령·통제원리가 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비효율성과 함께 전후 베트남정부가 특유하게 노정했던 경제관리상의 미숙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처럼 베트남의 국영기업들도 노르마 제일주의에 안주했고,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는 국가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중공업 우선정책은 자본과 기술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낙후된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비취볼 때 결코 합리적인 발전전략이 아니었다. 또한 공업화를 위한 급속한 자본축적의 필요성은 농업부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아울러 통일 베트남에서는 당과 국가가 경제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호 치 민을 승계한 당 서기장 레 두안부터 전쟁을 통한 ‘투쟁정신’에 친숙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부분의 당 및 행정관료들도 ‘게릴라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⁵⁷⁾ 그 결과 평화시의 일상적이고도 경제적

(Ithaca: Cornell University Southeast Asia Program, 1988), pp. 163~173.

57)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 42; Duiker, “Vietnam:

문제를 담당하는데는 부적격한 경우가 많았다.

세번째 요인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투자의 부족이었다. 전후에 황폐해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베트남정부는 국내저축 60%, 해외저축 40% 비율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자금유입에도 한계가 예상되어 해외저축 가운데 약 60%는 서방국가와 국제금융기관에 의존할 심산이었다.⁵⁸⁾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베트남이 통일 직후 즉각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가입하고, 1977년 4월에 외자도입법을 채택하였으며 팜 판 동 수상이 같은 해 봄 서유럽 국가들을 순방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한 것이었다.⁵⁹⁾

그러나 베트남정부가 기대한 해외자본의 유입은 기대를 빗나갔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이 大宗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후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갔던 중국으로부터는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또한 서방으로부터의 원조도 기대수준을 훨씬 밑돌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미국이 주도한 對베트남 경제제재 조치였다. 베트남의 전후경제 복구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포드 및 카터 행정부는 베트남을 외면했다.⁶⁰⁾

A Revolution in Transition," *Southeast Asian Affairs* (1989), p. 351.

58) 이흥표,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개혁, 개방노선" (한국지역연구학회 '93년도 통일교육연구 발표논문, 1993. 4. 11), p. 5.

59) 성태현, "베트남의 대외경제관계와 한국·베트남의 경제협력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1989년 봄), pp. 107~115.

60) 남부 베트남의 붕괴 이후 미국은 통일 베트남을 여전히 敵國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부진했던 이유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1978년 12월 이후 본격화된 캄푸치아 분쟁과 곧 이은 중국과의 전쟁이다. 그 결과 베트남경제는 전쟁의 불모가 되어 국가재정을 경제개발보다 국방부문에 과도하게 지출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⁶¹⁾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 평균적으로 재정의 39.2%는 자본축적에, 26.4%는 경상비에, 그리고 34.5%는 군사비에 할애되었다. 그러나 군사비의 비중은 1978년에는 40.4%, 1979년에는 47%까지 올라갔다. 전쟁은 또한 베트남을 주변 아세안(ASEAN) 국가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방측의 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유입을 더욱 더 어렵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天運도 전후 베트남경제에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남부 베트남에서 4년 연속으로 계속된 극심한 자연재해는 농토를 황폐화시켰으며, 특히 1978년 베트남 전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300만톤의 식량 피해를 가져왔다.⁶²⁾ 베트남이 전형적인 쌀생산 농업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연재

간주했으며, 전쟁상태는 경제제재 조치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에는 베트남에게도 책임이 있다. 1977년 미·베트남 관계정상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을 때, 베트남은 미국에게 전쟁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실종미군의 인도에 관해서는 협조를 아꼈다. George C. Herring, "America and Vietnam: The Unending War,"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pp. 117~118.

61) Kimura, "Vietnam-Ten Years of Economic Struggle," p. 1051.

62)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베트남공산당사」, p. 187.

해로 인한 농업생산 부진의 결과는 단순히 식량부족에 그친 것이 아니다. 이는 공업원료, 기계 및 설비의 수입에 할당되어야 할 외화가 식량수입에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업 부문의 성장까지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2. 新經濟政策의 實驗과 陣痛

가. 經濟自由化政策과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

1979년 여름, 베트남정부는 기로에 직면했다. 기존의 스탈린식 경제발전 전략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으나 그 논리적 대안은 베트남 지도부에게 정치적 부담이었다. 경제활동 메카니즘에 있어서 국가통제를 완화하고 경제행위에 있어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일은 사회주의체제의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총회가 열려 당면 경제위기의 극복을 핵심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베트남공산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총회는 생산을 증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국방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당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일을 긴급과제로 설정하고, 국가경제에 있어서 사적 부문의 역할을 증대할 것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⁶³⁾

경제발전의 진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당 지도부의 내분이 全無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집단지도 체제 덕분에 베트남의 정치엘리트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있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베트남 지도부는 사회주의의 정치적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에 눈을 돌려 일련의 경제개혁을 모색했다. 이때, 당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은 ‘국가, 집단, 그리고 개인의 3자 이익의 결합’이었고, 이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ies)으로 요약되었다.⁶⁴⁾

신경제정책의 핵심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제자유화 조치였다. 곧, 남부 베트남에서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 속도를 늦추고, 잉여 개념을 경제활동에 도입하며 생산과 유통, 분배과정에서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신경제정책은 1981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근간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979년 여름부터 동계획이 이미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경제정책은 베트남의 제1차 개혁으로서,⁶⁵⁾ 1986년 이후에

63)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p. 49~69, 73~74;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pp. 82~83.

64) Carlyle A. Thayer “Vietnam'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2, no. 483 (April 1983), pp. 158~161;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pp. 65~66.

65) 당시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이며, 소련의 개방·개혁보다는 훨씬 앞선 것이었다. Victor Funnell, “We Cannot Live on Theories: A Changing Vietnam,” *Asian Affairs*, vol. 20, no. 3 (October 1989), p. 277.

나타난 제2차 개혁, 곧 도이 모이정책의 원형이 되었다.

신경제정책의 도입 이후 농업부문에서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는 합작사로 하여금 노동의 양에 따라 농민에 대한 임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권리를 주는 것과 농민부업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특히 最終生産物 契約制(end product contract system)를 도입하여 청구량을 초과한 생산량은 농가나 농가 소집단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한 일이었다.⁶⁶⁾ 또한 공업부문에 있어서 사기업의 역할을 당분간 인정하였고,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노무 및 재무관리에 있어서 자주권을 확대하였다.⁶⁷⁾ 아울러 임금제도에 있어서 평균주의를 지양하여 생산이나 경영실적에 상응시켰으며 보너스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⁶⁸⁾

1979년과 1981년에 걸쳐서 베트남경제는 뚜렷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 곡물생산은 1980년에 1,440만톤, 그리고 1981년에는 1,550만톤을 각각 기록하여 1976년도 수준을 넘어서면서 목표치 1,600만톤에 육박했다. 1970년대 말과는 달리 이번에는 좋은 기후환경도 경제회복에 一助했다. 기업의 사유화에 힘입어 공업부문에서의 생산력도 크게 증대하였는데, 1980년과 1981년 사이

66) Prabhu L. Pingali and Vo-Tong Xuan, "Vietnam: Decollectivization and Rice Productivity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0, no. 4 (July 1992), pp. 706~707.

67)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Country Profile, 1992-93*, pp. 19~20.

68)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pp. 67~69.

에 상품생산량은 70% 정도 신장하였다.⁶⁹⁾ 그리고 변화의 주요 무대는 통일 이후 호치민시로 개명된 舊사이공市였다. 1981년 초, 호치민시에는 벌써 2,000개 정도의 개인 상업회사와 300여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이 성업중이었다.

신경제정책의 효과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당내 분열의 조짐을 가져왔다. 1980년대 초 베트남경제의 회복은 남부에서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일부 보수파들이 사회주의 이념의 퇴색을 경계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에 대해 1980년 12월에 확정·공포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의 생산력 발달을 규정함으로써, 보수·이념파와 개혁·실용파간의 절충을 모색하였다.⁷⁰⁾ 헌법은 또한 국가평의회 구성을 통한 집단지도체제를 제도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재강화하였다.

베트남공산당은 1982년 3월에 제5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1~1985)을 추진했다.⁷¹⁾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베트남경제의 현실적 조건과 베트남 국민의 필요와 능력에 상응하는 경제발전 전략의 책정이 강조되었는데, 우선 식량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농업발전을 우선시하고 경공업 중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공업은 농업과 경공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 중요성이 하향조정되었다. 이러

69)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 79.

70) Ibid., p. 83.

71) Thayer, "Vietnam's New Pragmatism," pp. 155~159;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pp. 125~127.

한 정책전환에는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이 중공업발전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있었다. 또한 신경제구로 농촌인구를 이동하거나 농업을 집단화하는 속도도 다소 늦추기로 하였다.

베트남의 제1차 경제개혁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의 전반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⁷²⁾ 1981년에서 1982년 사이 공업생산력은 12% 이상 늘어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연평균성장율의 두 배를 기록했으며, 수출 또한 10% 이상 신장되었다. 이어서 1983년에는 공업생산력의 증가가 10%를 기록했다. 농업생산역시 1980년 이래 계속 호조를 보였는데, 1980~1983년의 4년 동안 연평균 100만톤씩 증산함으로써, 이 역시 1976~1980년 기간의 두 배에 이르렀다. 1982년의 총곡물생산은 목표량을 26만톤 초과하는 1,660만톤에 이르러 전년도 대비 8% 성장을 이룩하였고, 1983년에는 1,700만톤을 넘어섬으로써 마침내 식량자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경제자유화 조치에 따른 신경제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였다. 첫째, 유통 통제의 완화는 자유시장의 변창과 함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몰고 왔다. 이는 비사회주의 경제부문, 곧 사적 경제활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남부에서 특히 심했다. 1981년과 82년, 베트남 전체의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각각 90%와 80%에 이르렀다. 또한 청부 혹은 임무량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확보한 농민과 노동자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낮은 수준

72) Duiker, "Vietnam in 1984: Between Ideology and Pragmatism," *Asian Survey*, vol. 25, no. 1 (January 1985), p. 100;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 97.

의 합의가격으로 국가에 물품을 판매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자유시장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필요한 재화를 適期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위해 자연히 합의가격을 시장가격에 연계하여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로 나타났다.⁷³⁾

한편 남부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생산재 소유개념이 급속히 쇠퇴해갔다. 또한 농업집단화 속도의 완화와 농촌경제의 상업화 및 자본유입은 농민간의 계층분화를 재연했다.⁷⁴⁾ 예컨대 1981년도 부농과 농업자본가들의 수입은 중농들의 그것을 10배 이상 증가했던 것이다. 아울러 도시에서도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생산부문에 속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경제적 불균등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투기와 폭리, 절도와 매점매석 등 사회부패에 결합하자 사회 일각에서는 경제자유화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나. 經濟의 再統制化와 再自由化

1983년부터 베트남정부는 경제를 다시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정부는 한편으로 경제자유화 시기에 나타난 경제

73) 안승욱,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p. 73.

74) Ngo Vinh Long, “Agrarian Differentiation in the Southern Region of Vietna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14 (1984), pp. 283~305.

회복 기조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할 경제안정화 정책이 시급해진 것이다.⁷⁵⁾ 이를 위해 베트남정부는 다음 세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첫째는 분배과정의 재통제였다. 먼저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초과생산량이나 부업생산에 따라 가지게 되는 초과수입에 대하여 재정편입 비율을 높였다. 또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이나 보너스에 대한 은행의 감독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급하는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재감독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는 유통의 재통제로서 이는 기간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곧, 유통의 통제완화는 자유시장의 변형을 초래하고 이는 곧 국가의 자원이 소비재 생산에 몰리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국영 상업부문의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영 상업망을 확충하게 되면 자연히 비사회주의 유통부문은 소멸될 것이고, 또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면 각종 세금의 징수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1983년에 상공업 稅法을 개정하여 사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였고, 각종 서비스 부문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영업허가세를 부과하였다. 특히 남부에서는 모든 상품에 대한 정찰가격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찰가격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자유가격제의 형식 속에서 실질적인 통제가격제의 효과를 기

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p. 152.

대했다.

셋째로 베트남정부는 1983년부터 남부의 농업집단화를 재강화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당시 강력히 추진되었던 남부의 농업집단화는 정책 미숙과 농민들의 소극적 참여, 그리고 캄보디아 및 중국과의 전쟁으로 그동안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3년부터 재강화된 남부의 농업집단화는 그러나 이 데올로기적 이유만이 아니라, 남부의 대부분 농업생산물이 국가당국에 집중되지 않고 자유시장에 흘러들어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남부지역의 농업집단화는 1985년에 이르러 집단농장 혹은 협동농장의 비율이 전체 농가 혹은 농지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⁷⁶⁾

이와 같은 경제의 재통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곧, 인플레이션의 수습, 재정 적자폭의 감소, 그리고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공헌을 남겼던 것이다. 그 반면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의 통제정책하에서 나타난 경제적 문제점들이 재연되는 부작용을 동반했다.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베트남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1985년 현재 실업자의 숫자는 350만명을 넘어서 전체 고용자의 15.3%에 육박했으며, IMF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베트남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60달러로서 세계최빈국 20개 그룹에 속하고 있었다.⁷⁷⁾

76)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Country Profile, 1992-93*, p. 20.

또한 이중경제가 형성되면서 투기와 암거래, 밀무역 등의 경제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경제전반에 걸친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한 당간부와 국가관료들의 특권행사와 부정부패도 만연했다.⁷⁷⁾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비교하자면 제3차 계획은 성공작이었다. 그러나 성장의 부작용 또는 후유증 때문에 베트남경제는 1985년에 이르러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1985년부터 베트남경제는 다시 자유화시기로 회귀했다. 1985년 6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차 총회는 1980년대 초반의 개혁조치를 보다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개혁안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가격과 임금, 그리고 금융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이며, 상품가격을 비용과 이윤의 원리에 상응시킬 뿐만 아니라 배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제도를 재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서 베트남공산당은 베트남경제가 당면하고 있던 하부구조의 취약성, 낙후된 자본과 기술, 지나친 관료적 통제 및 증대하는 외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의 재자유화 조치에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크게

77) Kimura, "Vietnam - Ten Years of Economic Struggle," pp. 1040, 1048.

78) Gereth Porter, "The Politics of 'Renovation' in Vietnam," *Problems of Communism*, vol. 39, no. 3 (May-June 1990), pp. 72~88; Nguyen Van Canh, "A Party in Decay: The New Class and Organized Crime," pp. 23~35; in Thai Quang Trung, ed., *Vietnam Today: Assessing the New Trends* (N. Y.: Crane Russak, 1990).

작용하였다. 그것은 1985년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 집권과 함께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정책이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베트남이 통일 이후 발전시켜온 소련과의 밀접한 관련이 소련의 변화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만든 사실이다. 또한 소련의 변화는 베트남의 개혁파들에게 1980년대 초반의 경제자유화 조치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보수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소련 역시 베트남의 변화에 적극적이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6월, 베트남공산당 당서기 레 두안과의 회담을 통해 향후 5년간 경제원조를 두 배 늘일 것을 약속하며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을 권유했다.⁷⁹⁾

Ⅲ. 베트남 社會主義經濟의 改革과 開放: 도이 모이

이 절에서는 1986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곧, 도이 모이를 분석한다. 도이 모이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를 전후하여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맞물려 있던 제1단계 도이 모이는 경제적 개혁·개방과 정치·사회적 변화가 병행한 것이었으나,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초가 된 제2단계 도이 모이는 경제적

79) Tri, "The Renovation Agenda: Groping in the Dark," in Trung, ed., *Vietnam Today*, pp. 37~45.

개혁·개방의 확대 이면에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보수·회귀가 두드러진 것이 주요 차이점이었다.

1. 第1段階 도이 모이政策

가. 도이 모이政策의 背景과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흔히 도이 모이(Doi Moi, Renovation)로 불리는 베트남의 경제적 쇄신 혹은 개혁·개방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의 기원은 1970년대 말에 추진된 ‘新經濟政策’으로 소급될 수 있다. 그러나 도이 모이의 공식적인 기점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착수된 1986년이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12월에 개최된 베트남공산당 제6차 대회는 1980년대 초에 진행된 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6~1990)에서 도이 모이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결의함으로써 베트남 현대사의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제6차 당대회를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 전체회의에 비교하기도 한다.⁸⁰⁾

도이 모이정책의 추진세력은 두말할 필요없이 베트남공산당내 실용주의 개혁파였다. 1985년 9월에 있었던 통화개혁의 실패는 당과 정부 엘리트의 대폭 개편을 초래하여 실용파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였다.⁸¹⁾ 또한 1986년 1월에는 부수상 트랭 쑹이 해임된 것에 이

80) Tri, “The Renovation Agenda: Groping in the Dark?,” p. 37.

81) 베트남정부는 경제의 재통제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기반구축을 성

어 7월에는 당서기장 레 두안이 죽고, 그 자리를 정통 이념파에서 실용·개혁파로 변신한 트롱 친이 승계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6차 당대회는 이제까지 베트남 권력엘리트의 중추를 이루었던 3인의 혁명 제1세대—트롱 친 당서기장, 판 반 동 수상, 레 독 토 정치국 실력자—를 퇴장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대신 개혁세대의 대표주자인 구엔 반 린이 당서기장 겸 대통령에 취임하였다.⁸²⁾ 그는 호치민시 市黨委員長으로서 경제개혁 정책에 성공한 업적을 평가받아 오다가, 1982년에 정치국에서 축출되었으나 1985년에 다시 정치국원이 된 인물이다. 구엔 반 린이 새로운 당서기장에 취임한 것과 함께 새로 권력층에 부상한 인물들은 대개 남부 베트남 출신이거나 남부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경제학자, 지방정부 서기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구엔 반 린의 집권에는 소련의 변화에 따

급히 자신한 가운데 제4차 경제기발 5개년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본축적의 일환책으로 1985년 9월에 통화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시중자금을 장악하려 했다. 그러나 통화개혁의 소문이 1주일 전에 시중으로 퍼져나가 국민들은 은행예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실물자산 및 미국 달러의 구입에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향후 2년 동안 무려 1,000%로 상승했다.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p. 74.

- 82) Ganganath Jha, “The Politics of Perestroika in Vietnam, 1986-1990,” *International Studies*, vol. 28, no. 4 (October/December 1991), pp. 375~376;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pp. 182~187;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p. 244~245.

른 이른바 ‘고르바초프 효과’의 작용이 컸으며, 실제로 구엔 반 린은 베트남의 ‘작은 고르바초프’라고 불리기도 한다.⁸³⁾

‘작은 고르바초프’라는 별명에도 불구하고 구엔 반 린이 추구한 베트남의 도이 모이정책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덩소평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과 더욱 흡사했다. 비록 소련이나 동구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동구권의 경제적 변화를 직접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도이 모이의 목표는 여전히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틀 속에서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⁸⁴⁾ 다시 말해 도이 모이는 기존의 계획·통제체제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를 의미했으며, 공산당의 역할을 감소시킨 것도 아니었다.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도이 모이를 통하여 당이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베트남공산당 제6차 당대회는 ‘景氣過熱’에 따른 부작용을 동반하였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교훈에 기초하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반적인 목적을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의 모든

83) Thai Quang Trung, “Factions and Power Struggle in Hanoi: Is Nguyen Van Linh in Command?,” pp. 1~21 in Trung, ed., *Vietnam Today*;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p. 245.

84) Tri, “Vietnam in 1987: A Wind of ‘Renov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p. 307; Tri, “The Renovation Agenda,” pp. 38~41; Per Ronnas and Orjan Sjoberg, “Economic Reform in Vietnam: Dismantling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7, no. 1 (1991), pp. 7~19; Dao Dui Tung, “Vietnam’s Renewal: Initial Successes and Experience,” *Far Eastern Affairs*, no. 3 (1990), p. 20.

측면에서 ‘安定’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안정화의 의미는 상품의 생산과 분배 및 유통에 있어서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 삶의 안정과 점진적 개선이라고 제시했다.⁸⁵⁾ 이어서 1987년 12월에는 당의 당면과제로서 주요 3대 경제 프로그램의 추진이 설정되었다. 그것은 식량·식품, 소비물자 그리고 수출상품의 생산 증대였다.⁸⁶⁾

먼저 식량·식품의 생산목표는 쌀의 경우 2,200만톤으로 하여 5년간 연평균생산량을 2,000~2,050만톤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기타 식량작물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식생활을 개선·조정하기로 하고 기타 식품, 가축, 家禽, 야채, 과일, 수산물 등의 생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비물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5년간 연평균 소비물자 생산을 13~15%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끝으로 1986~1990년 동안 수출량은 제3차 5개년계획 기간보다 70% 증가시키며, 기타 외국과의 일반적 경제협력은 물론 관광, 해외송금, 항공서비스 등을 통한 외화획득도 중요시하였다.

도이 모이에 입각하여 추진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구조의 개편과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다. 이에 따라 스탈린식 사회주의 공업화 모델이 폐기되는

85) Tri and Booth,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Vietnam,” p. 18;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pp. 183~184.

86) Tri and Booth,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Vietnam,” p. 18;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pp. 187~1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pp. 155~156.

대신 경제정책의 초점은 농업과 경공업 및 수공업의 발전에 맞춰졌다.⁸⁷⁾ 특히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1987년 12월에는 국가가 토지의 사용권을 임대하면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한 토지법이 제정되었고, 토지의 임대 기간도 15년까지 늘었다. 또한 최종산물계약제도를 강화하여 농민들이 토지의 사용권을 갖고 시장가격으로 농산물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純產出契約制度(net product contract system)가 도입되었다.⁸⁸⁾

둘째, 국가경제 체제내에 多元的 經濟構造(multi-sectoral economy)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일종의 혼합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⁸⁹⁾ 이는 종래의 ‘국가·집단·개인 3자 이익의 결합’ 원칙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서, 베트남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부문의 順機能的 역할을 인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비록 국영 부문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생산의 부문단위는 국영, 집단경영, 公私合營, 자본주의적 합영 및 순수 개인경영의 다섯가지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공업부문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사기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1987년 8월

87) Tung, “Vietnam’s Renewal,” pp. 9~10; Tri and Booth, “Vietnam’s Economic Developments in Vietnam,” pp. 19~22.

88) 구성열, “베트남의 경제정책과 성장추이” (1993년도 한국동남아 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89) Tri and Booth, “Vietnam’s Economic Developments,” pp. 22~24; 이홍표,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혁, 개방노선,” pp. 1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p. 156.

부터 국가보조 대신 기업회계제도가 실시되었다. 1988년 말부터는 국영 및 협동농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족중심의 영농체제를 농업 생산의 기초로 삼았다.

도이 모이정책의 세번째 기조는 경제관리의 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모색한 일이었다.⁹⁰⁾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베트남정부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관리방식을 폐기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대신 중국에서 처럼 국가의 계획과 시장원리가 변증법적으로 조화되는 ‘計劃商品經濟’(planned commodity economy)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계획과 통제가 여전히 경제관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중앙정부의 계획이 命令的(imperative)이라기 보다는 指示的(indicative)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 모이정책하에서 국가가 조세나 재정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에만 주로 관여하고, 생산과 분배 및 유통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폭 위임하며,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가격통제 대신 시장가격이 경제의 흐름을 관장하도록 한 사실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넷째는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도이 모이정책은 특히 서방국가 및 인근 아세안(ASEAN) 국가와 동아시아 신흥공업 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이들과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90) Porter, "The Politics of Renovation in Vietnam," pp. 89~90; Tri and Booth,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pp. 24~27; Tung, "Vietnam's Renewal," pp. 13~17.

데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1985년 6월에는 무역업무의 신장, 외자도입의 정부보증 확대, 계획초과 외화획득분에 대한 재량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신규칙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에는 무역장려를 위한 관세 및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수출입상품세법과 외국인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법이 각각 공포되어 그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⁹¹⁾

특히 외국인투자법은 외국기업에게 100% 소유권을 인정하고 과실 송금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우대조항을 포함하여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외국인투자법보다 리버럴한 것”이라는 평을 얻을 정도였다.⁹²⁾ 이어서 1988년 8월에는 국가협력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 리스트의 작성, 계약, 감시지도, 규칙의 수정보완 등을 맡게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사이공수출가공공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89년 4월에는 수출입세의 감면을 실시하였다.⁹³⁾ 이와 같은 대외 경제협력 강화조치의 배경에는 베트남 지도부가 냉전체제하 東西陣營간의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세계체제내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정세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⁹⁴⁾

끝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치 및 사회영역의 쇄신 및 활성화

91) 구성열, “베트남의 경제정책과 성장추이,” p. 77.

92) *The Economist*, December 19, 1987.

93) 구성열, “베트남의 경제정책과 성장추이.”

94) Gareth Porter, “The Transformation of Vietnam’s Worldview: From Two Camps to Interdependen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2, no. 1 (June 1990), p. 3.

화였다.⁹⁵⁾ 도이 모이정책은 경제부문의 개혁과 개방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이다. 베트남정부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이거나 정치부문의 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 베트남정부는 이를 통하여 당과 국회를 쇄신하고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을 오히려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당내외 사회전반에 사고와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총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특히 국회는 단순히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아울러 1987년부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당과 행정부의 淨化·整風運動이 벌어졌으며, 언론과 정보의 영역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자유화와 공개화가 이루어졌다.

나. 도이 모이政策의 成果와 도이 모이의 動搖

도이 모이정책이 추진된 첫 2년 동안 베트남의 개혁·개방에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988년에 방콕에서 베트남의 도이 모이를 중간평가하기 위해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비관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다.⁹⁶⁾ 그러나 1989년부터 도이 모이는 그 효과를 확

95) Tung, "Vietnam's Renewal," p. 7; Porter, "The Politics of 'Renovation' in Vietnam," pp. 80~81; Jha, "The Politics of Perestroika in Vietnam," pp. 382~383; E. Bogatova, "Vietnam: The Search for Avenues to Renovation," *Far Eastern Affairs*, vol. 6 (1988), pp. 41~42.

연히 나타내기 시작했다. 1986년에 775%, 1988년에 394%에 달했던 超인플레이션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물자증산에 의해 1989년에는 월평균 2.5%, 연간 35%로 다소 진정되었다.⁹⁷⁾ 특히 농업생산의 경우 1989년은 베트남이 50년만에 최초로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50만톤의 쌀을 수출함으로써 태국과 미국에 이어 일약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부상한 해였다.⁹⁸⁾ 쌀의 수출이 대외 부채상환에 一助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989년은 또한 1988년에 비해 국민총생산 3.5%, 국민소득 3.2%, 그리고 공업생산이 각각 3% 성장하였다.

또한 대외 무역증대에 힘입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감소되면서 경상수지 사정도 크게 호전되었다. 1989년에는 수출이 목표의 40%를 초과 달성하였다.⁹⁹⁾ 그리하여 1989년도 외환수입은 전년도 대비 81% 증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1987년 외국인 투자법 공포 이후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활기를 띠어 1989년까지 총투자액이 약 8억 달러에 이르는 105개의 투자사업이 승인되었고 그 가운데 70개가 사업을 시작하였다.¹⁰⁰⁾ 결국 도이 모이정책의 추진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이제 성장의 기틀을 확실히 마련한 셈이었다. 비록 도이 모

96) Trung, ed., *Vietnam Today* 불 것.

97) 구성열, “베트남의 경제정책과 성장추이,” p. 80.

98) Tung, “Vietnam’s Renewal,” p. 4; Tri and Booth,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Vietnam,” p. 20.

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p. 156.

100) James Elliot, “The Future of Socialism: Vietnam, the Way Ahead?,” *Third World Quarterly*, vol. 13, no. 1 (1992), pp. 133~134.

이정책이 시행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동안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율이 제3차의 그것을 다소 밑도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의 안정과 내실의 측면에서 볼 때 도이 모이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말미에 이르러 도이 모이정책에 시련이 찾아왔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0년에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다시 월평균 4.4%, 연간 68%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¹⁰¹⁾ 국영기업의 국고보조가 주원인으로 작용한 정부의 재정적자 역시 1990년에는 3억 3천 4백만 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아울러 1990년 현재 3,500만의 노동력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700만명으로서 실업율이 20%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실업율의 급격한 상승은 캄보디아 철군에 따른 군병력의 민간부문 취업문제와 동구권 와해에 따른 해외 근로자의 귀국 때문이었다. 이들은 국영기업 부문에 불완전 고용되어 국영기업 경영부실을 더욱 부채질했다.

한편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정치의 영역에서도 도이 모이에 대한 견제가 나타났다.¹⁰²⁾ 도이 모이정책으로 권력과 지위 및 권위를 잃게 된 것은 당연히 권력엘리트내 보수파들이었고, 도이 모이정책의 하나인 당과 행정부의 淨化運動 역시 표면적으로는 무능과 부패의 척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베트남 지도부내 수구세력이 주요 타겟이었다. 보수·수구파들은 도이 모

101) 구성열, “베트남의 경제정책과 성장추이,” p. 80.

102) 이홍표,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개혁, 개방노선,” pp. 19~20.

이의 확대강화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이완할 것으로 염려했다. 개혁파에 대한 보수파의 공세는 결실을 거두어 1988년의 수상선거에서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도 무오이가 구엔 반 린 당서기장이 지원한 보 반 키에트를 눌러 이겼다.

이와 아울러 도이 모이가 추진된 1986년 이후 베트남에는 시민사회가 태동하여 당과 국가의 통제에 도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¹⁰³⁾ 언론의 영역에서 당의 검열과 규제가 다소 완화되자 ‘바르게 전하고 진실을 말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문학과 출판계에서도 베트남의 살롱(salon) 전통이 부활하여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무대가 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 남부 베트남의 자생적인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스스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북부 베트남 주도의 급속한 통일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더욱이 1989년 5~6월에 발생한 베트남의 학생시위는 중국의 천안문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던 바, 이로서 베트남 지도부내 보수파의 목소리는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이 모이가 동요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깥으로부터 찾아왔다. 소련과 동구에서 가속화되던 개혁과 개방이 마침내 脫사회주의화의 조짐을 나타내자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103) Carlyle A. Thayer, "Political Reform in Vietnam: Doi Moi and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pp. 110~129.

와 안정이 시대적 현안으로 부상했고, 그 결과는 당연히 도이 모이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졌다.¹⁰⁴⁾ 그리하여 보수파들의 反動은 개혁파들의 동조를 얻어냄으로써, 베트남 지도부는 전체적으로 공산당 일당지배에 대해 매우 방어적인 입장이 되었다. 1989년 8월에 소집된 당7차 중앙위원회는 보수파의 요청으로 '긴급안건'을 채택하고 공산당 일당지배에 대한 도전과 다원주의 및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¹⁰⁵⁾ 특히 보수파 엘리트들은 동구와 베트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1989년 늦가을부터 동구사회주의가 잇따라 붕괴하고 소련사회주의체제의 장래 역시 극히 불투명해지자, 도이 모이의 장래는 더욱 더 어두워졌다. 1989년 12월, 당내 급진개혁파로 알려진 정치국원 트란 수왕 바크가 당으로부터 축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언론과 문화활동이 재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역할 증대와 함께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베트남경제의 큰 힘이 되었던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도 무망해졌다. 이로써 도이 모이는 시작된지 만 5년도 못되어 동요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지도부는 새로운 외부환경 속에서 발전전략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104) Michael C. Williams, *Vietnam at the Crossroads* (N. Y.: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Press, 1993), p. 32.

105) Thayer, "The Challenges Facing Vietnamese Communism," *Southeast Asian Affairs* (1992), pp. 358~359.

2. 第2段階 도이 모이政策

가. 도이 모이의 修正·強化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한 베트남의 도이 모이는 좌절 대신 새로운 진로를 모색했다. 베트남 지도부는 세계사적 대변혁 앞에서 도이 모이의 지속적 추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¹⁰⁶⁾ 그러나 1990년대의 도이 모이는 그 이전의 도이 모이와 꼭 같지는 않았다. 제2단계 도이 모이의 핵심은 경제적 부문에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반면,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오히려 보수적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1990년 3월에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제8차 중앙위원회는 공산당 일당지배를 견지하고 복수정당제도의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 대신 당내 민주주의의 보장과 법에 의한 당의 운영을 통하여 보다 대중에게 밀착된 도이 모이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제7차 당대회에 이어서 7월에 열린 국회에서는 정치국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지도부 인사교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혁추진 세력이 대거 득세를 하면서도 정치적 변화를 제어하려는 보수파들의 입지가 두드러지게 약화되지는 않았다. 보기로 새로 당서기로 선출된 도 무오이는 구엔 반 린과 함께 도이 모이정책의 쌍두마차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보수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106) Williams, *Vietnam at the Crossroads*, pp. 35, 56.

그 대신 당내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보 반 키에트가 수상에 취임함으로써 최고지도부내에 保·革均衡이 이루어졌다.

베트남 지도부는 1990년 이후 도이 모이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것이 실시되는 동안에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과 질서의 유지를 크게 강조했으며, 동시에 헌법개정을 통해 권력기관의 역할분담을 명문화하였다. 1992년 4월에 열린 8기 제10차 정기국회는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인민은 주인이고 국가는 관리자이며, 당은 지도자’라고 규정하였고, 특히 ‘국가권력의 최상급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입법권과 감독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와 아울러 비록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는 배제되었지만, 일상생활의 脫스탈린化는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人權의 측면에서 베트남은 중국이나 북한을 능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베트남공산당 제7차 당대회에서 확정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91~1995)은 다음의 7대 방침에 기초하고 있다.¹⁰⁷⁾ 첫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통화관리정책의 실시, 둘째 농업중심 경제의 점진적인 발전 추진, 셋째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증진, 넷째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을 전개하는데 따른 제문제 해결, 다섯째 미시적 및 거시적 경제운용기구의 개혁, 여섯째 사회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끝으로 사회안정을 위한 법과 질서의 유지이

1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pp. 158~159.

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발표와 동시에 베트남공산당은 소위 ‘2000년대를 향한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베트남의 도이 모이가 지향하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였다.¹⁰⁸⁾ 그 주요내용은 2000년대까지 사회·경제적 성취목표로 1인당 국민소득의 倍加, 물가상승을 연 10% 이내 억제, 수출의 5배 증가, 그리고 서방국가와의 경제적 유대강화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 공산당은 첫째 경제체제에 있어서 ‘개방·다부문·상품·계획경제’(open multisector commodity planned economy)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는 시장기능을 겸비한 계획경제를 뜻하며, 시장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 특히 서방의 자본과 기술 및 시장을 이용하여 모든 국내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개방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수출의 다양화와 다변화를 추진하여 원자재보다는 가공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며,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에 주력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공지역을 설치하여 합작투자와 하청산업을 장려한다.

셋째, 재원조달에 있어서 가계저축을 장려함과 동시에 균형예산과 조세행정을 강화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증권시장 및 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세액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은행의 유치를

108) 위의 책, pp. 158~164; 구성열, “베트남의 경제정책과 성장추이,” pp. 84~86.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는 산업구조조정으로서 중공업 우선정책을 포기하고 베트남의 능력과 국민적 수요에 일차 부응하는 경공업육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다. 농업부문 등 1차산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나 전반적으로는 노동집약적 혹은 기술집약적 공업부문의 확대가 장기적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 경영형태를 보면 경제주체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특히 관료적 비효율성이 만연하고 있는 국영기업을 정비하고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며, 자본재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국영으로 하되 에너지, 기계, 금융업 등은 주식회사 또는 외국인 합작의 형태로 유도한다. 한편 농업부문과 소비재산업에 있어서는 협동조합과 사기업을 주요 경영형태로 하고자 하고 있다. 다부문 경제체제하에서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국가경제부문과 집단적 경제부문 그리고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포함한 사경제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국가는 이와 같은 다부문적 경제주체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째 생산요소의 소유와 분배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보면, 자원,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은 국유이며, 토지의 사용권은 장기임대되고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생산요소는 공유 혹은 사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며, 소득의 분배는 일차적으로 생산성에 근거한다. 끝으로 베트남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지역의 전략적 자원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분산 및 여러 지역간의 경제협력의 기초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확립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나. 第5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 現況과 展望

도이 모이의 수정·강화정책은 지금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¹⁰⁹⁾ 우선 국영기업과 공사합영기업의 비중 및 역할이 저하되는 가운데 사기업이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89년과 91년 사이 국영기업의 숫자는 12,000여개에서 6,000여개로 줄어들었으며, 1992년 말 현재 사기업의 수는 2,600여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급속한 속도로 증대하고 있는데, 1987년 12월 외자도입법이 처음 발효한 이후 1992년 말까지 총 556개 프로젝트에 걸쳐 46억 2,700만 달러치의 도입이 승인되었다. 또한 토지법 개정 이후 농업생산성도 급격히 향상하고 있다.

그 결과 1992년도 국민총생산은 5.4%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1986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인플레이션은 월평균 1.2%, 연간 15% 수준으로서 남북통합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쌀과 원유생산의 급증에 힘입어 무역수지 역시 1992년에는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2년도 산업생산량은 원유, 철강, 화학비료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14~15.5%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농업부문은 4.5% 증가하였는데, 특히 식량생산은 연초 계획을 150만톤 초과한 2,400만톤을 생산하여 쌀 수출량이 190만톤에 이르렀다.¹¹⁰⁾

109)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Country Report*, no. 1 (1993), pp. 18~22.

이와 같은 수출의 증가는 1992년에 들어와 아시아국가들 및 서방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어 교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도이 모이의 수정·강화 이후 나타난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경제제제조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이다. 결국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개방'의 결과라기 보다는 '개혁'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방'의 효과가 극대화할 경우, 베트남 경제의 전망을 더욱 더 밝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발전의 장애요인들을 안고 있다. 첫째는 사회간접시설의 극심한 낙후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오랜 전쟁의 상처이다. 예컨대 베트남 전체 도로의 10% 정도만 포장되어 있으며 남북을 잇는 유일한 국도 역시 일차선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교량의 1/3은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으며, 사이공과 하이퐁을 비롯한 주요 항만시설도 접안 및 하역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¹¹⁰⁾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不備는 베트남의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석유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불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이 사회간접자본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

110) *Korea Herald*, July 20, 1993.

11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1993.

엇보다도 재원의 조달이다. 베트남 당국은 2000년대까지 소요될 재원으로 400~5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반을 해외 저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¹¹²⁾ 그런데 해외자본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액수의 재원은 어느 한 국가가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현재 IMF와 ADB 등 국제금융기관은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독일의 주도로 베트남에 대해 대규모 차관을 준비중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의 관건은 베트남에 대해 투자와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대베트남 경제제재를 곧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고 있으나 실종미군의 송환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 시기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셋째는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로 뚜렷이 대비되는 베트남경제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현지 베트남인들은 ‘지금 현재 베트남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가 아니라 호치민시의 400달러와 하노이시의 100달러’라고 말한다고 한다.¹¹³⁾ 도이 모이정책 이후 공업화와 사유화가 속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남부가 북부를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외국기업들이 북부가 아닌 남부에 투자를 집중시킨 것이 이와 같은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부지역에서는 혁명정신이 퇴조하고 공

112) *Korea Herald*, April 25, 199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1993.

113) 「朝鮮日報」, 1993. 5. 28.

산화 이전 시대의 기억이 회생하고 있어 베트남 통일의 의미조차 흔들린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¹¹⁴⁾ 또한 개혁과 개방 속도의 지역간 편차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넷째로는 경제관리능력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의 궁핍에 더하여 기술관료 및 전문경영인의 부족은 베트남 현대사의 당연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이다. 곧, 오랜 전쟁은 산업인력의 양성이 아닌 군사훈련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직후에 구소련으로 교육을 받으려 갔던 관료들도 사회주의 경제학을 배웠을 따름이다. 베트남이 인근 아시아국가나 국제금융기관에 인력을 파견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한 것은 최근 몇년 동안의 일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無形의 경제 노하우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패와 부정도 베트남의 순조로운 개혁과 개방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또한 시장경제는 소유권이나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법의 지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혁명과 전쟁을 거치면서 발달한 게릴라식 유대와 私的 연줄은 무사공평한 보편적 법체계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¹¹⁵⁾ 아울러 지금과 같은 집단

114) Williams, *Vietnam at the Crossroads*, pp. 86~87: 「朝鮮日報」, 1993. 2. 16.

115) David W. P. Elliott, "Dilemmas of Reform in Vietnam," in William S. Turley and Mark Selde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지도체제가 경제적 개혁을 위한 정치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카리스마적이거나 절대권력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혹은 위기의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¹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많은 베트남 전문가들은 도이 모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제 베트남의 경제는 루비콘 강을 건너간 것이다. 사이공에 이어 하노이도 더 이상 ‘혁명의 도시’가 아니라 ‘개방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¹¹⁷⁾ 베트남은 전체적으로 ‘大躍進’의 문턱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⁸⁾ 1993년도 7~7.5%의 사회총생산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향후 5년 내 일인당 국민소득 1,000 달러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적으로는 ‘아시아의 새로운 龍’으로 부상할 날을 기약하고 있는 것이다.¹¹⁹⁾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 63.

116) David Wurfel,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Turley and Selde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p. 22.

117) 「朝鮮日報」, 1993. 5. 28.

11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1993.

119) *The Times*, April 1, 1993; 「東亞日報」, 1993. 4. 3.

IV. 結 論

이 절은 결론으로서 베트남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정책의 주요 특질을 비교사회주의 혹은 비교발전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여기서 분석의 초점은 도이 모이의 역사적 기원, 도이 모이의 이념적 기초, 도이 모이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타난 국가, 시민사회 및 세계체제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발전모델로서의 도이 모이의 성격 규정 문제 등이다.

1. 베트남 改革·開放의 起源과 性格

베트남이 경제적 개혁·개방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였다. 비록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도이 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착수된 것은 1986년 이후였지만, 개혁과 개방의 발단 자체는 소련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97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시장사회주의적 발전이 모색된 것과 비슷한 때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베트남과 중국간의 긴장관계를 감안하면 베트남이 등소평에 의한 중국의 경제개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은 그 기원에 있어서 자생적이고도 자주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¹²⁰⁾

1986년 이후 본격화된 도이 모이의 추진을 소련 및 동구의 변화

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도 적절한 견해는 아니다. 사실상 베트남의 ‘쇄신’을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치부할 수 없다.¹²¹⁾ 비록 베트남이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실패로 경제적인 시련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구나 소련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가 만성적으로 축적된 상황도 아니었고 따라서 대내적으로 체제안보의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베트남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은 소련이나 동구의 경우처럼 만성적인 경제적 失政과 정치적 정통성의 부식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이었다기 보다는, 혁명과 전쟁의 성공적인 완수 다음의 당연한 수순으로서 경제발전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였던 것이다. 결국 베트남 공산당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은 ‘자주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970년대 말 베트남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의 원초적 형태가 나타날 때만 해도 베트남 지도부내 정치적 갈등도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공산당은 세계공산주의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그 바탕은 호 치 민의 정신적 유산과 함께, 승리로 장식한 혁명과 전쟁이었다. 베트남은 중국이나 소련에서처럼 保·革갈등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권력대결을 연출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표면화

120) William S. Turley, "Introduction," Turley and Selde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pp. 1~15; David Wurfel,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 19~52.

121)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일기」 (서울: 통나무, 1993), p. 44.

되는 것은 개혁과 개방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에 반대하던 보수파 혁명세대마저 1986년 이후 도이 모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무렵, 한편으로는 자연사 등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이 모이의 국민적 지지도 앞에 쉽게 무력해졌다.

2. 도이 모이의 理念的 基礎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이 이와 같이 능동적이고 자생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독특한 이념적 기반 때문이다. 아시아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의 민족주의적 배경과 속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베트남에서의 맑스·레닌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수단적 가치가 더욱 중요했다. 그리하여 베트남 민족주의는 혁명과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용해되었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념체계인 것이다.

도이 모이가 대내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저항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독립과 전쟁 과정에서 다져진 베트남 민족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수정·강화된 도이 모이 곧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진보라는 이율배반적인 원칙이 양립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민족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적 기반이 강력한 정통성의 뿌리로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¹²²⁾

도이 모이의 또 다른 이념적 기초는 실용주의이다. 민족주의가 아시아 공산주의의 일반적 특징이라면 실용주의는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특유한 문화적 유산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비교적 강한 이념적 교조주의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베트남 민족주의는 독립과 전쟁의 경험을 통해 實用主義를 내면화해왔다. 이는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에 있어서 베트남과 북한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¹²³⁾ 강대국과의 명분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實事求是的인 타협을 우선시해 왔던 것이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사의 특질이다.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 공산주의관은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생존과 독립의 원리를 체득해 왔다는 사실과 함께, 프랑스에 의한 자본주의적 식민지 경험과 미국의 사실상 '준식민지'였던 베트남 남부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122) David W. P. Elliott, "Dilemmas of Reform in Vietnam," Tutley and Selde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pp. 53~94; Williams, *Vietnam at the Crossroads*, p. 85.

123) Sang-In Jun, "A Maker of vs. a Victim of History: A Comparative-Historical Study of Economic Reforms and Developments in Vietnam and North Korea," *The Korea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pp. 59~96.

않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베트남 사회주의체제는 폴란드나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의 어느 국가보다 경제적 개혁에 있어서 기민하고도 적극적이었다.¹²⁴⁾

3. 國家, 市民社會 및 世界體制의 相互作用

사회주의체제 베트남에서 도이 모이가 국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것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당면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가 ‘위로부터’ 선도한 경우이다. 베트남의 경우 시민사회의 점진적 형성은 도이 모이의 부산물이지 그것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구 또는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과는 성격을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의 국가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에 대해 고도의 자율성을 구가했고 또한 현재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우, 1980년대 말 동구에서처럼 국가의 정통성 약화와 ‘밑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해 체제가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추진된 초기의 개혁·개방 정책이 베트남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세계체제론적인

124) Williams, *Vietnam at the Crossroads*, p. 85.

시각에서 해석하면, 당시는 동서냉전체제가 재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베트남은 19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일련의 경제적 개혁정책도 세계적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 가운데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와해되기 시작한 동서냉전체제와 1990년대 초의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완성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도이 모이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도이 모이는 그 세계사적 타이밍에 있어서 행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전후기 상황을 이용하여 베트남의 도이 모이가 국가주도로 순항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압초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당장 국가의 자율성에 걸맞는 국가의 능력(capacities)은 아직 미지수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시에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관료기구의 발달은 베트남이 결여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또한 세계자본주의 발달사의 후후후발 주자(late, late, latecomer)로서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교우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하게 지속될지도 모른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국제경제의 개방화 경향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끝으로’ 참여하는 베트남을 반드시 축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작금에 추진되는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의 노력이 새로운 국제경제의 판도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의 국가는 매우 심각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는 1986~1988년에 버금가는 정도의 시민사회가 다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다.¹²⁵⁾ 또한 도이 모이가 성공하는 경우에도 시장경제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다원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발달을 가속화할 것이다.¹²⁶⁾ 더군다나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는 오랫동안 평등주의에 익숙해져 왔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分配的 正當性’(distributional legitimation)을 견지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분배의 공정성 문제를 실질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체제의 대내적 정당성은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發展모델로서의 도이 모이

베트남의 도이 모이는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개혁·개방을 병행시킨 소련의 고르바초프 발전모델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동시에 베트남은 경제구조의 개편과 안정화를 사유화에 선행시키고 급속한 변화보다는 점진주의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폴란드나 체코, 그리고 헝가리의 경험과도 다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발전모델은 흔히 등소평 집권 이후에 나타난 중국형, 곧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한 亞流로 설명된다. 경제적 개혁·개방

125) 일례로 남부 베트남의 전통종교인 카오 다이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남부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Ibid., p. 87 참조.

126) David W. P. Elliott, "Dilemmas of Reform in Vietnam," p. 59.

이 발전모델로서 의미를 가지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개혁과 개방이 세계체계의 대변혁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도이 모이를 중국의 개혁·개방과 반드시 동일시할 수는 없다.¹²⁷⁾ 우선 베트남은 중국보다 훨씬 경제규모가 적은 나라이다. 극단적으로 베트남은 전국토가 경제특구처럼 작동하고 있다.¹²⁸⁾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참여하고 싶은 필요성과 열망에 있어서 베트남은 중국보다 훨씬 강렬하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국에 비해 베트남은 지금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이 1/3에 불과할 정도로 극빈의 저발전국가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개혁과 개방에 대한 내부적 반대가 훨씬 약하고 혁명과 전쟁의 경험에 연장하여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정도와 동원의 효과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베트남 사회주의체제가 발전경로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넓은 운신의 폭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도이 모이는 스스로 중국형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빼고나면 베트남은 많은 점에 있어서 인근 동남아국가와 매우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中華大陸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127) Williams S. Turley, "Introduction," Turley and Selde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pp. 4~5.

128)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일기」, p. 24.

동남아 해양세력의 일원이기도 하였다.¹²⁹⁾ 그리하여 베트남 지도부가 중국모델을 이야기하는 대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공업국 모델을 거론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외국인 경제자문가들은 베트남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눈길을 주변 신흥자본주의 국가로 돌릴 것을 권유하고 있다.¹³⁰⁾

정치·사회 영역은 남겨둔 채, 경제적 부문에서만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部分的 改革’(partial reform)으로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개혁적 부문과 비개혁적 영역간의 갈등이 중국에서처럼 구조적인 긴장관계는 아니다. 중국에서의 ‘部分的 改革’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해, 베트남의 도이 모이는 우선 가능한 곳에서 개혁을 시작하여 중국적으로는 필요한 곳에서의 개혁으로 나아가는 전체적 ‘過程’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¹³¹⁾ 여론수렴기관으로서의 당의 활성화나 국회의 중시 등의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실은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멀지 않은 장래, 베트남의 도이 무이는 중국처럼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의 절대우위 속에서 개발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때 우리는 국민당정부

129) Williams J. Duiker, *Vietnam: Nation in Revolu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3), pp. 116~117.

130)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9, 1993.

131) Elliott, “Dilemmas of Reform in Vietnam,” p. 56.

하의 대만이나 인민행동당 정부하의 싱가포르를 베트남의 향후 정치발전모델로 인식한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내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체제의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탄력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개혁·개방에 가속도를 붙이면서도 동구와는 달리 밑으로부터의 저항을 선제 예방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회주의 레토릭 이면에서 실질적인 자본주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까운 선행은 민주주의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고도의 자본주의 발달을 단기간에 이룩한 베트남의 이웃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의 또 다른 龍이 되기를 꿈꾸는 베트남이 중국모델 보다는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 모델에 더욱 매료되고 있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다.¹³²⁾ 여기서 사회주의의 변화를 놓고 흔히 던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곧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엄밀히 구분하는 문제 역시 적어도 도이 모이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아무도 분명히 말하지도 않고 또 누구도 책임있게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사회주의이고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 성문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법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¹³³⁾ 매우 독특하게도 베트남에서 정책이라고

132) 보 반 케에트 수상은 도이 모이의 추진과정에서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했다. KBS 제1TV회견, 1993. 1. 24.

133) Elliott, "Dilemmas of Reform in Vietnam," p. 66.

하는 것은 이상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단 벌어진 현실을 사후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실험방법치고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¹³⁴⁾

134)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일기」, p. 34.

第5章 北 韓

I. 北韓 社會主義體制的 形成過程

1. 政權樹立過程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사회를 통합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1946년 2월 인민정권과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의 수립과정과 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에 대한 분석없이 전반적인 체제건설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쿠바 등에서는 자체 민족공산주의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였다. 반면 동구의 대부분 국가들은 소련군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반대 정파와의 연합, 흡수통합, 단독정권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 은밀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사회주의적 개조도 초기부터 대부분 강제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北韓 社會主義體制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북한

은 내부적인 혁명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순전히 외부적인 영향에만 의존해 형성되지도 않았다. 해방 후 북한 체제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동구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타 요인보다도 소련의 영향이 더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봉건 및 식민제도의 타파와 민주개혁 추진이 유난히 신속하게 전개되었던 점으로 보아 내부적인 개혁의 원동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혁의 원동력은 바로 동구와는 相異한 經驗을 통해 수립된 북한정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경험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金日成만이 자신의 武裝勢力을 이끌고 입북했기 때문에 무력의 독점을 통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정권장악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1945년 9월 19일¹⁾ 김일성의 원산항 도착 후에야 입북을 시도했던 조선의용군은 소련군에 의해 2차에 걸쳐 무장해제 당함으로써²⁾ 김일성의 강력한 라이벌 정파였던 연안파의 군사적 기반이 무력화되었다. 소련 거주 한 인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었던 소련파와 박헌영 중심의 국내파는

1) 김일성의 입북 일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대숙은 9월 19일로 보는 반면, 김창순은 9월 초순 김일성이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본다.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54;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들베개, 1986), p. 412.

2)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 148~155. 2차에 걸친 조선의용군의 입북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대략 1945년 10월 초부터 12월 사이로 추정된다.

원래 무장력을 갖추지 않았던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의 무장해제는 곧 김일성의 무력 독점을 의미하였다. 즉 김일성 일파는 소련군의 비호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도 해방 후 북한내 무장세력을 가진 유일한 정파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 북한에서와 같이 무력을 점유한 정파가 동시에 소련군의 후원을 얻고 정권수립에 참여한 예를 동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여기서 김일성을 지지했던 蘇聯軍의 북한 진주시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빠른 지역의 경우에는 소련군이 해방 직전인 8월 12일에 점령하였다. 이는 소련군이 대일본 선전포고와 동시에 시작한 관동군에 대한 작전 수행의 일환으로 북한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무력을 독점한 金日成 일파는 후에 조선인민군의 주도세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장악 과정에서도 武力으로 타 정파를 制壓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정권이 수립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45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는 김일성이 소유한 병력에 의해 둘러싸인 채 개최되기도 했는데,⁴⁾ 이는 무력을 전적으로 소련군에 의존해야 했던 동구의 경우와는 상이한 유형의 정권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는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 일파에 도전하는 정파로서 소련파,

3) 崔完圭, “人民軍의 發展過程과 黨·軍關係,” 高性俊 外, 「轉換期の 北韓社會主義」(서울: 大旺社, 1992), p. 249.

4)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319.

연안파, 국내파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理念的으로 同質性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련군은 이들 타 정파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의 정치참여를 지원하였다. 또한 해방 후 지방의 질서유지를 위해 우후죽순처럼 결성된 각종 위원회들 중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설립된 반면, 민족주의 진영의 거두인 조만식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소련군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참여한 이념적 갈등 요인은 일찌기 극복되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상이한 타 정치세력들을 와해 또는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동구의 경우보다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정권은 신속히 건설될 수 있었다.⁵⁾

주요 세력들의 이념적 동질성으로 인해, 지방 인민위원회들의 연합체 성격을 띤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가 김일성을 위원장, 연안파 김두봉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해방 후 6개월만인 1946년 2월 8일 수립될 수 있었다. 또한 김일성 등 해외 공산주의세력의 주장에 따라 1945년 10월 10일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를 결정하고 이듬해 8월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하여 北朝鮮勞動黨 창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북한에 유일정당 체제가 일찌기 확립되었다. 김일성은 타 공산주의세력들을 계속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이들의 이념적 동질성으로 말미

5) 전인영, “동구 및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비교: 공산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296.

암아 정치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구축될 수 있었다. 이로써 북한에서는 정파간 주도권 경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先 社會主義體制 建設을 위한 連帶, 後 政派間 鬭爭 및 肅清이라는 구도가 전개되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일성을 위요한 정권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김일성이 체제건설 초기부터 세 가지의 중요한 국가기관, 즉 군부, 행정기구, 당에 대해서 동일한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던 것은 아니다. 먼저 軍部에 대해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 일파는 해방 직후 북한 내에서 무력을 유지·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따라서 군부는 김일성이 직접적이면서도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 1948년 2월 朝鮮人民軍이 창설될 때까지 군대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의 모든 지위는 김일성의 빨지산 동료들이 차지하였다. 예를 들면 장교와 정치간부 양성을 위한 최초 학교로서 1946년 2월 8일 설립된 평양학원의 원장은 김일성과 같은 빨지산 출신인 金策이 맡았으며, 여러 가지 군사력을 통합·지휘할 최초 기구로 동년 8월 15일 설치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각각 崔庸健과 金一이 차지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이 창설되고 공화국이 수립될 때에는 민족보위상과 인민군 총사령관에 崔庸健과 姜健이 각각 임명되는 등 군의 요직은 김일성 일파에 의해 독점되었다.⁶⁾

김일성이 군부 다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관

6) 張浚翼, 「北韓人民軍隊史」(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참조.

은 행정기구였다. 그의 영향력 행사는 소련군의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 우선 소련군은 曹晩植과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억압을 통해 김일성이 행정기구를 장악하는데 기여하였다. 조만식은 태아적 정부라고 할 수 있는 以北5道行政局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이 국내에 알려진 1945년 12월 28일 이후 조만식과 그의 추종세력은 반탁을 주장함으로써 소련군의 탄압을 받게 되었으며,⁷⁾ 소련군의 비호를 받은 김일성은 행정기구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치기구의 성격을 띠고 밑으로부터 형성된 지방인민위원회들의 연합기구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수립될 때 위원장직을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한 소련군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인민위원회들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해 온 소련군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화될 때 자연스럽게 김일성을 지원했다.⁸⁾ 蘇聯軍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介入方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번째 방법은 소련군이 수립한 민정부에서 파견된 자문관을 통한 制度的 浸透였다. 소련군은 일찌기 점령지역마다 위수사령부를 구성하여 각 급(도 또

7)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서울: 박영사, 1989), p. 33.

8) 그렇다고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부터가 소련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위원회의 설치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설치과정에서도 소련군의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서울: 중앙일보사, 1993), pp. 46~47.

는 군) 지방인민위원회의 조직화로부터 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소련군은 자신의 영향력을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 1945년 10월 3일 民政府(민정부 장관은 로마넨코 소장 25군 부사령관)를 창설하였다. 소련군이 민정부를 북한의 실질적인 중앙통치기구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각 도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지방인민위원회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통제를 가하였다. 예를 들어 민정부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업중단된 기업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조달과 수송을 지원해 주는 한편, 지방인민위원회의가 은행 인사 및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공포하는 등 행정통제를 가하였다.⁹⁾

두번째 방법은 인민위원회 모임에서의 주도권 행사를 위한 소련군의 直接 參與였다. 예를 들면, 각 지방인민위원회가 당면한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각 도간의 횡적인 연계를 제도화하려 했던 중요한 모임인 이북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1945년 10월 8~10일에 개최되었을 때, 총 170명 참석자 중 소련군 측에서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을 비롯하여 소련군 장성 20명이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루어진 의제들도 모두 이들이 제안하였다.¹⁰⁾

이렇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련군이 각급 인민위원회에 개입해온 결과,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될 때 소련

9) 류길재,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p. 59.

10) 위의 논문, p. 61.

군의 비호를 받았던 김일성이 위원장의 직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군부와 행정기구에서와는 달리 초기 黨內에서의 김일성의 권력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었다. 1946년 8월의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와 1948년 3월의 제2차 대회 때만 하더라도 金料奉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 하나는 사전 합의에 의한 김일성의 양보이고, 다른 하나는 김일성의 패배이다.¹¹⁾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지만,¹²⁾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그가 양보해야 할 상대가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당의 핵심기관인 정치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서 잘 드러났다. 1차 때는 전체 5명 중 김일성 자신, 2차 때는 전체 7명 중 김일성과 김책 외에는 그의 지지세력이 없었다.¹³⁾

이와 같이 김일성은 당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그의 독자적 통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

11)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74.

12) 심지연, 「잊혀진 革命家の 肖像: 金料奉研究」 (서울: 인간사랑, 1993), p. 123.

13) 김일성이 당을 완전 장악한 시기는 1961년 9월 개최된 로동당 제4차대회 때라고 볼 수 있다. 이 대회는 1956년 8월종파사건을 통해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주요 인물에 대한 숙청을 완료하고 1958년 3월에 열린 로동당 제1차 대표자대회에서 연안파의 잔당을 제거한 후에 김일성 일파의 승전고 속에 열렸다. 4차대회 이후 1960년대의 정치숙청은 김일성 일파에 대한 것으로서 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배제하고 黨·軍의 二元化를 추구하였다. 실제로 초기 북한군부 내에 당조직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김일성과 그의 일파가 여타 세력들의 군조직 침투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결과였다고 판단된다.¹⁴⁾

요약하자면 김일성은 군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소련군의 지원으로 민주개혁 추진의 제도적 장치인 행정기구에 대한 권력을 장악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미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배제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군부, 행정기구, 당에 대한 김일성의 영향력이 각기 달랐듯이 이들 기구에 대한 소련군의 영향력 정도도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역시 소련군은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로 신속히 전환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정기구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반면, 군부의 형성과정과 초기 당의 발전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민주개혁'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김일성은 黨보다는 臨時人民委員會를 통해서 소위 '민주개혁'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주의의 기반을 구축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갔다. 그 이유는 이상의 정권 구축과정

14)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pp. 170~174.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내에서는 김일성의 정치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46년 2월 15일 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행한 “당내 정세와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黨의 役割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임시인민위원회의 개혁추진을 해설하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일군대열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이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 되도록 옹계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민주정치를 철저히 실시하며 파괴된 경제를 빨리 부흥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민주주의적과업들을 잘 수행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대중속에서 인민정권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광범한 대중속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성격과 당면과업, 그 인민적시책에 대하여 적극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이 인민정권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를 적극 지지옹호해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⁵⁾

즉 김일성은 당이 개혁의 핵심세력 또는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인민위원회가 추진하는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전 및 홍보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15) 「김일성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56.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이러한 전략은 결국 농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확대해 나아가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개혁의 최우선 과업인 土地改革은 김일성이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보고에서 ‘반동세력의 경제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민주적 독립 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역설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그 실시가 예고되었다.¹⁶⁾ 구체적인 내용은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면서 드러났는데, 요지는 ① 5정보 이상의 경작지 소유자와 부채지주의 경작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빈농과 고용농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것, ② 매매, 저당 설정, 소작, 상속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私的 所有權을 制限한다는 것 등이다.¹⁷⁾

토지개혁은 시작된지 불과 20일 만에 완료되었는데, 동구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신속한 것이었다. 개혁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임시인민위원회의 전국적인 통치망에 힘입었다는 점이다. 지방별 인민위원회가 연합체 성격의 임시인민위원회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토지개혁 실시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추진의지와 밑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지가 수렴될 수 있었다. 둘째는 일제 식

16) 위의 책, p. 30.

17) 民族統一研究院, 「北韓의 實相과 變化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 189.

민지시대의 영향으로 지주계급이 토지개혁을 반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⁸⁾ 더욱이 일부 잔재했던 지주세력마저도 상당수 남한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본 사회에서의 토지에 대한 애착은 농민들을 아무런 저항없이 개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었다. 즉 토지개혁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에 비해 타격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 신속한 개혁 요인의 하나였다.¹⁹⁾

민주개혁에 있어서 토지개혁이 농촌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켰던 반면, 主要産業國有化는 도시의 산업 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주요산업국유화령」이 1946년 8월 10일에 공포되어 산업, 교통, 운수, 채신, 은행 등 제반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추진되었는데, 산업의 90% 이상이 일본인들에게 소유되었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거의 없었다. 한편 10월 4일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가 발표되어 소규모 개인사업은 계속 보호되었다. 민주개혁은 이와 같은 경제개혁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6월 20일의 「노동법령」은 8시간 노동, 소년노동, 노동조합 등을 규정하였고 7월 30일의 「남녀평등권 법령」은 봉건적 남녀관계 타파를 제도화하였다.

民主改革은 그 성격에 있어서 봉건적 식민지사회로부터 사회주

18) 장상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과정의 특질,”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 110.

19) 스키타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p. 443.

의적 협동체제로 이동해 가는 過渡期的 措置였다고 말할 수 있다.²⁰⁾ 개혁을 위한 법령과 이의 추진은 모택동식의 ‘신민주주의’노선을 따르는 것으로서, 부르조아 민주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두 단계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3. 生産樣式의 社會主義的 改造

한국전쟁 후 1950년대 후반 북한은 생산양식을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다. 이 기간 동안 농업협동화와 수공업 및 상공업의 협동화가 완성되어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農業部門

農業協同化의 연원은 해방 후 일제 소유의 농장, 과수원, 목장을 국영·도영으로 협동 경영한 데서 찾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한 추진력은 韓國戰爭에 의하여 促進되었다.²¹⁾ 전쟁에 의해 북한의 농촌은 인력의 부족을 겪어야 했

20) 위의 책, p. 438; 고현욱, “북한의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이행,”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pp. 128, 136.

21)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의 사회구조변화,”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을 뿐만 아니라 농토, 관개시설, 농기구, 농로 등 농업관련 생산 수단이 파괴되어 개별적인 영농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협동화 의식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은 목장, 전선공동작업대, 부업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력협조반 등에 농민들이 농기구를 기탁하고 생산에 공동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부터 경험적 수준에서 협동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협동화는 농민들 상호간의 이익상충과 관리운영의 결함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²⁾

1954년 11월 3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농업협동화는 大衆的 段階로 전환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공업 부문이 국영화로 인해 대체로 사회주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농업이 토지개혁에 의한 개인경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농업협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선 공업에서는 사회주의적국영경제가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이후 북반부에서는 중요산업이 국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공업에

소, 1992), pp. 189~190.

22) 조영건,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경제,”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p. 143.

서는 국영경제가 절대우세를 차지하기때문에 사회주의경제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지금 개인경리가 우세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의 일부는 부농화하고 그외의 많은 농민들은 아무리 당과 정부에서 도와주어도 생활은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할것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을뿐 아니라 공업발전에까지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공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농촌경리도 완전히 계획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농업이 공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갈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미 우에서 말한 알곡도 공업원료도 육류도 보장할수 없습니다.

농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업을 협동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농업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것입니다.²³⁾

1954년 말부터는 농민들의 협동조합 가입이 급격히 진행되어 1956년 말 총 농가수의 80.9%가 협동화에 참여하여 15,825개의 협동조합이 형성되었다. 북한은 1956년 4월 제1차 5개년계획 중에 농업협동화를 완성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부농, 상업 겸업 농민, 전후 편입지구 농민들을 포함하는 모든 농민의 농업협동화를 1958년 8월 완결하였다. 연도별 협동조합의 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규모는 관리운영 수준과 기술장비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초기 협동화가 경험적으로 실시되던 시기에는 한 조합당 30호 이하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점차 확대하여 1958년 말에는 30호 이하의 조합은 사라지고, 100호 이하가

23) 김일성,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24~129.

〈표 3-5-1〉 농업협동조합의 증가 추이

구 분	단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협동조합수	개	806	10,098	12,132	15,825	16,032	3,843
조합 농가호수	%	1.2	31.8	49.0	80.9	95.6	100.0
조합 경지면적	%	0.6	30.9	48.6	77.9	93.7	100.0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 330.

10.2%, 101~300호가 53.6%, 301~600호가 32.0%, 601호 이상이 4.2%를 차지하였다.²⁴⁾

협동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가지 特性은 토지개혁이 불과 20일 정도 만에 완성되었던 반면 농업협동화는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토지개혁이 대부분의 농민들을 수혜자로 만들었던 반면 협동화는 농업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로서 사적 토지소유의 종언을 의미해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애착을 가진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 手工業 및 商工業部門

도시에서의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농촌에서와 같이 협동화의 방식을 택하였다. 먼저 手工業 協同化의 역사는 한국전쟁

2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 330.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부터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시작된 개인수공업의 협동화는 영세성과 기술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폐해로 인한 수공업자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전후에 협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단시간에 순조롭게 완성하였다.

반면 商工業의 協同化 과정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초기에 부의 확대를 위해 상공업자에 대해서 기업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투기나 고리대금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함으로써 소위 상공업의 ‘制限利用政策’을 펼쳤다.²⁵⁾ 그러나 농업협동화와 사회주의 공업화로 인해 상공업자들이 자재와 원료를 시장에서 구입하기 힘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상공업은 전후에 전면적으로 개조되었다. 업종별 생산협동조합이 상공업 협동화의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조합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었다. 제1형태는 생산도구를 공유하지 않고 작업만 공동으로 하는 초보적 형태이며, 제2형태는 생산수단을 공유 또는 사유하면서 노동과 출자에 따라 분배하는 반사회주의적 형태이고, 제3형태는 생산수단을 완전 공유하고 사회주의적으로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제2형태가 지배적이었다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제2형태를 거쳐 제3형태로 전환되었다.²⁶⁾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수공업의 협동화에 비해 훨씬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해 주는 사실로서 상공업의 사회주

25) 김한길, 「현대조선역사, 1983년판」 (서울: 일송정, 1988), p. 358.

26) 위의 책, pp. 358~359.

의적 개조가 경리형태의 개조와 함께 상공업자들의 인간개조를 병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는 사상교양을 통해 이들을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근로자로 개조해 나아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1958년 8월 농업협동화와 때를 같이하여 완성되었다.

4. 社會主義 發展戰略의 定立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더불어, 1950년대 후반 북한체제의 주요한 변화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공업화란 重工業 中心의 소비에트식 산업 발전전략으로서, 당시 북한에서는 생활필수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의 발전도 필요불가결하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인민생활의 내핍을 강요하는 무리한 발전전략이었다. 따라서 농업협동화와 상공업 및 수공업의 협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내 파벌간의 이론적 논쟁이 없었던 반면 공업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쟁은 심각하였다. 發展戰略 論爭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김일성 일파 대 소련파 및 연안파 간의 갈등을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1956년 8월중 파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이 논쟁을 반대파를 숙청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 진행 중이던 1955년 金日成은 소련파 朴昌玉이 위원장이었던 국가계획위원회의 보고를 비판하면서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위해 중공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의 발전전략에 의하면, 공장건설을 위해 건재 및 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계공업과 철강 공업의 발전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식료품·생필품 등의 경공업 부문은 인민생활에 불편을 줄지언정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떤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겠습니까? 공장과 집을 많이 지으려면 철재와 강재, 세멘트, 벽돌, 목재를 비롯한 건축자재들과 건설기계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 그러므로 앞으로 건재 및 화학 공업부문에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 건재 및 화학 공업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 소요되는 기계라든가 부품 같은것을 제때에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기계공장들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100%로 보장할수 있도록 기계공업부문에 또한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기계공장들에 투자를 더 하는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철재와 강재를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합니다. ... 다른나라에서 들여오는 공장들도 선후차를 가려서 당장 필요치 않은 공장들과 인민생활을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지 않는 공장들에 대하여서는 그 납입기한을 조금씩 미루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 오늘 우리는 고기가 없어서 먹지 못하지 가공하지 못해서 못먹는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가지고 통줄임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썩이지 말고 잘 절이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인민들의 식생활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²⁷⁾

27)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당 및 정권기관 지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55년 10월 21일),” 「김일성저작집 9」, pp. 433~435.

발전전략을 둘러싼 당관료들간의 갈등은 로동당 제3차대회(1956년 4월)에서 다음 해부터 추진될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을 확정·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重工業 優先 發展, 輕工業·農業 同時發展’이라는 자신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1956년 6월과 7월 2개월 동안 소련 및 동구 국가들을 방문하였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전후 복구기간 동안의 원조에 대한 감사표시와 제1차 5개년계획을 위한 경제원조의 요청이었다. 그는 별 소득없이 돌아왔으며, 김일성 대 그의 정적들(연안파와 소련파)간의 정책 공방은 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에서 첨예화되었다. 이 회의에서 연안파인 경공업부상인 尹公欽이 김일성의 경제정책을 비난하였으며 崔昌益·朴昌玉 등 연안파와 소련파의 실세들은 윤공흙의 입장을 지지하였다.²⁸⁾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당내 반대파를 공략하는 기회로 삼아 8월중파사건을 통해 두 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가하였다.²⁹⁾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숙청작업은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전략논쟁도 막을 내렸다. 따라서 이 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자신의 발전전략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28)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p. 95.

29) 김일성의 강력한 라이벌 정파의 하나였던 박헌영 중심의 국내파에 대한 숙청은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되어 1955년 12월 15일 박헌영의 처형으로 끝났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발전전략 논쟁은 연안파·소련파의 연합 대 김일성파의 대결이었다.

김일성은 또한 이 회의를 통해 북한 경제전략의 골간을 이루는 ‘經濟에서의 自立’을 표방함으로써 자력갱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김일성은 한국전쟁 전 소련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었고,³⁰⁾ 둘째로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 국가 순방시 이들 국가들은 그에게 이렇다할 만한 원조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셋째로 8월중파사건 이후 소련의 미코얀(Mykoyan)과 중국의 彭德懷가 북한을 방문하여 숙청사건을 문제화함으로써 김일성을 격노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주의가 스탈린의 모델을 충실히 따랐던 김일성으로 하여금 소련은 더 이상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했다³¹⁾는 점 등이다. 결국 양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김일성의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인 대응이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김일성으로 하여금 경제에서의 자립을 주창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러한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대중의 조직동원을 위한 ‘혁명적 균중관점’과 ‘사상교양사업’의 강화를 주장하였는데,³²⁾ 이 주장은 1958년 9월 천리마운동³³⁾과 1960년대 청산

30) 1964년 로동신문 9월 7일자에 의하면, 북한은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소련과 부당한 무역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원자재를 국제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가는 한편, 기계와 필수품들을 국제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출하였다. Joungwon Alexander Kim, "The Peak of Socialism in North Korea: The Five and Seven Year Plans," *Asian Survey*, vol. 5, no. 5 (May 1965), p. 256에서 인용.

31) 스킨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서울: 돌베개, 1986), p. 643.

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은 群衆路線으로 구체화되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과 권력투쟁은 스탈린 집권체제 확립시의 정책논쟁과 그 양상이 비슷했다. 소련이 1928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전 몇 년 동안에 전개된 정책 논쟁, 즉 샤닌(Shanin)의 농업중심주의 발전전략 및 부하린(Bukharin)의 균형발전전략 대 스탈린의 중공업 우선정책 사이의 갈등은 후자의 채택과 스탈린의 권력투쟁의 승리를 가져왔다.³⁴⁾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권력투쟁의 수단인 것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肅清을 正當化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전전략논쟁은 정파들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여기서의 승리는 상대방 세력의 숙청을 합리화하였다.

발전전략논쟁과 권력투쟁이라는 당내 갈등을 거쳐 추진된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1950년대 후반 경제계획을 통해 그 기반이

32)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1956년 12월 13일),”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3) 천리마운동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을 모방한 것으로서 경쟁에 의한 능률보상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라기 보다는 노동투입증대를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를 통해 한계 생산력의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86), p. 64.

34)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81), pp. 63~87.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이 북한경제 전분야를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반면, 5개년계획(1957~1960)은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계획기간을 1년 단축시키기까지 하였다. 1957~1960년 동안 국민소득이 2.2배로 증가하였으며,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어 양곡 수확고도 1946년과 비교해 126%로 증가하였다.

工業部門은 특히 주목할만한 成果를 거두었다.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공업 총생산액은 3.5배에 이르렀는데, 이 중 생산수단 생산은 3.6배, 소비재 생산은 3.3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기계금속 성장율은 47.5%로 증가하였다. 사회총생산 구성비에서는 공업부문이 1956년 40.1%에서 1960년 57.1%로 증가하는 반면 농업부문은 26.6%에서 23.6%로 감소하였다.

요약하자면,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1940년대 후반 제반 민주개혁을 통해 봉건적 및 식민지적 잔재를 일소하였고 1950년대 농업협동화와 수공업 및 상공업의 협동화를 통해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였다. 한편 1950년대 후반 발전전략 논쟁과 권력 투쟁을 통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그 건설기에 이미 葛藤構造를 孕胎해가고 있었다. 당내 반대파의 제거를 통해 다소 취약했던 김일성의 권력은 확고해지게 되었지만, 자력갱생에 입각한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공업화가 북한의 유일한 발전전략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즉 발전논리를 달리하는 반대파의 퇴장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체제 발전에 대한 엘리트들간의 공개된 요구의 표출과 집합

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곧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내포적 경제성장의 저해를 의미하였다.

II. 北韓 社會主義體制의 發展과 限界

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공업화로 기계 및 금속공업의急速한 成長에도 불구하고 경공업·농업부문이 낙후하여 産業의 不均衡을 낳았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발전둔화를 겪게 되었다. 여기서는 산업 불균형과 이에 따른 발전둔화를 가져왔던 요인을 대외적으로 중·소분쟁으로 인해 북한이 단절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점과 대내적으로 동원체제에서의 혁명적 군중노선의 비합리적 요소와 유일적 지배체제의 확립으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무시되었다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中·蘇紛爭과 自主的 經濟發展路線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중·소분쟁은 청국과 제정러시아 사이의 긴장관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양국간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1956년 2월에 개최된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한 때부터이다. 흐루시초프는 이 대회에서 권력강화과정에서 스탈린이 행한 무자비한 숙청과 개

인승배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대내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세계공산주의 운동에 큰 파문을 던졌다. 무엇보다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세계 사회주의체제 건설에 대한 그의 업적과 사회주의체제 발전전략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스탈린식 경제정책의 채택으로 급속한 공업화와 농업집단화를 추진하고 있던 중국은 흐루시초프의 발언을 수용하기 힘들었다. 특히 생존해 있는 원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 毛澤東은 스탈린 격하 문제가 자신에게도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므로 흐루시초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발생한 중·소분쟁은 1960년 6월에 개최된 부카레스트회담에서 중국 대표인 彭眞이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원칙을 논박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1964년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다소 개선된 적도 있었으나, 중·소의 갈등은 적어도 1980년대 고르바초프 등장시까지 지속되었다.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북한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중·소분쟁은 북한 사회주의체제 발전 혹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양대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분쟁은 특히 그 초기에 북한의 자유로운 정치적 行動空間(behavior space)을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어느 한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취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주의체제 건설기와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전후 복구기에 양국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및 물질적 지원이 북한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을 위요한 북한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공간은 극히 제한되었다.

제한된 행동공간 내에서 북한은 양국에 대해 均衡的인 입장을 견지하려 하였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1961년 7월 북한이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은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두 조약은 불과 5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조·소조약을 ‘역사적 의의를 갖는 거대한 사변’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조·중조약에 즈음하여 ‘피로 맺어진 전투적 우호와 유대’라고 칭하면서 양국 모두에 대해 우호적인 언사를 되풀이했다.³⁵⁾

둘째, 중·소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은 점차 양대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서 체제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로 북한 특유의 이념인 主體思想이 發展하게 되었고, 특히 자주성의 4가지 원칙이 공식화되었다. 自主性の 原則이란 1950년대 후반에 제시된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와 1962년과 1966년에 각각 주창된 국방에서의 자위와 대외관계에서의 자주를 말하는데,³⁶⁾ 이 원

35)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pp. 729~730.

36) 196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중국과 소련에 대한 발언 또는 태도는 단순히 수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이기까지 했다. 예를 들

칙의 제창으로 주체사상은 대내외적 정책을 합리화하는 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⁷⁾ 이 중에서도 국방에서의 자위와 대외관계에서의 자주는 중·소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서 북한이 사회주의 세계의 동요로부터 자주성을 견지하려는 ‘폐쇄 또는 단절’ 전략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물론 시기에 따라 중국 또는 소련에 약간 편향적인 성향을 띤 경우도 있었으나 북한의 이러한 단절전략은 최근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심화되어 중·소 양대 사회주의체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본주의체제로부터의 종속을 회피하려하고 있다.³⁸⁾

셋째, 중·소분쟁은 분단관리체계의 특성을 지닌 북한에게 체계의 존속을 위해 보다 더 武力指向的인 路線을 취하도록 하였다.

어, 1961년에 개최된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와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각각 ‘우리 인민의 해방자이며 가장 친근한 벗’ 그리고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우리와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 온 전우’라고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이 없이는 개별적인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전체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발전 그리고 이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와 중국을 지칭하는 교조주의를 다함께 비판하였다. 國土統一院 編,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Ⅱ)」(서울: 國土統一院, 1980), pp. 98~99.

37)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p. 86.

38) 임현진, “세계체제와 종속반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교훈,”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13권 1호 (1991. 10), pp. 155~183 참조.

중·소분쟁으로 행동공간이 협소해진 북한은 1961년 남한에서의 정치변화를 한반도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파악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심화된 반제국주의 의식, 즉 반미의식을 지닌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남한내 군사정부 등장을 용인한 사실을 곧 미국이 남한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시와는 달리 중·소의 갈등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 모두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기치 아래 1962년 당 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經濟·國防 並進 路線을 채택하는 동시에 4대군사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특히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공업에 더욱 많은 투자를 실시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중·소분쟁으로 협소해진 행동공간 속에서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소련 또는 중국 어느 한 쪽 과도 종전의 동반자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의 체계화로 사회주의 진영내 변화에 대한 이념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분단체계의 관리를 위한 경제·국방 병진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은 특히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택하게 됨으로써, 1950년대 후반 이래 사회주의 공업화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간 불균형에 의한 발전둔화를 경험해야 했다. 이렇게 대외적인 요인으로서의 중·소분쟁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動員體制의 強化와 唯一支配體制의 確立

가. 群衆路線의 政治事業 優先

1960년대의 초의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 그리고 대안의 사업 체계는 1950년대 말 천리마운동이란 이름 아래 이미 시작된 사회주의적 동원을 한층 강화시켜 주었다. 특히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0년대 이래 동원체제의 기본 골간이 되는 혁명적 군중노선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 왔다. 군중노선이란 당과 국가기관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생산과정에서의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급노선이다. 농촌에서의 군중노선은 청산리방법을 통해서 전개되어 나아갔는데, 이 방법의 명칭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면서 제시한 농촌 경리 방법이라는 데에서 유래한다. 한편 공업 분야에서의 군중노선은 1961년 김일성이 평남 용강군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제기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 확립되었다.

이들 군중노선은 물질적 동기를 유발하는 합리적 또는 경제적 요인을 등한시한 반면 政治事業을 우선시하였다. 정치사업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서³⁹⁾ 인민대중이 생산의 주인이라는 논리하에 관리방식을 강조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9) 신병식,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 이행과정,”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p. 114.

주목할 것은 당시 군중노선에서의 정치사업 우선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勞動力을 管理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력갱생의 경제체제하에서 자본과 기술의 투입을 증대시킬 수 없었던 1950년대 후반에는 농업 부문의 노동력이 공업 부문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어 기술자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나마 생산성을 제고하였다.⁴⁰⁾ 그러나, 1960년대에는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마저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자 북한은 노동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리 방식으로서 군중노선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부기관 요원들이 농촌이나 공장 현지에까지 내려와 인민 대중과의 토론을 통해 실정을 파악하고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전략이라는 북한의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군중노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한 노동력을 당이 통제하도록 유도하였다.⁴¹⁾ 한편으로는 협동농장이나 기업소 지배인층의 무사안일주의적 사무 태도와 노동자들의 근무 태도를 감독하고자 現地指導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기존의 지배인 유일관리체계를 대체시킨 黨委員會가, 그리고 농촌에서는 종래의 군인민위원회 대신에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이 되어 종전의 상부하달의 행정적 통제 방식을 지

40) 金東源, “北韓의 經濟開發政策의 性格과 經濟改革 展望,” 「亞細亞研究」, 32권 1호 (1989), p. 8.

41) 李卜壽, “北韓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社會的 隋伴現象,” 「亞細亞研究」, 16권 2호 (1973), p. 58.

양하고 각급 당이 수평적으로 노동력을 지도·관리하는데 참여하였다.

한편, 정치사업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 등의 균중노선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規範的인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물질적 동기 부여를 수정주의적인 위험한 사고로 간주하였다. 김일성은 말하기를,

혁명사업이나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복무하려는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오와 자각적열성입니다. ... 물질적자극만 주로 내세우는것은 수정주의이며 아주 위험합니다. ...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로동에 차이가 있는것만큼 분배에서 차이를 두기는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배에서 차이를 둔다고 하여 물질적자극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길로 가게됩니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그것으로써 물질적자극은 충분하며 그이상 나가면 사람들에게 리기주의를 길러주게 됩니다. ...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것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바르게 실시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수 있습니다.⁴²⁾

즉 김일성을 위요한 북한 지도부는 물질적 동기부여 자체를 사

42)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재정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담화, 1968년 10월 31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 377~378.

회주의적 생산양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군중 노선에서는 각 개인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는 經濟的 人間型이 否定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 말 중국이 대약진운동 초기의 사회주의적 분배체계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을 낳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운동 말기에 물질적 유인을 사용했던 경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⁴³⁾ 북한은 1960년대를 통하여 군중노선의 정치사업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을 무시한 전략만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둔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나. 金日成 唯一支配體制

1962년 북한은 經濟·國防 竝進路線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노선의 구체적인 실행은 1960년대 후반 엘리트간의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의 발전전략 논쟁에서와 같은 파벌간의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권력투쟁을 동반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실현은 일부 최고위 엘리트의 숙청을 수반하였다. 노선을 둘러싼 엘리트간의 공방은 김일성이 자신의 파벌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김일성 유일체제의 형성을 도왔다고 할 수 있다.

43) Amartya Sen, "Behavior and the Concept of Preference,"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6), pp. 77~78 참조.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주장하는 대내 強硬派가 登場하게 된 理由는 중·소분쟁으로 북한의 행동공간이 협소해진데다 주변 환경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1961년에 집권한 남한군부가 반공이념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간의 갈등이 첨예한 형태로 표출된 월남전쟁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내 강경파의 입지를 높여 주었다. 金昌奉, 崔賢, 許鳳學, 崔光, 吳振宇 등 군부지도자로 대표되는 強硬派는 중공업 발전이 사회주의체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체제수호를 위해서 중요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특히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소련의 기술과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사실상 소련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반면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 박용국 등의 穩健派는 7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중공업과 경공업의 均衡的 發展을 주장하였다.⁴⁴⁾ 노선에 관한 논쟁은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의와 1967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강경파가 부상하고 온건파가 숙청되는 동시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강경노선이 추진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강경노선의 추진으로 7개년계획은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 완성기간을 3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44)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p. 105.

그러나 吳振宇를 除外한 김창봉, 허봉학, 최광 등 強硬派는 당이 부과한 군사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인민군 내에서 당의 지위를 약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1968년 말 김일성의 비판을 받고 肅清되었다.⁴⁵⁾ 물론 이들의 퇴진과 함께 강경노선은 철회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60년대 후반 경경노선의 추진은 국방비 지출의 획기적인 증대로 국방력의 증강을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金一이 행한 보고에 잘 드러나 있다.

1960년에 국방부문에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9%가 돌려졌다면 당대표자회의가 있는 이후인 1967~69년 동안에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31.1%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돌려졌으며 지난 9년동안에 거의 8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국방건설에 지출되었습니다. ... 당이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은 결과 7개년계획기간에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강력한 국방공업이 창설되었으며 지난날 보충이나 몇자루 생산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오늘은 인민군대와 전체인민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⁴⁶⁾

반면 김일성이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큰

45) 스키타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p. 766. 그러나 김일평에 의하면, 이들이 숙청된 이유는 소련과의 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얻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p. 107.

46) 國土統一院 編,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Ⅲ)」(서울: 國土統一院, 1980), p. 114.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은 예견하였던 것보다 일정하게 늦어지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강경노선의 추진과 번복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음에 틀림없다.

발전전략을 둘러싼 엘리트간의 공방이 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노선논쟁의 과정에서 군부의 최고 지도부를 교체 또는 숙청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그의 통치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과 번복은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낳는 한편 군부에 대한 지배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金日成 唯一支配體制의 구축에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社會主義經濟의 發展鈍化

1960년대의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던 반면 타 부문의 생산성을 등한시 함으로써 經濟體制의 葛藤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우선 체제의 경제적 수행능력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 기간 동안에 추진된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의 목표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성과 면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북한이 고도의 공업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과 두 가지 중요한 지표인 국민소득과 양곡 수확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미발표 부분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산업부문의 구체

〈표 3-5-2〉 북한의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의 목표와 성과

주요 목표	주요 계획목표	주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업 발전 ·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2.7배 · 공업총생산 3.2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미발표 · 공업총생산 3.3배 · 기계금속공업성장률 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기술혁신 · 문화혁명과 국민 생활 향상 · 국방 경제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수확고 600-700만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수확고 미발표 · 계획기간 3년연장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 13.

적인 성과들을 보면 주로 重工業 分野의 발전에 힘입어 공업총생산이 증가했던 반면 경공업과 농업생산은 목표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산업의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철강 부문은 당초 170만 톤 계획을 훨씬 능가하여 198만 톤을 생산하였고, 강철, 비철금속, 기계류 부문도 목표에 근접함으로써 중공업 부문의 실적은 성공적이었다. 한편 직물, 식품가공, 종이 등 輕工業과 쌀을 비롯한 糧穀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중공업 부문의 생산성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음을 시사해 주었다.⁴⁷⁾ 1960년대의 이러한 不均衡한 産業發展은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정립된 자력갱생원칙하에서 중공업 중심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강행한 결과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1차 7개년계획 기간 동안 산업의 부문간 불균형은 경제전반의

47)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 1992), p. 61.

發展鈍化 현상을 초래하였다. 1960년대 북한의 GNP 성장율은 1950년대 후반(예를 들어, 1956년은 31.8%)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연평균 10.12%를 기록하였다.⁴⁸⁾ 이 정도의 성장율마저도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성장율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던 1967~1969년에는 연평균 성장율이 5.8%에 불과하였다. 1960년대의 발전둔화가 결코 발전의 중단이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둔화현상은 지표상으로 볼 때 1970년대보다도 심각한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⁴⁹⁾

요약컨대, 1960년대의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중공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발전둔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정립된 자력갱생에 입각한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공업화가 북한경제의 구조적 한계성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1960년대의 대내외적 요인들은 더욱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양대 사회주의체제간의 뿌리깊은 갈등인 중·소분쟁이 1960년대 들어 격화되면서 북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분쟁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적 행동공간이 위축되었던 한편, 자주성을 강조하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체계화되었으며 분단관리체계의 존속을 위해 병영국가화되었다. 대내적인 측

48) 위의 책, p. 142.

49) 鄭相勳, “經濟計劃과 成長,”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 法文社, 1985), pp. 154~157.

면에서, 정치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혁명적 군중노선은 물질적 동기를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형을 부정하는 노동관리 방식에 그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둘러싼 엘리트 갈등의 종식으로 인해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가 확립되었지만 이것은 곧 정책에 대한 異見 表出의 메카니즘이 遮斷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측면에서는 특히 김일성체제의 정당화 기반을 확대시켰던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향후의 정책 수정 혹은 선택의 폭을 한층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소분쟁처럼 체제의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적정 수준의 정치적 진동(fluctuation)은 오히려 그 적응과정에서 엘리트들이 체제의 구조 및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공식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體制의 安定度를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당화의 기반이 결코 대중의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군중노선을 통한 경제적 동원도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고 전개된 경제우선의 논리가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1970년대 이래 시도된 개방화의 노력도 구조적 개혁을 회피한 채 추진된 매우 소극적인 정책에 그치고 말았다.

Ⅲ. 北韓 社會主義體制의 變化

북한은 누적된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 전반 서방의 설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대서방 개방정책을 취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합영법」을 채택하여 외채 부담없는 자본과 기술 도입을 시도하는 동시에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외개방을 위한 제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이나 중국의 개혁·개방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타 체제에서의 개혁과 달리 북한 내부의 변화는 개혁이라고 부르기에 변화의 심도(depth)와 급진성(radicalism)의 정도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調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코르나이(Janos Kornai)의 改革에 대한 概念化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개혁이라고 칭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⁵⁰⁾ 첫째, ① 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 구조, ② 국가소유권, ③ 관료적 조정메카니즘 중에서 한 가지 이상

50)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61, 388.

에 변화가 발생하여야 한다.⁵¹⁾ 둘째, 그 변화는 사회주의체제를 변혁시킬 만큼 급격하지는 않으면서 약간 급격한 혹은 완만한 (moderately radical or moderate) 수준이어야 한다. 즉 개혁이란 심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식 이데올로기 또는 權力構造, 所有權構造, 官僚的 統制 등의 부문에까지 미치며 완급의 정도에 있어서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 만큼의 相對的으로 緩慢한 페이스로 진행되는 변화이다. 이러한 틀에 비추어 보아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의 변화가 개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⁵²⁾ 본 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요인과 실태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51) 심도를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①, ②, ③이다. 이외에도 ④ 실적주의, 간부의 가부장적 행위 ⑤ 전형적인 경제현상으로서 강요된 성장, 노동부족, 실업현상 등이 있다. 물론 심도의 순위가 높은 것은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52) 1984년 시작된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도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의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희상은 ‘숨겨진 동화할 수 있는(hidden and assimilable) 개혁’이라고 칭한다.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Domest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1990’s, Arlington, Virginia, July 12-14, 1991).

1. 1970年代 初 開放의 實驗 및 試鍊

가. 開放의 對內外的 促進要因

북한이 적대시 해오던 서방국가들을 상대로 1970년대 들어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던 요인은 데탕트 시대의 도래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자력갱생에 기초한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력갱생에 바탕을 둔 外延的 成長의 限界를 가져오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에너지 자원의 수급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석탄은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지만, 원유, 코크스용 석탄 등과 같은 주요 전략 에너지 자원이 전무하여 에너지 산업이 극히 취약하였다.⁵³⁾ 둘째, 기술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대부분의 기계 설비는 1950년대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계획에 의해 소련 등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중·소 분쟁으로 인하여 북한은 이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에너지 자원, 기술, 시설재 등 불가결한 수입수요를 충당시켜 줄 외환 공급능력이 극히 취약하였다. 따라서, 경공업 등 타 산업의 희생과 유희 자원(자본과 노동)의 총체적 동원(total mobilization)을 바탕으로 이룩한 그 동안의 사회주의

53) 이종석, “북한 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편,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서울: 형상사, 1991), p. 88.

공업화조차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외연적 성장의 단계를 벗어나 내포적 성장의 단계로 전이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방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외개방은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 한반도를 위요한 國際秩序의 變化는 북한이 서방 국가들에 문호를 개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1960년대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벌이면서 자주성을 지키는 한편, 반제반식민 민족해방운동을 명분으로 제3세계에서의 외교역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서방과의 관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데탕트 시대의 도래로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1971년에 시작된 미·중간의 데탕트와 1972년의 일·중 국교정상화에 대해 북한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1972년 2월 28일 「美·中 上海共同聲明」이 발표된 후 김일성은 미국에 대해 적극적인 접촉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동년 9월 29일 발표된 「다나카-周恩來 共同聲明」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⁵⁴⁾ 더욱이 북한은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대규모 대표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는 등 다변화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상과 같은 對內的 필요성과 國際的 환경변화가 서로 收斂하여 1970년대 전반 북한의 대서방 개방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볼 수

54) 許文寧,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北韓·統一研究論文集(IV)」(서울: 통일원, 1991), pp. 165~166.

있다. 그러나 대내지향적 산업정책을 고수하려는 북한 지도부는 제한적인 개방에 그칠뿐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할 수 없었다.

나. 改革의 構造的 制約要因

1970년대 전반기에 북한이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제한적 개방만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즉 대서방 개방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제약했던 요인은 무엇인가? 그 요인은 경제외적인 측면, 그 중에서도 政治的 側面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와 3대혁명소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재활성화를 들 수 있다. 권력승계문제는 분단관리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 또는 이념적 이완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3대혁명소조운동은 관료주의를 비롯하여 경험주의, 무사안일주의 등 사회주의체제 제도화 및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를 혁명의 계속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각각 구조적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우선 權力承繼 問題가 구조적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측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56년 8월중파사건을 계기로 타 파벌을 숙청하고 1960년대 후반 노선 갈등을 계기로 자신의 일파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김일성은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최대 과제는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

작업이었는데, 이는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승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즉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권력투쟁을 통해 등장한 흐루시초프는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 비밀연설에서 스탈린의 비인도주의적 권력 남용과 개인숭배를 비판함으로써 선통치자를 비판·격하하는 사례를 남겼다. 또한 중국에서는 군부를 장악한 林彪가 문화대혁명의 전파자로서 毛澤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지만,⁵⁵⁾ 그의 권력 남용이 毛의 불신임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197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권력승계가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목격했던 김일성은 그와 血緣을 가진 자 중에서 후계자를 선택하려고 하였으며, 그 대상으로서 한 때는 동생인 김영주도 고려하였으나 결국 아들인 金正日을 택하였다.

권력승계문제는 1971년 6월 24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발언에서 시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여기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⁵⁶⁾

55) 毛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다른 인물들 즉 유소기 또는 화국봉과 달리 임표는 黨章程에 후계자로 명문화된 유일한 인물이었다. Harold C. Hinton, 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9: A Documentary Survey*, vol. 4 (Wilmington, Delaware: Scholarly Resources Inc., 1986), p. 2239.

56)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04.

면서 革命的 世代交替를 강조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이미 동년 2월 3일 각 기관 청년 사업부장 및 사로청 위원장 협의회에서 사로청 간부가 4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비판하면서 간부층의 세대교체를 강조하였다. 郡 사로청 간부는 32살 그리고 中央 사로청 간부는 35세까지로 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⁵⁷⁾ 김정일이 당시 29세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같은 발언은 金正日의 世代에게 혁명을 잇게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은 비밀리에 열린 1973년 9월 로동당 중앙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組織 및 宣傳煽動 擔當秘書’로 임명되고 이듬해 2월 11~13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政治委員으로 전격 발탁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 후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주요한 당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됨으로써 후계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제6차 당대회 이후 이상 세 가지 조직의 멤버쉽을 동시에 가진 간부는 김일성과 김정일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이러한 급부상은 동시에 그가 김일성의 思想的 後繼者라는 이미지를 전파하려는 노력과 병행되었다. 한편으로는 김정일 자신이 1974년 2월 19일 당 사상사업 일군들에게 행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

57)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6」, pp. 15~17.

여”라는 대중연설에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金日成主義라고 정식 선언하였고,⁵⁸⁾ 동년 4월 14일 김일성주의를 실천적인 사상체계로 확립하기 위하여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⁵⁹⁾ 즉 자신이 김일성 혁명사상의 해석자, 전파자, 계승자가 되면서 권력세습을 정당화시켜 나아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1973년에 구성·파견된 3대혁명소조가 새로운 세대에 의한 계속혁명의 논리를 확산시킴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권력승계문제는 김정일 세대에 의한 혁명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합리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격상 개혁의 중요한 요인인 공식 이데올로기의 이완이나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특유의 부자간 권력승계는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과 동떨어진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大革命小組運動 또한 1970년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構造的改革을 制約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대혁명에 대한 강조와 3대혁명소조의 각 지역 파견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의 혁명적 군중노선(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을 한차원 끝

58) 卓珍·金剛一·朴弘濟, 「김정일 지도자」, 제2부 (東京: 東邦社, 1984), pp. 10~12.

59) 10대원칙 중에서 특히 1항의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와 10항의 “김일성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가 혁명의 실천성과 계승성을 주장하는 대목으로서 원칙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어울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그동안 군중노선이 극복하지 못했던 관료주의를 위시하여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의 폐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존슨(Chalmers John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공업화는 사회적 복잡성과 혁명 엘리트들의 관료화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으며, 체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官僚制의 刷新(bureaucratic shake-up)을 취하게 된다.⁶⁰⁾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이 매우 과격한 수준에서의 쇄신을 통해 관료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변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보다 젊은 세대에 의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음에 틀림없다. 물론 그 해결 방법이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달리 급격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의 다음 발언은 노령화된 간부들이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갖가지 병폐에 젖어 있음을 지적하지만 그들의 과거 경력을 고려해 과격한 방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간부들이 이와 같이 지난 시기 많은 일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해방후 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며 그들의 수준도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들이 현실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요학습, 수요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체제도 세우고 매해 한

60)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25~26.

달씩 정규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체계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으며 당이 요구하는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오랜 간부들을 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떼어버릴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일부 오랜 간부들 속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한자리하였으니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해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른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간부들을 떼어버릴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것처럼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당 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들을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였습니다.⁶¹⁾

3대혁명소조운동은 결코 관료주의를 비롯한 사회병리에 빠져 있는 각 사회기관의 간부들을 숙청하려는 과격한 관료제 쇄신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모택동 사후 집권한 등소평이 경제개혁과 함께 당·정의 역할을 분담시켰던 바와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반대로 소조운동은 새로운 세대에 의한 革命偉業의 繼承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를 김정일의 권력기반

61)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5.

으로 전이시키고 사회주의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의 持續性을 꾀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 추진 논리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권력승계를 준비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와 3대혁명소조운동의 확산은 코르나이가 改革의 중요한 要件으로서 지적했던 공식 이데올로기의 이완 혹은 일당지배 형태의 권력구조에 있어서의 개편, 관료적 통제메카니즘에 있어서의 변화 중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권력승계문제는 오히려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발전시키고 이를 승계하는 자로 인식시킴으로써 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3대혁명의 대대적인 전파와 소조의 파전은 관료주의를 교정함으로써 극히 소극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였지 기존의 관료적 통제메카니즘을 완화시켜 본질적으로 생산과정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1970년대 북한의 대서방 개방은 등소평 집권 이후 중국에서 추진된 관료구조의 개편과 같은 것을 동반하지 않은 채 제한적인 개방에만 머물렀다.

그 결과로서, 1970년대 전반 북한의 대공산권 무역비중은 1971년 85%에서 1974년 48.8%로 감소하는 반면, 對西方圈 貿易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와 차관 총액을 훨씬 능가하는 經濟協力이 서방 국가로부터 도입되었다. 물론 협력의 성격이 설비 등을 포함

한 차관이라는 점에서 1950년대 소련 및 동구 국가들과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무상원조 위주의 협력과는 다르다. 그러나 1960년대를 통틀어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3억 3천만 달러의 차관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북한으로서는 1970년대의 이러한 대대적인 경제협력 도입이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표 3-5-3〉 북한의 6개년계획기간(1971~1976) 경제협력도입
(단위: 만 달러)

	계(국가별)	무상원조	차 관
합 계	190,000	28,000	162,800
소 련	39,900	-	39,900
중 국	28,300	28,000	3,000
서 방 권	122,600	-	122,600*

주: * 표의 서방 차관의 경우 설비도입을 포함함.

출처: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86), p. 70.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대서방과의 경제협력은 다시 위축되고 말았다. 주된 對外的인 원인은 오일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원유가가 상승되는 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연, 아연 등 비철금속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북한은 외화획득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수입설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난이 가중되어 북한은 外債를 償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⁶²⁾ 따라서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급자족의 경제정책으로 환원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외적인 원인 외에도 앞에서 지

62)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pp. 15~16.

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대서방 개방을 대내적인 구조적 개혁과 병행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 개혁을 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로써 1970년대 후반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가 감소하자 북한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을 증대시켜 나갔다.

2. 1980年代 開放의 再試圖 및 經濟管理方式의 調整

가. 對內外的 要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84년 9월 8일 「合營法」을 채택함으로써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듬해 「합영회사 및 외국인 소득세법」과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을 제정하여 합영회사와 합영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 징수를 규정하는 한편 「합영법 시행세칙」을 제정해 합영회사의 설립절차, 합영조건, 합영지역, 노동관리, 외환관리,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1984년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輕工業革命’⁶³⁾의 기치 아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전개하였고 생산성

63) 경공업혁명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참

향상을 위해 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獨立採算制를 확대 실시하여 경제관리방식에 있어서의 조정을 시도하였다. 경공업혁명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바, 여기서는 개방을 재 시도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합영법을 채택하고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게 된 요인과 그것들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 1980년대 초에 이르러 합영법을 채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먼저 중요한 對內的 要因으로서 北韓經濟의 構造的 問題點을 들 수 있는데, 1950년대 말기부터 이미 고착화된 자력갱생에 기초한 대내지향적 공업화는 대외부문의 역할을 한정하여 무역을 확대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였다. 즉 수입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이 불충분한 품목에 한정하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만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입요구가 증대될 때 이에 필요한 외환조달이 곤란하였다. 전후 복구기간 동안 대체로 양호했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가 1960년대에는 거의 전무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 초기의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이 북한의 지불지연으로 후반에 이르러 차관도입이 중단되자 북한은 설비의 운용과 수입을 위한 외환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다.⁶⁴⁾

한편, 북한의 합영법 채택을 자극하였던 對外的 要因으로는 1970

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87~204.

64) 위의 책, pp. 68~69.

년대 말부터 시작된 中國의 개혁·개방정책의 모방 효과를 들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전후하여 일본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1978. 8)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1979. 1) 대외관계에 있어서 친서방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적 개방과 함께 1970년대 말부터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11기 3중전회에서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띤 개혁을 농촌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1984년 제12기 3중전회를 계기로 개혁을 도시기업부문으로 대폭 확산하였다. 또한 중국은 1979년 광둥성과 복건성을 시험적으로 개방하였으며 이것이 성공을 거두자 1980년 5월에는 두 개 성의 일부지역을 經濟特區로 지정하여 무역자주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조치는 무엇보다도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이다. 1979년 7월 중국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제정하는 한편 1984년에는 「中外合作企業法」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였다.⁶⁵⁾

말하자면 중국의 사례를 목격한 북한은 1970년대에 경험하였던 외채상환의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해외자본을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곧 합영법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物質的 動機 誘引을 통해

65)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現況과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22, 25~26, 28.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로서 독립채산제를 확대·실시하였다. 독립채산제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⁶⁶⁾ 김일성은 1973년 2월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생산의욕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이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⁷⁾ 그러나 실제 기업운영에는 실시되지 않다가 1984년 12월 당 중앙위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는

66) 「김일성선집」 1판 1권(1949년)의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에서 사용되었던 기업소의 ‘자립경제’라는 표현이 (p. 252) 2판 1권(1960)에서는 ‘독립채산제’라고 바뀐다(p. 295). 이 보고는 1947년 2월 19일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로서, 북한이 표현 변경을 통해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의 기원을 1947년으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67)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물질적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방식으로서 독립채산제의 실시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도덕적자극과 함께 물질적자극을 옹계 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추동할 수 있으며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낡은 사상을 빨리 없앨수 있습니다. ...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국영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 리용을 전제로 합니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기적 경제범주이며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필요없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할수 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25.

것을 계기로 하여 1980년대 중반 전산업부문에 확대 실시되었다.

독립채산제가 생산성 향상을 꾀하려는 것이었던 만큼 북한은 합리적인 생산단위로서 聯合企業所를 설립하였다. 1975년 12월의 당중앙위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기업관리 조직으로서 기존의 직영공장과 기업소를 집단화한 연합기업소 설립이 이미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1984년 11월 13일 정무원 상무회의에서 독립채산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합기업소가 필수적이라는 김일성의 발언⁶⁸⁾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어 1986년 9월 기준으로 그 수가 120개에 이르렀다.⁶⁹⁾

그러나 북한의 독립채산제가 官僚的 統制메카니즘의 변화를 통한 개혁의 논리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개혁은 가격제도, 재정권한, 임금결정 등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下放함으로써 상대적인 자율성을 인정하였던 반면, 북한에서의 독립채산제는 생산목표 수립에서만 독자성을 인정하고 중앙의 통제메카니즘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68) 김일성,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49.

69) 연합기업소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① 중화학공업 공장·기업소를 모기업으로하고 이와 관련된 공장·기업소들이 연합된 형태, ② 철광산, 탄광 등의 채취공업 기업소를 모기업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공장·기업소들이 연합된 형태, ③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전문업종의 공장·기업소들이 연합된 형태 등이다.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 展望」, pp. 231~232.

나. 합營 및 獨立採算制의 實態

합영법 채택 이후 북한의 합작 실적은 한마디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이 외국기업의 합작을 유치한 실적은 66건이며 해외진출은 21건이다. 이 중 일본기업의 진출이 절대적인데 대부분이 朝總聯系인 점을 고려하면 서방국 기업의 합작을 유치함으로써 기술습득과 생산품 수출로 외화획득을 증대시키려 했던 북한의 본래 의도가 성취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 합작기업은 대부분 농산물 가공, 피복 등 단순노동을 요하는 제조업이나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어 북한경제에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했다.

〈표 3-5-4〉 연도별 합영 현황

	일본	소련	중국	동구	서방	제3세계	합계
1985	3	1				(1)	4 (1)
1986	4						4
1987	14		(1)		1	(1)	15 (2)
1988	12	1 (3)	(2)	3(2)	4		20 (7)
1989	15	4 (8)	1			(1)	20 (9)
1990. 6	2	1 (2)					3 (2)
합계	50	7(13)	1(3)	3(2)	5	(3)	66(21)

주: ()는 북한의 해외진출 건수임. 연도구분은 합영기업의 완공 또는 조업시기를 기준으로 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대외경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2).

합영법을 통한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모색했던 북한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 첫째, 分斷管理體系로서의 북한은 이를 위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외국기업과의 합작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가의 기술, 자본, 경영방법을 도입하여 결국 고용의 증대와 수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이러한 경제적 교류가 필수적으로 자본주의적 사고를 불러들여 체제존속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合作을 위한 環境的 條件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합작기업에서의 생산물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을 목적으로 할 뿐 국내시장에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합작기업은 시장확보를 위해 상당한 부담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 점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과 함께 합작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셋째, 1970년대 外債支拂 不履行으로 서방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합영법을 통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북한의 개방 노력은 1970년대의 대서방 개방 때와 마찬가지로 체제의 존속과 분단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構造的 改革을 回避하였기 때문에 선진 서방 기업의 합작의욕을 불러 일으키는데 미흡한 조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합영법은 일부 조총련 기업 외에는 선진 자본과 기술을 지닌 서방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었으며, 조총련기업과의 합작조차도 단순 가공업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대외적 개방 목적의 합영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대

내적으로 기업소들간의 연합에 의한 새로운 생산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물질적 동기를 유인하고자 했던 독립채산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독립채산제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⁷⁰⁾

첫째, 북한은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는 각 기업소들을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관리 방식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制度的인 限界를 안고 있다. 기업소는 국가의 지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적 독자성이 인정된다. 또는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계획경제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골간을 침해하는 우경화 경향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수립된 생산계획은 ‘법과 같이’ 여겨져 무조건 수행되어야 하며, 오직 자연재해나 국가규모의 상황변화가 있을 때에만 수속을 밟아서 조정될 수 있다.⁷¹⁾

둘째, 기업소에 대한 평가가 계획 목표의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 기업소는 생산의 증대에 노력하는 대신 目標達成에만 主力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소가 계획작성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기업자체의 예비 생산력을 은닉하거나 생산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차후 계획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계획에 있어서도 현물생산지표가 가장 중요

70) 평화연구원, 「동북아와 남북한」 (서울: 평화연구원, 1989), pp. 182~186.

71) 池海明, 「北韓의 國營企業·協同農場 管理制度와 인센티브 構造」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研究中心, 1993), pp. 24~25.

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소는 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원가인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소는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윤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성과급 외에 장려금, 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勤勞意慾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기업소 외부 사정으로 공장 가동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노력은 오히려 逆機能을 낳을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자재, 노동력 등이 부족하거나 수송능력이 부진한 경우, 기업소가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노동의욕은 저하되고 만다.

따라서, 1980년대 합영법 채택과 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는 이미 고착화된 사회주의체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구조적 개혁없이 대외적 개방만을 시도하는 정책기조 위에서 체제를 존속·유지하려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1978년 이후 중국에서 대담하게 추진된 개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일성 스스로가 인정한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⁷²⁾ 이렇게 消極的인 調整政策으로 일관함

72) 1984년 2월 13일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담화에서 김일성은 말하기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현대화수준이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현실은 우리가 사회주의나라들뿐아니라 제3세계나라들,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널리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시장에 진출하

으로써 개혁의 호기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1990年代 初 새로운 開放 戰略

가. 對內外的 要因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대외개방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는 한편 1992년과 1993년 개방에 대비한 법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대내적인 개혁을 동반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1970년대의 대서방 개방이나 1980년대의 합영법 채택보다 훨씬 意慾的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要因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① 1980년대 말부터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우호적 경제관계의 철회, ②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에 따른 북한경제에의 모방효과, ③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감 증대와 자본주의체제의 압박, 그리고 ④ 북한경제정책의 기초를 이루어 왔던 자력갱생이 가져온 극심한 경제침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구소련과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력 회복을 목적으로 지금

려고 해도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수 없었지만 그런 장애는 많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5.

까지 북한과 유지해 왔던 友好的 經濟關係로부터 脫皮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⁷³⁾ 舊蘇聯은 1990년 11월 루블화를 약 300% 정도 평가절하하는 한편, 북한과의 교역에서 청산결제 방식을 택하여 무역 흑자를 대북한 원조로 취급해 왔던 전통을 깨고 동년 12월 硬貨決濟를 要求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결제방식이 1991년에는 부분적으로 실시되다가 1992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결제방식의 변경은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화결제는 북한의 원유도입에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기존의 연간 80만 톤 도입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1991년과 1992년에는 3~4만 톤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中國도 북한에 대한 특혜무역의 전통을 깨고 硬貨決濟를 要求해 왔다. 1992년 중국·북한간 경화결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결제방식에 대한 북한의 적응능력 부족으로 1992년에는 30% 정도만이 경화결제되었다. 그러나 동년 12월 중국은 다시 1993년부터 양국간 무역을 경화결제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북한의 외환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⁷⁴⁾ 또한 原油 供給에 있어서 중국은 경화결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호가격을 폐지하고 국제시장가격에 근사한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소련과 중국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대북한 압력은 북한에게 새로운

73) 「內外通信」, 1993. 5. 20 참조.

74) 「朝鮮日報」, 1992. 12. 31.

자생능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기존의 자력갱생원칙에서 상당히 일탈한 대외개방의 제도화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978년 이래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이 1992년 1월 鄧小平의 「南巡講和」를 계기로 심화단계에 돌입함으로써 북한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남순강화는 鄧이 광둥성의 경제특구를 방문하면서 개혁·개방을 심화 확대할 것을 주창한 것으로서 3~4월중에 개최된 정치국 전원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개혁·개방의 심화가 보수성향을 지닌 陳雲, 李鵬, 宋平 등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⁷⁵⁾ 북한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온 중국을 모방하여 1984년의 합영법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중국의 모형을 원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북한은 동반자 상실로 인한 國際的 孤立感과 資本主義體制로부터의 壓迫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개방의 제도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들의 잇다른 붕괴는 자본주의세계에 체제의 승리감을 안겨준 반면, 북한에게는 중국 이외에 어떠한 실질적 동반자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한편 북한의 6배(1990년 기준)에 해당하는 남한의 경제력⁷⁶⁾은 남한이 속한 자

75)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p. 72.

76)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본주의체제에 대해서 위협의식을 느끼게 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자본주의체제와의 단절보다는 적응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극도로 沈滯된 經濟狀況下에서 북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그리고 외화획득을 위한 무역 증대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의욕적인 방식으로 개방을 제도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공업화 때문에 드러나게 된 산업불균형과 외연적 성장의 한계, 그리고 대내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한적 대외개방만을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희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극심한 에너지난이 가중되고 특히 製造業 분야에서의 打擊으로 북한경제는 1990년 이래 3년째 -3.7%, -5.2%, -7.6%의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할 만큼 악화일로에 있다.⁷⁷⁾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 북한은 자본주의체제와의 교류가 더욱 불가피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끄는 요인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대내적 개혁을 抑制하는 要因 또한 존재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체제의 수호를 위해 공식 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1991년 이래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당관료 및 대중이 현체제를 자본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비교하는 것도 막고 있다. 또한 社會政治的 生命體라는

77) 韓國銀行, “1992年 北韓 GNP 推定結果,” (報道資料 1993. 6).

개념을 통해 수령·당·대중간의 북한 특유의 수령 중심 인간관계를 교양시키며 외부 세계와 유리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개방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대중들을 외부의 변화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199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외국기업법」은 외국기업의 북한 진출을 돕기위한 중요한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설립을 나진·선봉지구와 같은 自由經濟貿易地帶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북한사회와의 밀접한 接觸을 回避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진전되면서 공식 이데올로기가 차츰 이완되는 징후를 보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1981년 6월 제11기 6중전회에서 「4항기본원칙」, 즉 사회주의 노선, 무산계급독재,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고수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毛思想을 양면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1984년 12월 7일 「인민일보」 사론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더 이상 중국의 모든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본주의의 장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일 중국이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완전 부정한다면 이는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아니하고 4항기본원칙의 고수를 표명하는 한편 毛思想의 교조적 해석이나 마르크스주의의 비현실성을 지적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과의 理念的 矛盾을 緩和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개방을 제도화하는 단계에서 중국과 같은 조치 대신에 ‘우리식 사회주의’ 등 공식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는 개혁지향적 성향을 가진 엘리트들이 당 내에 존속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발전전략 논쟁과 엘리트 갈등을 통해 金日成은 唯一支配體制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김정일세대의 권력승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숙청으로 인해 그 후 엘리트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도전은 물론이고 정책에 대한 의사표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法制度의 整備

북한은 1991년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선정되자 바로 이를 겨냥해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고 羅津, 先鋒, 淸津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하는 동시에(17조), 타국의 법인 또는 개인과의 합영 및 합작을 장려하고 있다(37조). 또한 1992년 10월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제정하였으며, 1993년 1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환관리법」 등을 채택하고 동년 10월에는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토지임대법」 그리고 11월에는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하여 대외개방의 法制度를 整備하였다. 이러한 새

로운 전략은 중국식 개방 모형을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얼마만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經濟的인 理由가 있다. 첫째, 북한의 중앙통제경제하에서는 原資材의 供給이 여의치 않을 것임으로 각 기업은 외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둘째, 勞務管理 側面에서도 고용이나 해고를 노동기관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⁷⁸⁾ 셋째,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市場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내 시장이 협소한데다 북한의 해외시장 확보에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독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 외에도 북한의 統制된 社會는 외국인 기업 또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 대외개방의 성공 가능성을 저해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북한은 현실적으로 南韓을 개방의 주요한 파트너로 여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은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로 관계개선이

78) 「韓國經濟新聞」, 1993. 2. 16.

용이하지 않고, 일본은 북·일 수교회담이 담보상태에 빠짐으로써 당분간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남한과의 교역은 內國間 去來로서 관세장벽이 없으며 清算決濟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외화부담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선호하는 교역 상대라고 할 수 있다.⁷⁹⁾ 또한 남한은 특히 일본보다도 중저가의 技術을 유리한 조건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만일 육로가 개통될 경우 자재와 시설재의 운송은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초 이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개방과 조정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북한 지도부는 구조적 개혁없는 대외개방만으로 발전진화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중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開放과 改革은 마치 양 수레바퀴와 같아서 두 가지 변혁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여러가지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다만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범위 내에서 制限的인 調整 政策만을 추구하여 왔다.

데탕트 무드를 활용한 1970년대 초 대서방 문호개방은 자본, 시설재, 기술 등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경제체제의 구조적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外債負擔만을 남긴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구조적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79) 고현욱,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모색”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南北關係의 새로운 認識」의 발표논문, 1993. 4. 9), p. 10.

도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 구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위구조의 형성과 함께 김정일 세대에 의한 계속혁명의 논리가 개혁의 요건인 공식 이데올로기의 이완 또는 관료적 중앙통제의 완화를 거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3大革命小組運動이 관료주의의 병폐를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중국 문화대혁명기의 관료제 쇄신이나 등소평 복권 이후의 당·정 분리와 같은 관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혁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식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1970년대의 개방은 개혁의 주요 변수인 당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과 공식 이데올로기의 이완, 국가소유권 구조의 변화, 관료적 통제메카니즘의 이완 중 어느 징후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북한의 정책 기조는 1990년대 초반 개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 북한은 외채의 부담없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合營法을 채택하고 물질적 동기유인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獨立採算制라는 경제관리방식을 확대 실시하였지만, 양자는 결코 중국의 개혁·개방에서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주목할 것은 1980년대는 북한경제체제의 진로에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북한 지도부는 失機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비교적 유리하게 전개된 국제적 상황하에서 1978년 제11기 3중전회 이후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서와 같이 정치적 변화없는 경제개혁이라는 모험회피적(risk-averse) 체제변신의 가능성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존의 소극적 조정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1980년대 말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북한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인과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상과 같은 북한의 소극적 조정정책의 원인은 分斷體系管理와 김일성·김정일을 위요한 새로운 權威構造를 正當化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한국전쟁의 후유증과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통해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치체계의 안정을 도모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권력이양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최고 지도자 교체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 왔던 것과는 달리 북한은 부자세습이라는 특유의 권력이양 방식을 택하고 이를 정당화함에 따라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인간형을 줄곧 부정해 왔던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의 논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고 이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본 결론은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체제 특히 개혁·개방의 장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분단관리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임의적 국가권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높은 북한에서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

인 특히 분단체계관리와 리더쉽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다.

分斷體系管理: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인들의 原因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요인은 북한 체제로 하여금 獨特한 發展過程을 걷게 하였다. 실제로 무기체제와 밀접히 관련된 중공업 중심의 편향된 발전전략으로부터 핵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택한 주요한 대내외적 정책은 분단관리체제로서의 북한이 가진 특수성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요인은 어떠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든지 政治體制의 安定이 필요하다는 것을 正當化시켜 주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북한 지도부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각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부문간 연결이 고도화되어 있어 어떤 소규모의 정치적 갈등이 단순히 권위구조의 변화 또는 지배세력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체제 전반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배세력의 교체가 있는 경우 새로운 세력이 체제의 통제구조를 재조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때 이완된 통제구조하에서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가 말한 '歪曲된 近代性'에 의해 정치참여를 학습한 인민이 폭발적 동원을 통해 체제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민은 엄밀한 의미의 별도의 政治共同體意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즉,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

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위기는 분단관리체제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단체계라는 변수가 북한체제의 장래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시키는 強力한 리더쉽을 正當化시켜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社會構造: 북한과 같이 통제된 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과 같이 산업화의 결과 새로운 사회세력이 등장하여 정치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혹은 동구(특히 중부 유럽)처럼 시민사회의 전통이 부활하여 반체제적 요소가 발전한다든가 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북한사회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變化를 겪어왔다.

첫째, 근 50년에 걸쳐 사회주의체제가 존속되어 오는 동안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행위자가 世代交替를 통해 대부분 바뀌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은 인구의 대부분이 전후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체제는 이들에 대해서 각급 학교, 단체, 군대 등 공식적인 정치사회화 기관을 통해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사회적 변동을 체험한 기성세대가 지니고 있는 체제에 대한 正體感이나 價値觀을 갖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후세대가 기성세대처럼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혁명과업 등의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벨(Vaclav Have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의례적인(ritual)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같은 용어들이 직접적인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화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산업화의 결과 북한에서도 新中間階級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잠재적 사회계급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교관, 유학생, 해외근로자, 외국군사고문, 기술관료 등은 개혁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 인테리로서 권력 엘리트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아직 사회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념보다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선호할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많은 귀순자 혹은 방문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의 腐敗는 심각한 정도로서 이는 쉬라펜토흐(Vladimir Shlapentokh)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非合法的 私的 領域이 공적 영역을 침식해 들어가고 있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비합법적 목표를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부패 형태로서 제2경제 혹은 지하경제가 있는데, 인민들은 이를 통해 필수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통제가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적 정보교환의 공간을 확보해 가고 있다. 한편, 합법적 목적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부패 형태로서 기업소나 공장의 관리인 계층이 현물 생산량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재와 시설을 적시에 조달하기 위해 당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 등이 있다. 이렇듯 부패라는 형태를 통해 비합법적 사적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集團主義的 思考가 威脅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사회의 성격은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내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결국 정치적·도덕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이념체계와 상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周邊環境: 주변환경 특히 소련, 중국, 북한간 삼각관계는 북한경제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건설과정과 한국전쟁에 의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세 국가는 中·蘇紛爭으로 인하여 교묘한 줄다리기의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서 북한은 주체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을 발전시켜 自主性を確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폐쇄와 단절 전략에 근간을 둔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 부문 간 불균형을 초래해 결국 1960년대 후반부터 발전둔화라는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소련 및 동구 社會主義體制의 崩壞와 중국의 改革·開放은 북한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철회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으로 소련 및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냉전 종식에 의한 經濟論理 優位의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점을 십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이미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개

혁·개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방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리더쉽: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으며 정치권력은 당을 중심으로 한 권위구조로부터 유래된다. 당은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해석하며 수많은 외곽단체를 동원해 사회를 통제하는 동시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사회를 결속시킨다. 북한 로동당은 수령인 김일성의 唯一支配體制下에 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유일지배체제는 김일성이 발전전략논쟁을 둘러싼 엘리트 갈등을 마무리하고 당권력을 장악하게 된 1956년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그 기반이 다져졌으며, 1960년대 후반 군부지도자들의 교체를 통해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는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엘리트 집단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經濟體制의 劃一性을 낳았으며, 또한 이 획일성으로 말미암아 모순이 노출되어도 이를 해결할 政策選擇의 폭이 지극히 制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리더쉽의 교체가 정책 결정과정의 수정 또는 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金日成 死亡後 리더쉽의 세력구성에 따라 북한이 전혀 다른 정책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만일 김정일의 정권이 순로롭지 않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결집력이 강한 새로운 대안세력이 등장해 탈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통한

정당성 획득을 시도할 것이다. 반면 김일성 사후 김정일예의 권력 승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그의 지배가 확고해지는 경우 북한은 제한적이거나 점진적인 改革·開放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理念: 북한체제의 특성 중 이념적 독자성만큼 두드러진 것은 없을 것이다. 주체라는 개념이 1955년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이래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자주성에 바탕을 둔 체제이념으로 발전되었으며, 1982년 이래 김정일에 의해 다시 북한체제의 모든 정치구조와 정책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정리되고 심화되었다. 북한은 최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받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논리로 더욱 體制의 獨自性を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이들 사회주의체제가 경제우선의 논리와 서구적 다원주의 정치모델의 모방으로 자본주의체제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반면 북한만은 특유의 이념적 체계화를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체제의 특수성을 표방하는 체제이념 자체가 북한의 改革·開放 可能性을 완전히 배제하는 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78년 이후의 개혁·개방과 관련, 중국은 한편으로 형식상 4個 基本原則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정의 기능 분화 및 기구의 축소개편을 통해 관료적 통제메카니즘을 이완시켜 지방과 기업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말하자면 개혁·개방과정에서 중국은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식이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중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결국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이념의 표방 여부보다도 實質的인 機能과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아 만일 김정일 체제가 확립되어 사회통합 및 체제유지에 대한 능력 및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이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소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政治文化: 儒敎文化의 가부장적 전통은 정치체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首領論과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적 권력승계를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었고 集團主義를 합리화시키는데 활용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경험 또한 북한 정치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북한은 김일성 지배체제의 정당성의 근원을 항일유격대에서 찾음으로써 抗日意識을 고취해 왔으며 한국전쟁 이후 反美意識을 심화시켜 왔다. 이로써 다원주의적 문화의 전통을 가진 중부 유럽의 사회주의체제와 크게 대조되는 북한 특유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서방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심화시키고 물질적 동기유인에 의한 경제적 인간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개혁·개방에 역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經濟的 要求: 북한의 경제는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沈滯一路에 있으며, 더욱이 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는 북한 당국이 자인할 정도이다. 이는 중앙집중적 사회주

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1950년대 후반 자력갱생원칙에 기반한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전략과 1960년대 후반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전략에 의해 불균형한 산업발전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권력승계 및 혁명적 군중노선의 정치사업우선 등의 정치적 이유로 구조적 개혁이 불가능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1970년대 전반의 대서방 개방과 1980년대 중반의 합영법 및 독립채산제의 실시는 발전둔화의 일로에 있었던 경제를 구제하려는 노력이었으나 그 변화의 폭과 심도가 극히 한정적인 것에 그쳤다. 특히 1980년대의 개방과 조정은 1978년 이후 전개된 중국의 개혁·개방을 목격한 후에 추진된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경제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만일 경제적 요인만 고려한다면 현재의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 자본주의체제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퇴조로 구소련 및 중국이 더 이상 후원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개방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이 언제나 체제의 안정이라는 政治的 要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第Ⅳ部

社會主義體制 變化的 類型 比較

빈 면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제Ⅳ부에서는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보편성과 변화유형별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제Ⅱ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의체제는 생성 및 건설과정에 있어서 이념과 경제운용 방법상의 보편성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주의체제는 스탈린식 모델로 대표되는 경직된 운영체계를 相異한 정치문화 및 경제적 조건에 맞게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옴으로써, 1980년대의 극적인 변혁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이미 각 체제간에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이 표출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東歐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 체제개혁 및 개방을 위한 노력은 체제전환으로 이어졌으나, 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 정치체제의 극적인 전환없이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에 버금가는 수준의 개혁·개방은 아직 요원한 형편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은 변화과정의 유형과 그 결과로 나타난 체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정치·경제적 변수들은 변화과정 및 변화결과로 등장한 체제의 성격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은 시대정신에 의해 성격지워졌던 사회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주어진 제약조건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회구성원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변화유형을 결정했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행위자의 영향력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권력엘리트의 성격 및 분열양상, 정치적 대안 세력의 存在 有無와 그 역할, 인민대중의 가치관 및 행동패턴, 軍部의 역할을 통해 나타났다.

한편 이들 행위자의 특성과 행위패턴을 결정했던 요인은 크게 정치 및 이념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시 대내적 요인 및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 및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간의 관계의 변화이다. 따라서 대외적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촉발하고 그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을 결정한 환경적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외적 변화 중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정치·이념적 변수로는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인한 소련의 역할 변화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체제의 수렴적 변화를 들 수 있으며, 경제적 변수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함 및 오일쇼크로 인한 서방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 확대와 경제개혁 정책노선 등을 들 수 있다.

제Ⅲ부의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해 보면, 권력엘리트의 입지 및 역할, 정치적 대안세력의 성격 및 역량, 소련과의 관계 변화, 체제이념의 收斂 등이 사회주의체제 변화 유형의 정치·이념적 변수로 파악된다. 한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적 문제점 및 세계 경제질서의 再編과 이에 따른 경제개혁 정책노선의 한계는 사회주의체제 변화 유형의 경제적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 나열한 사회주의체제 변화유형 결정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인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관계를 가질 뿐더러 심지어는 상호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체제변화의 유형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量的分析이나 檢證을 시도하기 보다는 본 연구 제Ⅲ부의 연구결과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체제 변화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치·경제적 변수의 역할 및 이들 변수의 作用機制를 설명하고, 체제변화 형태를 類型化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I. 政治·理念的 變數의 比較

1. 社會主義體制 形成過程

본 연구의 제Ⅲ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체제는 그 형성과정에 따라 크게 민족공산주의자들에 의한 自生的 사회주의체제와 2차대전 이후 소련의 점령하에서 형성된 사회주의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로서는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 사회주의 국가 중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중국, 베트남을 들 수 있고, 2차대전 이후 소련의 점령으로 인해 사회주의체제가 이식된 경우에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초기에는 강력한 소련의 지원하에 항일투쟁 경력의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소련군의 철수 및 중소분쟁과 북한에서의 주체사상 확립 등의 과정에서 자생적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 혼합형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¹⁾

자생적 사회주의체제 중 소련의 경우 계급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의 原型을 보여준 반면, 소련을 제외한 여타 체제는 대체로 계급혁명적 성격과 제국주의 및 침략적 외세로부터의 민족해방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록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라고 하더라도 체제형성 초기에는 代案不在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정치·경제모델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는 형성 초기에 모두 스탈린 체제와 흡사한 특징을 보인다.

自生的 사회주의체제와 外部移植型 사회주의체제의 차이는 권력 엘리트의 정통성 및 역할,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의 변용 및 응용 능력, 군부의 일체성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소련의 강제적 移植에 의한 사회주의체제 형성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지배엘리트는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민족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비해 자신들이 통치하는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나 신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이 결

1)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의 독특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Ⅲ부 제5장 북한 참조.

과적으로 소련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에 다름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지배엘리트들은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동의나 정통성 부여없이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이 제시하는 목표달성만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가 강화되었다. 지배엘리트의 관료화로 인해 소련식 모델을 벗어난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행위반경은 매우 제한되었으며, 일정 한계를 넘은 개혁정책은 곧바로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移植的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거치는 동안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과 경제성장 및 정의로운 분배 등을 그들이 체제를 결속하고 통치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명령형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힘입은 소련의 개혁·개방이 진행되자 이들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정통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반면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식민지 치하 및 점령치하에서 민족해방투쟁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 형성 이후에도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전략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에 주력함으로써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확보된 정통성에 힘입어 체제형성 초기의 소련형 사회주의 모델을 각각의 실정에 맞게 변용·적용함으로써 정책선

택을 위한 행위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들은 민족해방 투쟁과정에서 독립과 근대화의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급투쟁의 이념적 목표를 어느 정도 절충하는 변용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노선의柔軟性에 의해 인민대중이나 노선을 달리는 政派의 불만을 체제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자생적 사회주의 형성배경을 가진 체제는 점차 소련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된다.

첫째 유형은 스탈린식 체제의 변용과정에 있어서 체제형성 직후의 一人指導體制가 점차 현실적인 수요에 의해 集團指導體制化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집단화된 지도체제는 정권경쟁적 파벌로서가 아니라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한 파벌로 나뉘므로써 공산당을 정점으로 한 권력엘리트는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유형은 초기의 一人指導體制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숭배를 통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체제는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로서 민족적 정통성의 기반을 기초로 출발하지만 결국 억압적 정치행태와 정책선택상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인민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며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체제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됨으로써 체제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첫번째 경우로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 있어서 자생적 사회주의체제 지배엘리트는 지속적으로 스탈

린 체제를 自國의 실정에 알맞은 체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중국의 大躍進運動이나 文化大革命과 같이 참담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배엘리트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은 이러한 실험적 적응과정을 통해 세계체제 혹은 체제내부로부터의 도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사회주의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두번째 경우로는 알바니아와 북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사회주의체제 형성초기의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대안세력의 성장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체제의 변용 및 적응능력을 상실했으며, 경제난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 따른 지배엘리트의 立地는 각 체제에 있어서 정권담당세력과 軍部와의 一體性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 안정 보장장치로서 군부의 역할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동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군사력은 소련군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함으로써 서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전략적 대치세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소련은 사회주의 위성국가들에 대한 체제적 통제수단으로서 소련군과 이들 국가의 군사부문을 밀접한 연계를 가진 조직체로 체계화함으로써 각국 정권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식적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의 지배엘리트의 취약한 정통성은 정권담당세력과 군부의 일체성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체제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민족해방투쟁 및 근대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인민대중이 부여한 정통성에 입각하여 軍部를 철저히 장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련과 정치적·군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체제위기 발생시 정치적 安定保障 장치로서 군부의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 따른 정권담당세력의 立地 및 役割은 인민대중의 支持度 및 정책노선 채택과정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지배엘리트와 군부간의 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을 결정한 중요한 정치적 變數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2. 政治的 代案勢力의 性格 및 力量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代案的 政治勢力의 성격과 상대적 역량은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변화유형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정치적 變數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집권엘리트에 대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는 크게 시민사회와 지배엘리트 내부의 파벌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배엘리트의 파벌은 유럽 및 소련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중국

및 베트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노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기존 지배엘리트를 대체할 대안적 정치세력이 없을수록, 그리고 사회가 原子化되어 있을수록 체제변화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돌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주의체제가 조직화된 대안적 정치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체제변화는 관련 세력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정책노선을 둘러싼 파벌간의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정치적 대안세력이不在할 경우 체제전환 이후에도 대안적 정치세력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등의 방법을 통해 정치적 다원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알바니아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는 舊體制의 지배엘리트가 그대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外部移植型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위에서 제기된 지배엘리트의 정통성 및 대중적 기반의 결여와 소련의 견제 등에 의한 정책적 운신의 좁은 폭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공산당 내부에도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 파벌이 존재한다. 이 경우 지배세력은 정책운용노선의 선택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정치력의 행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 사회구성원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대응파벌이 집권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있어서 새로 등장한 대응파벌의 노선이 소련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는 것일 경우, 소련은 무력개입을 통하여 소련의 정책노선에 충실한 세력으로 하여금 집권하게 함으로써 親蘇政

權을 유지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헝가리의 경우에 있어서 1950년 중반 나지(I. Nagy) 수상의 등장과 몰락을 설명할 수 있는데, 소련의 통제하에 있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노선을 달리하는 대안적 지배엘리트의 등장은 곧바로 소련의 개입을 불러옴으로써 순조로운 체제변화의 가능성은 무산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지배엘리트 내부의 경쟁적 파벌의 존재는 시민사회의 존재와 더불어 체제위기 발생시 협상을 통한 정치적 多元主義에 기초한 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중국 및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정통성에 근거한 대중적 기반이 鞏固할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과정에서 통일전선형성 등의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집권세력과 정권경쟁적 관계에 있는 파벌보다는 정책적 노선을 달리하는 내부적 파벌이 형성되었다. 정책적 노선을 달리하는 내부적 파벌의 존재는 경직화되기 쉬운 사회주의체제 내의 완충역할을 통해 이들 국가가 체제위기에 봉착할 경우 정치적 多元主義에로의 전환보다는 정책적 타협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개방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 제Ⅲ부의 동유럽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1980년대 말부터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 대변혁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²⁾ 시민사회가 발달할 수 없었던 동부유럽의 사회주의체제 역시 地政學的 위치로

말미암아 중부유럽지역의 변화에 대해 ‘逆 도미노’(Domino) 현상을 보였으며, 이 보다 간접적이기는 하나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시민사회를 사회주의체제 변화와 연관지어 협의로 定意할 때, 시민사회의 형성요인 및 역할을 문화적·사회발전단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제한된 지역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통제하에 유지되어 왔던 東歐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성립은 이들 체제가 처했던 다양한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인민대중의 반응이 응결된 결과이기 때문에 역사 발전단계로서의 西歐的 시민사회 성립배경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이나 동아시아의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참여형의 정치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시민사회의 성립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빨리 체제전환을 이룩하게 한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중국 및 베트남과 북한은 家父長秩序를 기반으로 한 儒敎文化圈에 속해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고 공산당을

2) 본 연구의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국가영역 안에서 활동하면서 국가와 대립, 대비되는 이념을 보유하는 독립적인 사회단체의 조직체 또는 연결망으로서 파악한다(제Ⅲ부 제1장 참조).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역사의 전반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지적이긴 하나, 결국 이러한 정치문화적 배경은 사회주의체제 변화유형을 결정한 직접적 요인이었다기 보다는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주어진 정치·경제의 구조적 환경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반응의 特性 또는 행위의 程度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제변화의 속도나 폭에 영향을 미친 媒介變數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존재 유무 및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은 단순한 정치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 따른 지배엘리트의 정통성 확보 정도 및 체제변용 능력, 정권안정 및 효과적 통제장치로서의 군부의 역할, 경제구조 등이 사회구성원의 행위패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시민사회 有無 및 특성에 의해 사회주의체제는 재야민주세력(헝가리)이나 노동조합(폴란드의 자유노조) 혹은 인권단체(체코슬로바키아) 등이 존재하는 조직화된 체제와 이와 같은 조직이 미약하거나 全無한 原子化된 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의 존재 유무와 성격은 사회주의체제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을 때, 기존의 정치적 힘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힘이 재분배되는 형식과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주의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東獨의 경우, 분단상황하에서 민족적 동

질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西獨政府의 노력에 의한 정보의 지속적 유통과 서독의 경제적·정치적 포용성 및 월등한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동독주민에게는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이 하나의 정치·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80년대 말 세계체제의 변화로 인해 統獨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이 해소되자 동독주민은 대거 서독으로 탈출했으며, 결과적으로 동독정부의 정치력을 붕괴시킴으로써 급속한 동독지역 정치체제의 전환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3. 蘇聯과의 關係

1975년에 미국과 캐나다, 소련 및 東歐를 포함한 35개국간에 합의된 헬싱키선언으로 시작된 東西間의 탈냉전 움직임은 1979년의 미·중수교, 1985년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소련의 개혁, 소련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시작된 美·蘇間의 軍縮合意, 1989년 빈(Wien)회의에 의한 헬싱키선언의 구체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패권적 권한 포기를 통해 완성되었다. 특히 동서간 탈냉전의 결과로 나타난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패권적 권한의 포기는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중요한 이벤트였다.

2차대전 이후 소련은 東歐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지위를 독점해 왔고 반대로 동구 각국의 지배엘리트는 체제유지를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해 왔다. 소련은 지역의 패권주자로서 기능해왔지만 동유럽 개별 체제내의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 그리고 안보문제에 이

르기까지 모든 국내적인 문제가 결국은 소련의 문제로 환원되는 형국이었다.

국제수준에서 1980년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는 소련의 동유럽 통제력이 한계에 달한 반면 동유럽체제 내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위기로 소련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던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동유럽 패권주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의 편입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소련의 선택은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고 있던 동유럽 공산주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한편 文化的·地政學的 위치에 있어서 東歐만큼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소련체제의 개혁에 따른 대외적 역할의 변화는 아시아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도 그 간접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소련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베트남의 경우 소련의 지원감소로 인해 독자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래의 개혁·개방조치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東西間의 탈냉전과 소련의 역할변화에 따라 소련과의 관계계선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개혁·개방을 위해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북한 역시 소련의 역할 변화 및 중국의 경제논리 우선적 정책에 따라 대외관계 및 경제부문에 있어서 심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전반적 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과거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변화유형 결정요인들과 결합된 소련의 역할 변화는 곧바로 정치적 다원주의에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는 相異한 변화유형 결정요인으로 인해 소련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치적 체제전환없이 경제적 개혁 및 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4. 體制理念의 收斂效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고전적 형태는 ‘경찰국가’적 정부의 역할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약되는 시장기구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最適의 성장과 효율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극대화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고전적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도덕적 측면에 착안하여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도래를 예견했으나 구체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운용방법에 대한 靑寫眞은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탄생과 前代未聞의 자본주의적 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케인즈의 이론으로 代辯되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시장기구의 작동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2차대전 이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향

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西歐의 福祉國家 지향적 국가들은 경제정책 운용상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을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접합하는 유연함을 보였다.

이러한 西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노력은 일견 체제수렴이론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상이한 경제체제에 대한 영향은 非對稱的이었다.³⁾

서구 선진 자본주의체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비도덕성에 대한 열등감을 지워버리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관한 신념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하의 인민대중은 서구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적 이념 도입으로 인해 사회주의의 도덕적 우월감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체제이념 비교적 思考에서 현실 비교적 思考로 전환하게 되는 轉機를 맞게 된 것이다. 한편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체제간 정보유통의 확대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다.

한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收斂過程에서 동구의 보다 앞

3) 경제학적 체제수렴(convergence)이론은 한 경제의 최적체제(optimal economic system)가 완전한 자유방임적 시장과 완벽한 명령형 중앙계획의 연속적 조합선상의 한 점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만약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最適體制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체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주의체제는 정부의 계획적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주의체제는 시장기구를 도입·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선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지배엘리트의 형성배경, 관료주의의 심화, 정치적 대안세력의 등장 등의 영향하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정치 및 경제체제의 전면적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보다 낙후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앞선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충격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그동안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정권의 무능함과 부패에 대한 反體制的 저항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 및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들은 그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보다 과감한 경제적 개혁의 시도를 통한 경제적 성과를 可視化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보다 진일보한 개혁정책의 채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일인지도체제를 통한 개인숭배 및 권위주의적 성향의 강화로 인해 정책적 탄력성이 상실되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체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II. 經濟的 變數의 比較

1. 計劃經濟 問題點 解決方式

일반적으로 스탈린식 경제발전 모델을 原型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합은 명령형 計劃機制의 결합,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한 발전전략, 인센티브 체계의 미비, 軟性豫算制度에 기인한 결핍현상의 악순환 등으로 지적된다.

러시아혁명 당시 본질적으로는 半封建的이던 경제체제하에서 단지 제한된 산업부문을 보유했던 소련의 급선무는 경제부문의 신속한 산업화와 근대화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던 소련의 지배엘리트에게 있어서 성숙한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탈린 시대 이전의 소련 지배엘리트는 경제관련 의사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유효하게 집중시킬 수 있었으나 효율적인 計劃機制 및 情報能力 결여로 인해 경제계획은 조잡한 시행착오를 통한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原型으로서 여타 사회주의체제 건설 초기의 경제모델을 제공했던 스탈린식 모델은 1930~1940년대에 확립되었다. 당시 소련은 중공업이 ‘성장을 위한 원동기’(engine of growth)라는 관점에서 모든 자원의 투입을 중공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농업과 소비재 부문을 희생시켰으며 산업화의 가속을 위해 모든 가격은 희소성을 무시한 채 정책적으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과도한 중앙계획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체제의 경직성과 관료주의의 정착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희소성을 무시한 가격체계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양

적 목표달성을 위주로 한 계획체제는 기술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산업의 고도화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資源動員을 위한 중앙계획경제체제는 1950년 무렵까지 빠른 外延的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주로 事前的으로 작성되는 경제계획이 경제구조가 분화됨에 따라 현실적인 불확실성과 실질적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量的 계획 목표의 달성을 위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사용과 이에 의한 결핍 및 병목현상의 악순환, 이미 형성된 방대한 중공업부문의 유지를 위해 자원의 유효한 재분배가 불가능해진 점, 소비부문의 억제 및 관료체제의 확산으로 인한 인센티브機制의 결함 등에 기인한다.

한편 체제건설 초기에 스탈린식 경제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동구 및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령형 계획경제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더해 自國의 실정을 반영되지 않은 소련형 경제모델의 적용이 야기한 부작용 역시 수반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끊임없는 경제구조와 經濟運用機制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운용체제의 변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각국의 경제운용체제의 특성을 부여하였다.

소련을 포함하여 헝가리, 동독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1960년대 이래 이러한 경제체제의 결함을 개선함으로써 內包的 성장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으며, 1970년대부터는 對西方 經濟開放을 시도함으로써 外延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한편 중국은

1950~1960년대에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을 통해 극단적 平等主義와 自力更生의 이념에 바탕을 둔 자원동원식 경제발전을 추진했으며, 1970년대에 들어 적극적 對西方交易擴大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끊임없이 스탈린식 경제모델의 변용을 통해 자국의 실정에 알맞는 경제운용 체제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스탈린식 정치·경제체제하에서 굳건하게 자리잡은 경직된 관료주의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개혁조치의 적용을 제약했으며, 이념적 제약하의 개혁조치의 한계로 인한 內包的 성장의 실패는 경제적 갈등요인을 증폭시킴으로써 체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위기의 도래는 동구, 소련 및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공통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 사회주의체제가 처한 相異한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구조, 세계경제체제와의 관계, 지배엘리트의 이념적 성향 및 채택해온 정책노선에 따라 각국이 겪어온 경제체제변화의 경로 역시 相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 世界經濟秩序 再編의 影響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1960년대를 고비로 더 이상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의존하는 外延的 성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성장의 둔화현상을 겪게되어 심지어는 적대세력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성장율에도 못미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1970년대에 들어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 북한 등 거의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경제계획기제의 개선을 통한 부분적 개혁과 더불어 동시에 對西方 경제개방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친 대외경제적 요인으로는 상호경제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의 미약한 성과, 오일쇼크의 영향, 서방 경제기구의 확충 및 多國籍企業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소련을 비롯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상호경제원조회의를 통한 경제협력이 경제적 誘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서방 경제개방 노력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상호경제원조회의는 회원국 多者間의 공통된 決濟貨幣의 결여로 인해 회원국간의 무역이 기본적으로 兩者間의 무역협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特化가 불가능했다. 또한 소련의 천연자원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회원국간의 공동투자계획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불만이 증가했으며, 기술 및 자본에 있어서 서방 국가와의 협력필요성 및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경제원조회의를 통한 경제협력의 상대적 필요성이 감소하였던 것이다.

둘째, 1970년대에 발생한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는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주의 경제권의 대서방 交易條件을 악화시킴으로 인해 심각한 외채상환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對西方 經濟開放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한편 1980년대 이래 서방 자본주의 경제는 오일쇼크를 오히려 산

업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 대외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앞선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제3세계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신념을 상실하게 했으며, 상대적인 빈곤감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변혁의 기반이 되었던 인민대중의 체제부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했다.

셋째,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및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등 국제경제기구와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 체제는 세계의 금융자본 이동 및 상품교역체계를 주도하면서 각국의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하의 국가들이 더 이상 독자적 경제체제하에서 대외경제관계 발전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립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상대적 비효율성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對外部門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던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은 동구 사회주의권은 물론 중국 및 베트남과 북한 등 동아시아의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즉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를 대외경제교류에 보다 적합한 체제로 전환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동구의 헝가리와 유고

슬라비아 등 市場社會主義 노선을 채택했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개혁이나 시장기구의 도입 혹은 제한된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한계가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再編은 1970년대 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의 한계에 봉착했던 중국과 베트남 및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도 정책적 전환기를 마련해 주었다. 1980년대 중엽 이래 중국과 베트남은 계획경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장화 및 소유제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였나, 북한의 경우 체제의 특성과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해 지극히 제한된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3. 經濟改革 政策路線

東歐 및 소련과 동아시아의 사회주의체제는 형성 초기에 공통적으로 스탈린식 경제모델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점차 경직된 명령형 계획경제체제의 문제점이 심화되자 각 체제가 처한 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스탈린 모델을 변용·개혁하기 위한 경제정책에 의해 변화되어 왔으며, 체제전환의 以前 혹은 以後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체제하에서도 경제체제의 변화는 반드시 정책결정권자의 존재를 前提로 한다.

각 사회주의체제 혹은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의 정책결정권자는 스탈린식 모델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주의체제

의 경제적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 시도될 경제개혁노선의 정치적·경제적 효과를 감안 경제체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간의 상이한 경제개혁 노선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결정권자에 의한 경제개혁정책의 選擇機制 및 要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경제개혁의 유형은 ① 경제계획기구의 개선, ② 부분적 市場機制의 도입, ③ 전반적 시장화 및 생산수단 사유화의 추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유형은 경제정책 결정권자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들 대안을 선택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機制로서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입지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노선 선택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⁴⁾

〈식 4-1〉

$$F(P,E) = \text{경제개혁정책을 통한 정치적·경제적 성과}[G(P,E)] \\ - \text{경제개혁정책으로 인한 비용}[H(P,E)]$$

4) Seung Yul Oh,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Is China's Reform Model Relevant to North Korea?," *The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pp. 127~151 참조.

여기에서, $F(P,E)$: 경제정책결정권자의 기대 효용함수

$G(P,E)$: 경제개혁정책으로 인한 기대 성과

$H(P,E)$: 경제개혁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로 구성되는 예상비용

P ={정치적 요소: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대
외관계}

E ={경제적 요소: 경제발전단계, 경제구조, 경제객체의 경
제행위 패턴, 경제개혁 경험, 대외경제관계}

$F > 0$: 새로운 경제개혁정책을 채택

$F < 0$: 기존의 경제체제 고수

이러한 형태의 경제개혁 노선선택 모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의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정책 노선선택은 의사결정권자가 ① 경제체제의 현재 상태, ② 거시경제적 목표, ③ 이론화 혹은 실증적 경험을 통해 확립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의 <식 4-1>로 설명되는 期待效用函數의 계산결과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초기 스탈린식 경제모델의 본질적인 문제점 혹은 개혁조치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될 경우, <식 4-1>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책결정자가 경제개혁 정책노선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책결정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만약 새로운 경제개혁 정책이 가져올 정치적·경제적 이득이 개혁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 기존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하의 지배엘리트 혹은 체제전환 이후의 집권세력은 이러한 機制를 통해 개략적인 경제개혁노선을 결정한 다음 각 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경험, 경제발전단계, 경제구조, 대외경제관계 등 구조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혁의 구체적 속도 및 단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식 4-1>에 나타난 사회주의 경제체제 變化機制에 의하면 비록 사회주의체제의 경제문제 해결은 현재 혹은 과거의 모든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공통된 과제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정책은 각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및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입지 등의 요소를 포함한 費用·便益의(cost and benefit) 고려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정책결정권자는 정치적·경제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개혁 정책노선 및 그 추진 속도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 經濟計劃機制의 改善

1980년대 말 東歐 社會主義圈의 대변혁 이전 소련을 포함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경제체제의 기본 골격을 개혁하기 보다는 기존 경제체제의 作動機制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주로 經濟計劃機制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이러한 유형의 경제체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시도되었

다.

첫째, 195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의 개편을 추진했다. 구체적 내용은 경제계획기구와 행정기구의 분리를 통한 전문화, 계획기구의 분권화 및 통폐합을 통한 계획능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리베르만(Evsei Liberman)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생산단위의 운영의 틀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계획기구로부터 하달되는 계획지표(planning indices)의 개선, 경영활동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권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생산단위의 운영목표를 명확히하고 이의 달성여부에 따른 報酬의 差等化를 추진함으로써 물질적 誘因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셋째, 경제계획부문의 컴퓨터망 확충을 통해 정보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생산단위를 통제하기 위한 量的 指標를 이윤 및 비용 등 質的 指標로 대체함으로써 정보의 有效性을 향상시켰다.

넷째, 그밖에 기존 경제계획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외무역의 확대 등 실험적 개혁조치를 채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보다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던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래 1980년대까지 계획기구의 개선을 통한 경제개혁이 광범위하게 시도되었으며, 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 市場指向的 개혁정책을 채택하기 이전 짧은 기간 동안 실험적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북한 및 체체전

환 이전의 알바니아도 미미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경제체제의 개선책으로 경제계획기구의 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經濟計劃機制의 개선을 통한 개혁방법은 각 국가의 선택에 따라 그 정도와 폭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였다.

경제계획기구의 개선을 통한 개혁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① 이념적 제약하에 명령형 계획경제의 기본적 속성의 변화는 없었으며, ② 기존 관료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개혁적 조치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수 없었고, ③ 세계경제체제가 사회주의권 국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可視化되기 이전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게 되어 다시 舊體制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중국 및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낙후된 경제발전 및 경제계획 技術水準으로 인해 극히 제한된 범위 이상의 효율적인 계획기구의 개선이 불가능한 형편이였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 노선은 소련의 직접적 영향하에 있던 東歐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와 민족주의적이기는 하나 경직된 사회주의 이념체계에 예속되어 있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이념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채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그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음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해소할 수는 없었다.

나. 部分的 市場機構 導入 및 對外開放

東歐 사회주의체제 중 예외적으로 유고슬라비아는 1950년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동자자주관리’ 경제체제를 채택했으며, 헝가리는 1968년 ‘신경제체제’(New Economic Mechanism: NEM)를 도입함으로써 초기의 스탈린 모델을 변화시켜 市場社會主義化(market socialism)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헝가리의 ‘신경제체제’는 스탈린 모델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며 랑게(Oscar Lange)의⁵⁾ 市場社會主義 모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계획과 부분적 市場機制를 결합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랑게의 이론적 모델에서는 중앙계획당국은 生産財 등 중요한 부문에 있어서의 가격결정 및 투자를 결정하고 소비재 부문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헝가리의 ‘신경제체제’는 많은 측면에서 시장사회주의의 이론적 모델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정부 계획당국 및 관료기구에 의해 시장기구의 작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헝가리 경제개혁은 1956년의 민중봉기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경제구조에 의해 촉진되었다. 헝가리 공산당의 권력개편으로

5) 시장사회주의에 관한 Oscar Lange의 이론적 논문과 관련된 토론은 Benjamin Lippincott, ed.,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8), reprinted by McGraw-Hill in 1964. 참조.

수상에 선임되어 헝가리 공산당의 路線修正을 추진했던 나지(I. Nagy) 수상이 민중봉기의 결과 처형되고 소련의 지원으로 등장한 카다르(Kadar)는 헝가리 대중의 반소감정을 무마하고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른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또한 헝가리가 경제구조상 여타 사회주의체제보다 對西方의존도가 높았으므로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市場機制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헝가리의 '신경제체제'는 1970년 초기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1970년 중반 이후 다시 구경제체제로의 回歸傾向을 보임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첫째, 정치적으로 소련의 영향과 기득 관료층의 반발로 인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중앙계획의 축소 등 경제개혁 조치는 제약을 받았으며, 집권세력의 이념적 경직성은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을 저해했다.

둘째, 사회주의체제로서의 경제구조적 문제점 및 불리했던 세계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시장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 등 심각한 거시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진일보한 개혁의 추진이 좌절되었다.

한편 1950년대 초반 이래 발전되어 온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모델」은 기본적으로 맑시즘에 근거하여 생산단위가 그에 속한 노동자에 의해 경영되고, 경영결과는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며, 기본적 資源配置機制로서 시장기구를 채택하되, 정부는 생

산수단을 소유하며 투자 및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독특한 형태의 市場社會主義體制를 보여주었다.

맑시즘에 근거한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자주관리모델」은 뚜렷한 이론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 경험에 의해 발전되었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 1950년대 이래 많은 실험적 정책들이 채택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체제를 변형시켜 왔다. 이러한 경제모델 채택의 저변에는 극심한 지역적 경제격차와 다양한 민족구성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유고슬라비아의 환경과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의 자생적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이끌었던 티토 死後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立地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실용주의적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관리모델」은 수요에 대한 非彈力的 공급과 排他的 노동시장 등 모델 자체의 결함, 국가와 생산단위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中間機構의 不在,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시장기구의 작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중앙정부 통치력의 감퇴와 비효율적 생산수단 소유제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1980년대에도 전반적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중국과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기 이전 실험적 개혁조치로서 시장기구의 도입 및 제한적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했으며,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왔다. 중국

과 베트남의 경우 ① 자생적 사회주의 형성과정으로부터 확립된 정권의 정통성 기반과 초기 혁명지도자의 교체, ② 지배엘리트의 집단화를 통한 정책노선의 다양화, ③ 중국의 大躍進運動 및 文化大革命과 베트남 통일시의 極左的 정치캠페인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민대중의 자각, ④ 낙후된 경제기반으로 인한 경제계획기제 개선정책의 한계 등 현실적 조건이 개혁 추진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부분적 시장기구의 도입 및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이 점진적으로 시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부분적인 시장기구의 도입이나 제한된 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조치를 통해 전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그 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경제구조의 상호 연관성에 의한 경제변수간의 상승작용과 과감한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고려한 중국 및 베트남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다. 市場化·私有化·對外開放에 의한 經濟體制轉換

1989년 이래 소련을 비롯한 東歐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치체제의 전환에 이어 市場化 및 생산수단의 私有化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해왔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經濟計劃機制의 개선이나 부분적 시장기구 도입 및 대외개방에 의한 경제개혁이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 국가의 新指導部는 새로운 경

제개혁 방향으로서 西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틀을 指向하여 전면적인 市場化와 생산수단의 私有化 및 대외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신지도부와 주민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함을 서구 근대경제학에서 新古典學派의 이론적 틀이 제시하는 효율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 침체 속에서 시장기구와 사유제의 기능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다.⁶⁾ 이들은 서구의 선진경제가 신고전학파의 패러다임에 따라 인위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 및 경제구조의 진화와 더불어 형성되어온 체제라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시장기구 및 사유제의 도입이 곧 서구 시장경제와 같은 효율성을 가져다 주리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구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전환 이후 폴란드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새로운 지배엘리트들은 주민들의 반사회주의 성향에 따른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 구조적 조정에 앞선 급격한 市場化 및 私有化 조치를 선포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던 것이다.⁷⁾

이와 같이 경제체제 전환과정에 있는 러시아 및 대부분의 東歐

6) 이러한 환상의 형성에는 西歐 근대경제학의 질서정연한 模型化技法과 강력한 규범적 함의가 공헌한 바 크다. 1940~198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서구의 경제학 이론체계는 서구선진국의 물질적 풍요와 결합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구사회주의 시민사회 및 인민대중의 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7) 이와 같은 상황은 <식 4-1>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사회구성원의 행동패턴과 새로운 경제체제간의 不調和가 빚어내는 갈등구조 속에서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거시경제적 부작용의 정도는 경제체제의 전환속도 및 시장기구의 도입을 통한 개혁경험 有無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체계적으로 시장기구 도입을 통한 체제개혁 경험을 축적한 헝가리와 체제전환 이전 비교적 균형 잡힌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노선⁸⁾ 견지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동독 등 경제구조 조정 이전에 급진적인 市場化 및 私 有化 정책을 채택한 곳은 심각한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경험했던 것이다.⁹⁾

8) 점진적 체제전환노선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첫째, 사회구성원이 시장기구 및 사유제에 대해 적응하여 효과적인 시장기구에 필요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변화 및 학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구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급진적 체제전환에 의한 거시경제적 부작용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셋째, 체제전환이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9) 일반적으로 급진적 경제체제전환정책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 첫째, 경제의 각 분야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부분적 전환은 비효율적이다. 둘째, 기존 관료기구 및 기득권층에 의한 개혁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구체제의 잔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속도는 거시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집권세력의 경험적 판단 및 정치적 고려와 경제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동구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체제의 新指導部는 주민에 의한 선거결과에 따라 집권 여부가 결정됨으로, 시장경제 및 私有制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체제전환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개혁 초기의 실험적 시장기구 도입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정치체제의 전환없이도 보다 적극적인 시장기구 도입 및 소유제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화와 사유화를 지향함에 있어서 이들 국가는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東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겪었던 바와 같은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균형은 피할 수 있었다. 즉 이들 국가의 지배엘리트는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우월한 위치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배양할 수 있었던 이념의 실천적 변용경험을 활용하여 경제체제 전환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들의 개혁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치구조와 새로운 경제구조간의 갈등을 소화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혹은 급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선택에 따라 반드시 실질적인 市場化나 私有化의 정도가 비례적으로 진척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실적인 진척 정도는 체제전환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거시경제적 불균형의 정도와 기존 경제구조의 구조적 頑強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기반의 취약성 등의 원인으로 체제 전환과정에서의 物資不足 및 GNP 감소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경우 경제체제전환의 속도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¹⁰⁾ 또한 러시아의 경우처럼 옐친에 의한 급진적 경제체제 전환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료기구의 경직성 및 경제구조의 영향으로 실질적 정책실행이 차질을 빚는 경우 시장화와 사유화의 진척속도는 완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¹¹⁾

10)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발전단계로 인해 경제력이 취약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의 경우 정치체제전환 이후에도 비교적 권위주의적 정권이 등장하여 명목상 시장화 및 사유화를 통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척속도는 매우 느려서 아직도 경제의 상당 부분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형편이다.

11) 옐친 정부의 적극적인 체제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게, 식당 및 기타 서비스 업종의 경우 모스크바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있어서 평균 사유화의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11%만이 사유화되었을 뿐이다. *Economist*, November 7, 1992, p. 52.

Ⅲ. 社會主義體制的 變化 類型

1. 變數間的 聯關性 및 類型化의 基準

앞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변수들은 사회주의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촉발하고 지배엘리트와 인민대중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행위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의 특성 및 상대적 역할을 결정해 왔으며, 이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體制變化 類型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정치적 變數 分析을 통해 본 것처럼 각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 따라 권력엘리트의 상대적 입지 및 역할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곧 권력엘리트의 정통성과 정책변용 능력 및 군부 掌握力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 대안세력의 성격 및 역량을 결정했다. 또한 세계체제의 차원에서 소련의 역할 변화 및 체제수렴적 경향은 사회주의권 지배엘리트의 입지와 정책방향 및 정치적 대안세력의 영향력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기폭제로서 작용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문제점과 국제경제질서 재편으로부터의 파급효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불만을 누적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체제 구성원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체제위기는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 고조의 와중에서 권력엘리트는 정책결정자로서 정치적 입지와 경

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개혁노선을 결정했으며, 특히 정치적 고려는 개혁정책의 방향과 범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유형은 정치적·경제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이나 한 변수의 다른 한 변수에 대한 일방적 작용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변수간의 多變的 相關關係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變數는 상호간의 순환적인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정치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체제변화 유형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유형은 크게 동구 및 소련과 같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와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공산당 일당통치의 기존 정치구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과감한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동구 및 소련과 같이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체제 변화과정상의 차이점을 근거로 중부 유럽형, 동부 유럽형, 소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아직 정치체제의 전환은 물론 시장경제의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경제개혁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또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유형화함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의 특징이 반드시 경제적 영역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구 및 소련의 경우와 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를 비교해 볼 경우 비록 정치체제의 변화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체제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기구의 도입과 사유화

를 통한 경제발전 추구라는 공통된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체제 전환 이후의 동구 및 소련 역시 <식 4-1>과 같은 정책결정기제에 의해 경제체제 전환의 속도와 순서를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 각 국가를 제약하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상응하는 사회구성원의 행위 패턴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 변화과정에 있어서 지배엘리트, 대안적 정치세력, 인민대중의 상대적 역할을 근거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변수들은 각 국가의 환경적 조건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 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결과로서 특징지워진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의 다음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유형을 크게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전자에 해당하는 동구 및 소련은 다시 정치체제 전환과정상의 특징에 의해 중부 유럽형, 동부 유럽형, 소련형으로 구분하며, 북한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분류하기로 한다. 또한 정치체제 전환의 유형에 따라 체제변화의 요인과 결과로서의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기로 한다.

2. 變化 類型

가. 中部 유럽型: 市民社會를 포함한 政治的 代案勢力間의 妥協에 의한 體制轉換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하는 중부유럽의 사회주의 건설은 다소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소련의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이들 지역 내에 토착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하긴 했지만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건설은 오로지 소련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스탈린식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수순을 밟았다.

중부유럽의 학자들은 ‘동유럽’이라는 용어가 냉전에 의해 왜곡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예컨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구조의 분화 등 모든 차원에서 그 발전정도를 달리하는 동유럽과 중유럽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에 속했던 西歐의 對者概念으로 사용됨에 따라 동유럽이라는 용어만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은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화의 단계, 정치측면에서 정치체제의 분화 그리고 사회구조의 分化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부유럽권은 공산권으로부터의 체제전환을 유럽으로의 복귀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중부유럽 3국은 민족국가로서의 성립시기가 동부유럽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빨랐으며 전통적으로 서구의 정치·문화적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또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議會主義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정치를 경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부유럽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은 곧바로 중부유럽 고유의 정치문화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으며, 이식된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의 지배엘리트는 정통성과 스탈린 모델의 변용능력 및 군부의 掌握度에 있어서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는 주민들로 하여금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반체제적 성향을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1956년 인민대중의 봉기에 의한 헝가리혁명, 체코슬로바키아 고물카(Gomulka) 정권의 개혁에 의한 1968년 프라하의 봄과 이의 좌절 이후 1977년에 이르러 발표되었던 77헌장, 1980년의 폴란드 자유노조의 출범으로부터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소련지배체제하의 중부유럽의 정치체제가 결코 안정될 수 없었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중부유럽에서 사회주의체제는 인민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부분 주민들의 정치의식과는 유리된 채 표류해 왔다. 따라서 중부유럽의 권력엘리트들은 헝가리와 같이 개혁정책에 의한 성과의 한계에 봉착하거나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와 같이 극히 제한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배엘리트의 정통성 및 능력이 否定되게 되었고 결국은 밑으로부터의 체제전환 압력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편 지배엘리트의 취약한 권력기반에 더해, 중부유럽이 가지고

있던 서구에 가까운 정치문화와 다원주의적 전통은 다른 동유럽국가나 동아시아의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의 결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77년의 77헌장을 선포한 이후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대안적 시민사회 세력이 사미즈다트(지하신문) 운동을 통해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나갔으며, 폴란드에서는 1980년부터 자유노조운동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조직화는 국가·사회간의 힘의 재분배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다른 사회주의체제에 앞서서 평화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체제전환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헝가리는 부분적 시장기구 도입을 통한 경제개혁의 경험이 있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는 동구권 국가 중 비교적 발달된 공업기반과 안정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정치체제의 전환 이후 이 두 국가는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경제체제전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의 신지도부는 자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급진적인 경제체제전환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전환의 배경과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중부 유럽형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전환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중부유럽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소련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이식되었고, 역사적으로 서구에 가까운 다원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배엘리트의 정치기반이 취약

했으며, 사회주의체제가 정착하지 못해 체제불안정 요소가 존재했다.

둘째, 소련·중부유럽간의 힘의 재분배와 고르바초프에 의한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는 중부유럽의 권력엘리트들로 하여금 체제 전환에 대한 선택을 강요했다. 중부유럽의 엘리트들은 시기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채 사회의 요구에 굴복해 최종적으로는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셋째,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多元的 정치문화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조직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사회구성원간의 힘의 재분배가 상호협상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지배엘리트와 정치적 대안세력간의 타협결과에 의한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 정치적 체제전환이 완성되었다.

나. 東部 유럽型: ‘역 도미노 현상’과 人民大衆의 壓力에 의한 體制轉換¹²⁾

동부 유럽형의 정치체제전환 유형을 보여주는 국가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동독 등이 포함된다. 동독을 제외한 이들 국가는 역사적 배경에 의해 중부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사회구조의 分化도 미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2) 과거 동구 사회주의 국가를 통칭하던 ‘동유럽’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동부유럽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같은 상황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소련의 점령과 함께 강제적으로 이식된 사회주의 건설과정도 별 저항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동부유럽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을 살펴보면, 자생적 형태와 강제이식적 형태가 혼在하고 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동독 등은 소련의 모델이 강제이식된 경우이며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은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체제가 수립된 경우에 속한다.

이 때문에 1948년 소련과의 불화로 獨自路線을 추구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소련·동구 사회주의체제간 관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중부유럽 국가의 체제전환의 파급효과와 체제내적 정치위기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인민대중의 반체제 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정치체제가 전환된 경우에 속한다.

유고슬라비아는 티토 死後에 점차 악화된 민족분규와 관리적 경제모델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왔으며, 알바니아는 호자(Enver Hoxha)에 대한 개인숭배와 철저히 폐쇄된 스탈린식 경제모델로 인해 체제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고조되어 왔다. 즉 이들 국가의 권력엘리트는 자생적 사회주의체제 건설로 인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분규 및 경제운용체제의 결함이나 지나치게 경직된 정치·경제체제로 인해 체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한편 소련에 의해 강제로 사회주의가 이식된 국가 중에 루마니아는 유독 민족주의가 극단적 형태를 보여주었던 국가에 속하며, 이는 소련과의 외교적 불화와 고립적 외교노선 추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외관계상의 긴장유발을 통한 권위주의 정부의 독재강화는 중부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주민들의 反政府的 성향을 폭발시킴으로써 정치체제의 전환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구체적 사례의 相異性에도 불구하고 동부유럽의 사회주의체제는 국가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방적 지배체제가 1989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들 체제는 스탈린식의 국가운영방법을 그대로 고수해 왔으며,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중부유럽에서 공산당의 역할 再規定에 관한 논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태동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부유럽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정치적 대안세력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었다.

소련의 역할 변화 및 제반요인의 작용에 의해 중부유럽의 정치체제 전환이 추진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부유럽체제는 체제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可視化되기 시작했고 그 양상도 지배엘리트와 시민사회 및 정치적 대안세력간의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국가와 인민대중의 직접적 갈등확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권력엘리트와 인민대중의 직접적 갈등의 심화는 분단체제하의 동독에서는 주민의 西方移住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결국 서독에 흡수통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루마니아에서는 군부와 시위대간의 무력충돌에 의한 내전의 양상을 띠었으며,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민족분규로 인한 연방의 解體와 동시에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알바니아는 중부유럽의 체제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민의 西方大使館으로의 망명 및 이탈리아로의 집단탈주 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부유럽의 사회주의체제는 중부유럽의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훨씬 더 극단적인 갈등구조를 표출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밑으로부터의 顛覆에 의한 체제전환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독경제에 편입된 동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치체제전환 이후에도 경제체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기반이 중부유럽 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점에 기인하지만, 한편 조직화된 정치적 대안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등장한 신지도부 성격이 구체제의 정치구조를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라는 데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동부 유럽형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그 類型的 特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부유럽 사회주의체제는 自生型이나 移植型을 막론하고 분단체제나 집권자의 독재적 통치방식에 의해 지배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으므로 체제내 정치적 대안세력의 형성이 억제되었다. 이 때문에 집권공산당 내에서도 힘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경직된 정책을 고수했다. 따라서 체제위기가 高潮됨에 따라 지배엘리트와 주민간의 갈등국면이 더욱 노골화되었으며, 중부 유럽형과는 달리 체제내부의 대안적 정치세력간 협상에 의한 체제전환이 불가능했다.

둘째, 동부 유럽형 체제전환 과정은 대내적 요인보다 소련의 개혁정책에 따른 유럽에서의 역할 변화가 기본적인 動因으로 작용했

으며 특히 중부유럽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으로부터의 ‘역 도미노 현상’에 의한 後發的 체제전환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정치적 대안세력의 부재로 인하여 동부 유럽형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 중 서독에 흡수통일된 동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제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舊 지배엘리트에 속했던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속도 역시 중부 유럽형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형편이다.

다. 蘇聯型: 民族國家로의 解體와 권력엘리트의 分裂에 의한 體制轉換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세계 최초로 실천에 옮긴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더불어 세계정치·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소련체제의 전환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요컨대 1917년 혁명 이후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소련체제의 불안정 요소가 常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높은 사회의식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고도의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을 들었다. 특히 마르크스는 첫째 조건인 프롤레타리아의 政治意識을 강조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 상응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혁명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레

닌이 주도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의 러시아는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기본 전제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사회주의체제 유지 및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추격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레닌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의식을 함양하는 도구로서 공산당의 전위적 역할강화를 추구하였으나, 스탈린을 거쳐 브레즈네프 시대에 이르면서 소련사회는 경직된 관료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로서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소련은 레닌 스스로가 자본주의로의 후퇴라고 명명한 신경제정책을 거쳐 스탈린 시대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한 중공업우선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경직된 관료조직에 의한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경제의 운용은 결국 비효율성을 누적시켜 체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소련의 체제위기를 더욱 高潮시킨 요인은 세계체제의 변화였다. 즉 야노스(A. Janos)의 지적대로 사회주의에 대한 마지막 도전은 자본주의의 상대적 발전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이미 계급혁명에 의해 타도되었어야 할 자본주의 국가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세계경제를 주도하면서 사회주의체제와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이에 비해 1960년대 이래 시도된 소련의 경제개혁 정책은 그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경직된 관료기구와 경제구조로 인해 그 성과가 미흡했다.

특히 소련체제의 대내적 위기는 소련을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질서 붕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소련은 2차대

전 이후 동구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체제의 약화에 따른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탈소련화 추이는 관료기구의 화석화 및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등 대내적 위기와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지배엘리트를 분열시켰으며, 인민대중의 반체제적 성향을 강화하였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소련에 의해 합병되었던 민족국가들이 세계체제의 변화를 계기로 독립을 추진하자 소련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력의 한계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소련과 중부유럽은 그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중부유럽에서는 지배엘리트의 弱化와 시민사회 및 정치적 대안세력의 強化가 동시에 수반되었다. 그러나 전제정치 및 자생적 공산당에 의한 장기간의 권력독점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철저한 중앙계획적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던 소련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비록 인민대중의 정치적 입지가 서서히 강화되어 갔지만 조직화를 통한 정치세력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不在 속에서 소련의 개혁방향을 둘러싸고 지배엘리트가 분열하게 되었으며, 인민대중의 反政府的 성향을 등에 업은 엘친의 입지가 강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위기의 와중에서 고르바초프는 엘친 등 공화국지도자들과 1991년 4월 협상을 통해 새로운 연방조약에 합의한 이후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결과 경직된 관료조직의 반발과 함께 보수파의 쿠데타를 초래했다. 이를 기화로 시민의 반체제 성향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反轉시킨 엘친이 강력한 정치대안으로 등장하게 되

었다. 그러나 옐친은 어디까지나 집권엘리트의 분열 결과 등장한 세력이지 시민사회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대안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쿠데타 실패 후 연방의 국가기구들은 활동을 중지했고 그 공백을 옐친 러시아대통령을 비롯한 각 공화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채우기 시작했으며, 이어 연방의 해체와 동시에 소련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옐친 집권하의 러시아는 아직 정치적 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요건인 法治主義的 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련의 공산당 1당지배체제가 전환된 것은 사실이나 안정적인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확립한 단계는 아닌 것이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 옐친을 중심으로 한 신지도부는 과감한 시장화와 사유화를 통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진척 속도는 매우 완만하며 거시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소련형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1985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고르바초프의 개혁조치는 대내·대외적 및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체제위기에 대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과거 소련지도자들에 의해 시도된 부분적인 개혁정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둘째, 소련의 개혁조치는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의 위기인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유형과 유사하나 결과적으로 경직된 관료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

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압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동부 유럽형에 가까운 혼합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련의 체제전환은 결국 민족국가의 독립에 의한 소련의 연방체제 붕괴와 엘친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 내부의 분열에 의한 지배세력의 등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안세력간의 타협을 통한 중부 유럽형 체제전환이나 ‘역 도미노 현상’과 밀도로부터의 체제전복에 의해 급격한 체제변혁을 겪었던 동부유럽형과도 구분되는 것이다.

라. 東아시아型: 集團指導體制의 확립과 經濟體制轉換에 의한 政治安定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정치체제의 전환을 경험한데 비해 동아시아의 중국 및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가 ① 자생적 형성과정을 거침으로써 획득한 민족주의적 정통성, ② 스탈린식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여준 지배엘리트의 정책적 유연성, ③ 집단지도체제화함으로써 다양한 정책노선 수렴을 통한 과감한 경제개혁조치의 채택 등에 힘입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부유럽의 지배엘리트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사회주의체제 내의 긴장, 갈등 관계를 유발했던 것에 비해 中國과 베트남은 토착 민족공산세력이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음으로써 중부유럽권이 처음부터 봉착했던 정통성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정통성 확보와 국민적 지지 획득의 배경에는 사회주의 지배엘리트들이 민족주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정치·경제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련식 발전 모델보다는 각 국가의 현실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채택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中國 공산당은 창당 초기에는 물론 다른 지역의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927년 國共合作 붕괴를 기점으로 중국적인 혁명전략을 모색했고 1935년에 이르러 소련 유학파를 누른 毛澤東이 권력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中國化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 이후 문화대혁명을 전후하여 모택동의 一人支配體制가 확립되었으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한계를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배엘리트는 점차 集團化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강력한 국민적 지지 속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했다.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력 엘리트들은 프랑스 식민지투쟁부터 1976년의 남북통합에 이르기까지 始終一貫 민족주의의 편에 서 있었으며 베트남에서의 맑스·레닌주의는 오히려 민족주의의 완결을 전제로 한 手段的 價値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1970년대 남북베트남의 통일로 인해 경제건설의 실질적 필요성에 의해 지배엘리트가 집단화되어 다양한 정책노선을 조정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소련이나 중부·동부유럽에서와 같이 총체적 체제위기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었다기 보다는 체제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개혁·개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은 스탈린식 발전모델에 따른 국가발전이 한계에 봉착하고 이를 조정하려는 몇차례의 시도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1970년대 말 이후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을 도입했으며, 엘리트간의 타협에 의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실행으로 경제적 위기 및 사회체제의 한계가 가져온 갈등을 내부적으로 소화해 낸 경우에 속한다. 특히 경제개혁이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1989년에는 대규모 反政府 민중시위가 발생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구성원간의 힘의 재분배로 이어지기 보다는 지배권력 내에서 노선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제위기를 해소하였던 것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공산당의 정치적 입지가 안정되어 있었고 또한 오래 전부터 국가가 정책선택에 있어서 고도의 柔軟性을 가지는 정치문화가 정착해있기 때문에 개혁정책은 전적으로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위로부터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 개혁·개방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역시 집단화된 지배체제 내의 보수파와 개혁파 갈등구조가 심각한 국면으로 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노선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감한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의 성공적 결과를 통해 이들 국가의 지배엘리트는 인민대중에게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과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 유용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정치체제의 전환을 수반하지 않고도 경제개혁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의 논의를 근거로 동아시아형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 양상

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지배엘리트는 자생적 사회주의 형성과정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스탈린식 사회주의 모델을 자국의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었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화된 지배체제 내에서 路線調整을 거침으로써 심각한 정치적 갈등의 표면화를 제어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에 주력하여 긍정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민대중으로부터의 정치체제변화 압력 발생요인을 극소화하고 있다.

마. 北韓型: 一人支配體制의 強化 및 理念的 硬直性에 의한 政治危機的 要因 潛在

北韓은 소련군의 점령에 의해 체제 건설의 기초가 마련되었지만 東歐처럼 소련식 모델이 완전히 강제이식된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자생적 사회주의 엘리트가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체제를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체제 건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대내적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強制移植型과 自生型이 혼재하는 混合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대내적 원동력은 金日成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의 성격과 이른바 생산양식의 사회주의화에 대응하는 주민의 태도에서 유추

될 수 있다. 우선 金日成은 독자적인 무력의 독점을 통해 정권장악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등의 정파가 있었으나 이들 두 동질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에 의한 일인지배체제의 구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다른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一元的(monolithic) 지배체제가 강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에는 철저한 일인지배체제의 강화 및 정보유통의 폐쇄를 통한 정권정통성의 강제적 창출로 인해 정치적 대안세력의 형성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엘리트 내부의 정책노선수렴 및 경쟁파벌의 존립도 불가능했다.

이러한 경직된 정치체제에서 집권엘리트의 이념적 포용력이나 정책선택에 대한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분적 개혁조치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와는 달리 체제의 경직성이 개혁조치의 유효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 ① 북한 지배엘리트의 이념적 경직성 및 정권세습으로 인한 체제정통성의 약화, ② 시장기구 및 자본주의 경제적 요인의 도입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북한 지배엘리트의 우려, ③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대변혁이 주는 개혁에 대한 否定的 인식 등이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방향 선택에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세계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일반적 흐름과는 시간적 격차가 있

으나 북한은 단·중기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며 경제적 효율향상의 한계가 명확한 경제계획기구의 개선 및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자생적 사회주의의 특징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대안세력으로부터의 挑戰도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경직된 이념체제로 인한 지극히 좁은 정책선택의 폭은 잠재적인 정치적 위기가 常存하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형 정치체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적 사회주의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지만 一人支配體制의 강화과정에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제가 말소되어 버렸다.

둘째, 지배엘리트 내의 정책노선 調整機制가 결여되어 있으며, 권력세습체제의 확립과정에 있어서 집권세력에 대한 경쟁적 파벌이나 시민사회의 형성이 불가능했으므로 정치적 대안세력이 全無한 형편이다.

셋째, 분단관리체제로서 東西獨關係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한정부의 역할에 따라서는 남한의 체제 및 정치력이 북한의 정치적 대안세력화할 수 있으나,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상태 및 남한의 경제력으로 보아 짧은 기간 내에 이의 기정사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IV. 結 論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주의권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부터 출발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비록 정치적 多元主義의 지향과 시장화 및 사유화라는 보편적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구체적 변화과정 및 결과는 매우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 및 변화결과의 유형을 결정하는 變數로서는 각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세계체제변화의 영향, 지배엘리트의 특성, 정치적 대안세력의 성격과 역량, 경제객체의 행위패턴 및 경제구조상의 특성,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變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을 크게 東歐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의 경우와 같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결합된 경우와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정치체제의 전환없이 경제체제의 전환만을 추진하는 경우 및 북한과 같이 지극히 제한된 영역의 경제체제 整備에 그친 경우로 나뉘어진다. 한편 정치 및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추진된 동구 및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치체제 전환과정상의 특징에 의해 해당 국가들은 중부 유럽형과 동부 유럽형 및 소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부 유럽형의 정치체제전환 유형을 보여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지배엘리트와 정치적 대안세력간의 타협에 의한 평화적 정치체제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동부 유럽형 체제변화 유형은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와 동독·불가리아·루마니아의 소련에 의한 이식형 사회주의체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비록 상이한 체제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대안세력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중부유럽의 급격한 변혁에 영향을 받은 인민대중의 직접적 저항으로 인해 체제가 전복되었던 것이다.

소련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래 고르바초프에 의해 정치와 경제의 동시적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경직된 소련의 정치·경제구조로 인해 체제위기가 증폭되었으며, 이는 곧 민족국가의 독립에 따른 聯邦解體와 인민대중의 反體制化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지배엘리트는 정권경쟁적 파벌로 분열되었으며, 급진적 성향을 보인 엘친은 주민들의 반체제적 성향에 힘입어 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체제전환을 진행시켰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유형에 있어서 동아시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과감한 시장기구의 도입 및 소유제의 다양화와 대외개방을 통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공산당의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二分化된 체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긴장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체제형성 초기에 소련의 군사적·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김일성 체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래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로서의 특성을 강화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적·정치적으로는 소련 및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스탈린식 경제발전 모델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변혁과 더불어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및 경직된 스탈린식 계획경제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절대적 권력체제로 인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대안적 정치세력의 형성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폐쇄적 정책과 집요한 대내적 정치캠페인 및 敵對的 分斷體制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반체제적 성향의 表出을 억제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 경제체제 변화유형은 계획기구의 개선, 부분적 시장기구의 도입, 市場化·私有化를 통한 체제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정책노선은 정책결정권자의 費用·便益的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정책결정자의 비용·편익적 고려에는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경제적 부작용은 물론 권력엘리트의 정치적 입지 및 이념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 모델을 통해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경제개혁 정책과 시장화 및 사유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경우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정책결정자의 비용·편익적 고려에는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역사적 경험 및 自國 經濟構造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정책 決定機制에 의해 정치체제변혁 이전의 東歐 사회주의체제 및 소련은 계획기구의 개선을 통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는 부분적 시장기구의 도입을 시도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모택동의 주도로 스탈린식

모델을 중국에 알맞게 변용하려는 시도로서 대약진운동과 경제정책결정권의 週期的인 地方分權化 및 中央再集權化가 행해졌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에는 각국 新指導部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시장화와 사유화의 진척 속도가 결정되어왔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은 1980년대 이래 정치체제의 전환없이 과감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 정치이념과 경직된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의 경제체제개선 노력은 경제계획기제의 개선을 포함하여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왔으며, 경제정책은 정치·이념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에 의한 절대권력의 행사는 집단적 지도체제하에서 볼 수 있는 정책노선 調停機制를 말살함으로써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체제의 유연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계획기제의 개선에 의한 효율의 향상은 경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부분적 시장기구 도입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명령형 계획경제의 맹점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과 중국 및 베트남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체제전환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속도는 느리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어서 시장기구의 확대 및 소유제의 다양화는 경제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극단적인 이념적·정치적 통제 속에 제한지역의 개방에 더해 계획기구의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기구나 소유제의 다양화를 통한 본격적 개혁은 보다

면 장래의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類型化하고 비교·분석한 본문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체제 변화는 정치적·경제적 變數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각 變數間 상호작용 및 이에 의해 형성된 사회구성원의 行爲樣態에 의해 그 구체적 유형이 결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체제변혁의 渦中에 있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流動性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상호간에 外生變數로서 작용해 왔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온 것은 아닌 것이다.

빈 면

第 V 部

結論：北韓體制的變化展望

빈 면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의 비교분석을 기초로 하여 제V부에서는 北韓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북한은 變化의 段階에 있어서 1950년대 이전의 東歐, 스탈린 시대의 蘇聯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러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가? 지금까지 변화를 억제하고 체제의 현상유지를 도왔던 요인은 무엇인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북한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I. 北韓의 社會主義體制 維持의 要因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붕괴를 경험하거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와중에서 北韓만이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北韓이 변화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체제붕괴를 경험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北韓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섯 가지 측면의 比較社會的 要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社會主義體制 形成過程의 差異

앞에서 살펴본대로 체제붕괴를 경험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蘇聯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되었다. 蘇聯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주의체제의 이식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미 체제붕괴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첫째는 사회주의체제의 강제적 이식은 동유럽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부정한 것이다. 둘째는 어느 정도 성숙해있던 시민사회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셋째는 토지국유화 등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기존의 자본주의적 계급구조로부터 많은 사회적 저항을 받음으로써 정권의 초기부터 정권과 인민대중의 敵對感이 형성되었다.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체제를 自生的으로 발전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운동이 반외세 민족주의적 저항운동의 맥락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 그 자체가 강력한 正當性을 가지게 되었다. 北韓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소련군의 점령에 의하여 체제건설의 기초가 마련되었지만 동구에서처럼 소련식의 모델이 완전히 강제이식된 것은 아니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은 식민지체제 청산과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저항적인 社會勢力이 없었다. 부르조아 계급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지주들은 월남하였고 농민들은 사회주의 정권의 토지개혁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북한은 정권과 인민대중간의 統合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아직 밑으로부터의 도전을 저지하고 있다.

2. 歴史的 經驗의 差異:

反蘇·反社會主義 對 反美·反帝國主義

동구 및 소련 사회와 북한은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체제변화와 체제고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스탈린 사후 전개된 스탈린 격하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1956년 6월 폴란드의 포즈난 노동자 봉기, 1956년의 헝가리 봉기,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봉기는 모두 反社會主義, 反蘇 民族主義 運動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침공했고 또 소련군의 침공없이는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국적이고 대규모적인 격렬한 시민봉기였다. 이러한 일련의 반소 민족주의 운동에 대하여 소련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바로 그때 1956년과 1968년에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反蘇·反社會主義 運動이 東歐 社會主義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와중에 북한은 전혀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도발함으로써 결국 美國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고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역사적 상처를 입었다. 이후 북한에서는 전국토를 초토화한 미국에 대한 敵對感이야말로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正當化하는 이념적 기둥으로 이용된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반소·반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북한은 반미·반제국주의 운동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3. 支配理念의 差異: 修正主義 對 主體思想

스탈린 사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배이념은 修正主義化 또는 탈스탈린주의화(De-Stalinization)로 특징지을 수 있다. 수정주의는 점차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하게 하였고 결국은 이데올로기라는 형이상학적 질서에 기초하고 있던 소련 및 사회주의체제는 붕괴하고 말았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修正主義는 북한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스탈린의 우상숭배를 비판한 흐루시초프가 金日成의 우상숭배에 대하여도 비판하자 김일성은 정치적 내정간섭이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반격을 하고 나섰다. 김일성에게는 개인숭배 비판 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습되지 못하게 하여 정권을 수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로 대두하였다. 外部思潮 차단과 사상무장 강화가 모색되었다. 그것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점차 탈스탈린주의를 가속화하여 결국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하에 스탈린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4. 外部世界와의 關係의 差異

스탈린 사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점차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원주의를 발전시켰던 것에 반하여 북한은 다른 사회주

의가 다원화될수록 더욱 문을 굳게 닫아 自由化의 바람을 차단하고 체제를 더욱 경직화하였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해외 경험자나 방송, 로동신문 등을 통해 얻은 단편정보나 왜곡된 정보 이외에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 제국과 소련 공산체제 붕괴의 원인과 의미,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 경제체제의 문제점, 남북한간의 생활 격차 등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구사태 이후 蘇聯의 강경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공산체제가 종식된 후 북한의 폐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소련과 동구의 공산당을 몰락시킨 자유화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외부바람’을 막기 위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자료를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폐쇄 정책이야말로 북한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5. 社會的 性格의 差異: 市民社會 對 臣民社會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市民社會의 발달이다. 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 개념은 저항문화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시민사회 개념은 곧 체제저항의 문화를 의미하였다. 동구사회에서 시민사회 개념은 곧 公的 構造의 外部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지하신문 사미즈다트(samizdat) 읽기, 암시장에서 물건사기, 비공식 야학에서 공부하기,

교회에 대한 지지 등 ‘독자적 행위’를 하여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제2의 사회’(second society)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사회 발달의 결과 1980년대에는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은 소련의 武力뿐이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의 동구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자마자 동구가 일시에 붕괴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동구와 소련에서의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달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臣民社會로 특징지어진다. 신민사회란 시민사회가 발달되기 이전 단계의 사회들이다. 신민사회에서 개인은 경제 외적인 강제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이 없는 종속적인 臣民(subject)인 것이 특징이다. 신민사회에서 개인은 영주에 예속된 농노의 신분과 같이 국가권력의 조직에 의하여 직접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 신민사회의 예로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의 봉건제 사회, 구소련, 구동구, 북한 등 국가사회주의 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絶對君主가 지배하며 個人은 절대군주 앞의 臣下 또는 臣民(subjects)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회적 성격 때문에 북한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조직적 저항세력의 형성이 미약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모순, 경제적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주체가 미발달되었다.

6. 權力엘리트간의 派閥 存在 有無

동구 사회주의체제를 변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엘리트들간의

파벌 및 노선갈등이다.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파벌을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北韓에서는 中國이나 蘇聯에서 나타났던 혁명1세대의 사멸과 권력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북한 권력엘리트 집단 내의 파벌형성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 지도자가 장기집권했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에 변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蘇聯의 경우는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였고, 브레즈네프는 흐루시초프의 개혁을 비판하였고,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의 17년통치의 유산으로서 사상 최악의 경제부진현상, 無事安逸主義의 사회현상을 비판하였다. 체르넨코는 안드로포프의 개혁에서 보수로 회귀하였으며 고르바초프 이후 개혁이 본격화하였다. 중국에서는 덩소평이 모택동의 스탈린주의적 정책을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둘째, 북한에서는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준비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소련에서와 같은 前任者에 대한 격하운동이나 대안적 노선을 혁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또 현재의 권력엘리트 구조는 이미 金正日 후계체제로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金日成 사후에도 엘리트집단 내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도자가 교체되면 새 정권이 통상 정당성의 기초를 과거정권의 부정과 비판에서 확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북한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북한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동구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逆으로 대응하여 변화를 억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념적·정치적 영역의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풍요, 국제적 협력관계와 같은 구조적 토대가 아니라 정보의 차단, 이데올로기의 동원과 같은 정치적 통제에 의존하여 사회주의체제 및 김일성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존하여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의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을 현상유지한 것에 불과하며 1970년대 이후 체제발전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북한은 체제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년 12월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이 失敗했음을 인정한 만큼 경제문제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경제력으로 남한체제를 추격하거나 경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 토대가 개선되지 않고는 권력의 정통성을 무한정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I. 變化의 促進要因

제Ⅲ부의 사례분석에서 자세히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의 動因은 대체로 經濟的 要因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追擊發展에 失敗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개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동구 제국은 소련의 통치로부터의 해방도 중요한 동인의 하나였지만 親蘇 社會主義 政權이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큰 원인의 하나는 사회주의적 추격발전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1956년 시민봉기의 원인이 당시의 경제적 불만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소련, 중국, 베트남의 경우도 經濟回生을 위하여 위로부터 개혁·개방이 주도되었다. 소련은 經濟的 危機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부문에서 개혁을 시작하였으나 개혁을 위해서는 보수세력의 반대를 돌파해야 했기 때문에 보수세력을 약화 내지는 제거하기 위하여 정치적 개혁을 본격화하였다. 이렇게 방법적인 면에서 소련의 경우가 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經濟回生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北韓의 경우도 변화의 동인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經濟가 衰退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증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여타 사회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中央計劃經濟體制라는 점이다. 다른 사회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증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자본주의권의 더욱 강경한 對北 經濟封鎖이며, 둘째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權力維持의 論理가 經濟의 論理를 매우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가 주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더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의 폐쇄주의 때문에 현재제로는 과거의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 經濟回生에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제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지 않고는, 즉 경제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에 종속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효율성이 있든 없든간에 현재의 경제정책에서 變化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문제의 本質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엘리트들간에 自信感 상실과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선투쟁 및 파벌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덜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市民社會도 동구나 소련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 발달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며 밑으로부터의 불만이 조직적으로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표면화(active)되거나 조직화(organized)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재해(latent) 살아있다는(alive)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적이고 표면적인 저항보다는 日常生活型의 抵抗의 형태를 띤다. 또한 근로인테리로 불리는 신중간계급의 일부는 기존체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理念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인민의 경우도 東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권력없는 사람들의 권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체코에서 야채장수들이 萬國의 勞動者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걸어놓은 것만으로 體制順應者로 인정되고 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후기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을 하벨(Vaclav Havel)이 잘 보여주었듯이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이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지배자가 주체사상을 지배의 도구로 삼는다면 인민대중은 주체사상에 공식적으로는 順應하면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는 알리바이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또 북한이 대외적으로 개방해야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협력 파트너였던 소련과 동구에 대한 대안을 미국, 일본 등의 서방자본주의권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要因이다.

Ⅲ. 北韓式 變化 類型 決定要因:

積極的 改革·開放을 制約하는 要因

북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변화의 유형은 결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었던 길과는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식의 독특한 변화유형을 창출시킬 북한의 특수한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北韓이 蘇聯이나 東歐뿐만 아니라 中國이나 베트남 정도의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

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權力維持 方式의 特殊性

무엇보다도 金日成 정권의 권력유지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는 사실이 현재 및 향후의 개혁·개방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외부와의 차단과 단절이 김일성의 政權 維持의 특수한 전략이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修正主義化를 추진하고 있을 때 북한은 主體思想을 개발하여 더욱 폐쇄화하였다.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된 주체사상의 본질이 차단과 단절이다. 둘째, 김일성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숭배이다. 김일성 권력의 원형이 스탈린이었으며 아직도 스탈린식 우상숭배의 유산을 청산하지 않고 있으며 스탈린보다 훨씬 더 신격화된 형식의 우상숭배를 발전시켰다. 셋째, 김일성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主體思想이라는 지배이념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권력의 정당성의 기반이 경제가 아니고 이념적 순수성에 입각한 주체사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경제적 발전도에 두지 않는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의 “인민들이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며 노동자 농민과 사무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유지하는 한 앞으로의 변화방향에 큰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김일성의 권력유지의 이러한 특유한 특성들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을 強制的으로 창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과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또 위의 세 가지 특성이 권력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구(imperative)이기 때문에 폐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2. 分斷管理體制와 體制競爭의 負擔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의 선택을 제한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南北으로 分斷된 대결구조 속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이 분단의 요인은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동독, 베트남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하였다. 東獨은 서방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독의 문화적 침투 등 화평연변의 망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서독에 흡수되고 말았다. 베트남은 분단 이후 30여년의 내란을 치르다가 통일을 이루어 분단문제가 해소된 이후 1979년 9월 당 중앙위 6차총회를 기점으로 비로소 개혁·개방으로 정책선회를 할 수 있었다.

北韓은 분단의 상황 때문에 경제발전에 전념하지 못하고 국방·경제 병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엄청나게 소모하여야 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확인된 시점에서조차 사회주의의 이념을 변화시켜 체제효율성의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까닭도 북한의 사회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의 조건에서는 인민들에게 충격적인 정보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단상황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되었기 때문에 대내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의 教訓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이 가져온 결과의 교훈이다. 북한 지도층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改革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1989년 북경 天安門事態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黨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증대되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의 처형, 동독의 호네커의 망명, 레닌 동상의 철거 등은 金日成과 金正日에게 개혁·개방 공포증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

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은 당국이 범한 失手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지도자는 失手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하거나 정정할 것이 없으며 북한의 체제는 강하고 단일화된 당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인민들은 독창적이고 가장 발달된 이념체계를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 결속돼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요인들은 모두 체제를 硬直시키는 요인들이며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시키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식의 제한된 개혁·개방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V. 北韓式 改革·開放 類型의 展開方向 豫測

1. 北韓式 改革·開放의 類型

북한에는 개혁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도부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制約要因들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혁·개방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론이다.

그렇다면 북한식 개혁·개방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가? 북한에서는 결코 동구에서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도전에 의한 체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즉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등의 중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선거에 의한 체제변화는 없을 것이다. 루마니아와 같이 밑으로부터의 유험붕기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사회세력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또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이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정치개혁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권력의 정통성의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東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인 北韓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은 크게 보아 역시 東아시아 類型에 더 가까울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東아시아 社會主義 國家들처럼 사회주의체제와 기존 政權을 유지하면서 經濟體制를 변화시키는 類型에 더 가까울 것이다. 북한이 동유럽의 루마니아나 알바니아의 경우처럼 일인 장기지배체제하에 경직된 체제관리를 해왔지만 北韓은 루마니아나 알바니아와는 다르게 체제유지에 順機能的인 여러가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세계로부터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부터의 붕괴에 의한 체제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만을 선택할 것이다. 북한의 현재의 지도부가 意圖하는 개혁·개방의 방향은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한 반드시 金日成과 金正日의 政權을 유지하면서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경제분야 위주의 개

혁·개방, 그것도 특구건설 방식에 의거하여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수혈받는 방법에 그칠 것이다. 特區 이외의 지역에서 자본주의적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또는 토지의 사유화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이러한 資本主義的 制度 도입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이다. 北韓은 부르조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억제할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체질강화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안정된 權力維持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가 의도하는 개혁·개방의 방향은 1970년대 후반 중국이 취했던 정책을 어느 정도 모방한 형태일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정책들을 모방하여왔고 중국지도부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胡耀邦이 金正日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호요방의 관광개방 요구에 다음과 같이 ‘약속’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우리 개방정책 이제 하겠다. 개방정책 하겠는데 제한된 국부적인 군데만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로 중국을 모방할 것인가? 중국에서 1978년 이후 鄧小平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자는 四個堅持(공산당 영도, 사회주의노선, 프롤레타리아독재, 맑스·레닌·모택동사상)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도 한편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주체사상을

1) 신상욱·최은희 부부와의 대화에서 김정일이 행한 발언내용으로서 최은희씨에 의하여 녹음된 것임.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1991년 1월, 월간조선 별책부록), p. 281.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개방적 경제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서 선택된 북한식 개혁·개방의 모델로 추정된다. 그러나 北韓은 中國의 개혁·개방을 모방하고 있으나 개혁·개방의 내용이나 깊이와 폭에서는 中國에 비하면 훨씬 미약한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의 개혁·개방은 이미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징후들은 UN가입, 日本과의 수교추진, 남북한의 관계개선, 對美 接近 노력 등 대외정책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羅津·先鋒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UNDP 주관의 두만강 개발사업이다. 북한은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1992년 4월에 개정된 憲法에도 대외경제협력 관련조항을 첨가하였으며 조선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이미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화의 내용은 1980년대의 합영법보다는 훨씬 진전된 것임은 사실이다. 북한은 1993년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經濟失敗에 대한 認識을 계기로 경제에 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높아질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경제적 요구는 항상 정치적 안정의 논리에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2. 時期別 展開方向 展望

북한이 선택하는 변화유형이 위와 같다고 할때, 북한의 향후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權力이 극도로 중앙집중화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시기구분은 指導者의 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金日成이 생존하고 있는 기간, 金正日 정권기간, 그리고 金正日 以後의 기간을 각각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短期的 變化: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기간으로서 향후 3~4년 정도가 이 기간에 포함될 것이다.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하던 요인이 그대로 온존되어 있는 시기이다. 金日成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의 기초가 되어 현재의 정권은 유지되고 아울러 사회주의체제도 별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체제의 긴장요인에 별 개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의 危機的 징후가 점차 더 심화되어 간헐적인 사회적 소요가 있으나 김일성이 軍部를 장악하고 있는 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문제, 美國 및 日本과의 수교문제가 핵심변수인데 핵문제 및 미국 또는 일본과의 수교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경제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核問題 해결이 지연될 경우,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안되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더욱 폐쇄화되고 물리적 통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체제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은 식량문제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상황이 심화되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核問題가 해결될 경우,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이루어 일본으로부터 50억 달러 정도의 자본이 유입되고 남북경제협력의 증가로 인민들의 경제생활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간의 자본유입으로 공장가동율의 증가, 식량문제 개선 등 표면적인 문제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매우 制限的일 것이기 때문에 經濟效率性 개선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나진과 선봉지구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사회간접자본(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未備로 인해 공장가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 생존기간 동안에는 특구개발의 경제적 果實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의 유입의 효과는 오래지 않아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때 북한의 經濟回生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經濟回生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한기업과 일본기업들이 적극적인 對北韓進出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등 북한의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특구 방식의 개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미국 등의 외

국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未備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한편, 북한이 사회간접자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투자를 그만큼 犧牲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희생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外國企業의 진출이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체제적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대로 북한은 政權維持의 특수한 전략, 분단체제의 한계, 개혁·개방한 사회주의권이 보여준 교훈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내적 개혁을 동반하기 어려울 것이다. 對內改革을 수반하지 않는 개방정책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방정책이 국내기업에 생산 및 경제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면 유치된 외국기업의 생산력이나 외화가득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中國의 경우는 정치적 민주화는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대외경제 개방의 정도에 상응하는 경제개혁, 사회적 자율화 등 대내적 개혁이 수반되었다. 중국에서는 鄧小平 체제가 출범한 1978년 12월 당 11기 3중전회를 기해 인민공사를 해체시켰다. 「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에서 농업경영을 각 家戶가 책임지는 包產到戶制가 채택됨으로써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중국의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국은 또 초기의 경제개혁의 성과에 자신감을 얻고 1984년 10월 당 12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을 통하여 계획경제체제에서 상품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개혁을 성공시킨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

치의 하나는 鄧小平의 ‘解放思想’이다. 등소평은 休養一服政策으로 사상을 대폭적으로 해방시켜 정치적 동원에 지친 인민을 휴식시켜 활력을 회복시켰다.

중국과는 달리 위에서 분석한대로 북한은 대외개방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改革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思想統制를 強化하고 있다. 따라서 대내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개방정책의 추진이 북한의 개방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방정책을 통해 유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과 기술 등 생산의 하부구조에 한정하며, 상부구조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경제관리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와 개방정책의 결합방식으로는 경제회생에 失敗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생에 실패하면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사회적 소요가 빈번히 일어나고, 이를 武力으로 진압함으로써 인민과 정권 사이에 적대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民心이 김일성·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다. 정권 엘리트들간에 경제문제해결과 사회적 소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노선갈등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노선선택을 둘러싸고 위로부터의 갈등, 파벌투쟁이 심화될 것이다.

(2) 中期的 變化(金正日 政權期): 김정일 단독 체제로 이행하게 되면 權力의 正當性의 기초는 金日成이 의거했던 전통적 및 카리스마적 正當性 (traditional and charismatic legitimacy)에서 점차 經濟

合理的 正當性(rational legitimacy)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역사에서 金正日 정권 기간은 일종의 과도기적 기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金正日 정권은 변화의 논리가 아니라 현상유지의 논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社會的, 構造的 要求(structural imperatives)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이 20년 동안 후계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 金日成의 수혜자라기 보다는 前任 장기집권자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金正日 政權은 50여년 동안의 김일성 시대의 모순과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金日成 政權 50여년 동안 체제유지를 위한 폐쇄주의, 개인숭배, 역사왜곡, 경제비효율성 만연, 부정부패 등의 온갖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否定的 結果를 노정하는 기간일 것이다.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경제논리가 권력유지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일성 사후 金正日 단독정권기에는 지배엘리트들간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지도부가 분열되었듯이 김일성 사후 북한에도 폐쇄주의 경제체제 유지여부를 둘러싸고 엘리트들간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폐쇄주의, 단절과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 우상화가 모두 김정일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며 그 때문에 경제의 논리가 철저히 배제당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가 북한의 경제, 사회발전에 족쇄로 작용했던 것이다. 북한경제의 해결을 위한 길

은 정권의 명으로부터 경제를 해방시키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早期 失脚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정권의 실각은 밑으로부터의 조직적인 抵抗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군부쿠데타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건이 이 시점에서 폭발하는 까닭은 첫째, 경제회생이 지연되고 둘째, 비판적 사회의식이 성장하며 셋째,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대한 比較 때문에 지도자 權威의 절대성이 와해되며 넷째, 鄧小平 사후 실제로 등장한 중국의 신진 개혁엘리트들의 김정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적, 정치적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김정일을 실각하는 쪽으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는 政權交替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붕괴가 북한 사회주의체제 崩壞로 직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남한과 경쟁하고 있으며 東獨의 흡수통합이 동독의 기득권층에 가져다준 파멸의 교훈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층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南北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 북한 기득권층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장을 받지 않는 한 체제붕괴를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南韓에 흡수될 경우 300만에 가까운 기득권층의 이익이 일시에 박탈당하게 될 것임으로 단독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北韓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체제붕괴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이다.

(3) 長期的 變化(金正日 以後 政權期): 김정일 이후의 새로운 정권은 과거정권에 대한 否定을 기초로 積極的인 개혁·개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의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새 政權의 正當性을 확보하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체제통합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정권유지를 위한 사상교양, 폐쇄주의 등의 정치적 명에로부터 해방된 새 정권은 과감한 개혁·개방으로 오히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수명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南韓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社會主義 理念을 고수하면서 중국식의 정치체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의 사회주의 이념은 중국에서처럼 最小限의 理念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 시대는 김정일 이후 정권에 와서 쇠퇴하게 될 것이며 강제적인 방식의 정권 정당성 창출도 쇠퇴될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가속도가 붙어 점차로 매우 완만하지만 사회적 영역, 이념적 영역에 영향을 미쳐 개혁이 대세로 되는 상황을 올 가능성이 있다. 위로부터의 주도와 밑으로부터의 강화라는 방식으로 改革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고르바초프 시대 소련의 개혁·개방처럼 지도부의 의도보다 더 폭넓은 政治的·社會的 改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研究報告書 93-2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롬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